



국회의원

윤건영

재정경제위원회

2006 국정감사 자료집

힘찬 경제, 밝은 사회, 강한 나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06. 10. 13,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중)



국회의원

윤건영

재정경제위원회

2006 국정감사 자료집

힘찬 경제, 밝은 사회, 강한 나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06. 10. 13.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중)

〈 2006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며 〉

2006년 국정감사는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경제는 침체되어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들썩거리더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였으며 마침내 10월 9일에는 핵실험으로 한반도 초유의 안보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도 국정감사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안보위기와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반도의 급박한 긴장상태는 역설적으로 국회가 더욱 철저하게 국정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회균등은 무시한 채 결과의 평등에만 집착하고, 부의 정당성을 태생적으로 부정하며, 시장은 실패해도 정부는 만능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진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단세포적 국정운영이 우리 경제를 끝없는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저와 저의 보좌진이 2006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듬거나 정밀한 손질을 하지 않은 채로 묶은 것입니다. 국정감사 속기록, 피감기관의 서면 답변 등 국정감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집에 담긴 데이터, 정책분석, 정책대안 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좋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다듬지 않고 묶어내었기 때문에 훗날 안보위기가 해소되어 평화가 찾아오고 경제가 안정되어 민생이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될 때에 조용히 되돌아보면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분석보다는 성급한 판단이 앞서고, 차분한 지혜보다는 뜨거운 감정이 주도한 순간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공개한다면 저와 함께 하나의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한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이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밤잠 줄여가며 함께 땀 흘리고 유쾌하게 웃어가며 즐겁게 힘과 지혜를 합쳐 준 보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정, 이상훈 보좌관, 권재필 비서관, 정혜영, 안영수, 신선희, 홍효민 비서 모두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와 저의 의정활동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자료집에 담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2006. 11.

국회의원 윤 건 영

〈 목 차 〉

○ 머리말	1
○ 재정경제부	3
○ 국민경제자문회의	115
○ 국세청	127
○ 지방국세청	161
○ 관세청	175
○ 조달청	193
○ 통계청	207
○ 한국은행	227
○ 한국산업은행	267
○ 중소기업은행	283
○ 한국수출입은행	301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321
○ 한국조폐공사	337
○ 주택금융공사	351
○ 한국투자공사	365
○ 신용보증기금	375
○ 기술보증기금	387
○ 한국소비자보호원	401
○ 참고	415
· 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17
· 언론 속의 윤 건 영	418

머 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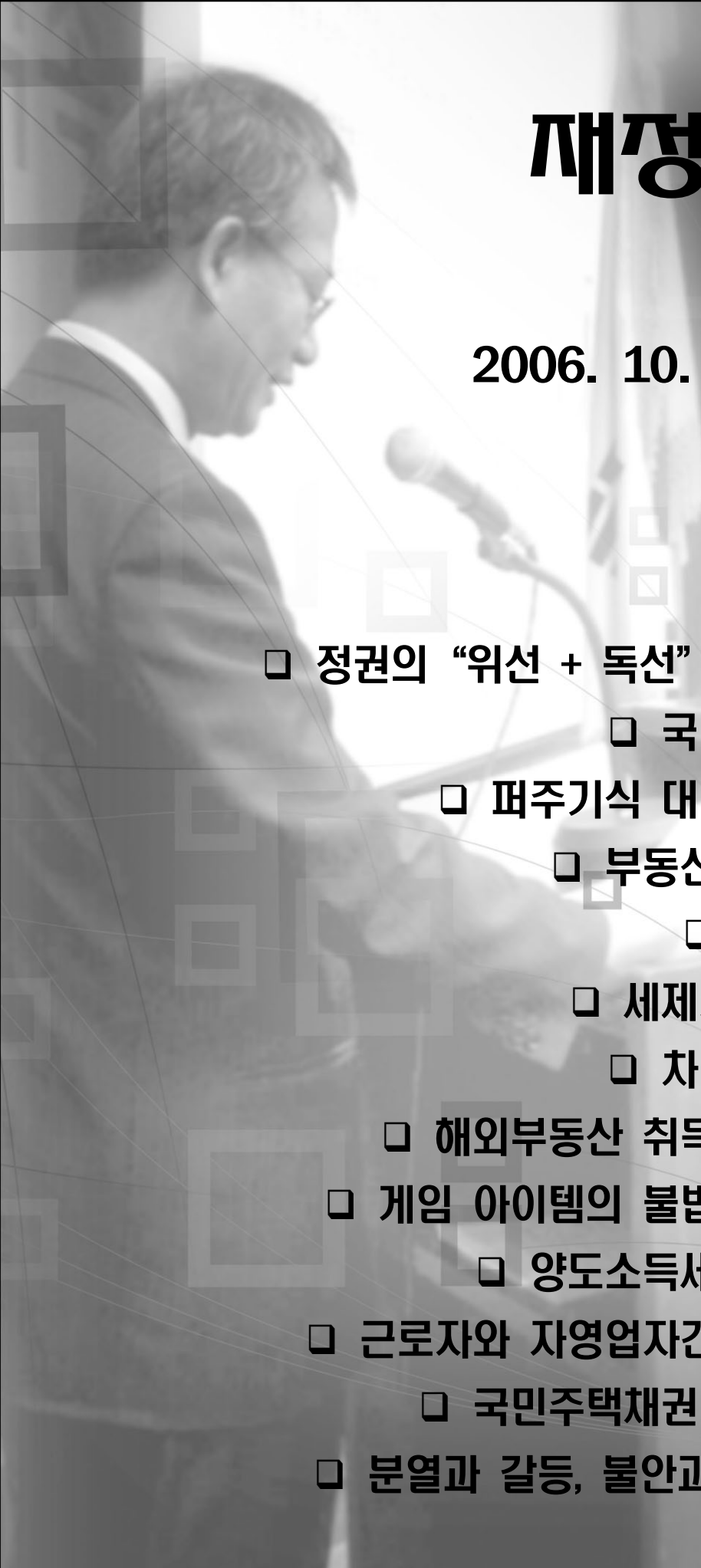
지금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노후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치명적인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그전 3년에 비해서 자살이 56.7%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인자살은 101.5% 증가했습니다. 경제범죄 29.5%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 85.1%, 연체채권 37.2%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는 80.9%, 실업자는 25.2%(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하는 일자리, 좀 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떨어졌고 사회갈등은 증폭되었으며, 개인, 기업, 정부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부, 모두가 time horizon, 즉 시계(視界)가 극단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구름에 가린 달이다.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걷히면 휘황찬란한 달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밝은 달입니까! 아니면 그 달은 구름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2006. 10. 13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모두발언 中

☞ 위 발언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006. 10. 13,17,30,31

2006. 11. 1

□ 보도자료

□ 정권의 “위선 + 독선” = 국민 “위독”

□ 국가채권관리 소홀

□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

□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 외환정책 실패

□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 차명거래금지 문제

□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문제

□ 게임 아이템의 불법거래 과세 문제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개선

□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개선

□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보도자료

2006. 10. 8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비전 2030

비전 2030은 현안파악도 제대로 못한 기획예산처의 졸속, 짜깁기 보고서
재정경제부가 9.27일 제시한 2006년 및 2007년 경제성장률과 큰 차이 보여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9.20일 확정된 기초노령연금제 반영 안 해
국방개혁2020, 국민연금개혁 등에 사용한 경제성장전망 모두 제각각 달라

○ 비전 2030의 허구성

1.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1)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됨
- 기획예산처는 2006년의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명목성장률은 높게, 실질성장률은 낮게 추정함. 그 이유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기획예산처는 2006, 2007년 공히 2.4%를 적용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6년 0.3%, 2007년 2.0%를 적용하였기 때문

※ 최근 1년여 간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05년도에 -0.4%, 2006년 상반기 중 -0.5%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의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라 하겠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2006년 예상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2007년 전망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06.9.27.

(2)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案도 반영하지 않음(기획예산처 담당자와 2006.10.2일 유선 확인함)

- 비전 2030은 기존의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案만 반영하였음
-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2006.6.4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2006.9.20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기로 결정하였음

2.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기획예산처의 비전2030 전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 ¹⁾	명목	명목
2006~2010	4.9%	7.4%	7.5%	7.4%
2011~2015	4.3%	6.7%	6.5%	7.2%
2016~2020		6.6%	6.5%	6.7%
2021~2025	2.8%	5.0%	5.4%	-
2026~2030		4.8%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30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3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2005.12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2006.2.21일, p.12.

○ 비전 2030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비전2030은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경제성장률조차도 당장 올해 전망치부터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처럼 정부 부처간 조율도 되어 있지 못하고 한 달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졸속 보고서에 ‘비전’이라는 말만 붙여서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준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엉터리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막상 국민들은 당장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안보불안까지 겹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20여 년 후 모습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정부가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비전2030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성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친 시장적인 경제 정책, 즉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6. 10. 13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한 7가지 이유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
2003~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더 많아
NDF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절차도 안 거쳐
재경부가 정책실패와 불법·월권행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은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외평기금의 불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생상품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경부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조치를 아직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8월, 2005년도 기금결산심사 중에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외평기금의 운용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근본책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최초 제안한 윤건영 의원의 감사청구 이유

1. **명백한 정책판단 오류** : 논리적 · 이론적으로 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시점에서 재매입(rollover)을 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 매입을 하여 지금까지도 재매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
2.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선물환거래 등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NDF나 스왑거래 등을 외평기금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

※ 재경부는 2003년 10월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평기금 업

무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업무인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2003.9.27일)하여 적법하다는 답변(2003.11.26일)을 받은 바 있음.

3. **기금관리기본법 위반** :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엄청난 위험자산에 손을 댄으로써 투기와 다름없는 행위(NDF 매입시 헷지를 하지 않음)를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
4. **예산회계법 위반** :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또한 예산회계법(및 기금관리기본법)의 국회승인사항 위반으로서, 파생상품의 특징을 이용하여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함.
5. **거시경제에 큰 부담 초래** : 편협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 외환정책은 국가채무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며,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초래함.
6. **국민세금 낭비** : 특히 NDF 손실(2조6천억원)은 투기세력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에게 현찰로 송금해준 것으로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민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임.
7. **무모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책**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훨씬 초과한 대규모 환율방어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으로서, 그 기간 중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은 반면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한 환율방어의 후유증으로 2004년 초 무리한 외환시장 규제를 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

[자료 1] 무모한 경기부양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
- 국제수지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

단위 : 억달러, 원, %

연 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분 (B)	B/A	연초v.s.연말 US\$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1998	371.7	316.3	85.1%	- 207.40	-6.9%
1999	265.6	220.1	82.9%	- 62.40	9.5%
2000	243.6	221.5	90.9%	114.30	8.5%
2001	46.4	66.2	142.7%	66.40	3.8%
2002	116.5	185.9	159.6%	- 125.70	7.0%
2003	258.6	339.4	131.2%	- 2.60	3.1%
2004	357.7	437.2	122.2%	- 154.00	4.7%
2005	170.5	113.2	66.4%	- 30.80	4.0%

자료 : 한국은행

* 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는데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외환보유고 증가) 시장이 일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스무딩 오퍼레이션)임.
- 그러나 2001년~2004년에 걸쳐 국제수지 흑자규모(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외환보유고 증가(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있었으며, 이는 과도한 대응임.
- 특히 2003~2004년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NDF 거래와 수십억달러 규모 Swap 거래가 있었음 ⇒ 이는 명백하게 과도한 대응임을 나타내는 것임.
(단, 2001년의 경우 국제수지 흑자가 46.4억달러에 불과하여 제외)

[자료 2] 외환시장 규제의 부작용

- 한국은행, 「2004년중 원화환율 및 외환시장 동향」, p.10. 내용 中 -

- 2004년중 외은지점 및 외국인투자자(비거주자)들은 ‘역내외 스왑레이트차’와 ‘내외금리차’와의 격차를 이용한 재정거래(arbitrage)를 활발히 행하여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음

- o 1~2월중 역외 스왑레이트가 정부의 NDF규제조치* 이후 크게 하락하여 역내외 스왑레이트 차이가 크게 확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sell/buy 외환스왑거래를 활용하여 원화를 조달한 후, 국고채 등에 투자하여 금리차익을 획득

* NDF 매입초과포지션 : 1.14일자 매입초과포지션의 110% 이내
NDF 매도초과포지션 : 1.16일자 매도초과포지션의 90% 이상

- 이를 반영하여, ‘04.1/4분기중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규모가 2003년중 실적(9.7억달러)의 3.5배에 달하는 34.1억달러 기록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규모 추이

(억달러)

2002	2003	2004 ^P	1/4	2/4	3/4	4/4
3.6	9.7	31.4	34.1	-3.6	-0.9	1.8

보도자료

2006. 10. 13

국민 ‘위독’ = 정권의 ‘위’ 선 + ‘독’ 선

■ 정권의 위선

-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정권의 독선

-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뜰 정부
-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 첫날, 현 정권의 위선과 독선이 국민을 위독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은 무려 50차례에 걸쳐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발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외평기금 부실화를 초래한 불법·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 반복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경기부양”이 참여정부 들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을 전제마저도 엉망인 비전 2030 등은 참여정부의 위선이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정부가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덤벼든 결과 소비, 투자, 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가 민간을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계의 전문가들의 건전한 비판에 철저히 귀를 막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주장사와 브레이크 없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과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정권의 독선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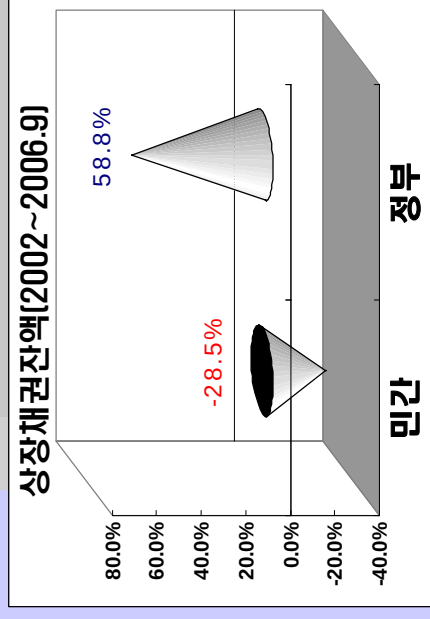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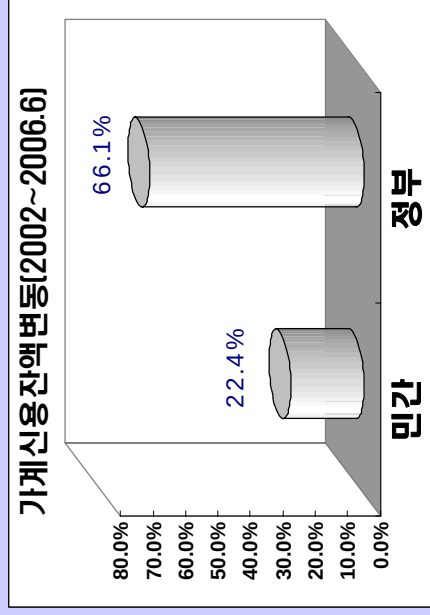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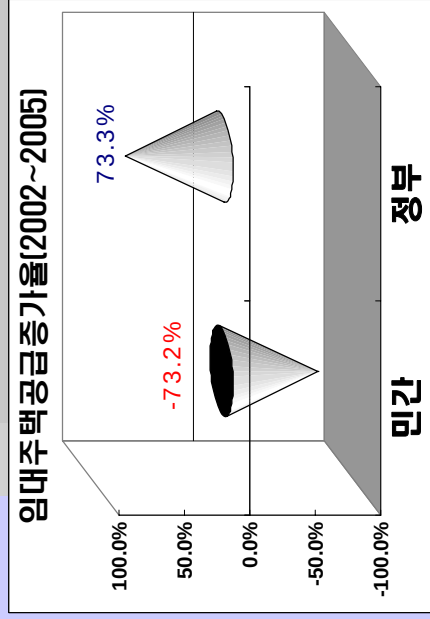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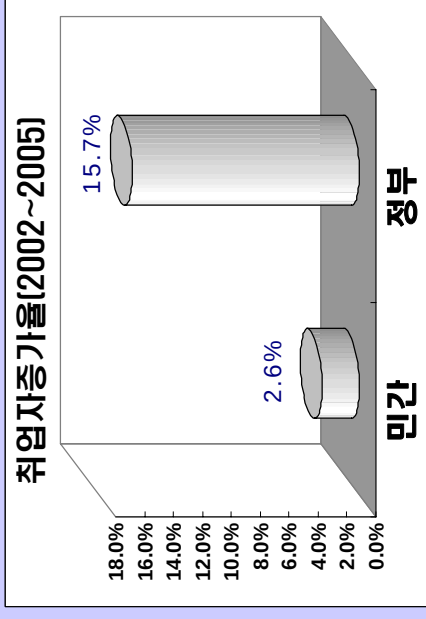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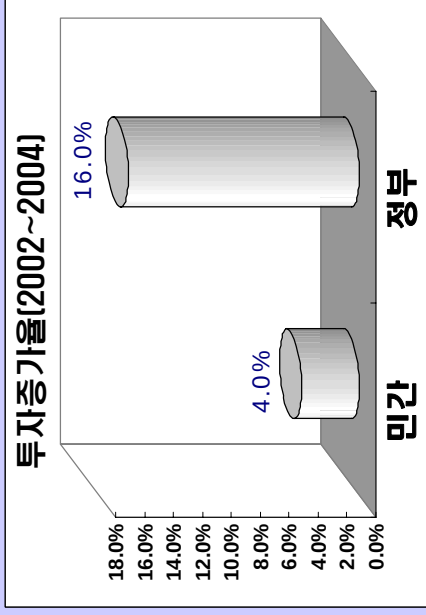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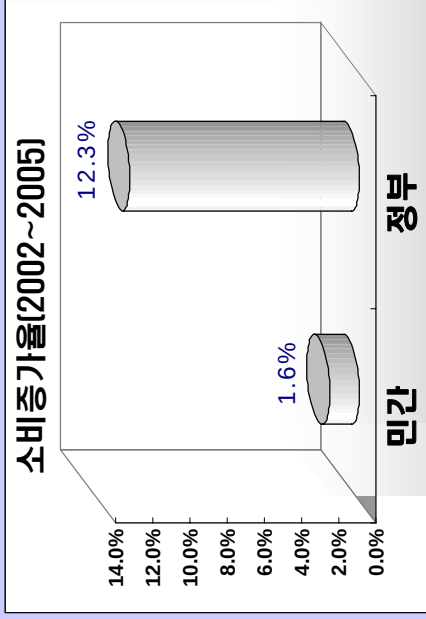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의 사회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자살자는 56.7%, 노인자살자는 101.5% 급증하였고, 경제범죄발생건수도 29.5%나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국가채무는 85.1% 급증하였다. 반면 국가채권은 17.8% 감소하였는데 연체채권은 오히려 37.2% 급증하였다.

고용상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구직단념자가 무려 80.9%나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3.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무려 25.2%나 증가했다. 게다가 취업자 중 소위 “괜찮은 일자리” 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겨우 0.7% 증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자에 주17시간 미만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9.0%에 달했다. 이 또한 2002년 7.3%에서 무려 1.7%p 증가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민민복을 희망한다면 위선적인 말장난이나 뜬 구름잡는 비전 같은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귀를 크게 하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반부자·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은 죽이고 나홀로 살찌 참여정부 실상



■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 대통령 및 당국자들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발언 현황

연 도	대통령	청와대 (인수위포함)	경제부총리	기타당국자	합 계
당선~2003	7회	2회	6회	-	14회
2004	2회	4회	3회	-	10회
2005	6회	2회	5회	4회	17회
2006	-	-	5회	4회	9회
총 계	15회	8회	19회	8회	50회

주 : 총괄적 경제운용 또는 미시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및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

자료 : 네이버 뉴스 검색 (2006.9.30 현재, 공식행사·브리핑·기자간담회 발언 기준)

- 모든 경기부양은 모두 “인위적” 인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킴
- 즉, 정부는 “부적절한 경기부양” 을 “인위적 경기부양” 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함
- 참여정부의 “부적절한” 경기부양 사례
 - [재정정책] 2005년까지 매년 반복된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의 반복
 - [외환정책] 2003~2004년 불법·편법 파생상품 거래를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 2005.7.15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2005.9.7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 2006.3.23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 2006.8.24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비전2030 전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 ¹⁾	명목	명목
2006~2010	4.9%	7.4%	7.5%	7.4%
2011~2015	4.3%	6.7%	6.5%	7.2%
2016~2020		6.6%	6.5%	6.7%
2021~2025	2.8%	5.0%	5.4%	-
2026~2030		4.8%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30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3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2005.12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2006.2.21일, p.12.

-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비교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2006년 예상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2007년 전망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06.9.27.

-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案도 반영하지 않음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2006.6.4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2006.9.20일 당정협의를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핀 정부(3페이지 그림 참조)

- 경제 통계로 본 민간부문 위축 및 정부부문 급증 사례

단위 : 십억원, 천명, 호, %

구 분		2002	최근 ¹⁾	증감	증감률	비고
소 비	민 간	353,560	359,273	5,713	1.6%	실질가격 기준
	정 부	77,924	87,529	9,605	12.3%	
투 자	민 간	157,508	163,794	6,286	4.0%	
	정 부	33,957	39,394	5,437	16.0%	
취업자수 (고 용)	민 간	21,298	21,847	549	2.6%	
	정 부 ²⁾	872	1,009	137	15.7%	
임대주택공급 (주 거)	민 간	41,292	11,057	-30,235	-73.2%	
	정 부	59,436	103,009	43,573	73.3%	
가계신용잔액 (개인금융)	민 간	420,736	515,065	94,329	22.4%	
	정 부 ³⁾	18,324	30,431	12,107	66.1%	
상장채권잔액 (기업자금조달)	민 간	141,314	101,059	-40,255	-28.5%	
	정 부	422,630	671,156	248,526	58.8%	
※ 규 제 건 수		7,723건	8,084건	361건	4.7%	

주1) 소비 · 취업자수 · 임대주택공급은 2005년, 투자는 2004년, 상장채권잔액은 2006.9월말, 가계신용잔액은 2006년 상반기말, 규제건수는 2006.9월말 기준.

주2)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공무원수(철도공사포함)+사회적일자리의 합계임.

주3) 정부부문 개인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증권선물거래소, 규제개혁위원회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 국책연구원 전문가의 비판 무시
 - 오히려 석연찮은 징계(직위해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퇴(2006.4.19)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퍼주기식 대북지원(8조원), 국민분열 자주장사의 결과는 북한 핵개발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단위 : 명, 건, %

구 분									증가율 (B-A)/A
	2000	2001	2002	평균(A)	2003	2004	2005	평균(B)	
자살자수	6,460	6,933	8,631	7,341	10,932	11,523	12,047	11,501	56.7%
65세이상	1,164	1,453	2,023	1,547	2,760	3,189	3,401	3,117	101.5%
경제범죄 발생건수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80,771	29.5%
파산신청 건수	461	842	1,443	915	4,159	12,479	38,902	18,513	1922.6%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 국가채무	134	9.8%	166	23.9%	203	22.3%	248	22.2%	284 ¹⁾	14.3%
통안증권 발행잔액	84	6.5%	105	25.2%	143	35.3%	155	8.7%	165 ²⁾	6.4%
공적연 금책임준비 금부족액 ³⁾	340	-	382	12.4%	435	13.9%	489	12.4%	-	-
합 계	558	-	653	17.0%	781	19.6%	892	14.2%	-	-
명목 GDP	684	10.0%	725	5.9%	779	7.5%	807	3.5%	849	5.3%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2006.9.27)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국 가 채 권 (구조조정지원분제외 ¹⁾)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관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3.1%
주35시간 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127	21.5%
주36시간 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730	0.7%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87	25.2%
구직단념자	165	117	69	90	100	125	80.9%

자료 : 통계청

· 체감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실질실업자 ¹⁾	1,868	1,814	1,666	1,799	1,959	2,148	28.9%
체감실업률	8.4%	8.1%	7.3%	7.8%	8.3%	9.0%	1.7%p

(주)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실 계산

보도자료

2006. 10. 15

대북지원 물자분배 감시 구멍

**북한 내 물자분배 활동 감시 국제기구 인원 총 61명에 불과,
국내 단체의 상주 감시활동, 상주인원 전무한 상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지원물자에 대한 북한 내 분배감시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재 북한에는 국제기구 및 NGO들이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2개 기구의 61명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측에서 파견한 인력은 단 1명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실제 북한 군인들이 쌀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마크가 붙은 쌀이 팔리는 것이 목격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일이다.

윤 의원은 “남한 국민들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이고 호의적인 지원혜택이 실제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 해 보아야 한다.” 며 특히, “현물지원이 설령 북한 내에서 제대로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최근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임이 결론 난 만큼,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윤건영의원 요구자료》

1. 대북지원의 북한 내 분배 감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현황(단체명, 각 단체별 북한 상주 인원 등) 및 통일부 현재까지의 분배 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 대북지원의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외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

기구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06.3현재)
FAO	2모작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1
UNDP	개발협력을 위한 능력 배양, 재정 및 은행부문 지원	2
UNFPA	모성건강 증진, 지역단위 산부인과 지원	1
UNICEF	기초교육·필수약품 지원, 모성구호, 식수·환경 위생	10
WFP	긴급구호(식량지원), 특별구호(취로사업, 지방 식량생산)	10
WHO	사스 등 질병 발병 탐지, 필수 의약품 지원, 면역확대 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말라리아·에이즈·결핵 퇴치·예방, 수혈서비스 질 향상	4
IFRC	보건, 긴급구호, 북한 적십자사 지원	3

<국제 NGO>

상주 단체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06.7현재)
Triangle(프랑스)	산림 및 환경보호 기술지원, 급수 및 위생	7
Concern(아일랜드)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7
GAA(독일)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13
PMU(스웨덴)	식량안보, 분배	1
Save the Children Food	어린이 지원사업	2

- 분배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국내 단체는 없음.

- 분배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

- 정부는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품목 선정, 분배결과 확인 등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 전용 가능성이 낮고 분배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품목을 우선 고려(비료 등)하고 있으며, 남북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꾸준히 설득, 북측도 이를 수긍하고 점차 협조하고 있음.
- 쌀 차관 제공시 합의서에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에 “제공된 식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왔음.
- 쌀·비료 지원시 포장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표기 하게하고, 쌀 10만톤마다 개성·고성 및 동·서해안 지역에서 분배현장을 확인('04년 총 10회→'05년 총 20회로 강화) 하고 있음.
- * 분배현장 확인은 우리측 인원이 직접 분배현장을 방문, 분배과정을 입회하고 분배관계자 및 주민과의 인터뷰 실시('05년에는 개성·고성·남포·원산·흥남·함흥청진에서 실시)
- 또한 쌀·비료 전달이 완료된 후 북측은 쌀의 경우 30일 이내, 비료의 경우 20일 이내에 도·시·군·구역단위까지의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문건으로 통보하게 됨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진시에도 지정기탁제를 의무화하여 분배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매 지원시마다 단체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분배결과를 확인함.

작성자 : 사회문화교류국 지원협력2팀 행정사무관 김상영, 연락처 2100-5842

보도자료

2006. 10. 17

한국과 미국이 11년간 '95~' 05)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 488만톤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2004년 기준 431.2만톤)의 1.13배에 해당
한국 대 미국 지원비중은 DJ정권 4:6에서 노무현정권 들어 9:1로 역전
한-미 식량지원 본격화된 1999년 북한의 성장률 6.2%(전년대비 +7.3%↑)
남측제공 식량차관,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 KDI보고서

※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A)	비 중 (A/C)	미 국 (B)	비 중 (B/C)	합 계 (C=A+B)
1995~1997 (김영삼정권)	15.0	43.2%	19.7	56.8%	34.7
1998~2002 (김대중정권)	114.0	39.9%	171.7	60.1%	285.7
2003~2005 (노무현정권)	150.0	89.7%	17.3	10.3%	167.3
총 계	279.0	57.2%	208.7	42.8%	487.7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11년에 걸쳐 지원한 식량이 총 487만7천톤이며 이는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의 1.1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Fact Sheet“, 2006.1.31)를 비교,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은 쌀과 옥수수를 포함하여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의 형태로 총 279만톤의 식량을, 미국은 같은 기간 총 208만7천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비중을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김영삼정권(1995~1997년) 한국 43.2%, 미국 56.8%, 김대중정권(1998~2002년) 한국 39.9%, 미국 60.1%를 차지한 반면 2003년부터 3년간은 한국 89.7%, 미국 10.3%를 기록하였다. 즉 노무현정권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역할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급격히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 의원의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의 연도별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 식량지원이 대량으로 시작된 1999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실질성장률 6.2%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첨부2 참조).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의 식량 지원이 극적인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식량 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KDI 보고서(“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 의 상관관계”, 북한경제리뷰 2006.2월호, pp.15~16)는 남측이 제공한 식량차관과 비료는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 확보로 이어짐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식량지원 중 상당한 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Various sources assert that some -perhaps substantial amounts- of the food assistance going to North Korea is routinely diverted for resale in private markets or other use : CRS Report, 2006.1.31*). 그리고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 이 선명하게 표시된 쌀포대를 운반하는 모습도 국내 언론에 목격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정부가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복귀시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1]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2006.2월호 中

“남쪽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지원을 결정한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은 현재 배급제를 통해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급제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협동농장으로부터 1kg에 40원씩 식량을 수매해서 45원 전후의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배급한다. 약 5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수반된다. 반면 남쪽이 식량차관을 제공할 경우 비록 남

쪽에 대한 차관은 남아있지만 당장 46원의 재정수입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비료 제공의 경우도 협동농장에 비료를 공급하고 그 규모만큼 구매가격에서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수입으로 연결된다. 수십만 톤의 식량과 수만 톤의 비료공급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직결되지만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을 확충해주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15~16.)

[첨부2]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연도	북한		식량지원규모					
	경제성장률 (실질)	곡물 생산량	한국지원 (B)	북한생산량 대비 (B/A)	미국지원 (C)	북한생산 량대비 (C/A)	한미합계 (B+C)	북한생산 량대비 ((B+C)/A)
1995	-4.1%	345.1	15.0	4.3%	0.0	0.0%	15.0	4.3%
1996	-3.6%	369.0	0.0	0.0%	2.0	0.5%	2.0	0.5%
1997	-6.3%	348.9	0.0	0.0%	17.7	5.1%	17.7	5.1%
1998	-1.1%	388.6	4.0	1.0%	20.0	5.1%	24.0	6.2%
1999	6.2%	422.2	0.0	0.0%	69.5	16.5%	69.5	16.5%
2000	1.3%	359.0	50.0	13.9%	26.5	7.4%	76.5	21.3%
2001	3.7%	394.6	10.0	2.5%	35.0	8.9%	45.0	11.4%
2002	1.2%	413.0	50.0	12.1%	20.7	5.0%	70.7	17.1%
2003	1.8%	425.2	50.0	11.8%	4.0	0.9%	54.0	12.7%
2004	2.2%	431.2	50.0	11.6%	11.0	2.6%	61.0	14.1%
2005	N.A.	N.A.	50.0	-	2.3	-	52.3	-
총계	-	-	279.0	-	208.7	-	487.7	-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6. 10. 17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

외평기금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
NDF는 만기 때 재매입(rollover) 않으면 환율 방어효과 없어
' 04.6월 이후 신규거래 중단했는데도 ' 05년 7,246억원 NDF 손실 생겨

※ 외국환평형기금의 발생원인별 손익

단위: 억원

계정과목	2002	2003	2004	2005	비고
잡이자계정손익	0	2,688	-21,609	-7,246	NDF 손익
외환평가손익	-9,000	3,645	-65,874	-25,240	환율변동에 기인
이자손익+기타	-8,895	-11,552	-14,722	-13,871	규모증가+금리수준
당기순이익	-17,895	-5,219	-102,205	-46,357	

자료 : 정부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한 외평기금 운용과 이에 따른 17.8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 문제는 제2의 카드사태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후유증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카드사태와 외평기금 사태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태는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와 거리모집인 허용 등 엄청난 소비진작책으로 단기적 소비 급증과 경제성장을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2~3년도 못 가서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져 급격한 경기 하강의 주범이 되었다. 외평기금 사태의 경우는 불법·편법 파생금융 거래까지 동원하면서 원화 환율의 하락(가치상

승)를 방어하여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과 2년여 만에 17.8조원(누적적자 기준)이라는 막대한 외평기금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가채무 급증과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도 일조하였다.

※ 과거 카드사태와 2003~2004년 외환정책(외평기금 사태) 비교

- 공통점 :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 차이점 : 카드사태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반면, 당시 외환정책은 재경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법·편법 수단이 동원되었음

구 분	카 드 사 태	외평기금 사태
시 기	IMF 이후 소비 급랭 시기	카드사태 부작용 등으로 인한 경기 저점 시기
수 단	<u>합법적이지만 근시안적</u> 인 지침 (카드 거리모집 허용,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등 : 1999년 여전법시행 규칙 개정)	법률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 ^{주)} 하여 채권발행한도의 국회승인 취지를 무력화시킨 <u>불법·편법 수단을 동원</u> (Swap, NDF 등 파생금융거래)
단기 효과	<u>소비진작</u> 으로 경기 활성화	유럽,일본의 환율하락과 달리 <u>환율 소폭상승/현상유지</u> 및 수출 급증
중장기 부작용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부채 급증으 로 인한 <u>소비급감</u> [특징 : 카드 돌려막기]	외평기금대규모손실, 국가채무급증, <u>환율급락</u> 및 환율변동성(Risk) 급증 [특징 : NDF 재매입]
결 과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문제의 사회 문제화, 경제침체	양극화 심화, 국가재정 건전성 악 화 및 성장잠재력 하락

(주) 재경부는 2003년 하반기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평기금 업무 중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2003.9.27일)하여 적법하다는 답변(2003.11.26일)을 받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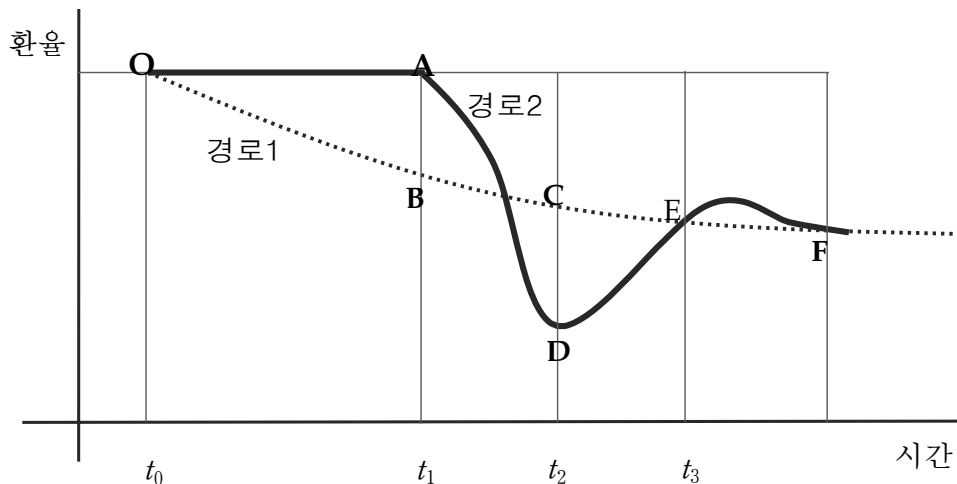
외평기금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과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고 NDF(차액결제선물환,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NDF 거래의 함정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환율방어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시점에서 계속 재매입(rollover)을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2004.6월 이후 외평기금은 신규 NDF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7,246억원의 NDF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외평기금을 이용한 무리한 환율정책은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가을까지 정부가 환율 1150원 고수하는 정책을 펴자 일반 수출기업들은 2004년 들어 환리스크 관리에서 손을 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방어 여력이 한계에 달해 급격한 환율하락(가치상승)이 일어나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믿음을 수출기업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무장해제 상태에서 손 쓸 겨를 없이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수출보험공사) :

2003년 7.2조 → 2004.1~10월 3.7조 → 2004.11~12월 3.3조 → 2005년 12.4조
 (월 0.6조) (월 0.37조) (월 1.65조) (월 1.03조)

※ 과거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에 대한 반작용



- 경로 1 : 바람직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 경로 2 : 실제 원화 환율의 움직임
- 점A~점D 사이의 경로 : 2004년 10월 이후 급격한 원화하락(overshooting)
- 점D~점E 구간 : 최근 움직임으로 추정됨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불법·편법 운용과 누적적자 문제는 무리하고 무모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고, “앞으로 신속하게 기금을 정상화시켜 더욱 수준 높은 외환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베일에 가려진 진상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06. 10. 30

통일부 '대북지원 규모 2조3천억원' 주장의 문제점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통일부가 10.18일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총 2조3,003억원 상당”이라고 밝힌 데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 규모 숫자를 축소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 대북지원 규모 : 통일부 방식 2.3조원과 한나라당 방식 8조원의 차이

구 분	통일부 방식	한나라당 방식	비 고
정부·민간 현물지원	2.3조원	4.6조원	양특회계 2.3조원 차이
경수로분담금	대상 아님	2.2조원	
금강산관광대가 등	정상 경제행위임	4.8억달러(약0.5조원)	
2000년 대북불법송금	정상 경제행위임	5.0억달러(약0.5조원)	
개성·금강산 등 투자	국내기업 투자임	0.6조원	
합 계	2.3조원	8.4조원	

□ 대북지원액에 양곡관리특별회계(2.3조원 상당)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 핵심 : 현물로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돈으로 평가하는 문제임
- 평가방법
 - (1) 북한 돈 가치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북한경제의 폐쇄성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쌀시장의 부재로 계산 곤란)
 - (2) 국제 시세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통일부 기준)
 - (3) 국내 가격으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한나라당 방식)
-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한나라당 계산방식은 우리 국민에게 대북지원의 크기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어 통일부 방식보다 더 적절함

즉, 쌀 1가마(80kg)를 지원한 효과를 표현해보면

* 통일부 방식 : 쌀 2만7천원어치 북한에 지원(국제가격 톤당 330\$ 적용)

한나라당방식 : 쌀 13만9천원어치 북한에 지원(국내산 톤당 174만원 적용)

⇒ 통일부 방식대로 “쌀 2만7천원어치 지원” 이라고 할 경우 우리 국민은 쌀 5분의 1가마를 지원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임

※ 특히 한국은행이 집계 발표하는 북한의 GDP 통계는 남한 가격 기준으로 작성(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의 현주소”, 삼성경제연구소, 2005.6.29., p.3.) 되므로, 북한 GDP 통계와 비교하려면 한나라당 방식이 확실히 더 적절함(수입곡물 지원분을 국내가격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지원규모 증가요소도 있음)

□ 경수로 분담금 2.2조원(원금 1.4조+이자0.4조+미집행0.4조) 중 대북지원 금액

- 경수로 분담금은 명백한 우리 정부의 부담임
- 경수로 분담금의 원래 목적이 북한 지원이었음 (KEDO나 우리 기업 지원 목적이 아님)
- 경수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그만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투자 부담을 덜어준 것임
- 같은 맥락에서 경수로 지원 이자도 북한의 투자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준 것임
- 다만, 남북협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4천억원을 지원 규모에 넣는 것은 부적절함
- ⇒ 따라서 경수로 사업으로 인한 북한 지원 효과는 ‘1.8조원’

□ 금강산 관광대가 등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 9.8억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시장경제와 폐쇄경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임
- 통일부 설명이 정당화되려면, 북한 내에서 외환거래가 통제받지 않고 시장경제와 같은 수준의 경제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 북한의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상거래행위에 의한 송금이라고 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임
- 더구나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므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와 관련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특히 현대 대북송금 5억불은 특검에서도 불법송금으로 판명난 사항
- 다만,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이 생길 수 있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지원과 교역,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 방식이나 내용도 세분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북한은 이 투자들로 인해 이미 여러 경제적 혜택(근로자 임금 등)을 받고 있음과,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건물 건축,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소유권은 국내 업체에 있지만, 엄연히 북한 내에 있는 건축물과 설비는 남한에 있는 경우와는 달리 매각이나 처분이 자유롭지 않음
- 최악의 경우 남북 왕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건축물과 설비들을 북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음
- 따라서 대북 투자는 매몰비용(sunk cost)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에게 손실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통일부의 2.3조원 지원 주장은 실제 대북지원 규모보다는 현저하게 축소된 것임

- 정확한 대북 지원 규모는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가”를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돈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함
- 통일부는 “대북지원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지원 규모를 모조건 축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다 사실에 가깝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규모는 우리 화폐가치로 약 8조원임

- 8조원 = 통일부 주장 2.3조원 + 양특회계 2.3조원 + 경수로분담금 1.8조원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8억불(약1조원) + 개성공단 등 투자액 0.6조원

※ 8조원 = 한나라당 주장 8.4조원 - 경수로 미집행금액 0.4조원

- 이는 북한 1년치 경상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임

※ 한국은행 발표(북한생산량을 국내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에 의하면, 2004년 북한의 경상 GDP는 23.7조원임

보도자료

2006. 10. 3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예고된 실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 못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필연
 강남 때려잡으려다 강남 집값만 많이 올려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으로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죽어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경제원리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택건설 실적이나, 주택가격 추이, 전세가격 추이, 미분양 주택 추이 어느 하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지표는 없다”고 밝히고,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8.31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 가격만 급등시켜 놓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한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애꿎은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1.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외환위기 이후 침체했던 수도권의 주택건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절반인 52.6%에 불과(수도권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 주택수	268,111	271,927	229,370	148,669	237,454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아파트	205,563	205,374	178,778	134,075	217,588	181,520	120,418	188,777	237,279	184,917	181,629

자료 :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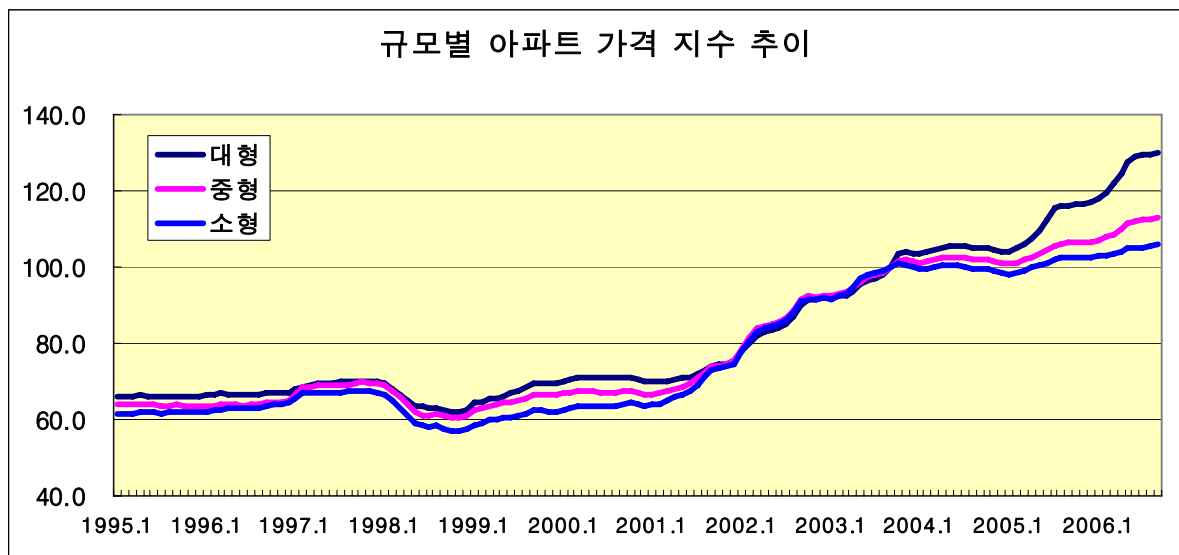
- 서울의 주택공급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2005년 서울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1/3인 32.4%에 불과(서울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서울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103,617	104,801	70,446	28,994	61,460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아파트	76,988	72,443	52,023	24,619	54,146	72,149	39,420	51,815	83,611	49,587	44,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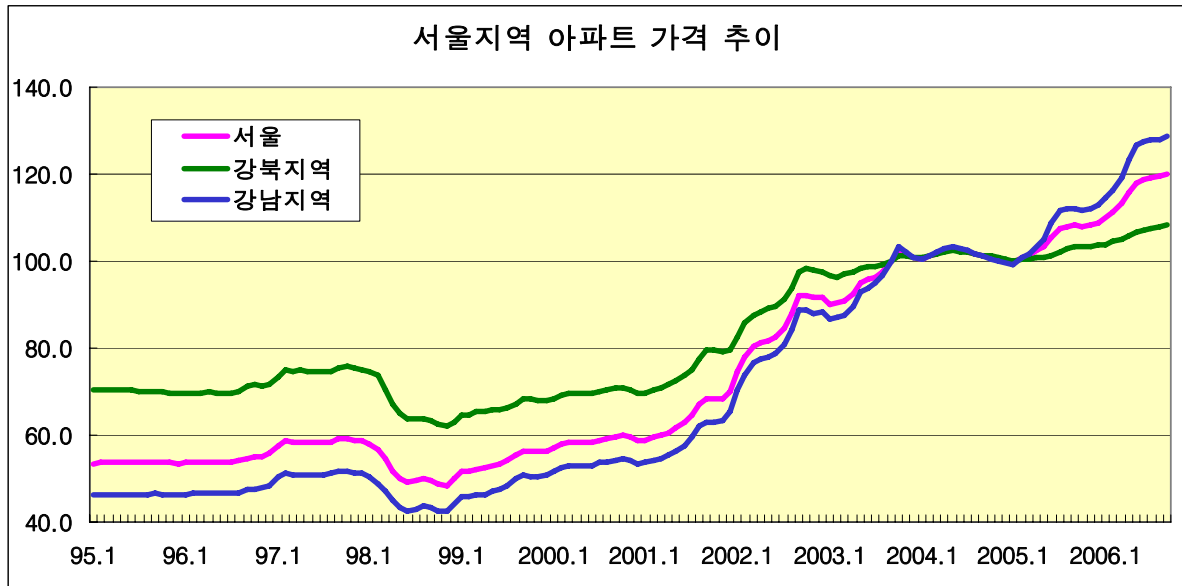
- 주택공급의 감소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중대형아파트와 가격 급등



※ 소형 : 19평 미만, 중형 : 19평 ~ 29평 미만, 대형 : 29평 이상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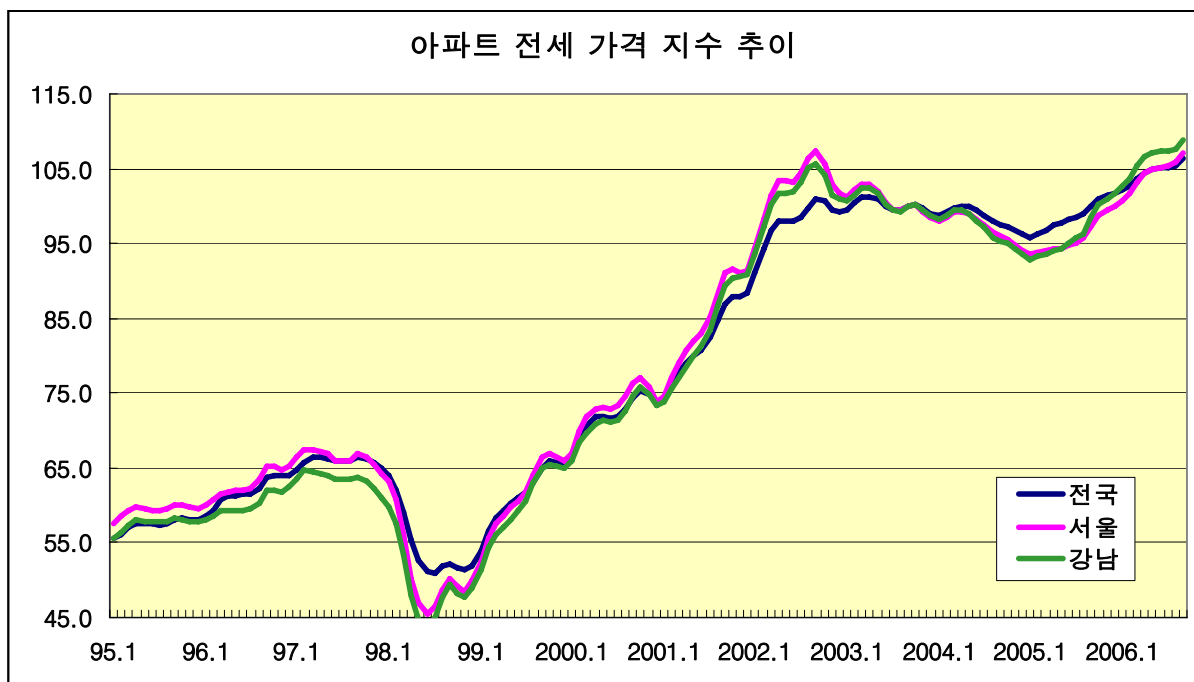
- 8.31 부동산 대책이후 오히려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
 - 특히,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급등
 - ⇒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히 실패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임대시장 위축으로 전세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
난 가중, 전세가격 상승 촉발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3. 지방 주택시장의 붕괴(미분양 주택의 증가)

-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2002년에 비해 2006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 285%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계	152,313	109,637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0,970
민간부문	91,450	69,434	62,734	81,098	57,121	38,941	20,741	14,168	31,894	60,781	51,415	67,381
공공부문	60,863	40,203	26,133	21,603	13,751	19,609	10,771	10,755	6,367	8,352	5,800	3,589
(준공후)	17,919	12,304	7,567	18,102	17,810	16,272	8,834	5,425	5,874	10,314	10,983	12,437

자료 : 건설교통부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
 - 2006년 8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2년에 비해 261% 급증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9,597
비수도권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1,373

자료 : 건설교통부

8.31은 예고된 실패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경고한 바 있다(윤건영 의원 홈페이지 “언론속의 윤건영”,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 참조). 이 칼럼에서 윤 의원은 8.31 대책의 문제점으로 (1) 참여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위험적 발상, (2) 지난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의 되풀이, (3) 조세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서민고통만 가중, (4) 위험요소 담고 있는 세대별 합산, 매매 금지, 양도세중과, (5) 정부주도의 획일적 공급정책 등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주택공급 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점,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임대시장이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 8.31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오늘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기억제는 매우 소극적인 목표로서,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기란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

윤건영 의원은 최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이른바 ‘신도시 발언’ 파문과 관련하여, “투기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엇박자 부동산정책이 이러한 불안심리와 한탕주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규모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데도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제하는 등 수많은 엇박자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해왔는데, 추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러한 국민 불신에 쐬기를 박은 격”이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감정이 섞인 업포를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국민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공급 확대정책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듯 임대주택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형주택의 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경직적인 정부 통제 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다”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급의 애로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6. 10. 31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 도입 추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만 고통받아
전국 1,777만 세대 중 45.4%인 806만 세대가 무주택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 도입하여 서민 부담 경감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연소득 이하인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7만세대 중 무주택세대는 전체의 45.4%인 806만세대(2005.8월 기준, 행정자치부 집계)에 달한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자가 총 503만명(2004 귀속년도)이고 이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00만명이 무주택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세규모는 2,400억원이며, 1인당으로는 연간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작게 부과함으로써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며,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를 반드시 관철시켜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06. 11. 1

노무현 정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을 4.2% 전망

대선공약 연간 7% 성장에 크게 못 미칠 듯
 명목 경제성장률조차 5.8% 증가에 그칠 전망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과 국가채무는 급증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1월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월 17일 발표한 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참조로 하여 노무현 정권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노 정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 5년의 연평균 4.2% 성장 전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간 7% 성장과 비교해볼 때 무려 2.8%나 낮은 수치이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명목 성장률조차 노 정권 기간 중 연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성장률 7%라는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허황된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거시경제 성적표(예상)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¹⁾	2007예상 ¹⁾	5년평균 ²⁾
GDP성장률(실질)	3.1	4.7	4.0	5.0(5.0)	4.3(4.6)	4.2(4.3)
민 간 소 비	-1.2	-0.3	3.2	4.1(4.4)	3.8(4.2)	1.9(2.1)
설 비 투 자	-1.2	3.8	5.1	7.6	7.0	4.5
건 설 투 자	7.9	1.1	0.4	-0.8	2.3	2.2

주 : 1. 괄호 밖은 KDI 전망, 괄호 안은 재정경제부(예산편성 전제) 전망임

2. 5년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KDI(2006~2007년 전망), 재정경제부

※ ‘명목성장률’ 연평균 5.8% 예상(재정경제부 기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연평균 ¹⁾
명목 GDP 성장률	5.9	7.5	3.5	5.3	6.7	5.8
GDP deflator	2.7	2.7	-0.4	0.3	2.0	1.5
실질 GDP 성장률	3.1	4.7	4.0	5.0	4.6	4.3

주 : 1. 연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2. KDI는 명목 성장률 예상치를 별도 발표하지 않아 재경부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재정경제부(2006~2007년 전망)

2004~2005년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2003~200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경제 外的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였다고 설명한다. 즉, 국보법,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추진, 그리고 수도이전과 위헌판결 등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윤 의원은 특히 편협한 자주국방과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켰고 사회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富國強兵’은 커녕 나라는 가난하고 국력은 약해져 ‘貧國弱兵’의 형색이 되어버렸다.

또한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불안과 좌절의 시기였다.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귀결되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의 결과 자살, 노인자살, 경제범죄 등이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노 정권 3년 반 만에 남은 것이라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연체채권뿐이다.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은 늘어났다. 채권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의 연체가 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134	9.8%	166	23.9%	203	22.3%	248	22.2%	284 ¹⁾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84	6.5%	105	25.2%	143	35.3%	155	8.7%	165 ²⁾	6.4%
공 적 연 금 책임준비금부족액 ³⁾	340	-	382	12.4%	435	13.9%	489	12.4%	-	-
합 계	558	-	653	17.0%	781	19.6%	892	14.2%	-	-
명목 GDP	684	10.0%	725	5.9%	779	7.5%	807	3.5%	849	5.3%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2006.9.27)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국 가 채 권	1,437,233	1,551,807	1,592,360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윤건영 의원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앞장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정책판단이야말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실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한다. 외환정책의 실패,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는 매우 많으며,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이다.

셋째로 정권보전 위한 국민분열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윤 의원은 강조한다. 대통령 20 대 80 발언이나 서울대 강남학생 비율 60% 발언 등은 모두 심각한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 하겠다. 또한 강남 대 비강남, 부자 대 서민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결코 넓지 않다. 지금이라도 경제선진화를 위해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장관의 역할은 특히 막중하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가 있을 때만이 불안과 좌절은 극복되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참고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세 계	2.7	4.0	3.5	3.9
아시아 ¹⁾	6.5	7.4	6.9	7.2
중 국	10.0	10.1	9.9	10.6
대 만	3.4	6.1	4.0	3.8
인 도	8.6	7.5	8.4	7.6
한 국	3.1	4.7	4.0	5.0

주 : 1. 일본 제외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Oct.) 2006.,
KDI, "KDI 경제전망, 2006년 3/4분기", 2006.10.17.

정권의 “위선 + 독선” = 국민 “위독”

□ 요 약

1. 위선정권

-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무리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을 하였음
⇒ 국가채무 급증, 중앙은행 운신의 폭 위축, 외환안정기능 위축 등 부작용 발생
⇒ 성장잠재력의 하락 초래
-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 국민갈등 조성, 국민불신 자초
- 기본 전제조차 맞지 않고 1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허구에 찬 비전2030 제시

2. 독선정권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뜰 정부
 - 소비, 투자, 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정부로 이행 중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편협한 자주장사의 참담한 실패
⇒ 한미동맹 균열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귀결됨

3. 국민은 위독

-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2007년 세계경제는 30년 만의 호황을 접고 하락 예상
-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경제도 빠른 속도로 하락 중
- 국가채무는 급증
- 참여정부 들어 자살, 노인자살, 경제범죄, 파산신청의 급증, 소비자 심리지표의 하락
- 국민은 5대 불안(고용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안보불안, 교육불안)에 시달림

☞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 특히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해법임

□ 위 선 정 권

○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 추진

· 대통령 및 당국자들의 발언 현황

- 총괄적 경제운용 또는 미시정책 현안 관련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
- 네이버 뉴스 검색 (2006.9.30 현재, 공식행사·브리핑·기자간담회 발언 기준)

연 도	대통령	청와대 및 인수위	경제부총리	기타당국자	합 계
2002~2003	6회	2회	6회	-	14회
2004	3회	4회	3회	-	10회
2005	6회	2회	5회	4회	17회
2006	-	-	5회	4회	9회
총 계	15회	8회	19회	9회	50회

· 재정경제부가 인식하고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기준

“경기부양에 따른 편익보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운용”

- 재정정책 :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그 규모가 과도하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
- 통화금융정책 : 과도한 통화팽창, 저금리 운용 또는 신용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이나 가계·기업 등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
- 외환정책 : 경제 펀더멘탈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환율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총수요 관리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 모든 경기부양은 모두 “인위적”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이 됨
(정부는 “부적절한 경기부양”을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
- 참여정부 들어 “부적절한 경기부양”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음

· “부적절한” 경기부양의 사례

- 재정정책 : 2005년까지 매년 반복된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의 반복
- 외환정책 :
 - (1)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폭을 크게 상회한 외환보유고의 증가
 - (2) 엄청난 규모의 외평기금 불법 NDF 거래
 - (3) 국회의 채권발행한도 승인권을 무력화시킨 Swap거래(외평기금과 국민연금 간)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자금 마련

※ 통화금융정책 :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but 미국금리보다 높은 한국금리)

- 참여정부의 “부적절한” 경기부양의 부작용 : 성장잠재력의 하락 초래
- 국가채무 급증
- 중앙은행 적자누적과 통화금융정책 운신의 폭 위축
- 환율 안정기능 마비

○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 국민갈등 초래, 국민불신 자초

- 2005.7.15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가구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자료 사용, 특히 미성년자까지 포함
 - 2005.7.21일,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사유로 행자부에 주의조치함
 - ※ 2006.10.2일, 행자부는 “2005년말 토지소유 현황 분석” 자료 공개시 인별 자료와 함께 가구별 자료도 공개한 바 있으나, 언론의 속성상 인별자료인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토지 57.1% 소유” 형태로 보도됨
- 2005.9.7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노대통령은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 발언함
 - 2005.9.8일, 서울대가 강남학생 비중이 12%라고 반박 자료 공개함
 - 청와대는 “2004년도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53명 중 강남학생 33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함
- 2006.3.23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 노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90%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려도 나머지 80%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고 발언
 - 근로소득세는 총 조세수입 중 6%에 불과함
 - 또한 상위 20%는 연봉기준 2,500~3,000만원(1천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임
- 2006.8.24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 서울 강남 3개구의 실거래가격이 3월 대비 6월에 14.4% 하락 주장
 - ※ 추병직 장관 “실거래가의 하락은 거품붕괴의 시작”이라고 발언
 - 3월과 6월 자료는 실거래 기준으로서, 대상 아파트단지조차 서로 다르고 동일 단지내에서도 평수·층수·내부수리여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건교부 발표와 건교부장관 발언은 완벽한 사실 왜곡임
 - 부동산뱅크 자료에 따르면 3월 대비 6월의 강남 3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강남구 8.24%, 서초구 8.68%, 송파구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허구에 가득 찬 ‘비전 2030’ 제시

-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기획예산처의 비전2030 전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 ¹⁾	명목	명목
2006~2010	4.9%	7.4%	7.5%	7.4%
2011~2015	4.3%	6.7%	6.5%	7.2%
2016~2020		6.6%	6.5%	6.7%
2021~2025	2.8%	5.0%	5.4%	-
2026~2030		4.8%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30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3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2005.12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2006.2.21일, p.12.

-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

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
- 기획예산처는 2006년의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명목성장률은 높게, 실질성장률은 낮게 추정함. 그 이유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기획예산처는 2006, 2007년 공히 2.4%를 적용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6년 0.3%, 2007년 2.0%를 적용하였기 때문

※ 최근 1년여 간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05년도에 -0.4%, 2006년 상반기 중 -0.5%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의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라 하겠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2006년 예상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2007년 전망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06.9.27.

-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案도 반영하지 않음 (기획예산처 담당자와 2006.10.2일 유선 확인함)
- 비전 2030은 기존의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案만 반영하였음
-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2006.6.4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2006.9.20일 당정협의회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기로 결정하였음

□ 독 선 정 권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핀 정부

- 경제 통계로 본 민간부문 위축 및 정부부문 급증 사례

단위 : 십억원, 천명, 호, %

구 분		2002	최근 ¹⁾	증감	증감률	비 고
소 비	민 간	353,560	359,273	5,713	1.6%	실질가격 기준
	정 부	77,924	87,529	9,605	12.3%	
투 자	민 간	157,508	163,794	6,286	4.0%	
	정 부	33,957	39,394	5,437	16.0%	
취업자수 (고 용)	민 간	21,298	21,847	549	2.6%	
	정 부 ²⁾	872	1,009	137	15.7%	
임대주택공급 (주 거)	민 간	41,292	11,057	-30,235	-73.2%	
	정 부	59,436	103,009	43,573	73.3%	
가계신용잔액 (개인금융)	민 간	420,736	515,065	94,329	22.4%	
	정 부 ³⁾	18,324	30,431	12,107	66.1%	
상장채권잔액 (기업자금조달)	민 간	141,314	101,059	-40,255	-28.5%	
	정 부	422,630	671,156	248,526	58.8%	
※ 규 제 건 수		7,723건	8,084건	361건	4.7%	

주1) 소비 · 취업자수 · 임대주택공급은 2005년, 투자는 2004년, 상장채권잔액은 2006.9월말, 가계신용잔액은 2006년 상반기말, 규제건수는 2006.9월말 기준.

주2)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공무원수(철도공사포함)+사회적일자리의 합계임.

주3) 정부부문 개인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증권선물거래소, 규제개혁위원회

· 소비 및 투자

- 반기업정서, 반시장정서 반부자정서 등에 기반한 정부의 편향된 경제정책, 국민들의 4대 불안(고용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 증가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침체됨
- 이에 정부 주도의 팽창재정 정책(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한국판 뉴딜 및 BTL 사업) 추진한 결과 거시경제 지표상 정부부문의 소비와 투자 급증

· 고용

- 실질적인 급여 조정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함
- 감세와 규제개혁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질 좋고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
- 정부 주도의 일시적이고 질 낮은 소위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치중함

· 주거 및 개인금융

-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을 매우 과격하게 사용(8.31 대책)
- 8.31 대책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림
- 한편, 주택 공급량의 감소로 더욱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30 대책)
- 민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함

· 기업금융

- 2003~2004년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분을 초과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국고채(외평채 포함) 및 통화안정증권 급증, 적자재정 편성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 대기업은 미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회사채 발행의 동기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국공채 공급 증가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 기타 : 벤처지원 문제

- 벤처기업 지원에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벤처기업”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의적임
-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벤처관련 산업에 시장왜곡이 발생하여 과거 벤처대란을 재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 참고 : 규제건수 증가
 - 규제개혁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전문가 조연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연구원 전문가(노영훈 박사)의 비판 무시
 - 오히려 석연찮은 징계(직위해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연구와 그 시사점」(노영훈, 2005.11.) 주요 결론
 -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 둘째, 부동산 급등을 경험한 주요국들의 경우 보유세부담이 낮아 가격상승률이 높았다는 증거는 없음
 - 셋째, 종부세로 인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 통제권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앙정부에게 이전될 것으로 예상함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광태원 위원장 사퇴(2006.4.19일)
 - 정부의 분배위주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편협한 자주 장사의 참담한 실패

- 정부와 민간부문의 대북지원 및 송금(교역) 규모 : 약6.2조원~9.1조원

- 식량차관	0.7조	+ 양특회계	2.1조	
- 인도적지원	1.7조			
- 경수로차관	1.4조	+ 이자부담	0.8조	
- 자재장비차관	0.1조			
- 금강산관광	0.5조			
- 민간대북투자	1.2조			
- 불법송금	0.6조			
총 계	6.2조	+	2.9조	= 9.1조원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 무상지원의 96.9%, 전체지원의 94.2%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기타” 조항에 의한 지원 (경수로사업, 민족공동체회복지원사업 등)
 - “기타” 조항 적용 여부는 남북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통일부장·차관과 총리가 임명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 “기타” 조항에 근거한 지원의 비중

구 분	1991 ~1997	1998 ~2002	2003 ~2005.6月	누 계
무상지원	99.0%	95.4%	97.2%	96.9%
유상지원	-	93.7%	90.5%	92.2%
전 체	99.0%	94.2%	93.6%	94.2%

- 편협한 자주 장사
 -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자주” 로 포장하여 동맹간 갈등 초래
-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 2006.7.5일, 미사일 7기 발사
 - 2006.9.26일, 6자회담 복귀 공식 거부 (UN총회 기조연설 中)
 - 2006.10.9일, 핵실험 강행

※ 2006.10.9일 북한 핵실험 강행은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미국 증시는 10.3일 사상최고치 갱신(다우존스지수 11,727.34 기록, 2000.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사상최고점을 넘어섬)
- 10.4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62%(22.22포인트) 하락한 1,352.00 기록, 코스닥 지수도 전일대비 1.62%(9.67포인트) 하락한 587.32 기록함
- 10.9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1%(32.60포인트) 하락한 1,319.40 기록,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8.21%(48.22포인트) 하락한 539.10 기록함
- 10.10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반등 후 강보합세를 보이며 등락 중

□ 국 민 은 위 독

○ 거시경제 :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2007년 세계경기는 하락 예상

· 해외경제 추이

- 미국은 금리인상과 소비증가세 둔화 등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성장률 둔화 예상
- 중국도 수출둔화 및 투자 진정책 등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성장률 소폭 하락 예상
- 특히 2007년은 글로벌 과잉 유동성 축소 과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들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Seri Economic Outlook, 2006.9.13)

※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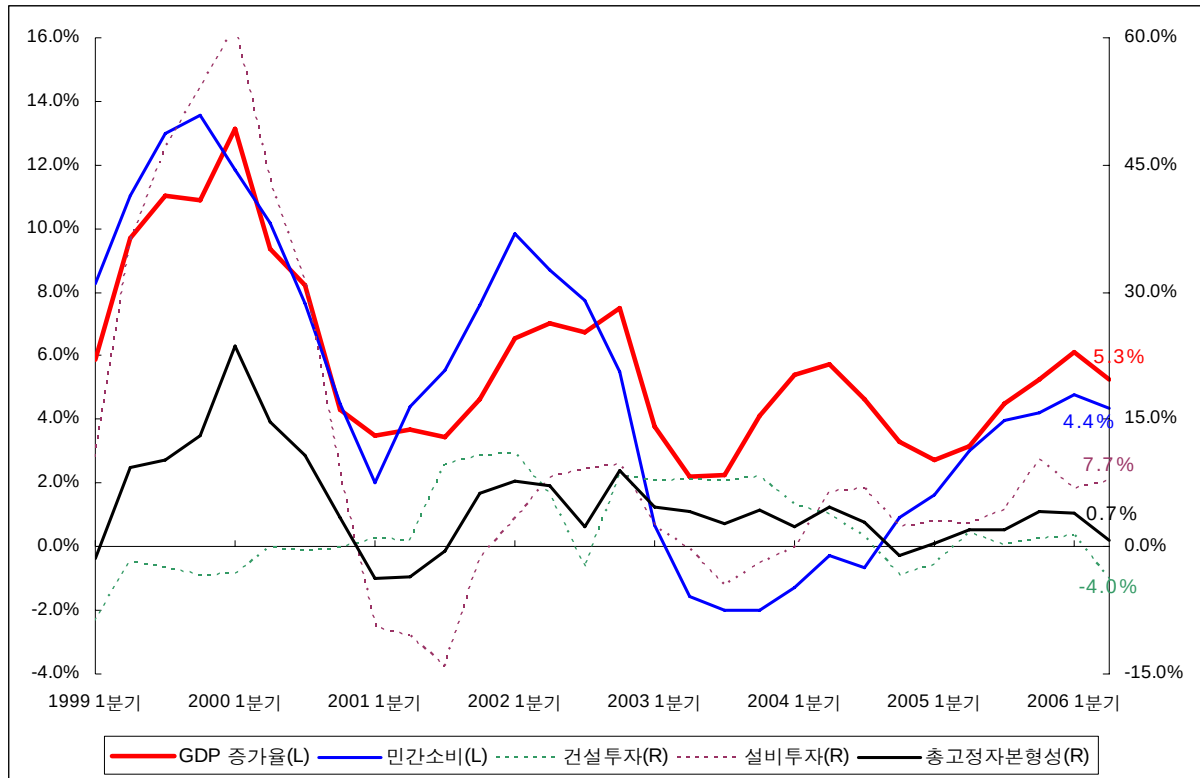
전망기관	IMF		OECD		Global Insight	
전망일자	2006.9.		2006.9.		2006.9.	
연 도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미 국	3.4	2.9	3.6	3.1	3.3	2.4
중 국	10.0	10.0	9.7	9.5	10.6	9.2
일 본	2.7	2.1	2.5	2.2	3.2	2.3
유 로	2.4	2.0	2.1	2.1	2.1	1.6

자료 : 재정경제부, 유건영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최근 국내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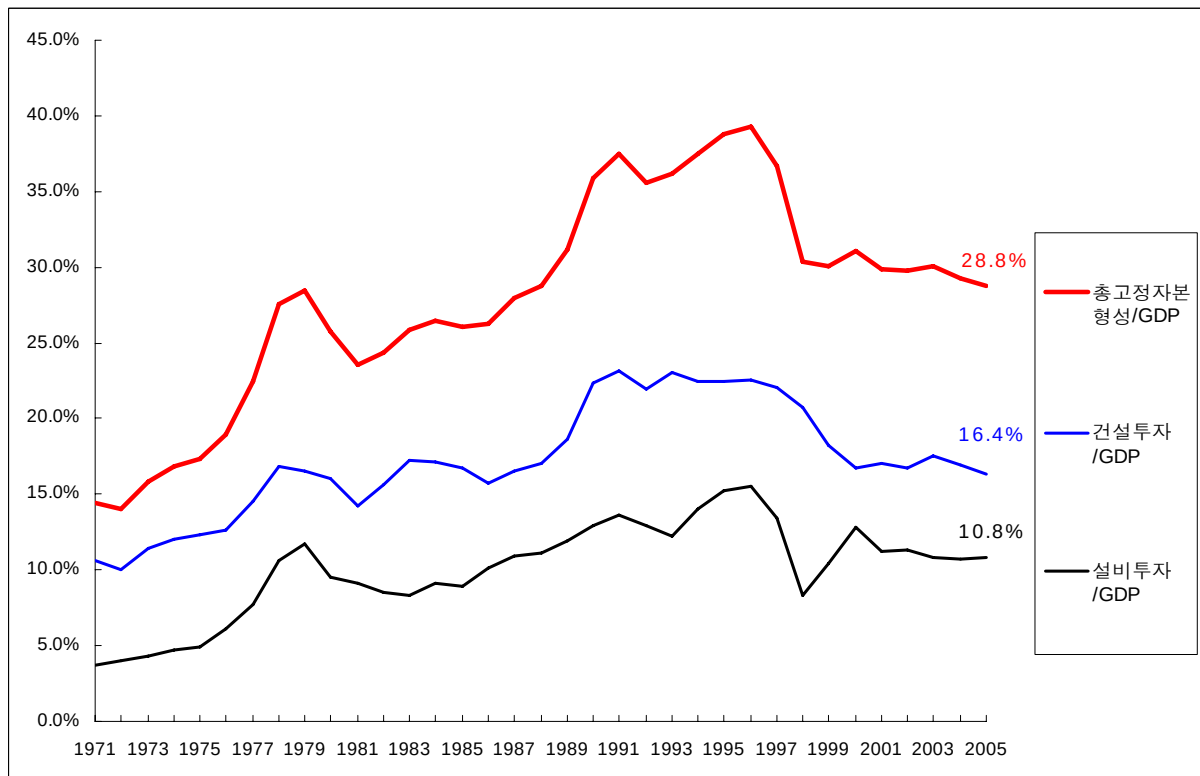
- 2006년 GDP 증가율은 1분기 6.1%, 2분기 5.3%를 각각 기록
⇒ 전년동기의 저성장(2005년 1분기 2.7%, 2분기 3.2%)에 따른 기저효과
- 건설투자는 2006년 1분기 1.2%에 이어 2분기에는 -4.0%로 급락
☞ 특히 최근 8분기(2004.3분기~2006.2분기) 평균 증가율은 -0.55%
⇒ 총고정자본형성은 2006년 1분기 3.9%, 2분기에는 0.7% 증가율에 그침

※ 국내 거시경제지표 추이(분기별)



자료 : 한국은행

※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연도별)



자료 : 한국은행

※ 각 기관별 2006년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기관별 전망치				
	한국은행 (2006.7.4)	KDI ¹⁾ (2006.7.15)		삼성경제연구소 (2006.9.13 ²⁾)	LG경제연구원 (2006.7.28)
		3/4	4/4		
GDP 성장률	4.4	4.8	4.1	4.1(4.0)	4.0
민간소비	4.2	4.5	4.0	3.7(4.0)	3.8
설비투자	5.9	10.1	6.2	6.4(6.1)	5.7
건설투자	1.6	1.0	1.3	-0.1(1.5)	0.9
상품수출	11.1	14.0	11.6	9.4(7.1)	11.0
상품수입	7.7	13.8	10.7	12.9(11.4)	14.0

주 : 1)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분기별로만 발표
 2) 각 항목별 괄호 안은 2006.5.25일 전망치임

○ 국 가 채 무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2005년 국가채무의 급증세 지속
 - 2005년말 현재 정부발표 기준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
 - 2005년도 국가채무 증가액은 45조원, 이는 GDP 증가규모(28조원)의 1.6배임
 - 참여정부 이후 2003~2005년 3년간 정부발표 공식국가채무는 114조원 증가
 - ※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액 123조원임
- 2006년 이후 국가채무 지속 증가 예상
 -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말 국가채무는 283.5조원(전년대비 14.3% 증가, 명목 GDP의 33.4%)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7년말 국가채무를 302.9조원(전년대비 6.8% 증가, 명목 GDP의 33.4%)으로 예상함
-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채무 기준(IMF 기준)에 대한 문제점
 - 선진국들은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이 실현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은 중국·대만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

- 특히 한국은행 적자 누적으로 인한 적립금 고갈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함
(한국은행법 제100조) ⇒ 2007년~2008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134	9.8%	166	23.9%	203	22.3%	248	22.2%	284 ¹⁾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84	6.5%	105	25.2%	143	35.3%	155	8.7%	165 ²⁾	6.4%
공 적 연 금 책임준비금부족액 ³⁾	340	-	382	12.4%	435	13.9%	489	12.4%	-	-
합 계	558	-	653	17.0%	781	19.6%	892	14.2%	-	-
명목 GDP	684	10.0%	725	5.9%	779	7.5%	807	3.5%	849	5.3%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2006.9.27)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국 가 채 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질의서 참조)

·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국 가 채 권 (구조조정지원분제외 ¹⁾)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 국민 불안의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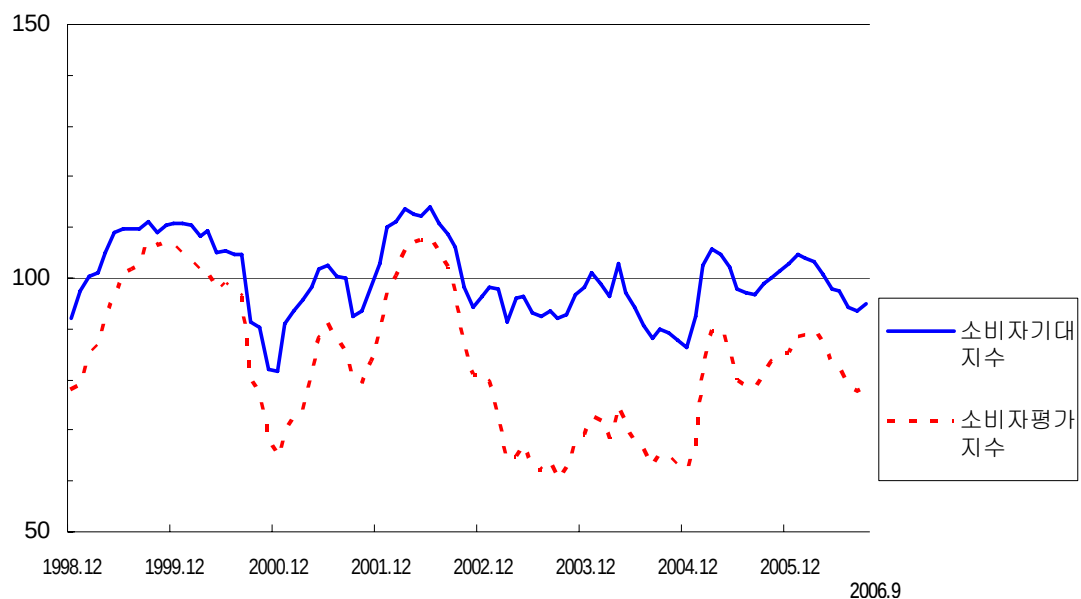
- 자살(특히 노인자살)과 경제범죄, 파산신청 급증 (참여정부 3년과 직전 3년 비교)

단위 : 명, 건, %

구 분	2000	2001	2002	평균(A)	2003	2004	2005	평균(B)	증가율 (B-A)/A
자살자수	6,460	6,933	8,631	7,341	10,932	11,523	12,047	11,501	56.7%
65세이상	1,164	1,453	2,023	1,547	2,760	3,189	3,401	3,117	101.5%
경제범죄 발생건수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80,771	29.5%
파산신청 건수	461	842	1,443	915	4,159	12,479	38,902	18,513	1922.6%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 소비자 심리지표의 하락 (소비자기대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 2006.9월 현재 소비자기대지수는 94.8(전월대비 1.1 증가), 소비자평가지수는 78.9(전월대비 1.1 증가) 기록하여 2006.3월~8월의 지속적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하는 상황
- 10.9일 북한의 핵실험 영향이 10월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함
- 특히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기준점인 100을 넘어본 적이 없음 (2002.8월 102.1 기록)

○ 고용 불안

·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3.1%
주35시간 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127	21.5%
주36시간 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730	0.7%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87	25.2%
구직단념자	165	117	69	90	100	125	80.9%

자료 : 통계청

· 체감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실질실업자 ¹⁾	1,868	1,814	1,666	1,799	1,959	2,148	28.9%
체감실업률	8.4%	8.1%	7.3%	7.8%	8.3%	9.0%	1.7%p

(주)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

○ 감세를 기반으로 한 선진 조세정책

-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vs. 가난한 자’의 구도로 몰아가서는 더불
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음
 - 소득세율 인하는 세원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
야 하며, 비과세·감면 축소와도 함께 추진해야 함
 - 법인세율 인하는 주주, 종업원,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는 것임
- 부동산 관련 무리하고 과격한 세제를 정상 과세의 틀로 환원
 - 양도소득세를 연분연승법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소득과세 제도로 흡수
 - 종합부동산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적용, 지방세로 환원
 - 보유세 증가와 보조를 맞춘 실질적 거래세 인하 추진

○ 과감한 규제개혁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 환상형 순환출자 정도만 규제할 수 있는 장치 유지, 나머지 규제는 폐지
 -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 특히, 편법 상속·증여의 문제는 정상적인 세제의 틀에서 보완·개선
- 수도권 규제 완화
 -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완화·합리화가 필요
 -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내유치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
쟁상대는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전 세계임을 명심해야 함

국가채권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현황

· 국가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2,354	2,383	5,667	5,662	7,482	6,860	21.1%
재 산 수 입	6,590	6,254	6,982	6,384	18,071	13,815	97.9%
경상이전수입	17,037	18,101	15,588	17,743	22,259	31,307	100.8%
재화/용역판매수입	1,544	1,288	1,965	1,524	2,971	921	-53.1%
관유물매각대	4,451	3,462	3,597	5,006	4,401	4,166	15.8%
융자회수금 (구조조정지원분제외 ¹⁾)	1,209,177 (1,100,415)	1,321,964 (1,155,488)	1,346,832 (1,124,724)	1,072,823	1,039,425	1,068,659	-20.7%
예금및예탁금	125,625	135,343	154,085	137,614	117,349	105,107	-31.8%
기 타 수 입	276	406	385	304	269	269	-30.1%
조 세 채 권	70,179	62,606	57,259	59,683	72,131	78,344	36.8%
합 계 (구조조정지원분제외 ¹⁾)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주1)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 연도별 종류별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2,241	2,321	5,405	5,076	6,640	6,756	25.0%
재 산 수 입	6,120	5,558	5,843	5,312	5,293	2,158	-63.1%
경상이전수입	15,851	16,550	14,483	15,662	19,518	26,316	81.7%
재화/용역판매수입	291	258	1,147	899	1,570	247	-78.5%
관유물매각대	791	474	472	349	395	320	-32.2%
융자회수금	1,590	2,012	2,456	3,519	2,882	3,842	56.4%
예금및예탁금	1,079	922	470	582	280	2,100	346.8%
기 타 수 입	55	5	2	24	33	9	350.0%
조 세 채 권	38,402	35,656	32,960	32,801	41,800	45,038	36.6%
합 계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 국가채권과 연체채권 추이의 특성

- 국가채권은 줄어들었지만 연체채권은 늘어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경상이전수입(대부분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음
- ⇒ 국가채권은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1조5,719억원(100.8%) 증가
 연체채권은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1조1,833억원(81.7%) 증가

※ 회계별 연체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증 감	증감률	비 고
일반 회계	재 정 경 제 부	1,609	1,332	-277	-17.2%	조세채권
	국 세 청	42,170	45,955	3,785	9.0%	
	관 세 청	3,463	3,925	462	13.3%	
	국 방 부	105	1,309	1,204	1146.7%	
	보 건 복 지 부	1,011	1,183	172	17.0%	
	기 타 부 처	181	217	36	19.9%	
	소 계	48,539	53,921	5,382	11.1%	
특별 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592	1,509	-83	-5.2%	
	교통시설특별회계	453	1,053	600	132.5%	
	환경개선특별회계	5,191	5,789	598	1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1,185	1,185	-	
	철도사업특별회계	1,755	0	-1,755	-100.0%	
	기타 특별회계	937	606	-331	-35.3%	
	소 계	9,928	10,142	214	2.2%	
기금	고용보험기금	3,382	4,084	702	20.8%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5,100	6,329	1,229	24.1%	
	임금채권보장기금	3,150	3,702	552	17.5%	
	국민주택기금	7,120	5,323	-1,797	-25.2%	
	농지관리기금	3	501	498	16600.0%	
	쌀소득보전기금	0	419	419	-	
	국민건강증진기금	15	284	269	1793.3%	
	응급의료기금	1	116	115	11500.0%	
	학자금대출신보기금	0	621	621	-	
	기타 기금	1,174	1,344	170	14.5%	
	소 계	19,945	22,723	2,778	13.9%	
총 계		78,412	86,786	8,374	10.7%	

○ 재경부 연체채권 관리의 문제점

· 연체채권 연령의 고령화

- 전체 연체채권 중 1년 이상 채권의 비중은 43.0%(전년대비 4.2% 증가)임
- 2005년말 현재 1년 미만 연체채권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연체채권은 22.7% 증가하였고, 특히 10년 이상 연체채권은 35.2%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연체채권 연령별비중	2005년	연체채권 연령별비중	전년대비 증감
연체채권		78,412	100.0%	86,786	100.00%	10.7%
1년 미만		47,960	61.2%	49,435	57.0%	3.1%
1년 이상	1~2년 미만	12,109	15.4%	16,108	18.6%	33.0%
	2~3년 미만	5,295	6.8%	6,788	7.8%	28.2%
	3~5년 미만	5,686	7.3%	6,578	7.6%	15.7%
	5~10년 미만	6,529	8.3%	6,750	7.8%	3.4%
	10년 이상	833	1.1%	1,126	1.3%	35.2%
소 계		30,452	38.8%	37,350	43.0%	22.7%

자료 : 재정경제부

·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미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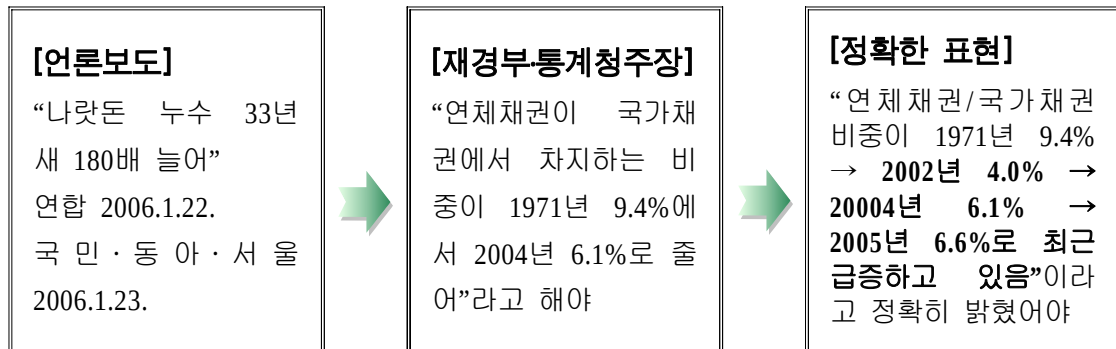
- 2003.12월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제도 도입
 - 2004.8월 성과평가기준 마련, 전 부처에 통보
 - 2005.6~7월 2004회계년도에 대해 실적평가 실시
 - 연령별 연체채권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2004년부터임
- ⇒ 2005년말 현재 연체채권 급증 : 관리시스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충당금, 결손처분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 제도가 없음

-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상 대손충당금 제도, 결손처분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가회계법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현재는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규정에 준용하여 결손처분 업무 중임

※ 언론보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부적절한 대응

- 2006.1월 국가채권관리백서 발표 당시 일부 언론에서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이 증가한 데 대해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9배가 넘었다’ 등으로 보도
- 이에 재경부와 통계청은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언론 못지않은 부적절한 논리로 일관 (2002년 대비 연체채권비율이 급증한 사실은 숨기고 1971년 대비 감소한 점만 표시함)



☞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의 홈페이지 게시 내용

1. 재정경제부 “연체채권은 정부가 떼이는 돈이 아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 (leech@mofe.go.kr)

게시일 : 2006.01.25 09:10:00

http://mof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a2_sec_1&id=2ddd4efba7cefa1c7a33d113

[정책해설] 61%가 1년미만 단기 연체...대부분 다음 연도에 상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채권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1971년 국가채권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간하는 것으로서, 국가채권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국민에게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백서 발간은 국가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채권관리백서, 나라 살림 투명성 '업그레이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채무의 절대적 규모뿐 아니라 국가의 채무 상환능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가채권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상 청구권으로서 국유재산, 물품 등과 함께 국가자산을 구성하는 중요 항목으로 의미가 크다.

참고로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 원인 반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가채권이 128조4000억 원, 국유재산 217조6000억 원, 물품 8조1000억 원, 국고금 5조 원, 외화자산 37조5000억 원으로 약 397조 원에 이른다. 자산과 부채의 비교를 통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가 정착될 경우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권은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3년간 280배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28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권은 4589억 원에서 128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국내총생산은 3조4200억 원에서 778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권 33년간 280배 증가

이렇게 국가채권이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융자를 경제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가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융자채권이 크게 증가(1971년 대비 270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행기간이 도래했으나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04년 말 현재 7조8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권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1년에 비해서는 180배 증가한 것이나, 전체 국가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의 9.4%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백서 내용 중 연체채권 증가만을 부각시켜 그동안 연체채권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연체채권 전체를 ‘나랏돈 누수’나 ‘정부가 떼이는 돈’이라는 식의 보도까지 했다.

정부의 정책과 재정상황 등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의무다. 이러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때 정부와 국민은 동반자로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국가채권 증가하면 연체채권도 당연히 늘어

우선 국가채권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난 33년간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크게 증가했다. 국가채권이 증가하면서 연체채권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의 핵심은 연체채권이 전체 국가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1년 9.4%에서 2004년 6.1%로 하락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연체채권 증가만을 부각시킨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결여한 것이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대부분은 일정기간 이내에 상환된다는 점에서 연체채권 전체를 ‘나랏돈 누수’로 보는 것도 부정확하다. 2004년 말 현재 전체 연체채권 중 61.2%에 이르는 4조8000억 원이 1년 미만의 단기간에 걸쳐 연체된 채권이며, 이런 채권은 대부분 다음 연도에 상환되기 때문이다.

백서 발간을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재정경제부 실무자들의 노력이 무시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이러한 보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부당하게 떨어뜨리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제도 활성화

앞으로 정부는 연체채권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우선 2003년 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중앙관서별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채무자 및 재산 파악과 고액 **세금채납자** 명단 공개 등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그 내용 전체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국가채권관리백서를 발간하고, 그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 통계청 “‘통계 왜곡’ 언론 공신력 스스로 떨어뜨려”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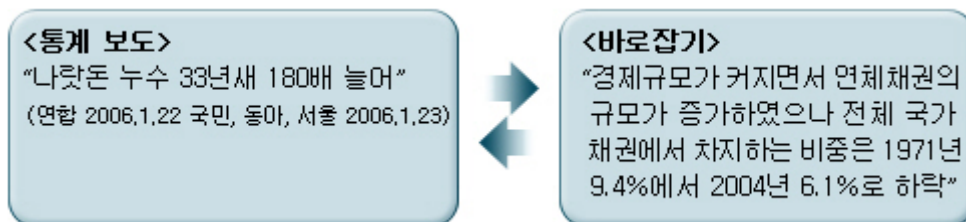
박주선 (gogo@allim.go.kr)

등록일 2006.04.21 18:04:00

http://nso.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e_sec_1&id=6992f28de41f09a75939bb01

교묘한 본질 왜곡 ‘고무줄 통계 보도’ 사례 분석

사례 4.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 늘었다?



지난 1월 23일자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가 넘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가 펴낸 국가채권관리백서에서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 증가만을 부각시켜 그동안 연체채권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숫자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더 따져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권의 규모는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3년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자연히 늘어났다. 국가채권의 증가로 연체채권의 규모 역시 늘어났다. 단순히 연체채권의 절대량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년 전인 1971년 9.4%에서 2004년 6.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로 커졌다는 보도태도는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 질 의 사 항

1. 연체채권이 2004년에는 전년대비 22.1%, 2005년에는 전년대비 2005년 10.7%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연체채권이 무려 37.2%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체채권이 국가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4.0%에서 2005년말 현재 6.6%로 급증했습니다. 비록 2003년에 공적자금 상환 이자 22조2천억원이 상환면제되면서 국가채권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2002년의 연체채권 비중은 4.6%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들어 연체채권이 급증한 점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연체채권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체채권이 늘어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격한데 대한 재정경제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특히 재정경제부는 2006년 1월 25일,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언론사의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 새 180배 늘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제의 핵심인 연체채권이 국가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9.4%에서 2004년 6.1%로 하락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은 객관적 시각을 결여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2002년 연체채권이 4.0%(공적자금 반영시 4.6%)에서 2004년 6.1%, 2005년 6.6%로 급증한 점은 왜 생략을 했습니까? 이 또한 재경부 표현대로 “객관적 시각을 결여한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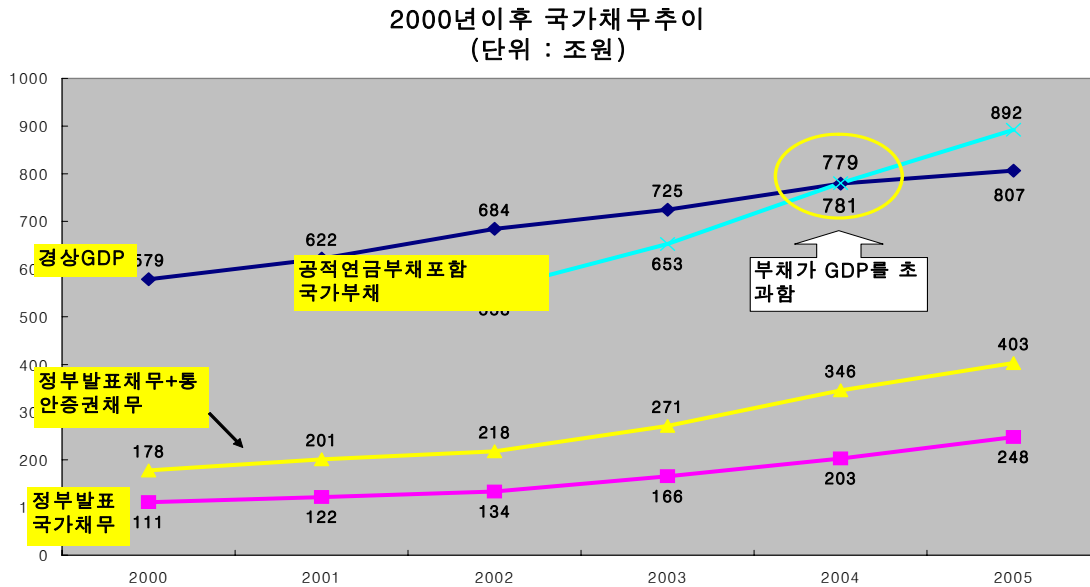
3. 재경부는 2003.12월에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6~7월에는 2004 회계연도에 대해 실적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현재 연체채권은 전년대비 8,374억원(10.7%)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부처별로 국가채권 현황과 관리대책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현황과약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부터 요구받은 다음 별도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수 부처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 만든 국가채권 성과평가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재경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연체채권에 대한 연령별 통계도 최근 2004년부터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규정도 없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채권 회수 대책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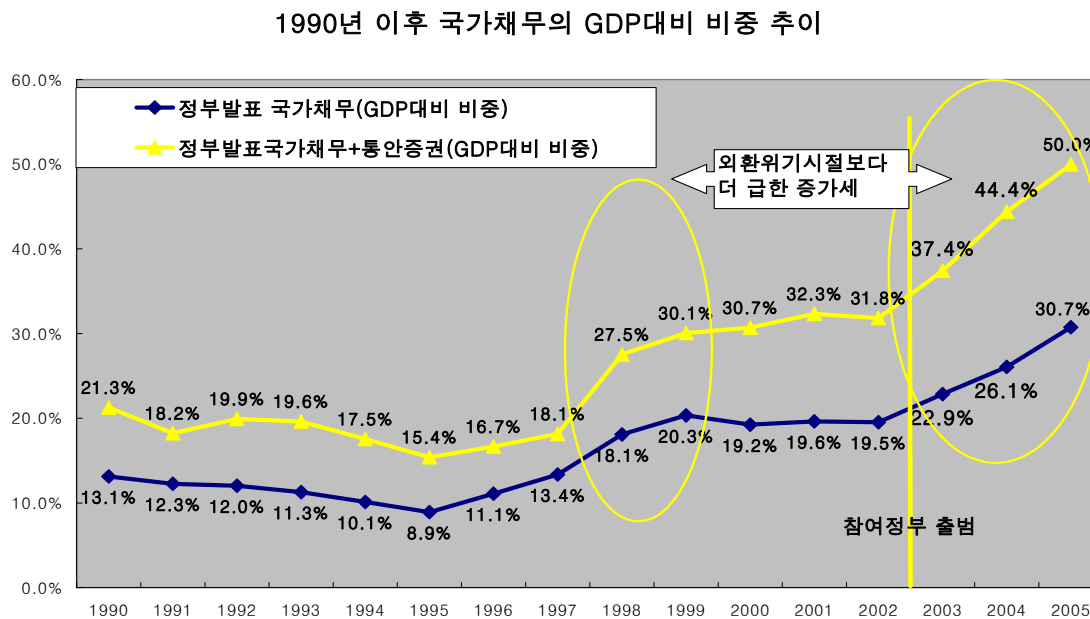
□ 첨부자료 : 국가채무 추이

- 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분을 국가채무에 포함할 경우, 2004년 국가채무는 781조 원으로서 동년도 GDP 절대규모 779조원을 넘어섰고, 2005년 국가채무(892조원)는 2005년 GDP(807조원)의 1.1배를 기록함



자료 : 재경부,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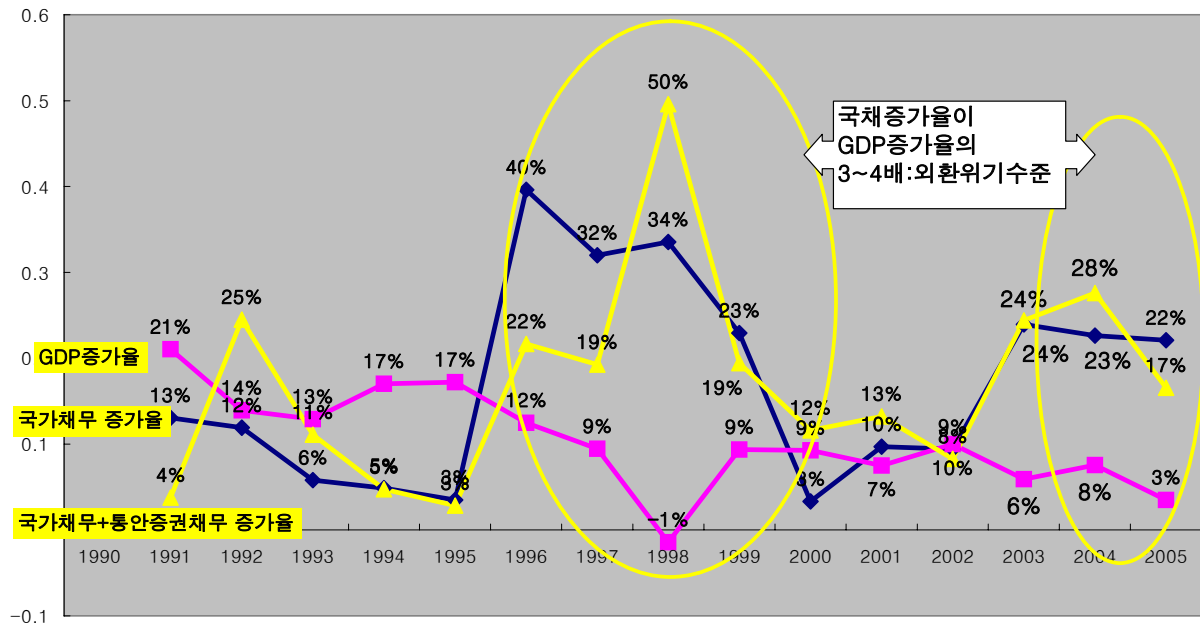
-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 또한 1990년 이후 최대수준
 - 정부발표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은 2005년말 30.7%
 - 한국은행 통안증권채무를 합할 경우 2005년말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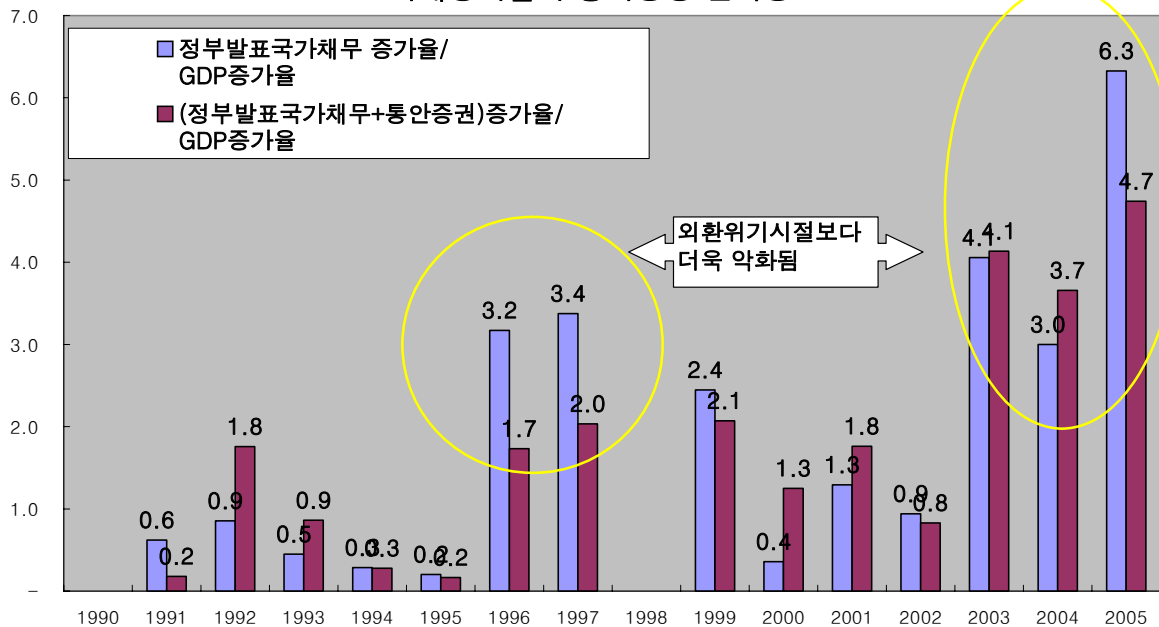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재경부

- 2003~2005년 국가채무 증가율 또한 명목 GDP 증가율의 3~4배 수준
- ※ 외환위기 전후의 국가채무증가율/GDP증가율 구조와 비슷한 상황

국채증가율과 GDP증가율



국채증가율/GDP증가율
: 국채증가율의 경제성장 탄력성



자료 : 한국은행, 재경부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

□ 대북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 대북지원 규모 및 현황(1995년~2006년 6월 말)

1995년~2006년 6월까지의 대북지원 규모

사업명	주 체	금 액		비 고
식량차관 ¹⁾	정부(유상)	2조 8,555억원	2조 1,332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223억원	남북협력기금
인도적지원	정부(무상)	1조 556억원		남북협력기금
	민간	6,454억원		민간단체 및 기구
경수로 관련	정부(유상)	1조 3,655억원		남북협력기금+ 공자금 ²⁾
자재 및 장비차관 ³⁾	정부(유상)	1,340억원		남북협력기금
금강산 관광	정부+민간	5,331억원		(4억 4,889만 달러)
개성공단	정부+민간	185억원		(1,850만 달러)
현대 불법대북송금		5,594억원 ⁴⁾		(5억 달러, 2000.6월)
총계(양특회계 불포함)		5조 338억원		
총계(양특회계 포함)		7조 1,670억원		

자료: 통일부

주석

1) 식량차관(국내산 쌀 130만톤, 외국산쌀 70만톤, 중국산옥수수 20만톤)

2) 공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은 제외함

3) 2006년 8월 31일 기준

4) 2000년 6월 평균환율인 1118.72원/\$ 사용하여 계산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관련비용은 각 연도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원화환산한 것으로 오차발생가능

※ 진영 의원실(11년간 8.5조원, 8년간 8조원)과의 차이점

- 공자금 차입하여 경수로지원한 데 오는 이자부담액 8,035억원(+)
- 민간의 대북 투자금액 1조 2천억원(+) : 개성공단 사업권 5억달러 포함
- 2000년 현대의 불법대북송금액 5,594억원(-) 등

⇒ 최대 11년간 9.1조원 (진영 의원실 8.5조원 + 현대의 불법대북송금 5억달러)

○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

1. 인도적 지원 및 식량차관 등 현물지원분에 대한 북한 내 분배의 형식적 감시
 - 국제기구 및 NGO에서 파견되어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는 상주인원은 61명인 반면, 우리 측에서 파견한 인력은 단 한명도 없음
 - 쌀 차관 지원시 통일부 직원이 분배현장을 확인하나, 사진촬영 후 한국으로 돌아오므로 북한당국이 실제 주민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릴 수 있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현안보고 中 (2005.7.12, 통일부)

대북 식량차관 분배 투명성 보장

- **제공자 표기** : 포장에 ‘쌀’, ‘40kg’ ‘대한민국’ 표식
- **분배내역 통보** : 북측은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 **분배현장확인** : 매 10만톤 수송완료 시점에서 동해안·서해안 각각 2곳 (총 20곳) 현장확인 추진(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

※ 주간동아 [한국 지원 쌀, 왜 북한군이 가져가나] (2006. 9. 12)

- 통일부는 직원을 보내 실제로 북한주민에게 쌀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나, 검증팀이 철수하고 난 다음 북한군이 쌀의 운반과 경비에 투입되었다는 점은, 북한 군부가 쌀을 빼돌렸거나 배급이 끝난 뒤 주민들로부터 다시 수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지원한 쌀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유출돼 연지(延吉)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탈북자에게 북한군이 쌀을 운반하는 동영상을 입수한 사람 발언)

2.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

- 2004년 북한의 명목GDP는 23.7조원으로서 남한(779조4천억원)의 33분의 1 수준에 불과, 같은 해 대북지원금액은 7,309억원으로서 북한 명목GDP의 3.1%규모(2004년의 경제 성장률은 2.2%임)
- ☞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 1999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세가 (+)로 전환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연도별 명목GDP, 경제성장률(실질), 대북지원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항목명	명목GDP	실 질 경제성장률	대북지원/ 명목 GDP	대북지원
1995	17,132.0	-4.1%	1.1%	185.2
1996	17,222.0	-3.6%	0.0%	3.6
1997	16,784.4	-6.3%	0.3%	42.2
1998	17,538.6	-1.1%	0.2%	42.9
1999	18,688.1	6.2%	1.6%	303.5
2000	18,927.5	1.3%	6.8%	1,290.8
2001	20,222.8	3.7%	2.6%	524.2
2002	21,276.7	1.2%	6.3%	1,333.5
2003	21,887.4	1.8%	6.3%	1,387.6
2004	23,707.0	2.2%	3.1%	730.9

주 : 지원규모 7조1천억원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통일부

※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A)	비 중 (A/C)	미 국 (B)	비 중 (B/C)	합 계 (C=A+B)
1995~1997 (김영삼정권)	15.0	43.2%	19.7	56.8%	34.7
1998~2002 (김대중정권)	114.0	39.9%	171.7	60.1%	285.7
2003~2005 (노무현정권)	150.0	89.7%	17.3	10.3%	167.3
총 계	279.0	57.2%	208.7	42.8%	487.7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북한의 무역수지는 8억2천만달러의 적자, 1995년 이래 무역수지의 누적적자는 64억7천만달러임

☞ 2004년까지의 누적 대북지원액은 약 49억달러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북한 무역수지 누적적자인 64억 7천만달러의 76%임

자료: 한국은행

※ 북한의 연도별 수출/수입과 대북지원액

단위 : 억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대북지원	대북지원/ 무역수지
1995	7.4	13.1	-5.7	2.3	41%
1996	7.3	12.5	-5.2	0.0	1%
1997	9.1	12.7	-3.6	0.5	13%
1998	5.6	8.8	-3.2	0.3	10%
1999	5.1	9.6	-4.5	2.5	56%
2000	5.6	14.1	-8.5	11.1	130%
2001	6.5	16.2	-9.7	4.0	42%
2002	7.4	15.2	-7.8	10.4	133%
2003	7.8	16.1	-8.3	11.6	139%
2004	10.2	18.4	-8.2	6.3	76%
합계	72	136.7	-64.7	49.1	76%

※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연도	북한		식량지원규모					
	경제 성장률 (실질)	곡물 생산량	한국지원 (B)	북한생산량 대비 (B/A)	미국지원 (C)	북한생산 량대비 (C/A)	한미합계 (B+C)	북한생산 량대비 ((B+C)/A)
1995	-4.1%	345.1	15.0	4.3%	0.0	0.0%	15.0	4.3%
1996	-3.6%	369.0	0.0	0.0%	2.0	0.5%	2.0	0.5%
1997	-6.3%	348.9	0.0	0.0%	17.7	5.1%	17.7	5.1%
1998	-1.1%	388.6	4.0	1.0%	20.0	5.1%	24.0	6.2%
1999	6.2%	422.2	0.0	0.0%	69.5	16.5%	69.5	16.5%
2000	1.3%	359.0	50.0	13.9%	26.5	7.4%	76.5	21.3%
2001	3.7%	394.6	10.0	2.5%	35.0	8.9%	45.0	11.4%
2002	1.2%	413.0	50.0	12.1%	20.7	5.0%	70.7	17.1%
2003	1.8%	425.2	50.0	11.8%	4.0	0.9%	54.0	12.7%
2004	2.2%	431.2	50.0	11.6%	11.0	2.6%	61.0	14.1%
2005	N.A.	N.A.	50.0	-	2.3	-	52.3	-
총계	-	-	279.0	-	208.7	-	487.7	-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은행

- 북한의 총 예산은 112.5억달러(11조) 수준이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사비는 2000년~2003년 총액이 61.4억달러임 (2004년 국방백서, 국방부)

☞ 7조 1천억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북한 정부 1년 살림의 70%를 책임지는 규모, 혹은 북한의 군사비를 무려 4년간 지원하는 규모인 셈

- 총 대북지원금액인 7조 1천억원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추산비용(최대 7600억원)의 9.3배에 이르는 금액

☞ 우리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북한은 이번 핵 실험과 같은 실험을 9번이나 할 수 있음

※ 중앙일보 2006.10.13 [경제 거덜난 북한 그 돈 어디서 났나] 기사 中

3. 기타 문제점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 경수로 사업 손실에 대한 대책 부재
- 대북사업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미적립

북한의 핵 개발 직접비용 (단위:달러)	
영변 5MWe 원자로 건설	5700만~1억7000만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2000만~5900만
플루토늄 생산(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가동)	2400만~7300만
핵무기 설계·제작(1발)	3300만~1억600만
기타 비용(우리놈 체광·정련 등)	5600만
소계 소형 플루토늄 1발 생산	1억9000만~4억6400만
+ 1회 핵실험	1억~3억
총액 플루토늄 핵폭탄 1발 생산 + 핵실험	2억9000만~7억6400만

자료: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국방부)

4. 참고사항

-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남한인구 평균수명 78.2세, 북한인구 평균수명 64.5세(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 20~25세 남한 남자 평균키 173.3cm, 북한 남자 평균키 158cm (중국 신화 통신이 AP통신의 ‘2005년 상반기 동아시아 통계연감’ 인용)
- 탈북자수 06.5월 현재 총 8,403명
(98년 이후 매년 2배씩의 급증세를 보이다가 ‘02년 1,000명을 상회하고부터 증가세가 안정화되어 2005년에는 1,383명 입국) (통일부, 2006.8.17)

□ 질의사항

1. 우리가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 동포가 굶어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이후 탈북자수가 매년 2배씩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천여명 정도씩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간GDP의 3%~6%에 달하는 우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한의 경제규모는 2004년 명목GDP기준으로 남한의 33분의 1 수준입니다. 1999년 이후 매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북한 명목 GDP의 3%~6%수준이었습니다. GDP의 1%는 한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1999년 이전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가 한-미 식량지원이 본격화된 1999년 6.2% 성장으로 급변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우리와 미국의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3. KDI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제공한 쌀과 비료가 결국 북한 당국의 예산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CRS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빼돌려지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인들이 운반을 하는 경우가 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정부는 분배정책에 많이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분배문제를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 물자들이 북한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분배의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재경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5. 최근 북한 관련 경제통계를 보면 미약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의 실제 삶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야 할 텐데 탈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6.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의 4년동안 북한의 총 군사비가 61.4억달러입니

다. 우리의 대북지원액 7조 1천억원을 각 연도 당시의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62.4억달러입니다. 대북 지원액을 9조 1천억원으로 계산하면 80억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의 4년치 군사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이번 핵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9번이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를 도와준 셈 아닙니까?

7. 지난 10일 재경위 회의 보고자료에서 장관은 북한핵실험이 경제 펀더멘탈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해외에서의 시장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1일에는 당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던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핵실험이 단기적으로만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외평채 발행을 연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굳건한데도 외화차입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외면하시는 겁니까?

8.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 계정에 대해 손실처리해야 할 금액(원금만 1.4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리고 손실처리는 공자기금 손실로 할 것인지 남북협력기금 손실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손실처리 문제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손실처리는 언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정책 실패

□ 질의사항

1. 투기와 투자

-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투기가 경제학 또는 경제전문 용어입니까?
- 투기하는 사람은 매수자입니까 아니면 매도자입니까, 혹은 둘 다 가능하니까?

2.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수요 초과가 있는 경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니까?

3.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초과가 있는 경우 환율 하락(절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니까?

4. 이 경우 달러 공급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들이 투기세력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5. 그렇다면 시장참여자들 중 일반 투자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6. 예를 들어 달러 공급 초과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수출기업이 달러화 하락을 예상하고 선물환거래를 통해 달러화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투기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까?

7. 재정경제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 중 약 800억 불 규모의 사상 최대의 달러 초과공급이 발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의 초과공급은 왜 발생했습니까?

8. 2003년 하반기에는 이미 유럽은 유로화의 화폐가치 상승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일본도 2003년 가을 무렵부터 환율가치의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1150원을 고수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환율고수 정책이 투기세력들을 더욱 모여들게 한 촉매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9. 특히 2003년 하반기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 유입이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투자를 많이 하려면 원화 수요, 즉 달러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투기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대통령께서는 주식가격이 오른 것을 대단한 치적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재정경제부의 논리대로 하면 결국 대통령은 해외 투기세력 덕분에 참여정부 유일한 치적을 쌓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1.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국제금융국장은 “하루에 (현물환 시장에서) 25억불에서 30억불 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만약에 NDF나 주식자금으로 15억불 이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투기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의 NDF 시장 추세를 보면 이것은 전혀 잘못된 답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DF 일평균 거래량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6.7억불에서 2003년 13.4억불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2004년 17.0억불, 2005년 26.1억불로 더욱 크게 늘어나서 2006년 2분기의 경우 45.1억불로 늘었습니다. 최근 NDF 시장 참가자들도 모두 투기자들입니까? 부총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일평균 NDF 거래량 및 외국인주식투자 추이(연도별)

단위 : 억달러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Q	2006.2Q
NDF	4.0억불	5.1억불	6.7	13.4	17.0	26.1	37.1	45.1
일평균거래량	(-)	(27.5%)	(31.4%)	(100.0%)	(26.9%)	(53.5%)	(42.1%)	(21.6%)
외국인주식투자 순유입	-	-	-8	135	94	-24	-	-
유 입	-	-	654	816	1,161	1,481	-	-
유 출	-	-	662	680	1,067	1,505	-	-

* 주) 괄호 안은 전년(2006년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 자료 : 한국은행, 「외환시장 동향」, 각 분기

12. 2004.1.15일 재정경제부는 NDF를 거래하는 국내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에 대해 매입초과포지션을 규제했고, 2004.1.19일 매도초과포지션을 규제했습니다. 둘 다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포지션을 규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경우 은행 자산규모의 몇 % 식의 규제가 상식에 맞고 특정일 현재 그 은행의 포지션으로 동결하는 규제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포지션 규제를 전일 날짜의 상태로 소급해서 동결하는 것은 더욱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고 무리한 규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 만약 이 포지션 규제가 발표되기 전날, 즉 포지션이 동결되던 날 미리 이 사실을 누군가 알았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14. 향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규제는 특정 외국계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경부 당국자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리 떠도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5.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004년 1~2월 중 정부의 NDF 규제조치 이후 ‘역내외 스왑레이트차’와 ‘내외금리차’와의 격차를 이용해서 활발한 재정거래(arbitrage)가 일어났고,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규모가 2004년 1분기 중에만 34.1억 달러에 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3년 “연간” 실적 9.7억달러의 3.5배에 달하는 규모가 불과 “한 분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문 시장혼란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부총리도 인정하십니까?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규모 추이

(억달러)

2002	2003	2004 ^P	1/4	2/4	3/4	4/4
3.6	9.7	31.4	34.1	-3.6	-0.9	1.8

자료 : 한국은행

[참고자료]

주요 통화의 對米달러화 변동률¹⁾

(%)

	한국 원화	엔화	유로화 ²⁾	대만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중국 위안화	인니 루피아화
2002년	10.7	10.6	17.9	0.7	6.3	0.0	16.4
2003년	-0.5	11.0	19.9	2.3	2.2	0.0	6.3
2004년	15.2	4.3	7.7	7.2	4.1	0.0	-9.3
2005년	2.3	-13.0	-12.7	-3.5	-1.8	2.6	-5.6
2006.1~9.	6.9	-0.1	7.0	-0.8	4.8	2.1	6.5
02.1~06.9	38.7	11.7	42.8	5.8	17.5	4.7	13.0

주: 1) 각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해당기간중 절상(+) 및 절하(-)율(%)

2) 뉴욕시장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 행정복합도시 건설, S 프로젝트, J 프로젝트, 공기업 본사 지방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전국토의 부동산 가격 급등
- ⇒ 개발지역 수용 자금이 시중으로 풀려서 자금 풍부해져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 적절한 공급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

- 강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짓겠다고 했던 판교신도시는 중대형 비율 축소
- 강남지역의 유일한 주택공급 방법인 재건축을 규제
-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공급 정책
-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정책
-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공급 부족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불가능

○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매매시장과 전세·임대시장 고려 부족

- 2주택 이상 보유자 : 양도소득세율 50% 단일 세율 부과(2007년 시행)
- 3주택 이상 보유자 : 양도소득세율 60% 단일 세율 부과(2004년 시행)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율의 급격한 인상
; 2005년 50% → 2006년 70% → 2007년 80% → 2008년 90%
→ 2009년 100%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하향과 세대별 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급증

cf)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

-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5%p씩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
- 토지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5%p씩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 ① 급격한 조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전세·임대자에게 전가
→ 전세가격 상승, 월세로 전환 → 서민부담 가중
- ② 양도소득세 종과에 따른 소형주택 위주의 매물 증가
→ 소형주택 가격 하락, 중대형 주택 가격 상승 → 서민부담 가중

⇒ 중장기적으로 세 부담은 주택가격에 반영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

- 감사원의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2005년 7월)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저소득층이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개발되는 택지지구에서 집중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 이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기초로 산출한 수도권 생활권별 임대주택수요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외곽의 과다 공급 계획된 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생활권		임대주택소 요(A)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권역	서울도심으로부터 의 거리(km)		소계(B)	1998~2002	2003~2007	B/A(%)
안산, 시흥권	30	7,620	23,119	2,051	21,068	304
김포권	30	4,680	14,248	2,309	11,939	304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권	35	1,740	15,403	4,932	10,471	885
수원, 용인, 화성권	35	14,040	62,811	17,441	45,370	447
평택, 오산, 안성권	45	4,900	22,793	4,654	18,139	465

자료 : 감사원 감사자료

□ 질의사항

-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주택은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주택공급 정책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참여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생각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주택공급의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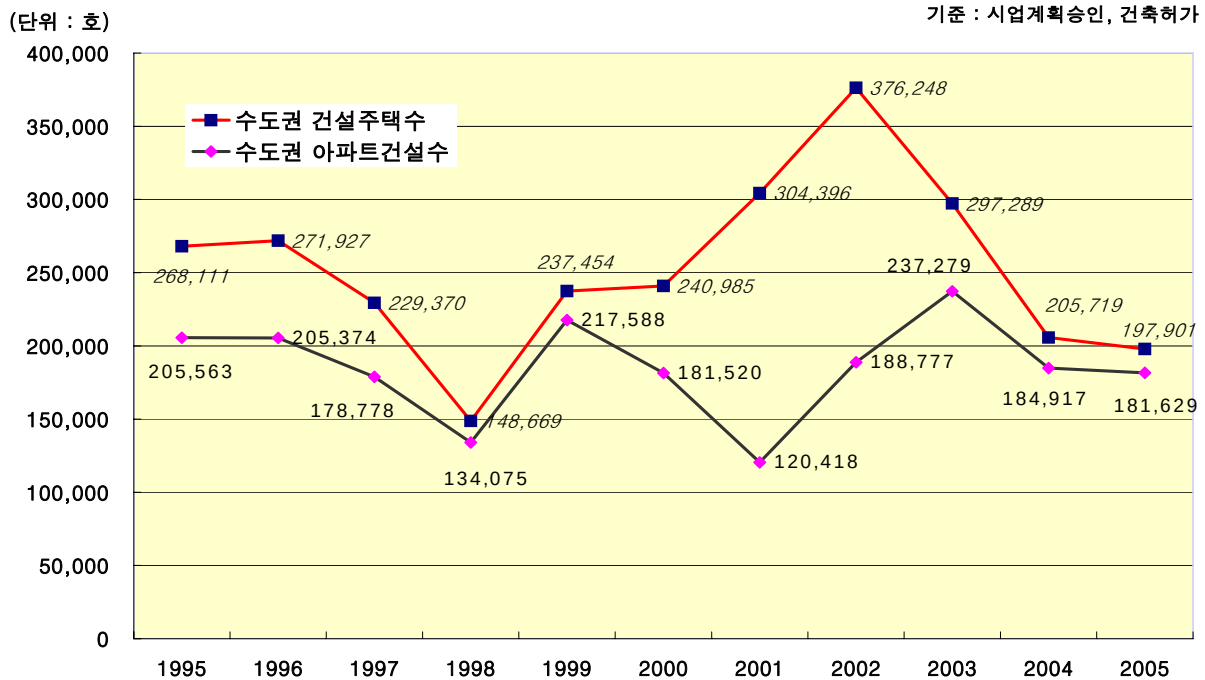
- IMF 이후 침체된 수도권의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 2005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절반인 52.6%에 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급격히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268,111	271,927	229,370	148,669	237,454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아파트	205,563	205,374	178,778	134,075	217,588	181,520	120,418	188,777	237,279	184,917	181,629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건설교통부

- 서울의 주택공급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 2005년 서울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1/3인 32.4%에 불과
(서울 주택공급 급격히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서울 주택건설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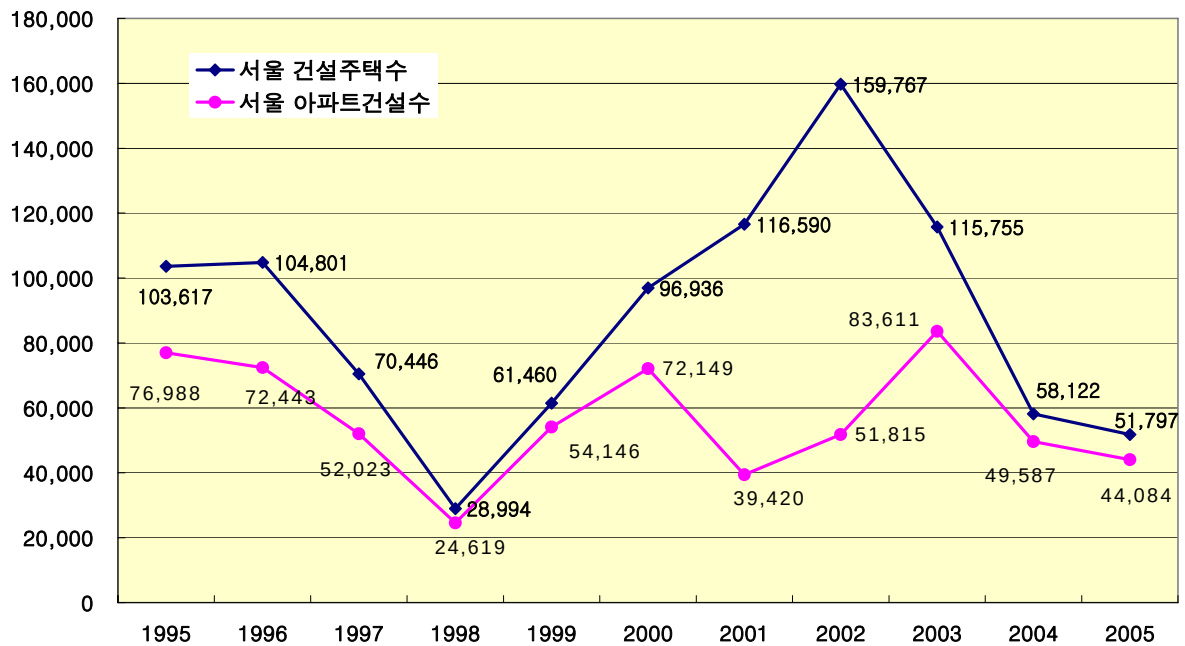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103,617	104,801	70,446	28,994	61,460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아파트	76,988	72,443	52,023	24,619	54,146	72,149	39,420	51,815	83,611	49,587	44,084

자료 : 건설교통부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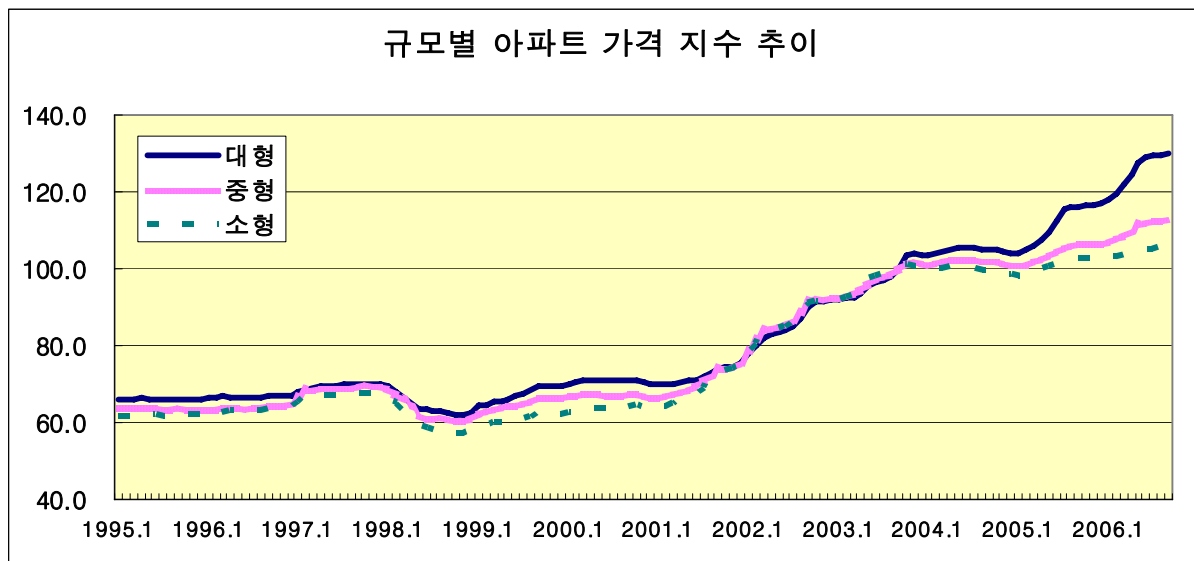
기준 :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자료 :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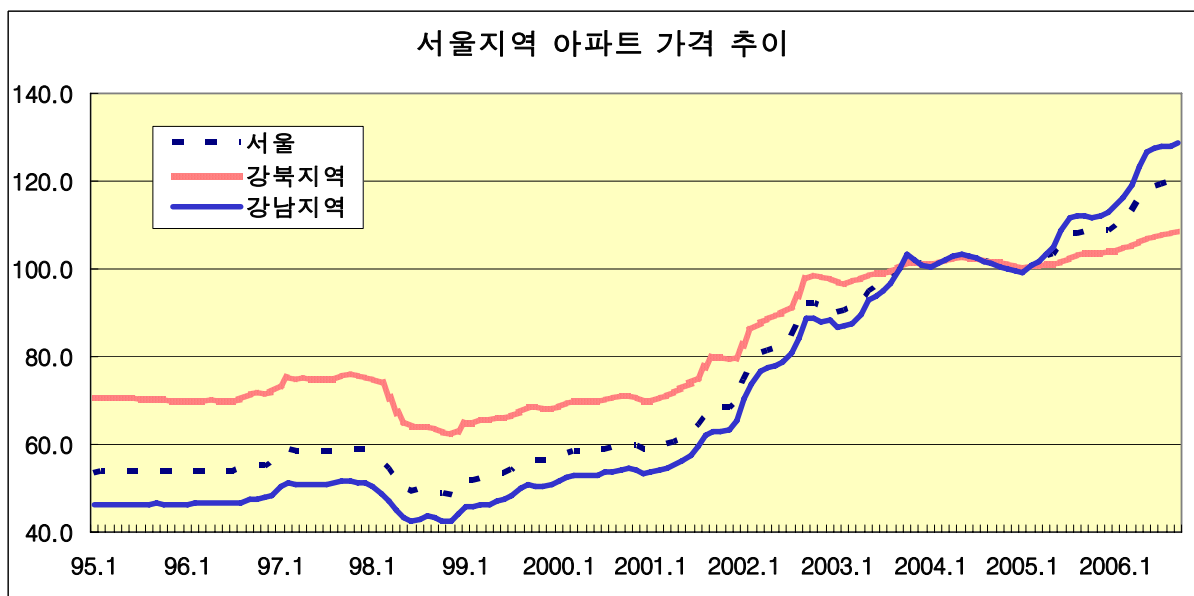
- 수요억제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은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줄였고, 그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003년 9월의 가격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규모가 큰 아파트의 가격 지수가 더 많이 상승



※ 소형 : 19평 미만, 중형 : 19평 ~ 29평 미만, 대형 : 29평 이상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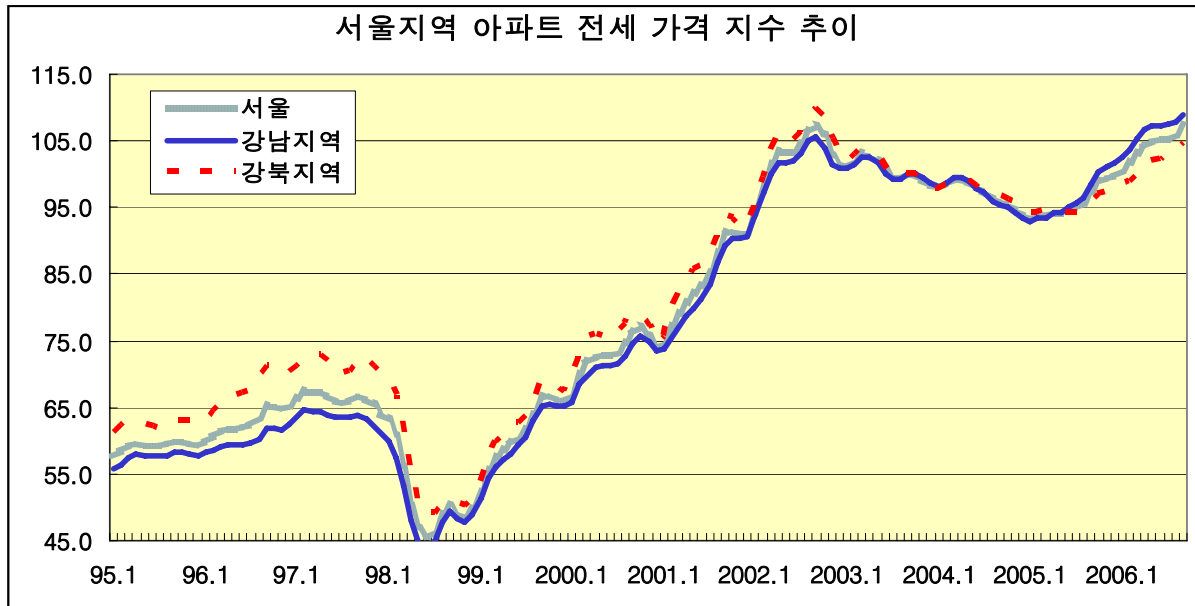
- 8.31 부동산 대책이후 오히려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
 - 특히,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급등
 - ⇒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완전 실패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 10.29 부동산 대책, 8.31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가격 상승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 ‘쌍춘년 결혼 호재와 이사철 수요’ 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6년 봄부터 ‘전세대란’ 우려. 추석이후 전세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에는 ‘학군이동’ 등의 요인으로 다시 급등할 가능성

⇒ 2002년 전세대란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임

○ 지방 주택시장의 붕괴(미분양 주택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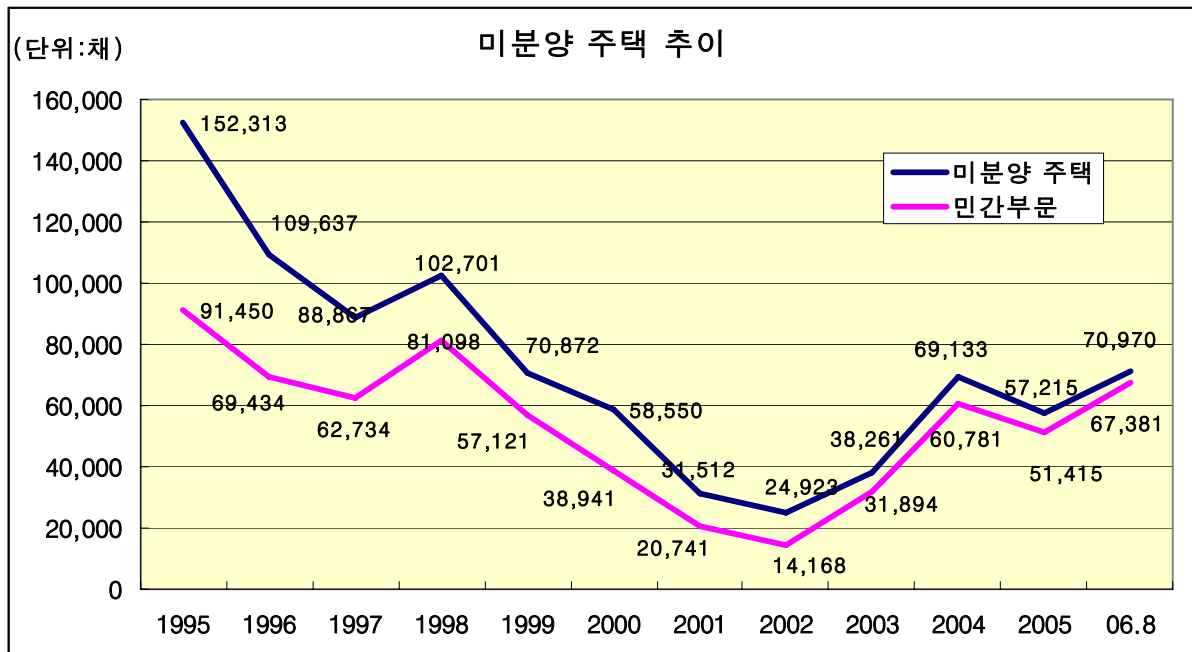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2002년에 비해 2006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 285%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계	152,313	109,637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0,970
민간부문	91,450	69,434	62,734	81,098	57,121	38,941	20,741	14,168	31,894	60,781	51,415	67,381
공공부문	60,863	40,203	26,133	21,603	13,751	19,609	10,771	10,755	6,367	8,352	5,800	3,589
(준공후)	17,919	12,304	7,567	18,102	17,810	16,272	8,834	5,425	5,874	10,314	10,983	12,437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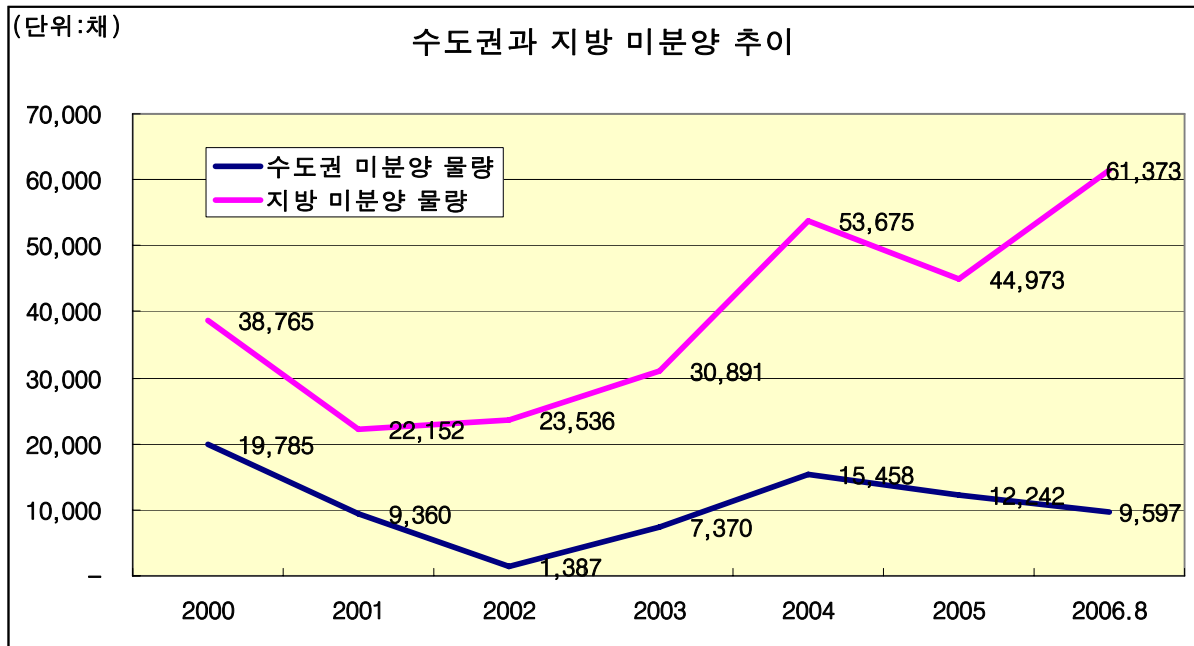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06년 8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2년에 비해 261% 급증
- ⇒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가 전체 미분양 주택의 증가 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9,597
비수도권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1,373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건설교통부

○ 아파트 공사 미착공, 시공 중 공사중단 급증

-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247개 건설 사업장에서 8만 9,230가구가 공사중단 되거나 착공 연기
 - 2003년 전국 33개 사업장 1만 2,441가구(지방 20개 사업장 5,354가구)
 - 2004년 전국 34개 사업장 2만 773가구(지방 17개 사업장 2,804가구)
 - 2005년 전국 61개 사업장 2만 4,783가구(지방 26개 사업장 8,806가구)
 - 2006년 6월말 전국 35개 사업장 9,277가구(지방 21개 사업장 4,992가구)

※ 공사 중단 이유 : 부도, 자금난 건설경기 침체 등

□ 질의사항

- 각종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추진하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과 지방 건설사의 타격이 매우 심각함. 과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최근 또다시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나타나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준비되지도 않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후보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3. 논의도 없이 발표되는 신도시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확대 발표(2006. 10. 23 기자간담회)

-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 없이 건설계획 발표
-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신도시 1곳은 기존에 발표한 (과주, 동탄 등) 신도시를 확대하고, 다른 1곳은 신규로 지정
- 도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 내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
-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신도시를 공급

○ 8.31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추진
 - 종부세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그동안의 규제정책은 변함없이 추진
 - 강남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

○ 건설교통부 장관의 잘못된 부동산 상황 인식

- 최근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
 - 10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있을 것
- 8.31대책은 강력한 정책이며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 없이 어느 누구도 근간을 흔들 수 없음. 국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인데 상위 1%가 전체 집값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됨
-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

○ 신도시 확대 지역 및 관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 10월 27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
 -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 인천 검단지구(340만평, 5만 6천가구, 15만명)
 - 규모가 커지는 곳은 파주 운정신도시(284만평→497만평, 7만 5천가구, 20만명)
 - : 파주교하지구와 합칠 경우 559만평
- 인천 검단지구의 부동산 가격 급등. 매물 회수 및 계약 파기
- 파주신도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

○ 공급 확대 정책이 중요하지만, 경직적인 정부 통제 위주의 공급 정책은 곤란

- 현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형평형 비율 등을 통해서 규제
-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급의 예로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함

□ 질의사항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펠프스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자에게 세금 많이 거두면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세정책은 세 부담 전가를 통해 모든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는 말을 했는데,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공급계획을 예고도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솔한 행동으로 오히려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 8.31 부동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1. EITC 도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2008년부터 지급

·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대

적용 단계	적용 대상
1단계(2007~2009년)	무주택, 재산1억 이하, 자녀(18세미만) 2인 이상 근로자
2단계(2010~2012년)	1단계 + 자녀 1인 이상 근로자
3단계(2013년~)	2단계 + 자녀 1인 이상 자영업자 + 자녀 1인 이상 특수직 사업자(보험모집인, 캐디, 대리운전원 등)
4단계(시기 미정)	무자녀 가구 포함해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이면 모두 지원 대상

※ 단계별 실시시기는 소득차익 시작 연도기준, 실제 지원금은 1년 후에 지급

연간 근로소득별 EITC 지급액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지급액	사 례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10%	300만원 근로소득→30만원 지급 500만원 근로소득→50만원 지급
800 ~ 1,200만원	지급액 상한선(80만원)	800만원 근로소득→80만원 지급 1,000만원 근로소득→80만원 지급
1,200 ~ 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액) ×16%(점감률)	1,400만원 근로소득→48만원 지급 1,500만원 근로소득→32만원 지급

※ 부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이 1,700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액에 한해 EITC 적용

○ EITC 도입 준비 미비

- EITC의 실시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세원파악임
 - 세원파악이 얼마나 가능할지 알 수 없음
 - 현재 국세청은 소득파악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소득파악 수준을 언제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없음

- 근로자 면세자 비율은 2004년 기준 57.9%(일용근로자 포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추이(%) : 52.8(01) → 56.4(02) → 56.6(03) → 57.9(04)

cf) 국세청 발표 근로자 면세자 비율 추이

: 44.2(01) → 48.5(02) → 45.8(03) → 46.1(04)

-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52.5%

※ 종합소득자 과세인원 비율 추이(%) : 47.4(01) → 49.2(02) → 51.3(03) → 52.5(04)

근거과세(장부 증빙) 인원비율은 2004년 기준 53.6%

※ 근거과세 인원 비율 추이(%) : 45.4(01) → 47.3(02) → 50.1(03) → 53.6(04)

추계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46.4%

※ 추계인원 비율 추이(%) : 54.6(01) → 52.7(02) → 48.9(03) → 46.4(04)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5년 기준 38.9%

※ 간이과세자 비율 추이(%) : 49.8(01) → 46.5(02) → 44.4(03) → 41.7(04) → 38.9(05)

- EITC 제도에 대한 Delivery System이 합당한 수준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자영업자 등 세원파악을 위해 국세청 필요인원조차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
- EITC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를 묶어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겠다는 방안도 없음

□ 질의사항

- EITC 도입 준비가 미비된 상황에서 급하게 EITC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원파악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도 되지 않는 불완전한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면밀한 검토가 있는 후에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무리하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세원파악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될지 추계도 못하는 상황에서 EITC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매우 심함
 - 불임 부부 등 자의가 아닌 신체적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들의 세부담도 강화되어 반발이 심함
- 실질적인 증세를 위한 방안
 - 저출산 문제를 내세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이자, 저출산 문제를 조세제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발상
 - 세수 증대 효과 1,300억원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시 5,500억원 증대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 도입으로 4,200억원 감소
 - cf)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자(약 240만명) 및 자영업자(약 140만명) 약 3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

○ 조세개편은 세수중립적이어야 함

- 조세개편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 조세중립적이어야 함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못
- 인적공제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면 가구 구성원에 따른 세부담이 공평하게 될 수 있음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공평>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근로자와 사업자간 차별적 소득세제 적용
 - ;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두어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짐

⇒ 성실한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근로자와 사업자의 면세점 비교(4인가족 기준)

구 분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면세점
근로자	400만원	100만원	70만원	1,012만원	1,582만원
사업자	400만원	60만원	48만원	-	508만원

자료 : 재정경제부

□ 질의사항

- 무슨 이유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하려고 합니까? 부동산을 세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하더니,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 세제개편은 최소한 조세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도록 개편안을 만든 이유는 무엇있니까? 저출산을 이유로 실질적인 증세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3. 성실납세제도 도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성실납세제도 주요 내용

- 성실중소사업자에게 회계장부의무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전자장부 허용
-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정액법·내용연수 단일화, 접대비·기부금 한도화

○ 근거과세에 역행하는 제도

- 지나친 간소화와 자율화를 통해 탈세, 회계처리 경직성 문제 발생
-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집요한 시도

-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연설 이후 재정경제부는 근거과세를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를 집요하게 통과시키려 함

□ 질의사항

- 근거과세에 역행하는 성실납세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세제가 오히려 뒷걸음 치려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소득에 응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름까지 성실납세제도로 그럴듯하게 변경하여 좋은 제도인양 포장하는 것부터 문제.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4.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과 함께 고려 필요
 - 2005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비롯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
 - 1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직불(체크)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세원파악을 위한 감면임을 고려할 때, 직불(체크)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문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모두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 질의사항

- 작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해 놓고서는 1년도 안돼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만 다시 20%로 환원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소득감면 도입취지가 세원파악을 위한 것임을 볼 때,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의도는 좋으나, 방법은 잘못된 세제개편

-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정부가 나서서 성형공화국 만들기

- 정부가 나서서 미용·성형 수술을 권장하는 효과 발생 가능성
: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화로도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세원과약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성형 수술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할 일을 말도 안되는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정부분의 세원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공제제도를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움.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언제 조세선진화를 이룰 것입니까?

차명거래금지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범죄에 차명계좌 이용 문제

- 많은 범죄에 일명 ‘대포통장’ 으로 불리는 차명계좌가 항상 이용
 - 국세청 사칭한 환급 사기에도 차명계좌 이용
 - 특히 마약, 사기, 불법 거래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는 차명계좌가 연계되어 있음
- 문제는 차명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계좌주인이 계좌 개설 시 본인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아님
- 범죄 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소득을 탈루

※ 차명거래는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사적(私的) 계약이기 때문에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로 막을 수 없음. A씨가 B씨 명의로 예금을 맡겼다가 분쟁이 생겨도 A씨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됨

○ 차명계좌의 원래 주인은 노숙자 등

- 사회적 약자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를 범죄에 이용
-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 대포폰’ 등에도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는 문제

○ 차명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차명거래 폐지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창회비 등을 내기 위해 회장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도 안됨
- 재정경제부에서도 10년 전부터 차명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금융회사가 실소유주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함
-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사후적 대처일 뿐이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

□ 질의 사항

- 탈세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금융실명법 도입 당시 차명거래를 금지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인해 도입되지 않았음. 올 1월 11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2년 정도 앞당길 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일정을 앞당기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외환자유화와 차명거래 금지의 연관성으로 살펴볼 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함.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차명거래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차선택은 무엇입니까?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성 여부 결정 문제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많은 조세분쟁 발생
 -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거래가의 적정성 여부
-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공시가액으로 할 것인지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할 것인가 여부
 - ⇒ 실거래가 검증에 문제가 있음.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

○ 성급한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

- 환율과 외환보유고 축적 문제에서 비롯된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는 성급한 면이 있음
- 외환의 거래는 금융감독원, 관세청, 한국은행 등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에 따른 신고 정도일 뿐 어떠한 과세물건을 얼마에 샀는가를 감시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

○ 새로운 유형의 탈세 가능성

-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속여 부당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 가능성 1 : 50만불의 주택을 100만불에 취득했다고 속이고 차액 50만불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
 - 가능성 2 : 외국에 보유한 100만불의 주택을 자녀 또는 타인에게 50만불에 매도했다고 속이고 차액 50만불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

⇒ 국내에서 사전 증여를 위해 많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가 오히려 국내 과세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한 검토 부족

- 해외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검증할 수 없다면, 탈세를 방지할 방법이 없음
- 전 세계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에서 파악할 수도 없음

□ 질의 사항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세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불복청구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해외부동산 저가 취득 후고가 신고 시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증여세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가 국내 과세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게임 아이템의 불법거래 과세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 현금이나 물건이 아닌 게임 아이템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대표적 게임인 ‘리니지’의 경우

- 갑옷·무기는 보통 하나에 1만원~2만원, ‘바이옴의 반지’ 150만원, ‘자켄의 귀걸이’ 32~5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특정 아이템은 1,000만원에 가까운 액수에 팔리기도 함

※ 전문 중개사이트만 수백여개. 아이템 거래의 국내 시장 규모 연간 1조원 예상

: 1위 기업인 아이템베이는 지난해 3천억원을 거래(올해는 3,500억원 내외 전망)

‘아이템베이’의 경우 미국 아이템 거래 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

- 게임 아이템 등의 불법거래의 폐해 발생

-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사기 사건이나 폭행사건 등)를 일으키기도 함

⇒ 원천적으로 아이템 매매를 막을 수 없다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질의 사항

- 게임 아이템 등의 불법거래에 대해 과세 여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아이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목으로 몇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정해져야 함. 아이템 거래 과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아이템 거래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라 포착하기 어렵다면, 아이템 거래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지난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자에게 50% 이상의 고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과중함. 이는 몰수적 조치라 할 것임
- 주택임대사업자와 2~3주택 보유자 모두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임대업자와 2~3주택 보유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cf)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문제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나 2~3주택 보유자나 차별이 없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함

※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임대주택법)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현행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아닌 양도시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오랜 기간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세방법임

○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개선 방향

-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
 ⇒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확립으로 장기보유 할수록 유리한 양도소득세 체계 구축

(예) 3년 보유자와 10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3억원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3년 보유자	3억원	3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7,290만원
10년 보유자	3억원	10년	3천만원	최고 18%	450만원	4,500만원

(예) 5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2억원과 5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5년 보유자	2억원	5년	4천만원	최고 18%	630만원	3,150만원
5년 보유자	5억원	5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1억 2,150만원

□ 질의사항

-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고율의 단일세율로 과세.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체계임.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2주택자와 3주택자도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임. 임대주택자의 경우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2주택자나 3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공평>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근로자와 사업자간 차별적 소득세제 적용

;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두어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짐

⇒ 성실한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으며,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전체체납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 다만, OECD국가의 대부분은 차량비·식비·선물·유흥비 등 업무관련경비가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공제됨

근로자와 사업자의 면세점 비교(4인가족 기준)

구 분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면세점
근로자	400만원	100만원	70만원	1,012만원	1,582만원
사업자	400만원	60만원	48만원	-	508만원

자료 : 재정경제부

○ 근로자 면세자 비율은 2004년 기준 57.9%(일용근로자 포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추이(%) : 52.8(01) → 56.4(02) → 56.6(03) → 57.9(04)

○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52.5%

※ 종합소득자 과세인원 비율 추이(%) : 47.4(01) → 49.2(02) → 51.3(03) → 52.5(04)

근거과세(장부 증빙) 인원비율은 2004년 기준 53.6%

※ 근거과세 인원 비율 추이(%) : 45.4(01) → 47.3(02) → 50.1(03) → 53.6(04)

추계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46.4%

※ 추계인원 비율 추이(%) : 54.6(01) → 52.7(02) → 48.9(03) → 46.4(04)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5년 기준 38.9%

※ 간이과세자 비율 추이(%) : 49.8(01) → 46.5(02) → 44.4(03) → 41.7(04) → 38.9(05)

○ 현재 소득과약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소득과약 수준을 언제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없음

우선 자영업자 소득과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조세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은 잘못된 인식임

□ 질의사항

○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조세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제제도 도입 등이 원인. 재정경제부에서 다른 사항들보다 이러한 세 부담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정경제부는 소득과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고치려하지 않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 부담 불공평을 언제쯤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조세제도는 언제 바꾸실 것입니까?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의 개요

- 주택법 제 67~68조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
- 2004.4.1일부터 실물발행 → 등록발행으로 전환
 - 실물 종이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전산등록
 -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민은행 창구에서 소유자가 직접 매도 가능
 -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 2005.1.5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변경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가표준 상향조정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하향조정
 - 시가표준액의 정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변경
- 2005년 국민주택채권(1~3종 합계) 8.2조원 발행 및 2005년말 현재 발행잔액 37.1조원, 2006.8월말 현재 발행잔액 39.3조원임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는 2001.8.1일 5%에서 3%로 인하 후 현재까지 적용 중
- 2006.10.30일 현재 5년 만기 국민주택(1종)채권의 유통수익률은 4.87%임 (KIS 채권평가 자료)
 - ⇒ 5년 만기 주택채권 1만원 매도시 매도가격 약 9,140원, 할인율 8.60% 수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의 문제점

· 제도의 불안정성 및 비효율성

- 채권발행의 적정 규모는 국민주택사업 자체의 방향성, 추진경과 및 기금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현 제도 하에서는 의무매입조항 때문에 무조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금 재무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주택 공급규모가 증가하거나 과표가 상승하면 채권발행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함

· 사회적 비효율성

- 정부에 비해 정보와 각종 환경이 열위에 있는 개인이 공채 매입 후 할인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효율 초래

· 개별 경제주체들 간의 형평성

- 동일한 제도로 인한 준조세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능력과 정보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크기의 부담을 지게 됨

· 국민주택기금이 증권예탁원에 수수료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 91조 제5항)

· 과표현실화로 인한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2005.1.5일 채권매입기준 변경 이후 2006년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

· 2006년도 예산 수립시 과표현실화로 인한 채권매입 수요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

· 특히, 행자부의 거래세 인하조치가 미흡한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 점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폭탄이자 직무 방기임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의 개선방안

- 국민주택채권을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직접 발행하여 자금 조달
- 국민에게는 목적세를 받아서 정부가 이를 전액 기금에 출연

○ 참 고 자 료

· 국민주택 채권의 종류

- 제1종 채권 : 국가/지자체로부터 인허가·등기·등록시 의무매입(만기 5년, 연 3%)
- 제2종 채권 : 공공택지 내 85m²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만기 10년, 0%)

· 국민주택 채권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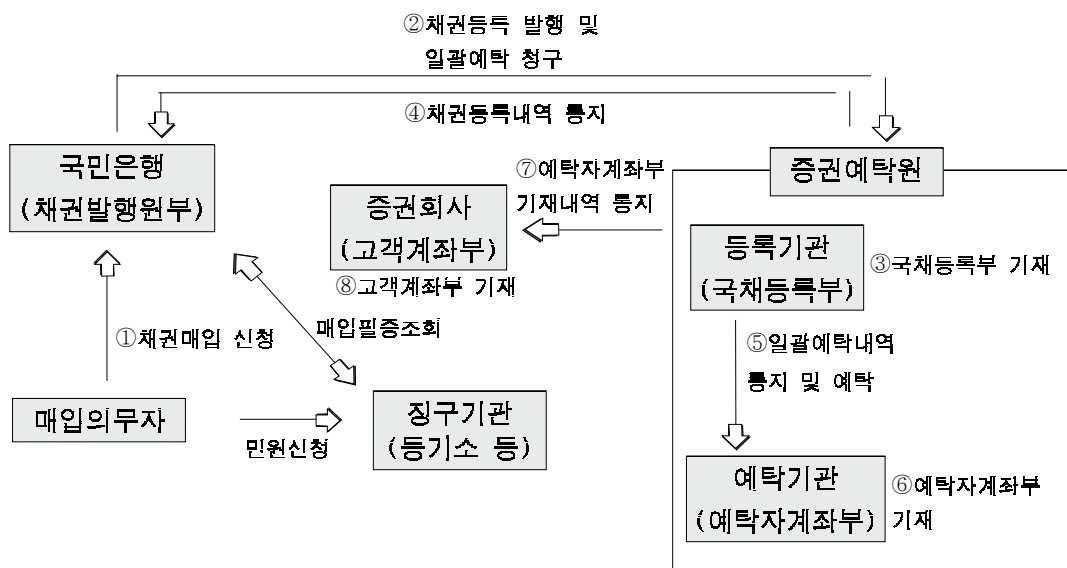
단위:십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발 행	5,439.6	7,617.6	7,090.3	5,539.2	8,209.1	5,640.1
잔 액	20,645.0	25,706.6	30,050.6	32,347.7	37,086.0	39,308.6

주 : 1~3종 합계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6.9월호

· 국민주택 채권의 등록·발행 흐름



□ 질 의 사 항

1. 지난 8월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9조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가, 국회에서 2천5백억원을 삭감하여 11조2천5백억원으로 발행한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과표상승에 따른 채권소요 증가로 인해 당초 예산에 비해 채권발행 한도를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재무상태나 국민주택 정책과 무관하게 과표상승이나 부동산 거래량 때문에 채권발행을 했다가 말았다가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면 대부분 할인을 해서 즉시 처분합니다. 그 차이만큼 결국 국민주택기금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준조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각종 환경이 열위에 있는 국민 개개인이 공채 매입 후 할인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또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제도 내에서도 동일한 준조세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능력과 정보의 차이,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크기의 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입장에서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 특히, 행자부의 거래세 인하조치가 미흡한 것과 더불어 과표 상승으로 국민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가중시키고도 여기에 대해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폭탄이자 정부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표 상승분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분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의무매입 규모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는 국민주택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직접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으로부터는 목적세를 받아서 정부가 이를 전액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공평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투명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 노무현 정권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2% 예상, 대선공약 7% 훨씬 못 미쳐

· 노무현 정권 5년간 거시경제 성적표(예상)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¹⁾	2007예상 ¹⁾	5년평균 ²⁾
GDP 성장률	3.1	4.7	4.0	5.0(5.0)	4.3(4.6)	4.2(4.3)
민 간 소 비	-1.2	-0.3	3.2	4.1(4.4)	3.8(4.2)	1.9(2.1)
설 비 투 자	-1.2	3.8	5.1	7.6	7.0	4.5
건 설 투 자	7.9	1.1	0.4	-0.8	2.3	2.2

주 : 1. 괄호 밖은 KDI 전망, 괄호 안은 재정경제부(예산편성 전제) 전망임

2. 5년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KDI(2006~2007년 전망), 재정경제부

· 특히 ‘명목성장률’ 조차도 연평균 5.8% 예상(재정경제부 기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연평균 ¹⁾
명목 GDP 성장률	5.9	7.5	3.5	5.3	6.7	5.8
GDP deflator	2.7	2.7	-0.4	0.3	2.0	1.5
실질 GDP 성장률	3.1	4.7	4.0	5.0	4.6	4.3

주 : 1. 연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재정경제부(2006~2007년 전망)

○ 2003~2005년의 세계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세 계	2.7	4.0	3.5	3.9
아시아 ¹⁾	6.5	7.4	6.9	7.2
중 국	10.0	10.1	9.9	10.6
대 만	3.4	6.1	4.0	3.8
인 도	8.6	7.5	8.4	7.6
한 국	3.1	4.7	4.0	5.0

주 : 1. 일본 제외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Oct.) 2006.,

KDI, “KDI 경제전망, 2006년 3/4분기”, 2006.10.17.

○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시기

· 분열과 갈등의 시기

- 국보법,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 4대 악법 추진과 소모적 논쟁
- 수도권전과 위헌결정,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 한미동맹 균열

· 불안과 좌절의 시기

- 안보불안 가중 :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귀결
- 자살, 노인자살, 경제범죄, 파산자의 급증, 대규모 신용불량자 지속
(2006.10.13 국정감사 질의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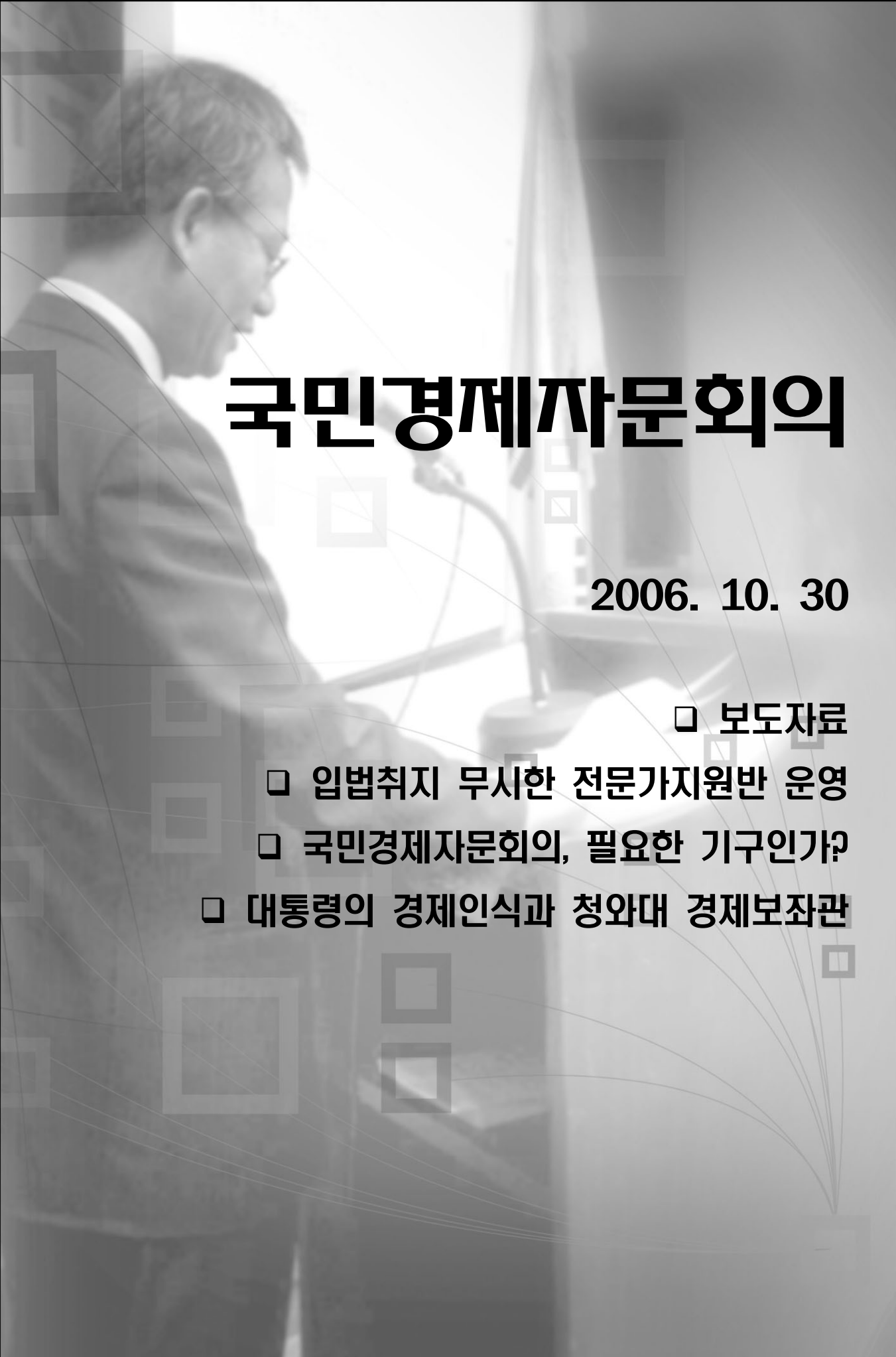
⇒ “富國強兵” 과는 정반대인 “貧國弱兵” 의 시기

○ 노무현 정권 3년 반, 남은 것은 빚더미

- 한국은행 적자누적과 적립금 고갈, 그리고 정부예산에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구조는 국가채무에 통한증권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례
-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가채권은 줄어듦, 반면에 연체채권은 더욱 늘어
(국가채권, 국가채무 현황은 2006.10.13 국정감사 질의서 참조)

□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함
 -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 :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
-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
 - 외환정책 실패, 부동산정책 실패 등
 -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 정권보전 위한 국민분열 언행을 삼가야 함
 - 20 대 80, 강남 대 비강남, 부자 대 서민, 서울대와 비서울대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10. 30

- 보도자료
- 입법취지 무시한 전문가지원반 운영
- 국민경제자문회의, 필요한 기구인가?
-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기구 아닌 옥상옥

전문가회의 법률안 국회에서 통과 안 되자 1달 후 자체 구성, 입법권 무시
 원로경제인회의 단 한 차례 개최, 쓴소리 듣고 나서 없애버려
 외국경제인회의 참여정부 들어 단 두 차례 개최
 사무처 정원 12명에 불과한데 파견근무는 10명씩이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는 본연의 자문기능 역할을 벗어나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 옥상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4월 정부는 위촉위원 증원과 전문가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심사과정에서 전문가회의는 자문기능을 넘어선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여 지난 2003년 6월 5일자로 대통령령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회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문가지원반’을 신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는 지난 2003년 5월 내부보고서에서 “대통령이 경제원로, 핵심경제부처 장관들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하여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기능을 보강”한다고 명시하고도, 2003년 10월 16일 단 한 차례 원로경제인회의를 개최한 후 2004년 7월 폐지해버렸다. 당시 개최된 원로경제인회의에서는 ‘교육 평준화 포기’와 ‘개방·경쟁 도입’,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쓴소리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참조).

한편 외국경제인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2003년 9월 3일과 2006년 4월 27일 단 두 차례 개최되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여정부와 대통령이 너무 쓴소리,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의 정체성도 불명확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의 정원은 총

12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파견 나온 직원은 사무처 정원과 비슷한 10명이나 된다. 특히 이 파견자들은 재정경제부 금융물류국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금감위·관세청의 서기관, 한국은행 2급, 3급 각 1명,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등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고위 전문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가 1명만 참석한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2006년에도 총 10차례나 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결국 사무처 직원들과 파견 직원들은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지원반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깊은 간여를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책을 기획하는 등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가 그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만큼, 자문회의가 원래 헌법상 취지에 맞게 순수한 자문의 역할로 돌아가고 사무처 기능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차라리 1999년 이전처럼 자문회의를 없애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정책을 펴는 길일 수 있음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사무처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취지 무시한 전문가지원반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가지원반 신설 경과

- 2003.4.3일, 정부가 당연직 2→10인 및 위촉위원 30→50인으로 증원, 전문가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2003.4.22~23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당연직 2→6인, 위촉위원 30인으로 증원규모 대폭 축소하고 전문가회의 신설은 제외함
 - 김효석 소위원장(2003.4.22)

“자문회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전문가로서 대통령을 어드바이스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밑에 전문가를 또 뒀냐 됩니까?”
 - 강운태 위원(2003.4.23)

“전문가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말씀들이 맞아요. 이것(자문회의)은 대통령자문기구 아닌가요? 재경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 기구를 두어서 뭐하자는 것이지요?”

⇒ 박용만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실장은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회의는 빼겠습니다.”** 라고 답변
 - 정의화 위원(2003.4.23)

“(前略)...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30인이 되는 분들을 모아서 진짜 차 마시면서 프리하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두는 구조는 잘못하면 그대로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경제문제라면 필요하면 재경부에 요청해서 브레인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옥상옥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2003.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사무처가 마

련하여 서무처장의 결재를 받음.

-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는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추진일정, (4) 개정안 및 신규대비표의 4단계로 구성
- 특히 이 중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는 ‘전문가지원반 신설’의 이유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개정안 및 신규대비표’에 조직도와 해당 조항(제3조의4)을 넣어놓았음
- 재경부에 법령개정 요청

· 2003.6.5, 개정 시행령안 시행

○ 전문가회의와 전문가지원반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 수행

-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은 동일함
 - 차이점 : 자문회의 산하에 직접 전문가회의를 설치할 것인가, 분야별회의 아래에 전문가지원반을 둘 것인가의 차이
 - 공통점 : 재경부 등 정부부처 업무와 중복, 옥상옥 역할 수행 우려
- 전문가회의 (2003.4월 국회에 제출했다가 삭제됨)

제6조의2(전문가회의)

 - ①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등 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가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가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③ 전문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가지원반 (2003.6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안, 재경부 협조로 신설)

제3조의4(지원반)

 - ① 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회의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둔다.
 - ② 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각 분야별로 사무처장이 소속기관의 장

- 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분야별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2006.6.12일,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개정됨)으로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③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소속 공무원중에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전문가지원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분야별회의 지원 목적으로 설치했음에도, 실제로는 분야별회의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 (금융허브전문가회의, 부동산전문가회의)

※ 대통령령에 정해진 분야별회의와 지원반 현황 (2006년 기준)

구 분	분야별회의명	지원반회의
대통령령에 명시	거시경제회의	거시경제전문가회의
	산업·통상회의	산업통상전문가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복지노동전문가회의
	외국경제인회의	없 음
	경제정책협의회	없 음
대통령령에 의한 의장 권한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전문가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전문가회의
	부동산대책회의	부동산전문가회의
	금융허브회의	금융허브전문가회의

- 2006년 들어 총 70회의 전문가지원반 회의 중 분야별회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의는 32회에 달함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2006.1.5, 복지노동전문가회의)
 - 한국경제 계량지표분석 - 시장과 국가의 역할(2006.1.4, 거시경제전문가회의)
 - OECD 국가의 사회지출 구조분석(2006.3.2, 복지노동전문가회의)

□ 질 의 사 항

1. 2003년 4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다 재경위에서 삭제된 ‘전문가회의’ 조항과 2003년 6월 5일 대통령령에 신설한 전문가지원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전문가지원반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분야별회의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야별회의 지원 목적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전문가지원반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회의 내용의 상당수가 분야별회의 안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3. 2003년 4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회의’ 조항이 “옥상옥” 이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회의’ 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지원반’ 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입니다. 이러한 옥상옥 조직을 가동해서 재경부나 건교부를 벗어나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8.31 부동산 대책 같은 엉터리 정책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재경부나 정부 각 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문가지원반을 가동해서 이중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필요한 기구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근거 및 연혁

· 설치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규정(대통령령)

· 연혁

- 1997.10.22, 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민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 경제문제를 초당적, 거국적으로 다루겠다”

- 1999.8.31,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 1999.11.22, 국민경제자문회의 첫회의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문제점

· 경제 원로와 국외에 대해서는 귀 막은 국민경제자문회의

- 원로경제인회의 폐지 : 2003.10.16일 한 차례 개최 후 2004.7월 폐지

- 외국경제인회의 저조 : 2003.9.3일, 2006.4.27일 단 두 차례 개최

· 옥상옥 구조와 자문기구의 비대화

- 전문가지원반을 이용한 별도 의사결정 기능 가동

※ 전문가 1인만 참석한 회의가 2006년 상반기 중에만 10차례 있으며, 이는 사무처직원과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처직원이 일정 부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임

- 파견근무 10명 : 공무원 6명, 민간전문가 4명(금감원, 주택공사, 한은 2명)

※ 사무처 정원 12명 (2005.3.2일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함)

□ 질 의 사 항

1. 전문가지원반 회의 중 2006년에만 10차례에 걸쳐 전문가는 1사람만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처 직원과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사무처직원이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무처직원이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파견 온 직원이 9월 말 현재 10명에 이릅니다. 재경부 국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금감위, 금감원, 관세청, 한국은행,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등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받아야 합니까? 행정 업무에 12명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그야말로 자문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문이 필요한 원로경제인회의는 폐지해버리고, 외국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단 두 번만 개최한 반면, 전문가지원반 등 변칙적인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8.31 부동산 대책과 같은 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책을 기획하는 등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그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고 비뚤어진 경제정책 개입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문회의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1999년 이전처럼 자문회의를 없애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정책을 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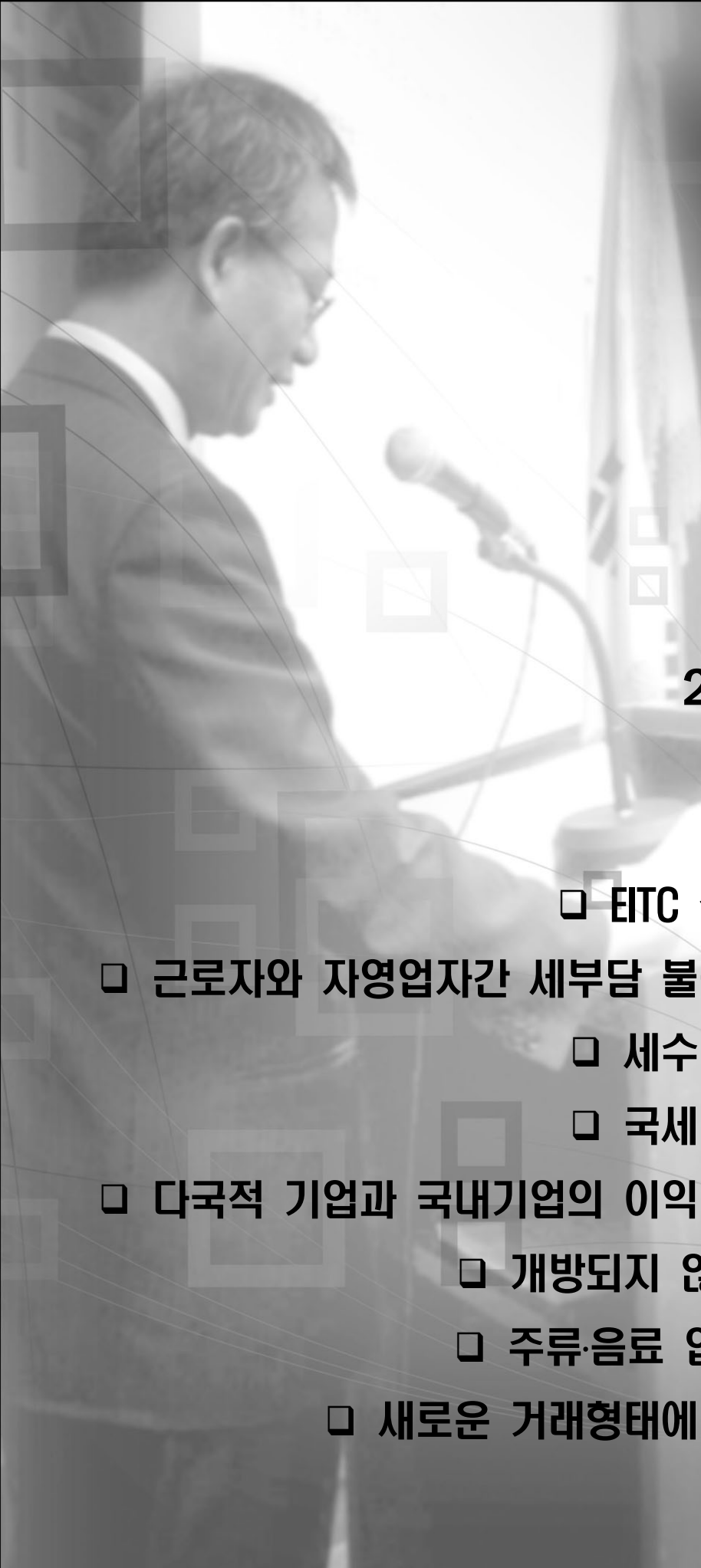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 대통령의 경제 인식 : 말의 성찬, 사실관계의 왜곡

-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 2003~2004년 무모한 외환정책
 -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의 반복
- 2006.1.18일과 1.25일 대통령 신년연설
 -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양극화와 일자리가 문제라는 취지의 연설(1.18일)
 -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 후, 여론 악화되자 1.25일 내외신기자회견에서 발뺌
 -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들의 노력이 있다는 발언(1.25일)
- 2006.3.23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 노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90%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려도 나머지 80%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고 발언
 - 근로소득세는 총 조세수입 중 6%에 불과함
 - 또한 상위 20%는 연봉기준 2,500~3,000만원(1천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임

□ 질 의 사 항

1. 대통령이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거나 경제는 좋는데 양극화가 문제라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대통령은 특히 나와 남, 아군과 적군 식의 이분법적이고 국민분열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세청

2006. 10. 16

- 보도자료
- EITC 실시와 세원관리
-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과 세원파악
-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 국세 통계 자료 문제
-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의 이익 불법 이전 문제
- 개방되지 않는 개방형 직위
- 주류·음료 업계 문제와 RFID
-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한 과세 과제



보도자료

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건수, 부과액 모두 크게 급증

세수가 부족했던 2004, 2005년 특히 두드러져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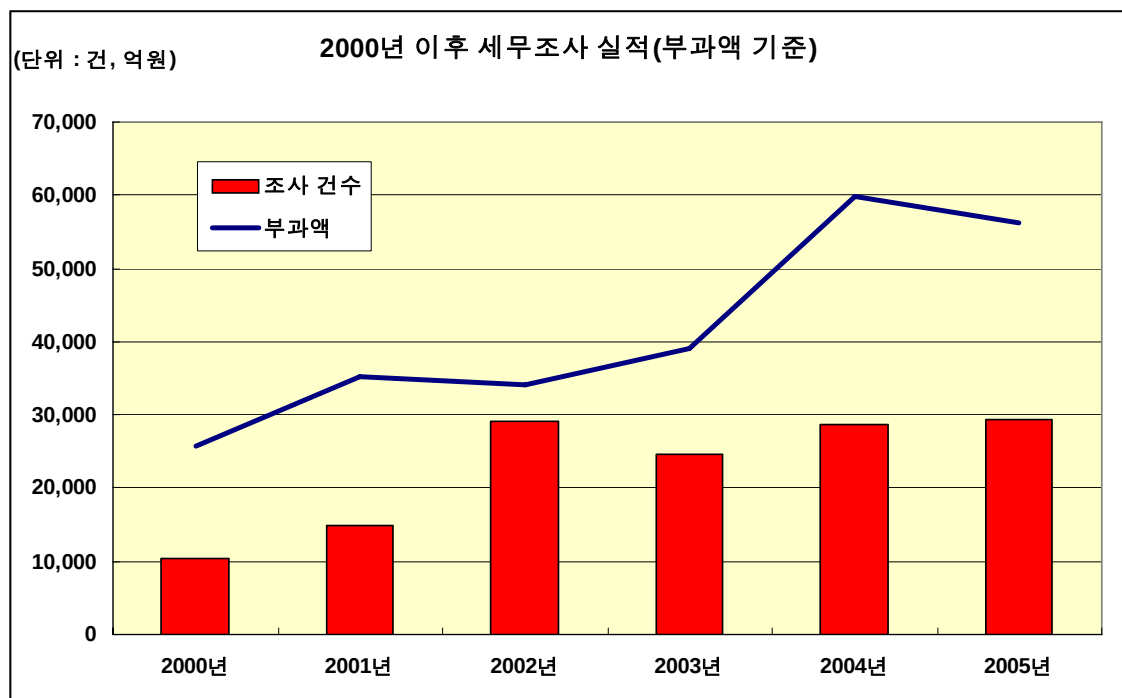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었다.

2000년 이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조사건수	10,427	14,909	29,147	24,522	28,711	29,410	13,276
부과액	25,771	35,175	34,013	39,127	<u>59,853</u>	<u>56,291</u>	19,732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3은 세무조사의 목적을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세수부족이 불거진 2004, 2005년 범칙 세무조사 및 정기 세무조사 모두 전년도에 비해 조사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세무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하면 2004년과 2005년에 무려 6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뺑뚱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꾸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임기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정기 세무조사								법칙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합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102	3,388	-	-	10,427	25,771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130	4,072	-	-	14,909	35,175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115	1,365	4,543	907	29,147	34,013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172	3,970	3,649	2,750	24,522	39,12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347	10,262	1,838	2,433	28,711	59,853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372	9,045	3,094	4,077	29,410	56,291
2006.6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12	1,609	813	1,003	13,276	19,732

참고: 상속·증여세 조사는 세무조사 실적이 아닌 경정 실적이 되므로 제외하였음

공란은 세무조사가 없었음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 세무조사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전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분석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세무조사 패턴, 다른 기간과 매우 달라

세무조사로 부동산 대책을 떠받치려는 참여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의 패턴이 투입인원, 피조사자 및 위반자, 추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10.29 대책, 8.31 대책을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무리하고 비정상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며 국세청장에 그 이유를 따졌다.

2002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2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4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국세청 투입인원	4,796	2,542	3,679	2,996	5,936	1,003	2,133
추징세액	907	714	2,036	2,433	574	3,503	1,003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	1891만원	2808만원	5534만원	8121만원	967만원	<u>3억 4925만원</u>	4702만원
피조사자 (위반자)	4,543 (574)	1,631 (837)	2,018 (509)	1,838 (350)	2,705 (35)	389 (133)	813 (36)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	12.63%	6.9%	<u>25.22%</u>	19.04%	1.29%	<u>34.19%</u>	4.43%

참고: 2000년, 2001년에는 부동산투기조사 없었음

자료: 국세청

윤건영 의원이 2002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3년 하반기와 2005년 하반기의 부동산 세무조사는 다른 해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 1) 2003. 2005년 하반기에 공통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이다. 2003년 하반기 국세청의 위반자 적발율은 25.22%에 달했다. 2005년 하반기의 경우 국세청은 유례없이 389명이라는 소수를 조사했고, 이 중 133명이 위반자로 밝혀져 34.19%로 2003년 하반기 기록을 경신했다. 다른 해의 적발율을 감안해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찍기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적발율이다.

2) 2005년 하반기의 추정 세액은 사상 최대의 수준이다. 투입인원 대비 추정세액을 보면 다른 해에는 몇천만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무려 투입인원 1인이 3억4925만원씩을 추정하는 유례없는 효율을 보인다. 다른 때에는 왜 이런 효율을 보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3) 2005년, 2006년 상반기와 2005년 하반기의 비교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두 해 상반기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거의 형식에 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정세액도 적고 위반자도 적다. 특히 2005년 상반기의 투입인원 대비 추정세액은 967만원에 그치고 있어 하반기의 3억 4925만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06년 상반기 경우 피조사자가 813명이지만 이 중 위반자는 36명으로 4.43%인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34.19%로 뚜렷이 차별화된다. 늘 비효율적인 부동산 세무조사가 2005년 하반기에는 그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은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에 발표한 10. 29., 8. 31 부동산 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무조사만 강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정기 세무조사, 왜 하반기에 집중되나?

모든 종류의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

준비 부족이 이유인가, 세수 부족이 이유인가?

조사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중 진행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의 반기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정기 세무조사가 각 연도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며 그 원인을 국세청장에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도, 부과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기 세무조사 실적(상·하반기 구분)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합 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1년 상반기	1,274	259	1,282	8,390	1,976	1,792	-	-	4,532	10,441
2001년 하반기	5,073	1,378	2,998	16,600	2,176	2,684	-	-	10,247	20,626
2002년 상반기	2,541	865	2,129	11,731	2,004	2,300	3,523	817	10,197	15,713
2002년 하반기	3,600	1,286	3,197	11,834	1,603	2,113	5,892	795	14,292	16,028
2003년 상반기	2,000	907	1,771	8,034	1,559	2,197	3,753	534	9,083	11,672
2003년 하반기	2,522	1,119	2,765	15,425	2,841	3,244	3,414	911	11,542	20,735
2004년 상반기	2,495	1,050	2,853	14,333	2,730	3,947	4,545	1,866	12,623	21,196
2004년 하반기	1,875	1,068	2,830	17,076	4,117	6,572	5,081	1,246	13,903	25,962
2005년 상반기	2,503	1,438	2,746	11,481	3,449	3,801	1,862	828	10,560	17,548
2005년 하반기	1,486	860	3,597	18,677	4,326	4,808	5,925	1,276	15,334	25,621
2006년 상반기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2,351	17,120

자료 : 국세청

윤 의원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한 가지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 부족, 또 한가지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 라고 의견을 밝히며, 국세청장에게 어느 것이 이유인가를 묻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이라며 철저한 사전 계획과 조사대상별·종류별 집중기간 배정을 통해 조사 인력과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을 국세청장에 당부했다.

EITC 실시와 세원관리

1. EITC 실시에 따른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EITC’ 실시에 따른 국세청 필요인원 질의(6월 임시국회, 6월 23일)

질의요지 : EITC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세원파악을 위해 몇 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 : 국세청 필요인원은 600명~6000명 사이.

“어느 정도의 인원 규모가 필요할 것인지 알 수 없음.”

⇒ 전임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요구에도 자료 제출은 미뤄지고 있음

- 계속적인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EITC 실시에 따른 정확한 필요인원을 추계하고 있지 못함

(2006년 ~ 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 국세청 1만 1588명 증원 계획안 제출)

- 6월 22일 재정경제부는 EITC 실시 방안 보고서 발표 및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실시 계획을 밝힘.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EITC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국세청의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함(법령이 결정된 후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는 답변 뿐)

- 기본적으로 EITC의 실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Delivery System 역시 검증되지 않음(필요인원이나 소요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지 못함)

- 국세청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6,158만원 정도로 5,000명이 증원된다면 최소한 약 3,000억원의 예산 증가 불가피($11,588 \times (5 \div 12) = 4,828$ 명)

※ 국세청 2006년 6월 현재 인원 17,404명

2006년 국세청 예산 1조 718억원(인건비성 경비 76.9% 차지)

- 2008년 지급되는 EITC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추산(약 31만 가구)
- 2010년 근로자 전체 적용시 EITC 예산은 약 4천억원으로 추산(약 90만 가구)

단계별 EITC 적용대상 확대 방안

- 1단계(2007~2009년)** 무주택, 재산1억 이하, 자녀(18세미만) 2인 이상인 근로자
- 2단계(2010~2012년)** 1단계 + 자녀1인 이상 근로자
- 3단계(2013년~)** 2단계 + 자녀1인 이상 자영업자 + 자녀1인 이상 특수직
사업자(보험모집인, 캐디, 대리운전원 등)
- 4단계(시기 미정)** 무자녀 가구 포함해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이면
모두 지원 대상

※ 단계별 실시시기는 소득과와 시작 연도기준, 실제 지원금은 1년 후에 지급됨

● 연간 근로소득별 EITC 지급액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지급액	사례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10%	300만원 근로소득→30만원 지급 500만원 근로소득→50만원 지급
800~1,200만원	지급액 상한선 (80만원)	800만원 근로소득→80만원 지급 1,000만원 근로소득→80만원 지급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액) ×16%(점감률)	1,400만원 근로소득→48만원 지급 1,500만원 근로소득→32만원 지급

※ 부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 1,700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액에 한해 EITC 적용

□ 질의사항

- EITC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국세청 필요인원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재정경제부에서는 EITC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필요인원을 추계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EITC 도입도 소득과와 인프라 여건이 미성숙 단계에서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원 확충이 필요. 제대로 된 통계정보 생성과 분석, 연구 등에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야 하겠지만, 조사 인원 등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청장께서는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줄임으로써 생기는 여유 인원을 EITC 실시를 위한 세원과약 업무로 전환하실 생각이십니까?

<참 고>

□ 2006년 국세청 인원 증원 사항

- 2006년 1월 2일자 대통령령
 -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관장하던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사무를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필요인력 56명(2급 1, 4급 3, 5급 18, 6급 25, 7급 25, 8급 21, 기능 -37) 증원
- 2006년 2월 8일자 대통령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1명 증원
- 2006년 3월 23일자 대통령령
 - 용인·동청주 및 북전주세무서를 신설하고, 납세자로부터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등 50명(4급 4, 5급 18, 6급 16, 7급 6, 8급 3, 기능 3) 증원
- 2006년 7월 27일자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40여만명으로 증가 → 종부세 관련 업무량 급증
실거래가 기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인원(결국 조사 업무 인원 필요)
 - 2월 행자부에 1,794명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요청하여 645명(5급 19, 6급 197, 7급 159, 8급 164, 9급 106) 증원 승인
- 2006년 ~ 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
 -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은 12만 9420명을 증원하고 9519명을 감원하여 총 11만 9901명 증원하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국세청 1만 158명 증원 계획안 제출)
 - 행정자치부는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할 때 매년 8,600여명씩 5년동안 4만 3,000명에서 5만명 수준의 인력 증원을 전망

2. 4대 보험 징수기관 통합 문제(EITC를 위한 인원 보충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치.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일원화

- 정부관계자는 “3개 공단 조직이 없어지거나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 다만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 동만 있을 것”이라 밝힘

cf)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업무는 현행 부과징수 인력 1만여명 중 5천여명으로 해결 가능. 나머지 5천여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제도에 투입한다는 입장

- EITC 실시와 비슷한 시기에 사회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청 모델이 아닌 부과징수 업무만 담당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국세청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하게 EITC를 실시하려고 하는 의도

cf) 사회보험청 모델이 아닌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EITC 실시에 따라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예상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잉여인력이 남는 방안

- 전군표 국세청장 발언

(9월 26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4대 공적보험 통합에 따른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4대 보험에 속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인원을 운용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따로 설치된 공단에 국세청이 가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접목해 운영해 갈 것

□ 질의사항

-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의 구조조정 없이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혹시 잉여 인력으로 EITC 실시에 따른 세원파악 업무를 할 생각이십니까? 국세청이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EITC를 실시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자영업자 세원파악을 현 인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세원파악에 관심 없는(?) 국세청과 EITC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은 세원파악 노력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원파악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결과는 세금 탈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

cf) 제1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2005. 12. 22)

: 422명 세무조사를 통해 3,016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 1,094억원의 세금 추정
평균 소득탈루율 56.9%

제2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2006. 3. 20)

: 319명 세무조사를 통해 3,18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 1,065억원의 세금 추정
평균 소득탈루율 57.7%

⇒ 2006년 8월 16일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 제3차 세무조사 착수

(단위 : 억원)

구분	인원	탈루소득	탈루세액	1인당 탈루소득	1인당 탈루세액
1차 세무조사	422	3,016	1,094	7.15	2.59
2차 세무조사	319	3,185	1,065	10.0	3.3

자료 : 국세청

cf) 종합소득세 과세인원비율 49.2%('02 귀속) → 51.3%('03) → 52.5%('04)

장부기장비율 47.3%('02 귀속) → 50.1%('03) → 53.6%('04)

- 하지만,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에 대한 의지보다 언론 홍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12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3월 언론에 결과 보도자료 배포
- 2005년 11월 2일, 2005년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관리공단 소득축소 탈루심사위원회에 국세청 직원이 참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5,000만원 넘게 건을 수 있는 ‘건수’가 되는 자료만 넘겨 줄 것(통보 건수 : 3건)과 통보 기준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

cf)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5. 1. 27)로 인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자 통보 조항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2

- 국세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는 국세청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반영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정확한 회의록이 아니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의 말이 왜곡된 것’이라 함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05년 12월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 과정과 비슷하며, 이는 국회와 국민의 관심에 대한 우려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물타기’를 한 것으로 생각됨

⇒ 세무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노력 집중 부각
국회가 통보자료가 적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 법의 개정 취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
- 국세청이 진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파악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많은 자료를 통보받아 국세청 스스로 검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

□ 질의사항

- 국세청의 세원파악 노력은 인정하지만, EITC를 실시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과연 재정경제부의 EITC 실시방안의 시나리오대로 세원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 국세청은 조세행정기관으로서 세입징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원파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원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공교롭게도 제1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국세청 직원이 협의한 시기와 비슷.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 국세청이 정말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파악에 관심이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일명 ‘건수’가 될만한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자료를 받아 국세청 스스로 검증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과 세원파악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공평> 국정감사 질의 요지

- 근로자와 사업자간 차별적 소득세제 적용

: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두어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짐

⇒ 성실한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으며,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전체체납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 다만, OECD국가의 대부분은 차량비·식비·선물·유형비 등 업무관련 경비가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공제됨

근로자와 사업자의 면세점 비교(4인가족 기준)

구 분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면세점
근로자	400만원	100만원	70만원	1,012만원	1,582만원
사업자	400만원	60만원	48만원	-	508만원

○ 근로자 면세자 비율은 2004년 기준 57.9%(일용근로자 포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추이(%) : 52.8(01) → 56.4(02) → 56.6(03) → 57.9(04)

○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52.5%

※ 종합소득자 과세인원 비율 추이(%) : 47.4(01) → 49.2(02) → 51.3(03) → 52.5(04)

근거과세(장부 증빙) 인원비율은 2004년 기준 53.6%

※ 근거과세 인원 비율 추이(%) : 45.4(01) → 47.3(02) → 50.1(03) → 53.6(04)

추계인원 비율은 2004년 기준 46.4%

※ 추계인원 비율 추이(%) : 54.6(01) → 52.7(02) → 48.9(03) → 46.4(04)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5년 기준 38.9%

※ 간이과세자 비율 추이(%) : 49.8(01) → 46.5(02) → 44.4(03) → 41.7(04) → 38.9(05)

○ 현재 국세청은 소득과악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소득과악 수준을 언제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없음

우선 자영업자 소득과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조세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잘못된 인식)

⇒ ‘따뜻한 세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형평성을 갖추도록 바꾸고, 자영업자들의 세원과악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

□ 질의사항

○ 현재의 소득세 과세구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공제 등 과도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국민개세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규모가 작아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과악은 매우 중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세제상의 불합리로 인해 탈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실정. 자영업자의 소득과악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불합리한 세제를 고쳐야 함. 국세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세원과악을 높여야 함.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원양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통계로 드러나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

cf)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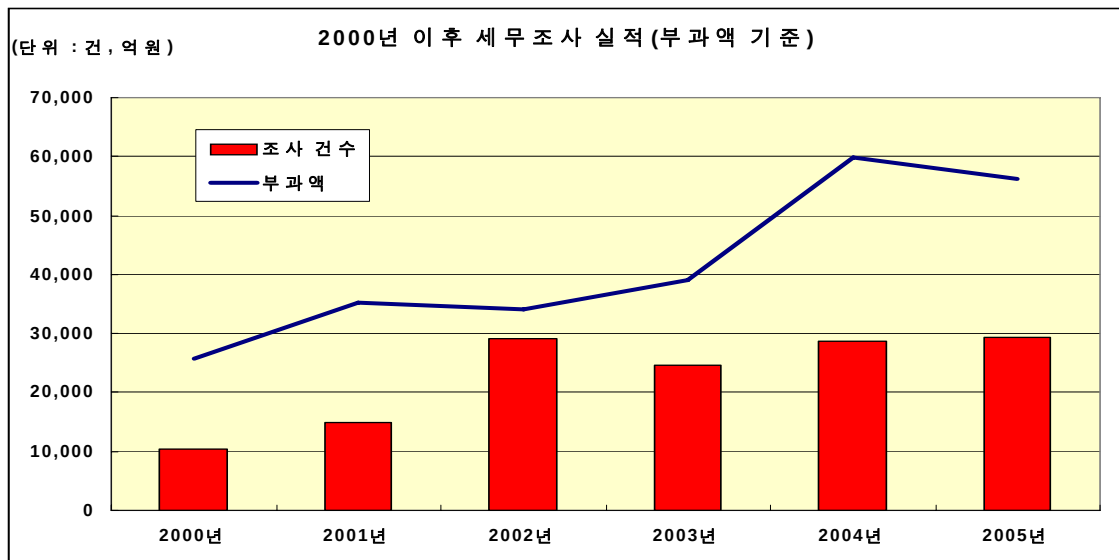
- 2004, 2005년에 6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임

2000년 이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정기 세무조사								법칙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합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건수	부과 액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102	3,388	-	-	10,427	25,771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130	4,072	-	-	14,909	35,175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115	1,365	4,543	907	29,147	34,013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172	3,970	3,649	2,750	24,522	39,12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347	10,262	1,838	2,433	28,711	59,853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372	9,045	3,094	4,077	29,410	56,291
2006.6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12	1,609	813	1,003	13,276	19,732

※ 상속증여세 조사는 세부조사 실적이 아닌 경정실적이 되므로 제외, 공란은 세무조사 실시 안함
자료 : 국세청



1. 2004년, 2005년 범칙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 급증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이후 범칙세무조사가 급증하였음

특히,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2004년과 2005년의 범칙세무조사 조사건수는 각각 347건, 372건에 이르면, 부과세액도 1조 262억원, 9,045억원으로 압도적 높음

2000년 이후 범칙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조사건수(A)	102	130	115	172	347	372	112
고발건수(B)	92	102	95	164	308	277	97
부과세액(C)	3,388	4,072	1,365	3,970	10,262	9,045	1,609

자료 : 국세청

2. 2004년, 2005년 정기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 급증

○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2001년 2조원 가량이었던 정기세무조사 부과액은 2002년 3조원 대로 증가하였고, 2004년 들어서는 거의 5조원에 육박

- 2004년의 경우 26,526건의 조사를 통해 4조 7,158억원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조사건수는 28.6%, 부과세액은 45.5% 증가
- 2005년에도 25,944건의 조사를 통해 4조 3,169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여전히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음

2000년 이후 정기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합 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10,325	22,383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14,779	31,103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6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2,351	17,120

자료 : 국세청

□ 질의사항

- 노무현 정부 들어 범칙세무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2004년 이후 범칙세무조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시기는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범칙세무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부과세액도 급증. 범칙세무조사를 나가면 일정분 이상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범칙세무조사 나가면 세수 확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곧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범칙세무조사를 나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한 반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였음. 이 또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에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3. 정부 부동산 대책에 충실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 10.29 부동산 대책과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던 2003년과 2005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

1)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

- 2003년 하반기 국세청의 위반자 적발율은 25.22%에 달함
- 2005년 하반기의 경우 389명이라는 소수를 조사, 이 중 133명이 위반자로 밝혀져 위반자 비율 34.19%

2) 2005년 하반기의 추징 세액은 사상 최대의 수준

-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을 보면 2005년 하반기에는 무려 투입인원 1인이 3억 4925만원씩을 추징

3) 2005년, 2006년 상반기와 2005년 하반기의 비교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

- 2005년과 2006년 상반기는 추징세액도 적고 위반자도 적음
- 2005년 상반기의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은 967만원에 그치고 있어 하반기의 3억 4925만원
- 2006년 상반기 경우 피조사자가 813명이지만 이 중 위반자는 36명으로 4.43%인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34.19%로 뚜렷이 차별화

2002년 이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2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4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국세청 투입인원	4,796	2,542	3,679	2,996	5,936	1,003	2,133
추징세액	907	714	2,036	2,433	574	3,503	1,003
투입인원 대비 추징세액	1891만원	2808만원	5534만원	8121만원	967만원	3억 4925만원	4702만원
피조사자 (위반자)	4,543 (574)	1,631 (837)	2,018 (509)	1,838 (350)	2,705 (35)	389 (133)	813 (36)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	12.63%	6.9%	25.22%	19.04%	1.29%	34.19%	4.43%

참고: 2000년, 2001년에는 부동산투기조사 없었음

자료: 국세청

□ 질의사항

-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03년과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05년에 많은 조사인원을 투입. 하지만 투입인원에 비해 법 위반자 비율은 매우 저조. 이것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보여주기’ 용 세무조사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2005년의 경우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하반기에 고작 389명을 조사해 무려 3,503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하였음. 본보기로 과도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아닙니까? 상반기 실적에 대해 본 의원이 실적이 저조한 부동산 세무조사라고 한 것이 억울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까?
- 올해의 경우도 성공하지 못할 부동산 정책을 위해 판교 등에서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버려두고 별 소득도 없는 투기법 잡기에 몰두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입니까?

<참고>

- 최근 몇 년간의 반기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정기 세무조사가 각 연도 하반기에 집중
-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납득할 수 없음
-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
: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 부족, 또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
⇒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 효율적 배치 실패

정기 세무조사 실적(상·하반기 구분)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합 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1년 상반기	1,274	259	1,282	8,390	1,976	1,792	-	-	4,532	10,441
2001년 하반기	5,073	1,378	2,998	16,600	2,176	2,684	-	-	10,247	20,626
2002년 상반기	2,541	865	2,129	11,731	2,004	2,300	3,523	817	10,197	15,713
2002년 하반기	3,600	1,286	3,197	11,834	1,603	2,113	5,892	795	14,292	16,028
2003년 상반기	2,000	907	1,771	8,034	1,559	2,197	3,753	534	9,083	11,672
2003년 하반기	2,522	1,119	2,765	15,425	2,841	3,244	3,414	911	11,542	20,735
2004년 상반기	2,495	1,050	2,853	14,333	2,730	3,947	4,545	1,866	12,623	21,196
2004년 하반기	1,875	1,068	2,830	17,076	4,117	6,572	5,081	1,246	13,903	25,962
2005년 상반기	2,503	1,438	2,746	11,481	3,449	3,801	1,862	828	10,560	17,548
2005년 하반기	1,486	860	3,597	18,677	4,326	4,808	5,925	1,276	15,334	25,621
2006년 상반기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2,351	17,120

자료 : 국세청

국세 통계 자료 문제

- 현재 국세청은 미국의 IRS와 달리 연구기능이 없고, 또한 외부 연구를 위해 미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최근 통계관련 TF팀을 운영하여 국세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 국세청에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어 세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조세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

<개선방향>

- 세수입 예측은 경제성장률과 관련하여 시나리오별로 할 것
→ 조세행정은 예측과 무관하게 경기 중립적이어야 함(전략적 편견 배제)
- 정책 수단별 세수입 효과, 부담/분배 효과 분석 필요
→ 이러한 정책분석 자료는 조세정책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혁신의 기초 자료가 됨
- 조세부담의 국제비교 통계 자료
→ 국제경쟁력 확보에 긴요하게 사용
-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융합(EITC) 관련 통계 자료
→ 사회보장관련 정보와 조세정보는 상호보완관계

□ 질의사항

- 조세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력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최근 국세통계와 관련하여 통계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국세통계에 대해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향후 OECD, IRS 등에 파견하여 선진국에서는 통계 관리와 생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은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의 이익 불법 이전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세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06년 10월 5일)

: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제세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외국 컨설팅 법인 및 일부 국내 기업들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내국법인들이 국외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를 적발

※ 적발된 거래형태

- ①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주소지에 실체가 없는 사업장을 등록한 후 특수관계회사가 행한 사업활동을 위 법인의 사업장이 수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 ②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용역을 수행하고도 외국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③ 내국법인이 국외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음

cf) 론스타의 경우 관리비 과다책정, 고금리 대출 등으로 수십억원의 추가 이익 얻음

○ M, J사 등 외국 컨설팅 법인 2곳과 국내법인 37곳 등 총 39개 법인에 대해 230여억원(외국 컨설팅 법인 104억원, 국내법인 126억원) 추정토록 하고, P, T사 등 다국적 기업 2곳에 대해 특수관계회사를 포함,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을 추가 징수하도록 국세청장에 권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토록 국세청 등에 통보

⇒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결과

- 국세청은 관련 법규 정비의 미비로 재외국민이 국내 체납세금 납부 없이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국외현지이주자에 대해 거주여권을 발급할 때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할 기회를 일실
- 외환위기 당시 외화조달을 위해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 허용한 외화표시채권 이자 소득 감면제도를 현행까지 유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미사항 지적

□ 국내기업의 부당지원에 의한 편법 증여 문제

- 현재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ex)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스 문제,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CB 변칙증여 문제 등
 -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국내기업간 이전가격으로 볼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집단내 기업간 지원 문제 역시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임. 이는 이전가격의 범위가 전세계냐 국내나라는 차이
 - 다만, 이러한 행태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 문제로 비롯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 이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세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청장께서는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을 비롯하여 신세계그룹의 상속 문제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임. 기업집단 내 편법지원을 통한 상속증여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방되지 않는 개방형 직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하면서 개방형·공모형 직위를 확대

· 국세청의 경우 개방형 직위 6개, 공모형 직위 8개

cf) 개방형 : 민간인 총원 가능

공모형 : 타 부처 공무원 총원 가능

- 기존의 신분적 계급 질서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가 도입 목적. 하지만, 개방형 직위의 경우 3자리는 공석 중으로 선발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3자리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모형 직위의 경우 전원 국세청 출신일 뿐 아니라 공모절차 없이 임명(6월 30일 인사 등)

- 국세청은 민간인 지원자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명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 질의사항

-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사퇴로 어수선했던 상황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출범 전날 개방형, 공모형 직위에 국세청 직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세청 조직은 과거 매우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출범과 함께 개방형, 공모형 직위의 범위를 넓힌 것은 민간의 활력과 효율성을 정부에도 도입하려는 것인데, 국세청의 개방형, 공모형 직위에 국세청장이 앞장서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개방형직위 재직자 현황

직위명	채용일 (임용일)	직급	성 명	주 요 경 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공석			· 선발절차 진행중
국세청 감사관	' 06.09.11	고위	김 기 주	· 중부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심사1과장 · 국세청 감찰담당관, 서울청 조사3-3과장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공석			· 선발절차 진행중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 06.08.04	고위	김 영 근	· 광주청 조사2국장,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 소득과악인프라추진단, 국세청 소득세과장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 06.06.30)	고위	공 용 표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청 정책홍 보담당관 (※ 선발절차 진행중)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공석			· 선발절차 진행중

※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직위 : 선발절차 없이 재직중인 상태

○ 공모직위 재직자 현황

직위명	임용일	직급	성 명	주 요 경 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06. 7.31	고위	이 승 재	· 중부청 조사3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06. 7.31	고위	이 병 대	·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 관리국장	' 06. 6.30	고위	김 남 문	· 국세청 총무과장,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T/F)팀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 06. 4. 1	고위	김 창 환	· 국세심판원,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 06.6.30	고위	홍 성 욱	· 중부청 조사3국장,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06. 4. 1	고위	민 태 섭	· 한국조세연구원(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 06. 6.30	고위	김 광	·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 06. 6.30	고위	강 성 태	·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민 국세청(파견)

※ 공모직위중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된 직위는 없음

주류·음료 업계 문제와 RFID

□ 현황 및 문제점

- 제품을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에게 대량교부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를 한 9개 청량음료 및 제과업 사업자 적발(국세청 보도자료, 2006년 7월 28일)

※ 무자료 거래는 해당사업자의 탈세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을 유도하여 탈세를 조장

- 주류의 경우도 무자료 거래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의한 탈세가 만연. 업소용이 아닌 주류가 업소에서 판매되고, 더욱이 가짜 양주 등이 유흥주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실

cf) 2005년 ‘가정용’ 주류나 ‘할인매장용’ 주류를 판매한 업소 5798곳 적발
(벌과금 18억원, 1,775개 업소 면허취소)

- 강병철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사무국장

“업계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정화노력을 한다고 해도 무자료 거래가 근절될 수 없을 것. 조사를 아무리 해도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든 문제”

- 최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식별)를 이용하면 주류나 음료 유통시장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cf)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휴대전화에 내장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리더의 핵심기능을 집적시킨 칩을 개발(이동통신사 통해 이 칩을 이용하여 11월 시범서비스 예정)
(주)파루의 경우 초저가 인쇄방식의 ‘RF EAS TAG’ 및 전자잉크 개발

□ 질의사항

- 지속적으로 음료나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RFID를 이용하여 음료나 주류의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RFID 칩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휴대전화에 내장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리더의 핵심기능을 집적시킨 칩(SoC)을 개발한 상태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류나 음료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한 과세 과제

1.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포탈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많은 조세분쟁이 발견되고 있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거래가가 과연 적정한가임.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공시가액으로 할 것인지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가임
- 더욱이 재정경제부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속여 부당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외환의 거래는 금융감독원, 관세청, 한국은행 등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에 따른 신고 정도일 뿐 어떠한 과세물건을 얼마에 샀는가를 감시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 50만불의 주택을 100만불에 취득했다고 속이고 차액 50만불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할 수 있음. 이때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 or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
- 국내에서 사전 증여를 위해 많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가 오히려 국내 과세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해외부동산 저가 취득 후고가 신고 시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증여세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율화가 국내 과세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세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불복청구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과세 문제를 야기한다면 대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를 건의할 생각을 있으십니까?

2.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의 과세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 현금이나 물건이 아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대표적 게임인 ‘리니지’의 경우 갑옷·무기는 보통 하나에 1만원~2만원, ‘바이옵의 반지’ 150만원, ‘자켄의 귀걸이’ 32~5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특정 아이템은 1,000만원에 가까운 액수에 팔리기도 함. 전문 중개사이트도 수백개에 달함. 1위 기업인 아이템베이는 지난해 3천억원을 거래 규모(올해는 3500억원 내외 전망)

cf) 아이템 거래의 국내 시장 규모 연간 1조원 예상

- 인터넷 오락사이트인 ‘한게임’의 사이버 머니의 경우 게임 머니 100조당 2~3만원에 거래. 최근 검찰은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 50여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수배(77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해 7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음)

cf) 적발된 판매업자들이 지난 2년 8개월여간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넘겨준 사례가 무려 118만 9500여건

- 온라인 도박게임 업체의 경우 현금과 사이버머니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판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음
-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는 게임의 본질을 왜곡.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기사건이나 폭행 사건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음

□ 질의사항

-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과세 문제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아이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목으로 몇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정해져야 함. 국세청에서는 아이템 거래 과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음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성화하는 것 또한 국세청의 역할. 아이템 거래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라 포착하기 어렵다면, 아이템 거래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국세청

2006. 10. 20

- 보도자료
- 지방국세청 공통
 - 대구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보도자료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급증

2005년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1,373건

2004년 고충민원 증가율 133.4%, 2005년도 41.4%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세정 서비스에 더욱 신경써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003년 416건에서 2004년 무려 133.4%나 늘어난 971건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도 41.4%가 늘어나 1,373건에 달했다. 2006년은 상반기말 현재 632건을 기록하여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입 비중이 전국의 5% 대에 불과한데,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국세청 중에서도 최하위로서 그만큼 대구·경북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무리한 세정집행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히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2004, 2005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나 과도한 징세를 한 결과일 수 있다.”며 고충 민원 접수가 급증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은 당연한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을 쥐어짤들 무슨 세금이 걷히겠냐”고 따져 묻고,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 세정’, ‘서비스 세정’을 펴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솔선해서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접수건수 (전년대비증감)	처 리 내 용		
		시정	시정불가	시정비율
2006년 상반기	632	505	69	78.53
2005	1,373 (41.4%)	1,045	153	76.27
2004	971 (133.4%)	820	60	85.15
2003	416	322	30	78.34

자료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청

지방국세청 공통

1. EITC 실시에 따른 필요 인원

: EITC 실시에 따른 세원파악 문제가 국세청의 당면 문제
5인 이하 사업장의 지급조서 제출이 잘 안되고 있음

□ 질의사항

- EITC 실시에 따른 각 지방청별 예상 필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각 지방청별로 세원파악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EITC 실시하는데 세원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지급조서 제출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상처럼 잘 제출되고 있습니까?

2. 카드 부당 할증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현황 및 문제점

○ 카드 부당 할증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중고차업계, 전자상가, 금은방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못함. 카드 사용하고자 하면, 6~10%의 수수료를 내라 함. 주된 이유는 카드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사업실적에 잡힌다는 것.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또한 거부하고 있는 실정
-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면서 할인을 해줄테니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함

○ 관리 실태 문제

- 신용카드 부당 할증의 경우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맹점 불법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국세청의 입장은 불법행위 신고만으로 탈세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도 일부만 행정지도. 2차 3차에 걸쳐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2~3차례 행정지도를 받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
cf) 신용카드 부당 할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의사항

-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각 지방청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원파악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당 할증이나 발급 거부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방청별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 준비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증가

- 과세 기준금액 하향(9억원→6억원)과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납부대상자 크게 증가

cf) 8.31 부동산 대책 당시 27만 8천명이 1조 2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대상자 36만명~37만명 수준 예상(2005년 7만명 수준)

- 국세청 조사인원 통폐합과 여유인원 종합부동산세 업무로 전환 실시
올해 국세청 인원 635명 증원되어 선발 중

○ 신고납부 제도에서 부과납부 제도로 전환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의 부과납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전 국세청장도 부과납부로 전환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

□ 질의사항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급증하여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 부과납부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청이 있습니까? 또는 부과납부방식으로 전환되면 행정 차원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국세환급사기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환급사기 문제 발생

- 2005년 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해 준다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ARS를 발송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름
-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한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금을 찾도록 하고 있음

○ 유사 사기로 확대

-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세청의 초기 대처가 부족하여 지방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
- 국세청에서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 홍보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는 없어지고 있으나, 도청 징세과 또는 연금·보험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으로 확대

□ 질의사항

- 최초 인지한 시점에 대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까?
- 지금은 또다시 잠잠해 졌지만, 언제 유사한 사기 사건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경기 장기침체

-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취약한 산업구조와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과 대외적으로는 환율하락, 유가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
- 섬유산업 불황과 밀라노 프로젝트 실패, 지역 건설사 침체 계속 등
- 지역 자금사정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
(2006년 7월 누계 어음부도율 대구·경북 0.3% vs 전국 0.09%)

대구·경북지역 부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총 계		제 조 업				건 설 업		전 국 부도율 (누적)
				전 체		섬 유 업				
		업체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업체 점 유 비	업체수	부도업체 점 유 비	업체수	부도업체 점 유 비	
' 04	계	460	0.55	182	39.6	59	12.8	76	16.5	0.18
	대구	322	0.66	143	44.4	53	16.5	51	15.8	
	경북	138	0.33	39	28.3	6	4.3	25	18.1	
05	계	342	0.36	141	41.2	38	11.1	65	19.0	0.14
	대구	240	0.42	110	45.8	32	13.3	35	14.6	
	경북	102	0.21	31	30.4	6	5.9	30	29.4	
비 율 (' 05 / ' 04)		74.3	65.5	77.5	104.0	64.4	86.7	85.5	115.2	77.8
' 05.7월 누계 ①	계	197	0.38	81	41.1	25	12.7	32	16.2	0.15
	대구	139	0.48	59	42.4	21	15.1	22	15.8	
	경북	58	0.19	22	37.9	4	6.9	10	17.2	
' 06.7월 누계 ②	계	159	0.30	70	44.0	15	9.4	24	15.1	0.09
	대구	115	0.35	49	42.6	13	11.3	17	14.8	
	경북	44	0.19	21	47.7	2	4.5	7	15.9	
비 율 (② / ①)		80.7	78.9	86.4	107.1	60.0	74.0	80.0	93.2	60.0

출처 : 한국은행

- 2006년 3/4분기 대구지역 업종별 기업경기전망(BSI) 지수는 전 분기에 비하여 제조업 77, 건설업 50으로 저조 ⇒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두움

○ 고충민원 급증과 시정비율 증가

- 2003년 이후 고충민원 접수건수 급증
: 무리한 세정집행의 결과, 공무원 업무 미숙 가능성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접수건수	처 리 내 용		
		시정	시정불가	시정비율
2006년 상반기	632	505	69	78.53
2005	1,373	1,045	153	76.27
2004	971	820	60	85.15
2003	416	322	30	78.34

자료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청

○ 세정지원 실적은 양호

- 2006년 8월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증가
(세정지원실적 건수 2.1% 증가, 금액 25.3% 증가)

세정지원 실적

(단위: 건, 억원, %)

기간별 유형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채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6.1 ~ 8월 ①	15,782	2,745	11,585	1,926	4,073	790	124	29
2005.1 ~ 8월 ②	15,456	2,191	10,022	1,496	5,327	680	107	15
증 감 비 ①/②	102.1	125.3	115.6	128.7	76.5	116.2	115.9	193.3

자료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청

□ 질의사항

- 최근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시정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도하고 무리한 세정집행 때문은 아닙니까?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업무미숙 때문입니까?
-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일부 대기업이나 업황이 좋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임. 특히, 건설업종의 타격은 심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더라도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

대구지방국세청 세수 점유 현황(국세수입 최하위)

(단위 : 억원, %)

연도별	대 구 청		광 주 청		대 전 청	
	세수	점유비	세수	점유비	세수	점유비
' 06.7월	35,678	5.6	41,898	6.6	52,309	8.2
' 05년	47,148	5.0	72,292	7.7	79,131	8.4
' 04년	37,709	4.4	72,306	8.5	69,708	8.2
' 03년	35,095	4.1	68,340	8.0	64,331	7.6
' 02년	28,823	3.8	65,521	8.6	53,458	7.0

자료 : 국세청

대구·경북의 총세수와 GRDP 점유비

(단위 : %)

구분 \ 연도별	2002	2003	2004	3개년 평 균
총세수 점유비	3.8	4.1	4.4	4.1
GRDP 점유비	9.8	10.1	10.5	10.1
차 이	6.0	6.0	6.1	6.0

주) 세수 점유비는 수입제세 제외 수치

자료 : 한국은행,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 현황 및 문제점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수 여전히 많아

-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수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차, 3차 거부 건수 역시 압도적
- 2006년 상반기의 경우도 2차, 3차 거부 건수가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음

2005년 지방청별 발급거부(행정지도) 건수

유 형 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220	6,097	5,586	1,890	1,568	1,696	3,383
1차 거 부	19,848	5,985	5,463	1,864	1,547	1,686	3,303
2차 거 부	358	105	123	25	20	10	75
3차 거 부	14	7		1	1		5

자료 : 국세청

2006년 상반기 지방청별 발급거부(행정지도) 건수

유 형 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7,086	2,118	1,967	628	555	579	1,239
1차 거 부	6,915	2,060	1,946	612	549	572	1,176
2차 거 부	153	53	20	15	3	6	56
3차 거 부	18	5	1	1	3	1	7

※ 3차거부자는 '05년도 2차거부자와 '06년도 2차거부자 중에서 거부한 자임

자료 : 국세청

□ 질의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원파악과 관련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도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지방국세청

□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지방국세청 부실과세 상위권

·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율 매년 최상위권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
서울	49.5	44.1	37.7	44.1	45.5	32.4	29.6
중부	46.4	43.6	34.2	43.6	36.5	32.3	28.5
대전	43.9	53.6	36.5	53.6	38.1	32.1	29.4
광주	47.0	46.7	47.4	46.7	44.8	35.2	35.8
대구	40.6	37.1	31.9	37.1	33.8	36.8	25.0
부산	42.0	43.1	42.9	43.1	43.8	31.6	24.4

자료 : 국세청

지방청별 심사청구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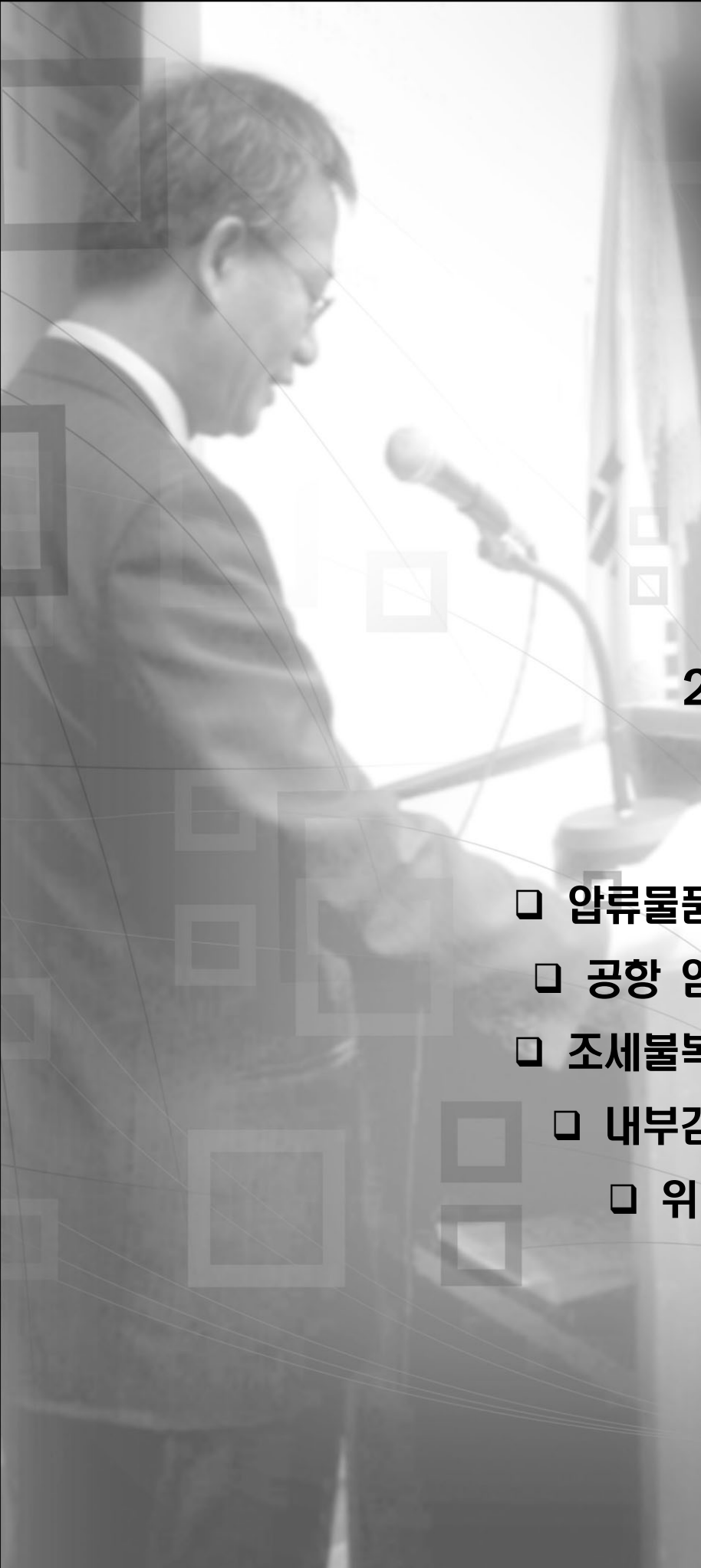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8
서울	42.2	34.0	39.7	29.7	38.3	42.1	25.9
중부	38.9	35.9	35.2	30.8	42.9	43.7	33.3
대전	21.6	28.8	26.9	33.3	33.3	42.0	23.8
광주	38.8	40.0	32.9	34.5	30.6	53.8	33.3
대구	34.6	23.7	25.7	18.0	38.0	52.6	14.8
부산	44.0	33.1	29.6	32.1	29.4	32.2	27.6

자료 : 국세청

□ 질의사항

-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인용율을 살펴보면 매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용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납세자 불복제도의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부실과세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획기적일 부실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2006. 10. 18

- 보도자료
- 압류물품 환가처분 문제
- 공항 임대료 체납 문제
- 조세불복청구 지연 처리
- 내부감시 시스템 부재
- 위조유가증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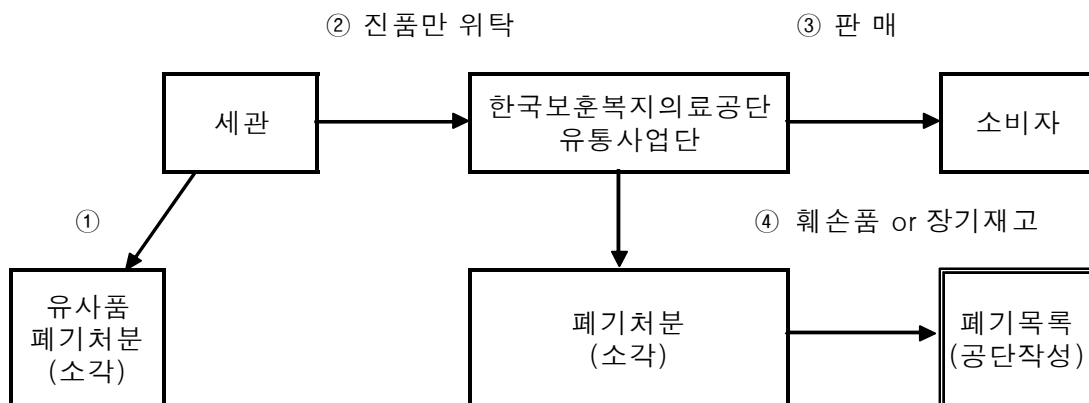
보도자료

관세청, 압류한 ‘짜퉁’ 시중에 유통시켰나?

관세청이 직접 소각해야 하는 “유사품” 이 위탁매각 업체로 넘어가
폐기처분과정에 입회한 세관직원은 “유사품” 표시에도 폐기처분서에 사인
압류물품 환가처분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해야

※ 환가처분 : 세관장이 압수 또는 몰수 등으로 국고귀속된 압류물품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유통사업단으로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는 것

□ 압류물품 환가처분 업무 flow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압류한 물품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짜퉁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며 관세청장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2006년 2월 17일 최종 판매되지 못한 79건이 소각되었는데, 28점의 폐기 사유에 “유사품” (일명 짜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한, 폐기과정에서 세관직원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확인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품’ 또는 ‘상표도용 상품’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소각하므로 위탁판매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문건은 관세청의 압류물품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간 짝퉁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은 “폐기 목록 서류에 ‘유사품’ 이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진품과 케이스 상이’ 또는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의 폐기 사유가 함께 적혀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짝퉁이 유통되려다 폐기처분 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예시> 2006. 2. 17 폐기 목록 중 ‘유사품’

물품관리번호	품명	세관명	위탁일자	폐기사유
016-05-H-000021	향수(G. ARMANI (개))	평택세관	2005-19-04	향, 케이스 불량, 유사품
016-05-H-000022	향수(폴로 (개))	평택세관	2005-10-04	향, 케이스 불량, 유사품
020-05-H-000417	향수(샤넬) 15ml	인천세관	2005-07-15	케이스불량, 유사품(진품과케이스상이)
020-05-H-000419	향수(C/D) 15ml	인천세관	2005-07-11	케이스불량, 유사품(진품과케이스상이)
030-05-H-000110	손가방(루이비통)	부산세관	2005-06-29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30-05-H-000111	손가방(불가리)	부산세관	2005-06-29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140-04-H-000033	키홀더(프라다)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140-04-H-000041	손지갑(프라다)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16-05-H-000021	손지갑(샤넬)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16-05-H-000021	손지갑(구찌)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또한, 윤 의원은 “관세청의 업무착오나 단순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세관직원이 폐기 확인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청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며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압류물품 환가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엄정한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세청의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29.1%로 매우 높고, 위탁판매 의뢰가 격도 소비자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점, 매각과정에서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폐기하게 되는 물품이 많은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압류물품 환가처분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장에 당부했다.

압류물품 환가처분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압류물품 환가처분 현황

- 관세청의 ‘환가처분’ 현황
 - ：세관장은 압수 또는 몰수 등으로 국고귀속된 압류물품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유통사업단으로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
 - －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환가요청을 하는 경우
- 위탁받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유통사업단은 위탁받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한 위탁판매가격 등 규정에 따라 매각하되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은 세관의 폐기승인을 받아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

○ 위탁판매가격의 결정

- 위탁판매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예정가격 환산율¹⁾을 곱하여 산출함
 -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 다만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이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과 100분의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
 - － 국내도매가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책정
 - ① 백금, 보석 및 이들의 제품은 전문감정기관(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순

1) 예정가격 환산율 : 위탁판매업체의 수수료율('06년은 29.1%)

도 확인 등 감정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한 국내도매가격

- ② 금 및 금제품은 수탁판매기관에서 판매되는 날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국내도매가격.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된 국내도매가격이 없을 경우 귀금속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국내도매가격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내도매가격
- ④ 세관장이 조사한 국내도매가격

○ 매각 관리 부실

- 2006년 2월 17일, 위탁판매되고 있는 물품 중, 최종 판매되지 못한 79건이 소각되었으나, 이중 28점이 “유사품” (진품과 케이스 상이,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으로 기록.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관직원은 폐기확인서에 사인함
- 관세청에서는 “유사품” 또는 “상표도용 상품”의 위탁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
 - 향 증발 및 외부상태의 흠집 등으로 정상판매가 불가한 불량한 상태의 물품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유사품”으로 잘못 표기(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
- ⇒ “유사품”이라는 용어와 함께 진품과 케이스 상이,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 판단 사유도 함께 쓰여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관세청의 답변은 신뢰할 수 없음.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잘못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세관직원이 폐기확인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음
- 위탁판매의 수수료율은 29.1%로 높은 수준. 관세법 시행령상 위탁 수수료율 2%
 - ※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 수수료도 2%

cf) 관세법 시행령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 질의 사항

- 2006년 폐기처분된 위탁 물품 중 무려 35.4%(28건/총 79건)가 “유사품”이라는 용어와 함께 ‘진품과 케이스 상이’,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과 같은 사유가 함께 있음.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실수로만 보기에선 좀 이상함. 관세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세청 직원들은 폐기확인서에 사인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서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물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해 준다면, 세관직원이 바쁜 시간을 내면서 폐기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관세청의 관리부실이든,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실수이든지 압류물품 환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관세청에서 의뢰하는 압류물품이 ‘유사품’은 아니라면, 명품회사 등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공항 임대료 체납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공항내 입주한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

-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을 비롯한 10개 공항에 입주한 건교부·관세청 등 국가기관이 2006년 9월까지 총 14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연체료 제외)
- 관세청의 경우 총 체납액이 5억 6,300만원으로 가장 큰 체납을 한 국가기관 2002년의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

국가기관별 임대료 체납액(2006년 9월 기준, 연체료 제외)
(단위 : 천원)

정부부처(입주기관)	체납액
관세청(세관)	563,511
경찰청(공항경찰대)	378,330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	339,699
기상청(항공기상대)	73,875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69,582
국방부(기무사)	65,968
보건복지부(검역소)	3,141
총 계	1,494,106

자료 : 한국공항공사

○ 국제공항시설 사용현황 및 부과경위

- 관세청은 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사용(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
 -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인 『한국공항공단』과 시설별로 ‘02년말 또는 2004년 말까지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2002.3.2일 『한국공사공사』가 발족하면서 임대료를 ‘유료화’ 하여 2002년 12월말 2002년도 임대료 564백만원 소급하여 부과
 - 2003년 예산편성시 2002년도 사용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공사가 협의·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전액 예산에 미반영(2002. 5월)
-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도 예산에 2002년도 사용분 미반영 사실을 알면서도 공항 입주기관에 일방적으로 납부고지(2002.12.30). 이후 매년 2002년분 임대료와 연체료(연 20%)를 부과 및 납부독촉
- 2003년도 임대료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급

공항청사 임대료 미납내역

(단위 : 천원)

공항별	무상사용 승인기한	최 초 부과고지	사용기간	임대료 미납현황		
				임대료	연체료	계
계				563,511	344,029	907,540
김포공항	2002.12.31	2002.12.30	2002.3.2~12.31	281,725	181,595	463,320
제주공항	2004.12.31	2003. 1.20	2002.1.1~12.31	226,795	133,359	360,154
김해공항	2004.12.31	2002.11.11	2002.3.2~12.31	23,414	7,313	30,727
광주공항	2004.12.31	2002.12.30	2002.1.1~12.31	6,745	4,142	10,887
청주공항	2004.12.31	2002.12.30	2002.3.2~12.31	24,832	17,620	4,142

자료 : 관세청

○ 미납사유

- 2002년도 임대료 소급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변호사 등에 질의한 결과 **공사법에 의거 공사의 임대료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
 - 재정당국(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료 납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한국공항공사법 부칙**제5조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의 승계)**

-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칭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공사 설립 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참고> 2002년도 임대료 소급 납부에 대한 의견

※ 건설교통부 및 변호사 등에 2002년 임대료 소급납부에 대하여 질의
(2003. 8월)

○ 건설교통부

- 공사법 부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공사 설립 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고 하므로, 공단이 행한 무상사용 승인은 공사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타당

○ 변호사 이운섭

- 일방이 제한 없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무상 사용승인 행위가 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공사에 승계되므로 2002년도분 임대료 청구는 부당

○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정부기관?

- 한국공항공사는 매월 5일 임대료 체납 국가기관에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발부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납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의사표현 역시 하지 않고 있음
- 해결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 매년 한국공항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국가기관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

□ 질의사항

- 관세청이 임대료 체납 국가기관 중 최고라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이 체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임대료 수입 등이 5년이 지나 결손처리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정부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세청의 체납액에 가장 많으니까 앞장서서 관련 정부기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해결하실 의향을 없으신가요?

조세불복청구 지연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법정처리기한 초과 비율 과다 및 평균처리기간

-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한 초과비율 과다

cf) 법정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 30일, 심사청구 - 60일

조세불복청구 법정처리기한 초과 비율

(단위 : %, 일)

구 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2000년	56.5	50	5.1	21	65.1	77
2001년	47.4	50	16.3	24	69.1	131
2002년	92.9	119	25.0	25	84.2	127
2003년	89.2	113	28.3	31	69.8	150
2004년	82.7	115	48.5	32	86.6	191
2005년	87	207	82.1	100	92.1	294
2006.6월	81.3	101	46.8	50	77.3	85

자료 : 관세청

-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2001년 50%내외가 처리기한을 초과하다가 2002년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92.9%로 급격히 증가. 평균처리기간 역시 2.38배 증가
 - 2005년에는 평균처리기간이 200일을 넘어선 207일

- 이의신청의 경우
 - 2003년까지는 30% 미만의 법정처리기한 초과비율과 법정기일에 가까운 평균 처리기간을 보였음. 하지만 2004년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48.5%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2005년에는 처리기한 초과비율 82.1%로 2배 가까이 증가. 게다가 평균처리기간은 100일로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임
- 심사청구의 경우
 - 매년 처리기한 초과비율은 80%대를 넘나들다 2005년에는 92.1%로 거의 심사청구 건 전체가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 2000년 이래로 평균처리기간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거의 1년에 가까운 평균처리기간인 294일이 걸림.

○ 매년 신청되는 과세불복건수는 많지 않음

- 과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과세불복신청이 법정기한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음.
- 불복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으나, 관세청의 경우 청구되는 과세불복건수는 비교적 많지 않음
- 2005년 급격히 증가한 과세불복제도 법정처리기한 초과비율과 평균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급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 6월까지 법정 기한 초과율과 평균처리기간이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임
- 관세청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적절한 법정처리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불복청구 신청 건수 및 인용율

(단위 : 건, %)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2001	청구	417	41	81
	처리	285	38	55
	인용	45	7	11
	인용률	15.8	18.4	20.0
2002	청구	360	36	139
	처리	397	36	120
	인용	94	6	43
	인용률	23.7	16.7	35.8
2003	청구	380	54	180
	처리	436	53	159
	인용	109	5	76
	인용률	24.9	9.4	47.8
2004	청구	241	74	116
	처리	254	66	142
	인용	72	6	58
	인용률	28.3	9.1	40.8
2005	청구	108	58	62
	처리	131	57	76
	인용	34	8	26
	인용률	26.0	14.0	34.2
2006. 6	청구	54	54	28
	처리	64	62	22
	인용	11	7	4
	인용률	17.2	11.3	18.2

□ 질의사항

- 2005년에 비해 2006년 6월까지 법정기한 초과율과 평균처리기간이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2005년의 경우 타 년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급증한 해임. 2006년 6월까지의 실적은 타 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잘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측면이 잘되고 있다고 보신 겁니까?
- 너무 긴 처리기간이 납세자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정처리기한 초과비율과 초과기간을 줄이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내부감시 시스템 부재

□ 현황 및 문제점

○ 법조 브로커에 휘둘린 관세청 직원

- 서울지검에서 법조브로커 김홍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6급 송종현이 연관된 사실을 적발(향응 2회 980만원, 금품 5,000만원 수수혐의)
 - 세관직원 송종현, 특가법(뇌물)위반으로 구속
 - 당시 조사에 관여한 직원(6급 이○○, 7급 김○○, 8급 차○○)들도 송종현과 함께 김홍수로부터 향응수수

○ 관세청 내부 감사 결과

- 관세법 위반사건 내용
 - 의류수입상 포미나(대표 양○○)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3,050만원)하고, 불법송금(2,450만원)한 것을 적발(2003. 10. 13 고발)
- 송종현에 대한 기소내용
 - 부정행위 : 관세포탈사건 조사시 2002년 2월~2003년 9월 수입분만 인지, 이전수입분은 고의누락하여 사건 축소하고, 압수한 팩스 자료 등을 반환하면서 즉시 소각토록 권유
김홍수(카페트 수입상)에게 사건선처와 관련 수차례 금품요구 및 동인의 카페트 수입부분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 암시
 - 뇌물수수 : 사건 선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김홍수로부터 현금 5,000만원 수수 및 관련 직원들과 일식집 및 룸싸롱에서 2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 향응 수수

※ 송종현은 향응(1회)수수는 시인하나 금품수수 혐의는 일관해서 부인

·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

- 6급 송종현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은 2002년 이전 수입분이 조사누락(전체 119건 중 2002년도 이전 수입분 56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포탈세액 약 2,400만원 추정)
- 사건 송치 후 2003년 10월경 송종현이 주선하여 김홍수로부터 일식집 및 룸싸롱에서 1회(340만원) 접대받은 것으로 진술(기타 추가향응 및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

○ 조치사항

- 송종현은 검찰기소에 따라 직위해제(2006년 7월 10일) 및 징계처분 예정
- 관련 직원들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 예정

□ 질의사항

-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관련 직원의 비리를 알았습니까?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사건만 내부조사 했습니까? 추징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추징액보다 많은 뇌물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종현씨가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상식적으로 함께 조사한 직원들이 송종현의 2002년 수입분 조사누락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관세청 내부 감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건만으로도 관세청이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서 이뤄낸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조유가증권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위조수표 또는 위조유가증권의 불법 유입 증가

- 과거 위조화폐가 불법으로 유입되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위조화폐보다는 위조수표이나 위조유가증권의 불법 유입이 많아지고 있음
- 위조화폐의 경우 장당 액면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위조수표이나 위조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이 매우 커 유통될 경우 금융시장에 매우 큰 불안을 가져올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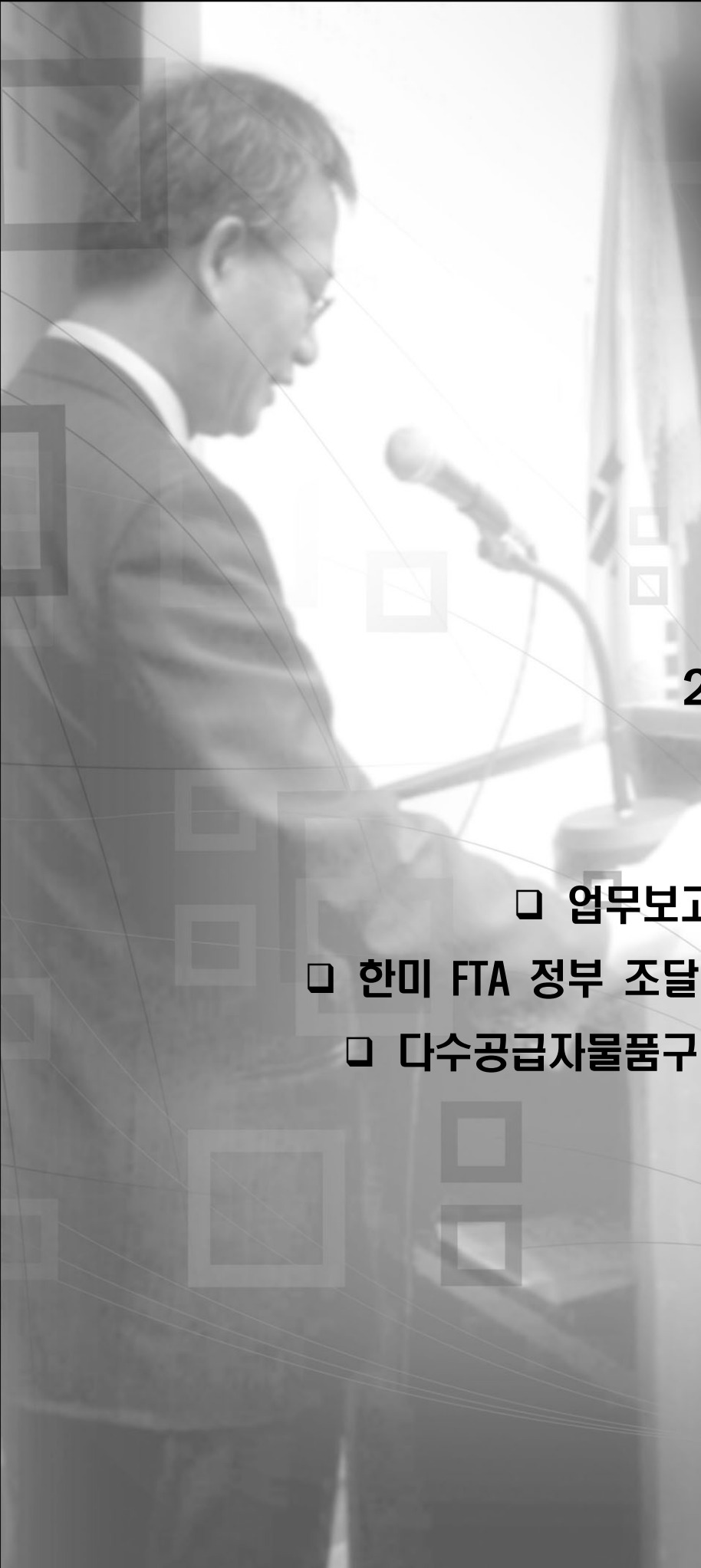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위폐, 위조채권 등 적발현황

구 분	건 수	수 량(매)				
		위조화폐	위조채권	위조수표	위조유가증권	계
2002년	8	7,027	3,512	-	-	10,539
2003년	12	12,190	5,483	49	-	17,722
2004년	8	394	757	1,677	-	2,828
2005년	5	10,700	-	3,591	6,000	20,291
2006.6월	3	-	6	-	50,517	50,523
계	36	30,311	9,758	5,317	56,517	101,903

자료 : 관세청

□ 질의사항

- 최근에 위조수표와 위조유가증권의 불법 유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니까? 위조수표와 위조유가증권 불법 유입의 증가는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관세청에서 보다 면밀한 감시를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조달청

2006. 10. 19

- 보도자료
- 업무보고현황 자료 관련
- 한미 FTA 정부 조달 분야 대비 미흡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 관련



보도자료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조달청은 뭘 하고 있나?

한미 FTA 협상 6개월 지나서야 기초 자료 수준의 용역 발주
 한창 진행중인 협상을 위한 전략은 11월 15일해야 나와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업 의견 수렴은 각 단체에 보낸 메아리 없는 공문 한장뿐
 정부조달 협상의 핵심 사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파악 없어
 업무보고에조차 없는 해외조달시장, 한미 FTA, 조달청은 포기?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9일 조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과 관련, 협상 대비와 국내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 주무기관이 되어야 할 조달청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 한미 FTA 관련 조달분야 용역 결과가 11월에나 나와?

조달청은 지난 8월 17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950만원을 주고 발주했다.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 선언이 2월 3일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용역을 발주한 것이며,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이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임을 감안할 때 왜 이 시점에서야 이 용역을 발주했는지 의문스럽다.

<용역의 주요 연구 내용>

- 미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현황 파악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사례 및 개선방안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및 시사점

조달청은 2005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주요 과제로 밝힌 바 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위 용역을 통해 파악해야 할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 정도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까지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서둘러야 했다.

특히 용역의 내용 중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및 시사점”이 들어 있는 것은 더욱 한심스럽다. 11월 15일이면 4차 협상도 끝났을 시점인데, 용역결과가 과연 협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2.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전혀 없어

한미 FTA와 관련 조달청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있는지?’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서 조달청은 한미 FTA가 시작한 직후 4개 기관에 ‘자료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었다.

- 공문 번 호: 국제협력팀-216
- 공문 발송일: 2월 14일
- 공문 제 목: 한-미 FTA GPA 협상 대비 자료조사
- 공문 수신인: 해외조달시장진출협의회장,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장, KOTRA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공문 내 용: 한미 FTA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청취
 - 진출 희망분야(물품/IT/군수물자 등)
 - 진출 장애요인 또는 진출에 요구되는 사항
 -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하여 평소 느끼신 점. 끝

2월 14일은 한미 FTA 협상 선언 후 불과 1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직 한미 FTA가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내진 한 페이지짜리 공문은 기관들로부터 아무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것이 조달청이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의 전부이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조달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문 한 장을 보낸 것 외에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달청의 직무유기이다.

3. 미국 측 주장이 수용될 경우 우리 조달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 전혀 못해

현재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에 국제협력팀 1~2인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 불거진 핵심 이슈에 대해 조달청은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우리 조달 시장이나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윤건영 의원실 질의 및 조달청 답변>

- 질의: Surety Bond 발급기관 상호 인정 문제와 관련,
 - 우리 보증회사 중 미국이 인정해줄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미국이 설정하는 threshold에 이 회사가 부합할지, 특정 회사만 선택할 경우 다른 회사들의 반발은 없는지, 미국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 및 조달청의 구체적인 입장

답변: Surety Bond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질의: 미국 측의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1500만 SDR→500만 SDR) 요구 관련
 - 수용될 경우 국내 건설시장 및 지방 건설업체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관련해 조달청이 파악한 내용은 없는지(있다면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한 조달청의 구체적 입장

답변: 정부는 한-미 FTA에서도 현행 양허하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할 사항임

- 질의: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전망 및 조달청의 입장

답변: 민자유치사업(BOT) 개방에 따른 영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할 사항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정부 조달 협상에는 왜 참여하는가? 혹 이 내용에 대해 조달청 뿐 아니라

정부 조달분과 협상단 자체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때마침 조달청의 ‘2006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는 지난해에는 들어 있었던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 한미 FTA가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달청이 한미 FTA,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관련

□ 조달사업 조기 집행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잘 한 일

○ 2005년 9월 30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의 경우, (별첨 1)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를 진작’한다고 조달사업 진행현황 설명:
 - 실질적으로 사업비용이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월별 현황을 보면 연중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었음(2005년 국정감사 지적)

☞ 조달사업의 진행현황을 마치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기 집행하듯 설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를 보고에서 빼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봄

□ 그러나 올해 업무현황보고 자료는 매우 부실

○ 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련 자료 대폭 축소

-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분은 16페이지
→ 올해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라는 제목으로 9페이지뿐

○ 지난해 추진하던 내용 대폭 빠져

- 우수조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조달과 관련한 내용
 - 물품검색 및 자동분류시스템(Ontology) 고도화사업(2005. 12 시작)
 - 국내 IT기업 해외진출 지원
- 조달청 역점 추진사업인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 모두 2006년 업무현황보고에는 빠져 있음

☞ 조달청 업무의 축소인가, 아님 청장 교체에 따른 핵심 업무 변경인가? 왜 이렇게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부실한가? 이유는?

한미 FTA 정부 조달 분야 조달청의 대비 미흡

□ 발주시점도, 연구주제도, 연구기간도 적절하지 못한 한미 FTA 연구용역

○ 한미 FTA 관련 조달분야 용역 발주를 2006년 8월 17일에?

- 연구용역명: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발 주 일: 2006. 8. 17(∼2006. 11. 15)
- 용역수행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팀)
- 계약금액: 2,950만원 (※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FTA 협상 선언이 2006년 2월 3일인데 6개월 이상 지나서야 이러한 용역이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보다 빠른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이미 1년 반 전 조달청 주요 업무의 하나로 꼽았던 사항

- 조달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 3) 중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 중 하나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 들어 있음

☞ 조달청의 업무 목표를 고려하더라도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파악은 보다 조기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중에는 지난해와 달리 국제협력이나 미 조달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조달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 한미 FTA 협상 전략이 왜 용역에 들어가 있나?

·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

- 미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현황 파악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사례 및 개선방안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및 시사점

(조달청의 과업지시서 중 용역의 기본방향: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시 장애요인(진입장벽)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등에 반영 시킴과 아울러...)

☞ 11월 15일에 나오는 용역보고서가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 자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3개월짜리 용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용역 List

용역명	수행자	수행기간
한·미 FTA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협상의 시사점	윤창인	2006.1-2006.12
한·미 FTA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임혜준	2006.1-2006.12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분석	이흥식	2006.1-2006.12
한·미 FTA의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발전대책	서진교	2006.1-2006.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한미 FTA 협상 전반과 관련한 용역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 표를 보듯 FTA와 관련해 1년짜리 장기 용역 다수 진행중

☞ 현재 다수의 용역을 진행하는 대외정책연구원에서 미국조달시장과 관련한 쓸모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보는지? 특히 3개월만에 그러한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결국 조달청은 한미 FTA와 관련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 보고서’를 발주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조달청의 한미 FTA 준비 매우 부족

○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어

- 조달청은 국내에서 조달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노력한다면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기관
- 그러나 조달청은 본인들이 상대하는 개별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 조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미 FTA와 관련,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내용’

1. KOTRA,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에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장애요인, 진출요구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별첨 2: 2/14일자 공문)
→ 별도 의견 제출 기관 없었음
2. 연구용역 진행중

☞ 조달청은 국내에서 조달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기에 노력한다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결과 민간기업 만나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일을 한 흔적 전혀 없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 상식적으로, 2월 3일 협상 선포를 한 상황에서 열흘만인 2월 14일에 해외조달시장진출협의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의견을 내놓으라고 할 경우 답변이 가능하겠는지? 또 그 이후 전혀 의견 수렴 노력을 안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

☞ 미국쪽 협상단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우리 쪽에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닌가?

□ 미국 측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우리 조달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음

- 조달청은 계속해서 정부 조달분야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국제협력팀 2명), 협상 내용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

* 윤건영 의원실 자료요구 및 조달청 답변

· Surety Bond 발급기관 상호 인정 문제와 관련,

- 우리 보증회사 중 미국이 인정해줄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미국이 설정하는 threshold에 이 회사가 부합할지, 특정 회사만 선택할 경우 다른 회사들의 반발은 없는지,
- 미국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 및 조달청의 구체적인 입장

답변: Surety Bond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미국 측의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1500만 SDR→500만 SDR) 요구 관련

- 수용될 경우 국내 건설시장 및 지방 건설업체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관련해 조달청이 파악한 내용은 없는지(있다면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이 이슈와 관련한 조달청의 구체적 입장

답변: 정부는 한-미 FTA에서도 현행 양허하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할 사항임

·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전망 및 조달청의 입장

답변: 민자유치사업(BOT) 개방에 따른 영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할 사항임

☞ 대체 조달청은 어떠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지?

☞ 계속해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혹 이러한 상황은 조달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 조달 분야 협상 전반의 문제가 아닌지?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 관련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란(MAS)란?

○ 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

-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제도

○ 조달청의 MAS 제도 평가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적합
- 유사한 물품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참여를 허용, 진입장벽 제거 통한 기업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물품 중 선택할 수 있는 장점
- 업무 담당자의 부정·부패 방지, 조달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제고, 고객만족행정에 기여

2005년, 2006년 현재 MAS 공급금액의 조달청 물품 구매 비중

(단위 : 품목/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8월말
MAS 계약	품목수	6,084	18,397
	계약금액	13,077	26,756
	공급금액(A)	9,175	8,338
조달청 물품구매(B)		96,876	64,333
비율(A/B)		9.5%	13.0%

자료: 조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MAS 확대의 문제점

○ 수요기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

- 기본적으로 MAS는 수요기관의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이므로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그러나 현재 수요기관이 희망 물품을 신청한 결과를 보면 거의 미미한 수준
 - 2006년 수요기관 희망물품 신청 현황: 냉방기, 냉난방기 등 5개
 - 반면 조달업체 희망물품 신청 현황: 720여개

☞ 수요기관의 희망물품 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신청 현황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 결국 조달업체들이 희망하는 물품만 계속해서 리스트에 추가되고 있는게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물품을 추가하고 있는지?

○ 예상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능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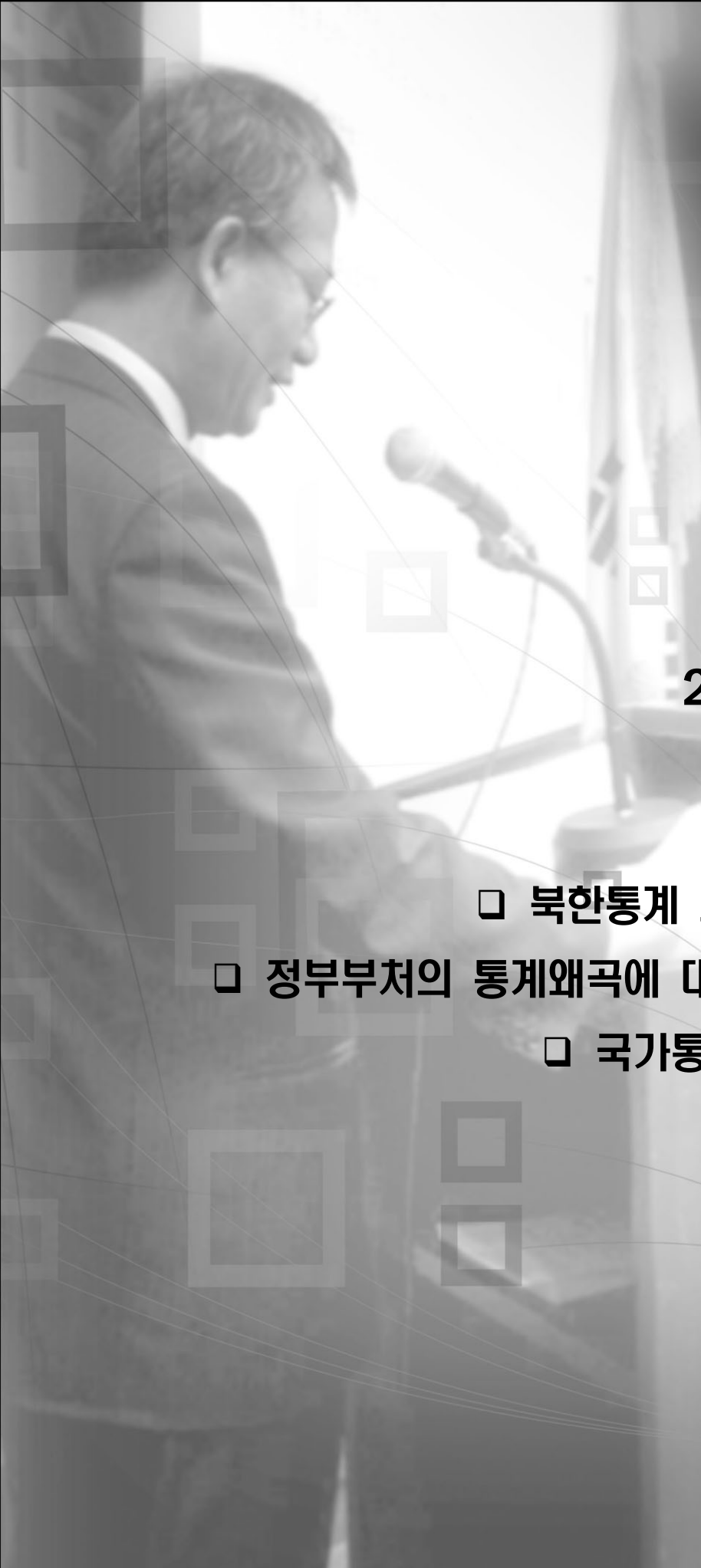
-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 제출) 새로운 물품에 대한 MAS 계약시 수요량 예측
: 업체 의견 및 시장상황 등을 참고하여 구매예상량을 정하여 공고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수요기관의 필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찾고자
하는 제도도, 노력도 없는 상황으로 업체의 의견에 사실상 전부 의존하는 상
황(조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확인)
- MAS는 계약 자체가 공급자에게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예상 수요량을
가능한 정확히 제시하여 공급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나, 현 제도상
으로는 그러한 의무도 책임도 조달청이 가지고 있지 않음
(조달청은 생산업체가 이미 시장에서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 등
이 없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청과의
계약을 근거로 생산계획을 잡을 것이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없을 경우에는 업

체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

- 오히려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 미만인 경우 차기 계약시 배제함으로써 수요 예측의 실패로 빚어진 상황을 조달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 있음

☞ 현재 MAS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할 경우 시장 상황 점검이나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MAS의 급속한 물품 수 확대를 위해 수요 예측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모두 업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게 아닌지?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편의 뿐 아니라 조달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제도상 조달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의 현행 제도는 모든 책임을 조달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지?



통계청

2006. 10. 18

- 보도자료
- 북한통계 외면하는 통계청
- 정부부처의 통계왜곡에 대한 미온한 대처
- 국가통계 통합 DB구축



보도자료

북한 외면하는 통계청

통계청 자체 작성 및 정부 승인통계에 북한통계 全無
 통일부 월별 자료 생산해도 통계청은 나몰라라
 KOSIS 홈페이지, 2005년 북한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 통계청 KOSIS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화면 (2006.10.17 현재)

(백만원)

기금유형별 기금액 ²⁾ 수록기간 (부정기:1991~2005)

	← prev	수록기간	2005	2004	2003	2002	2001
☐ 계		1991 ~ 2005	750,876	519,772	1,169,516	1,037,114	840,486
☐ 정부출연		1991 ~ 2005	375,000	171,400	300,000	490,000	500,000
☐ 민간출연		1992 ~ 2005	31	1	1	78	1,080
☐ 운영수익 등		1991 ~ 2005	15,843	38,371	46,515	42,036	29,406
☐ 공자예수금 ¹⁾		1999 ~ 2005	360,000	310,000	823,000	505,000	310,000

¹⁾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항목 주석>

²⁾ 2004년은 1~8월까지의 수치임

- 통일부는 2006.8월 현황 이미 발표, 통계청 KOSIS는 2005.8월까지만 수록되어 있음
- 항목 주석에 오류사항 방치 (2005년을 2004년으로 표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때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계청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673종에 달하는 정부승인통계 중에도 북한과 관련된 통계조차 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통계자료조차 제시간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1995년 이후 통일부, 국정원 등 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 자료를 넘겨받아 매년 한 차례씩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총 21부문 **76종**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통계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통계는 통일부와 KOTRA, 한국은행 등이 생산한 **24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인 KOSIS 홈페이지를 조회해 보면 각종 북한 관련 통계 수치가 작년 10월분까지만 게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계자료의 주석에는 수록 연도조차 200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일부는 매월 “남북교류 협력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2006.10.17일 현재 8월호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현황 등 총 11종의 북한 관련 통계를 통계청에 제공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 대북 교역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직접 북한관련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통계청이 기본적인 자료수집마저도 게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지원 규모 논란 등과 관련 “통계청이 앞장서 대북 지원 관련 통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교역대금과 지원대금, 국내지원과 국제지원,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접근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 통계청이 직접 관리하는 KOSIS만 느림보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 2006.10.17일 현재 **2006년 8월 자료**까지 공표
- 자료를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e-나라지표’
 - 2006.10.17일 현재 **2006년 8월 자료**까지 공표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2006.10.17일 현재 **2005년 10월 자료**까지 집계

통계청 KOSIS 남북교역 [반출입 통관현황]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반출입 통관현황

<서비스기관:통계청

주기 기간 ~ 소숫점 검색

☐ 품목수	1989 ~ 2005	349	202	186	204	201
☐ 금액(천달러)	1989 ~ 2005	264,338	258,039	289,252	271,575	176,170
☐ 반출:건수	1989 ~ 2005	9,582	6,953	4,853	3,773	3,034
☐ 품목수	1989 ~ 2005	679	575	530	495	492
☐ 금액(천달러) ¹⁾	1989 ~ 2005	611,309	439,001	434,965	370,155	226,787
☐ 합계:건수	1989 ~ 2005	16,581	12,893	11,209	8,796	7,754
☐ 품목수	1989 ~ 2005	1,028	634	588	572	549
☐ 금액(천달러)	1989 ~ 2005	875,647	697,040	724,217	641,730	402,957
☐ 반입:건수 계	2003 ~ 2005	44,563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2,877,901	-	-	-	-
☐ 반출:건수 계	2003 ~ 2005	44,096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2,989,882	-	-	-	-
☐ 합계:건수 계	2003 ~ 2005	88,659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5,867,783	-	-	-	-

¹⁾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통계표 주석>

최근년의 자료는 1월~10월까지의 자료임
출처: 통일부

e-나라지표 [남북 교역 추이]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지표명: 남북 교역 추이

[단위: 천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반입	152,373	176,170	271,575	289,252	258,039	340,281	317,925
반출	272,775	226,787	370,155	434,965	439,001	715,474	457,600
계	425,148	402,957	641,730	724,217	697,040	1,055,755	775,525
실질교역수지	-61,315	-110,639	-197,419	-169,485	-168,017	-220,778	-179,725

출처: 관세청 남북한 통관자료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 무상지원(민간, 정부), 경수로 건설, KEDO중유,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사회문화, 기타)금액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만을 비교한 개념임
* 2006년자료는 8월 기준임

지표 담당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 남북교역팀, 02-2100-5884

최근 갱신일 : 2006-09-21

북한통계 외면하는 통계청

□ 북한관련 통계 작성현황

○ 북한관련 통계 중 승인통계는 하나도 없어

- 2006.10.1 현재 통계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이 작성 승인한 673종의 정부승인통계 중 북한과 관련되어 승인된 통계는 없음
- 통계청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 7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통계 자료를 넘겨 받아 1995년 부터 매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간행물을 발간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에는 총 21부문 **76개 종류**의 통계가 수록
이 중 통계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통계는 통일부와 KOTRA, 한국은행 등의 **26종**에 불과

○ 자료 업데이트 느릿느릿

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지출현황 - 통일부에서는 2006년 8월 말까지의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공개(건별내역 및 금액)
 - 반면,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서는 2005년 자료조차 마감되어 있지 않음. 또한 주석에는 “2004년의 경우 1~8월까지의 수치임”으로 잘못 쓰여 있음. 이는 통계청이 북한 통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정보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

통계청 KOSIS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화면 (2006.10.17 현재)

기금유형별	기금액 ²⁾	(백만원)					수록기간 (부정기:1991~2005)
		수록기간	2005	2004	2003	2002	2001
☐ 계		1991 ~ 2005	750,876	519,772	1,169,516	1,037,114	840,486
☐ 정부출연		1991 ~ 2005	375,000	171,400	300,000	490,000	500,000
☐ 민간출연		1992 ~ 2005	31	1	1	78	1,080
☐ 운영수익 등		1991 ~ 2005	15,843	38,371	46,515	42,036	29,406
☐ 공자예수금 ¹⁾		1999 ~ 2005	360,000	310,000	823,000	505,000	310,000

¹⁾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²⁾ <항목 주석>

²⁾ 2004년은 1~8월까지의 수치임

2. 통일부에서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을 발표하여, 매월의 남북 인적교류, 교역동향 세부자료까지 공개하고 있음. 2006년 10월 17일 현재 2006년 8월 분까지 집계되어 공표

-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자료는 2005년 10월분까지 집계되어 있음.

반면, 통계청 정보시스템 중에 하나지만 자료를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e-나라지표에는 2006년 8월분까지 공표되어 있음

통계청 KOSIS 남북교역 [반출입 통관현황]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서비스기관 : 통계청

즐거찾기추가

주기 기간 ~ 소숫점 검색

☐ 품목수	1989 ~ 2005	349	202	186	204	201
☐ 금액(천달러)	1989 ~ 2005	264,338	258,039	289,252	271,575	176,170
☐ 반출:건수	1989 ~ 2005	9,582	6,953	4,853	3,773	3,034
☐ 품목수	1989 ~ 2005	679	575	530	495	492
☐ 금액(천달러) 1)	1989 ~ 2005	611,309	439,001	434,965	370,155	226,787
☐ 합계:건수	1989 ~ 2005	16,581	12,893	11,209	8,796	7,754
☐ 품목수	1989 ~ 2005	1,028	634	588	572	549
☐ 금액(천달러)	1989 ~ 2005	875,647	697,040	724,217	641,730	402,957
☐ 반입 :건수 계	2003 ~ 2005	44,563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2,877,901	-	-	-	-
☐ 반출 :건수 계	2003 ~ 2005	44,096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2,989,882	-	-	-	-
☐ 합계 :건수 계	2003 ~ 2005	88,659	-	-	-	-
☐ 금액(천달러) 계	2003 ~ 2005	5,867,783	-	-	-	-

1)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통계표 주석>
최근년의 자료는 1월~10월까지의 자료임
출처: 통일부

e-나라지표 [남북 교역 추이]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지표명: 남북 교역 추이

[단위: 천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반입	152,373	176,170	271,575	289,252	258,039	340,281	317,925
반출	272,775	226,787	370,155	434,965	439,001	715,474	457,600
계	425,148	402,957	641,730	724,217	697,040	1,055,755	775,525
실질교역수지	-61,315	-110,639	-197,419	-169,485	-168,017	-220,778	-179,725

출처: 관세청 남북한 통관자료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 무상지원(민간, 정부), 경수로 건설, KEDO종류,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사회문화, 기타)금액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만을 비교한 개념임

* 2006년 자료는 8월 기준임

지표 담당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 남북교역팀, 02-2100-5884

최근 갱신일 : 2006-09-21

○ 북한 관련 통계작성 담당하는 인력 및 예산도 매우 빈약

- 통계청 통계정보국의 행정정보과내 4급 1명, 7급 1명등 단 2명의 공무원이 전담
- 관련예산에는 간행물 발간예산으로 매년 500만원내외만 편성

☞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는 e-나라지표의 경우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으며, 지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관리하는 KOSIS의 자료는 1년여 동안 자료의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음.

매월 통일부에서 자료를 공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적시에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통계청의 직무유기임.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 북한 관련자료의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정부 공표통계조차 제대로 수합,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청 본연 업무의 태만행위라고 할 수 있음.

※참고

e-나라지표

-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만든 통계 사이트로 각 부처에서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빠르고, 그래프와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 이용자의 이해를 도움.
- 정부의 41개 부처가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 운영에 참가
- 각 부처 : 소관 통계지표 관련 업무(통계지표 발굴, 의미분석 등 설명자료 작성, 입력, 업데이트,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답변)
- 통계청 :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시스템 관리 및 개선, 통계지표 오류 여부 및 품질수준 점검)

□ 질의사항

1. 통계청의 기본업무가 무엇입니까? 국회에 통계청이 업무보고 할 때의 일반현황에 따르면, 각종 통계작성기준을 설정하고, 국가통계를 종합·조정하는 한편, 주요 통계정보를 생산, 종합관리하고,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 통계청장께서는 북한의 통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 중요한 북한관련 통계를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과 관련된 정부 승인통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정기간행물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76종의 통계 중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통계는 전체의 34%인 26종 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또한 똑같은 북한통계도 통일부 홈페이지와 통계청의 KOSIS, e-나라지표 간에 수치가 다릅니다. 업데이트가 제각각이고 잘못된 표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 같이 중요한 우리 국가통계는 제때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면 통계청은 북한관련 통계에는 무관심하신 겁니까?
5. 북한 관련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통계청 내에 단 2명입니다. 예산도 1년에 한번 책자 발간 때 500여 만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북한통계를 소소하게 취급하니까 북한에 대한 실상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6. 손자병법에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교류하며, 북한을 지원하고,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상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경제·사회 주요지표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이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 통계 뿐 아니라 남북교역과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제 현금흐름기준, 교역과 순수지원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집계하여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부처의 통계왜곡에 대한 미온한 대처

□ 정부부처의 통계왜곡 현황 및 통계청의 대응

○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 국민갈등 초래, 국민불신 자초

- 2005.7.15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가구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자료 사용, 특히 미성년자까지 포함
 - 2005.7.21일,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사유로 행자부에 주의조치함
 - ※ 2006.10.2일, 행자부는 “2005년말 토지소유 현황 분석” 자료 공개시 인별 자료와 함께 가구별 자료도 공개한 바 있으나, 언론의 속성상 인별자료인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토지 57.1% 소유” 형태로 보도됨
- 2005.9.7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노대통령은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 발언함
 - 2005.9.8일, 서울대가 강남학생 비중이 12%라고 반박 자료 공개함
 - 청와대는 “2004년도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53명 중 강남학생 33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함
- 2006.3.23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 노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90%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려도 나머지 80%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발언
 - 근로소득세는 총 조세수입 중 6%에 불과함
 - 또한 상위 20%는 연봉기준 2,500~3,000만원(1천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임
- 2006.8.24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 서울 강남 3개구의 실거래가격이 3월 대비 6월에 14.4% 하락 주장
 - ※ 추병직 장관 “실거래가의 하락은 거품붕괴의 시작” 이라고 발언

- 3월과 6월 자료는 실거래 기준으로, 대상 아파트단지조차 서로 다르고 동일 단지내에서도 평수·층수·내부수리여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건교부 발표와 건교부장관 발언은 완벽한 사실 왜곡임
- 부동산뱅크 자료에 따르면 3월 대비 6월의 강남 3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강남구 8.24%, 서초구 8.68%, 송파구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8.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中

☎ 추병직 / 건설교통부 장관 :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과거 연초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그런 정도 하락된 것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층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고 기본적으로 거래건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거래한 게 지난 4월인데 그 통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병직 / 건설교통부 장관 :

일일이 하나하나 방향이나 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가 축적되면 향의 동호수마다 발표를 하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반기에 거래가 이루어진 게 24만 건입니다. 그 중에 지나치게 높게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낮게 이루어진 10만 건에 대해서는 전부 통계자료에서 배제를 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것만 이번에 통계 잡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단지에도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이 발표에서 잘 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 통계청의 미온한 대응

- 의원실 질문 : 지난 8월24일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통계분석 결과 발표에 대하여 통계왜곡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의견 및 후속조치는

· 통계청 답변

- 본 통계에서 가격의 비교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에서 동일하지 않아 왜곡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가격통계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교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일하여야 하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비교기간 중 동일한 물건의 거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통계의 경우 비교기간 중 거래된 아파트의 단지별·평형별 거래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있어, 통계이용자가 기초자료 전체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집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한 용도나 관점에 따라 본 통계자료를 다르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 통계 자체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히 후속조치를 취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의 위치, 방향, 층수, 호실의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단지별, 지역별 가격비교는 보다 많은 거래실적이 축적된 이후, 건물방향이나 층별로 세분된 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05년 행자부 토지보유현황 관련 통계청 대응

- 의원실 질문: 행정자치부가 2006년 10월2일 발표한 ‘2005년 토지소유현황분석’ 이 통계왜곡이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에 대한 통계청의 의견 및 후속조치

· 통계청 답변

- 2006년10월2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대장과 주민등록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현상을 왜곡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 발표된 자료를 보면, 먼저 토지를 소유한 세대 및 인구와 소유하지 않은 세대 및 인구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이후의 통계표와 분석은 토지를 소유한 세대 및 인구에 국한하고 있음

	전체	토지 소유	토지 미소유	소유 비율
· 세대(만 세대)	1,785	1,070	715	59.9%
· 인구(만 명)	4,878	1,334	3,544	27.3%

- 이는 2005년 발표된 통계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 및 인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소유의 편중정도를 왜곡해 보일 우려가 있다는 통계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이것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주로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행태(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부인 등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드문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부합되는 것임
- 그럼에도 일부 언론(동아일보)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와는 다르게 임의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 및 인구까지를 포함시켜, 상위 구간별 토지소유비율 등과 같은 통계치를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도한 데에 기인하는 것일 뿐,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통계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1. 최근 정부부처의 통계왜곡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여러 언론에서 우려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통계의 경우, 그 관심의 정도가 매우 큼니다. 부동산 관련통계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2006년 10월 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 소유현황」이나 2006년 8월 2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실거래가 공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통계에 대한 언론의 왜곡논란에 대해 통계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2.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통계청에 요구하여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건교부의 「아파트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나 관점에 따라 본 통계 자료를 다르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 통계 자체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히 후속조치를 취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통계왜곡 논란이 있었던 행자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행자부가 2006년에 보완·발표하자, 통계청은 ‘2005년 발표된 통계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 및 인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소유의 편중정도를 왜곡해 보일 우려가 있다는 통계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본 의원이 통계청장께 묻겠습니다. 원시 통계자료만 틀리지 않게 공표한다면, 분석이 잘못되어도 통계왜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2005년의 행자부 통계분석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왜곡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겁니까? 행자부는 작년에 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시통계자료도 공표하고, 향후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 발표할 것임을 보도자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통계분석결과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것은 원시통계자료의 공개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통계분석결과가 사실을 왜곡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신 때문은 아니십니까?
4. 건교부에서 8월에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발표할 때, 건교부는 아파트 거래가격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평당 평균가격이라는 계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의 가격이 매우 개별적이고 편차가 크에도 짧은 자료 수집기간동안 동일 아파트가 두 번 거래되기 힘든 사실을 감안 하여, 이러한 계산을 하였다고 건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각종 언론에서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떨어졌으므로 ‘3.3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통계청장은 통계왜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역시 특정한 용도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비단 통계 원시자료만 신뢰성 있게 작성되고 공표된다고 해서 통계가 바르게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를 바르게 분석하여, 왜곡이 없이 사실을 표현할 수 있어야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6. 정부부처 장관의 발언은 전 국가에 걸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정부관료들이 왜곡된 통계분석을 하고, 이를 근거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려 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계청의 능동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국가통계 통합 DB구축

□ 국가통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진행상황

○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시스템 현황

- KOSIS : 통계청 작성 국가통계 위주로 제공
- STAT-KOREA : 85개 국가통계 작성기관 통계 DB 링크
- e-나라지표 : 통계작성기관별로 제공하는 정책관련 통계지표를 one-stop으로 서비스
- MDSS(Micro Data Service System) : 통계 원시자료 시스템
- GIS: 통계지리정보시스템, KOSIS와 지도를 연계해 지역 정보 검색
- 메타정보시스템: 통계청 작성 통계자료의 설명자료 제공
- 통계표준분류: 통계작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 자료 제공

○ 현 통계 자료시스템의 문제점

- KOSIS : 최신 자료의 부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가 대부분임. 엑셀 파일로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지표에 대한 설명이나 그래프를 볼 수 없음.
- STAT-KOREA :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정부부처 등의 85개 기관의 링크제공. Home > 통계작성현황 > 작성통계별현황 > 통계조사명 으로 검색(조사수 : 684개, 작성기관수 : 153개, 2006.10.13 현재)하면 통계로 가는 링크는 나오지 않고, 승인통계의 소재 정보만 볼 수 있음.

☞ 통계이용자들이 통계를 검색하는 이유는 그 조사의 통계자료가 보고 싶기 때문임, 승인통계의 승인번호나 작성주기, 작성기관등의 정보에 작성기관으로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주면 훨씬 이용자를 배려하는 사이트가 될 것임.

- e-나라지표 : 가장 최근에 만든 통계 사이트로 각 부처에서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빠르고, 그래프와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 이용자의 이해를 도움. 그러나 홍보의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e-나라지표 서비스

○ e-나라지표의 도입배경 및 설명

- 2006년 9월 1일 대국민 서비스 개시한 통계시스템의 하나
- 정책관련 주요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각 기관별로 통계 제공으로 통계의 소재를 모르는 이용자들의 검색 및 활용 저조

○ e-나라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

- 2006.8월말 현재 782개 국정관련 주요 통계지표 제공

※세부내역 첨부자료 참고

○ e-나라지표의 특징

- 41개 부처가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 운영에 참가
- 각 부처 : 소관 통계지표 관련 업무(통계지표 발굴, 의미분석 등 설명자료 작성, 입력, 업데이트,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답변)
- 통계청 :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시스템 관리 및 개선, 통계지표 오류 여부 및 품질수준 점검)

○ e-나라지표서비스의 문제점

- e-나라지표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결여
 -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 또는 ‘지표’ 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으나, 실제 검색 결과는 그렇지 않음
 - 통계청(2006.8.31) e-나라지표 보도자료 中

□ 별도 절차 없이* 인터넷 사이트(www.index.go.kr)를 통해서 이용 가능

-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 “지표” 만 검색해도 쉽게 e-나라지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며

-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e-나라지표 배너 설치

포탈사이트 검색어 입력하여 “e-나라지표” 찾기

포탈 사이트	검색어 ‘통계’	검색어 ‘지표’
다음	100개 안에 없음	상위 9번째
네이버	100개 안에 없음	상위 16번째
엠파스	100개 안에 없음	상위 8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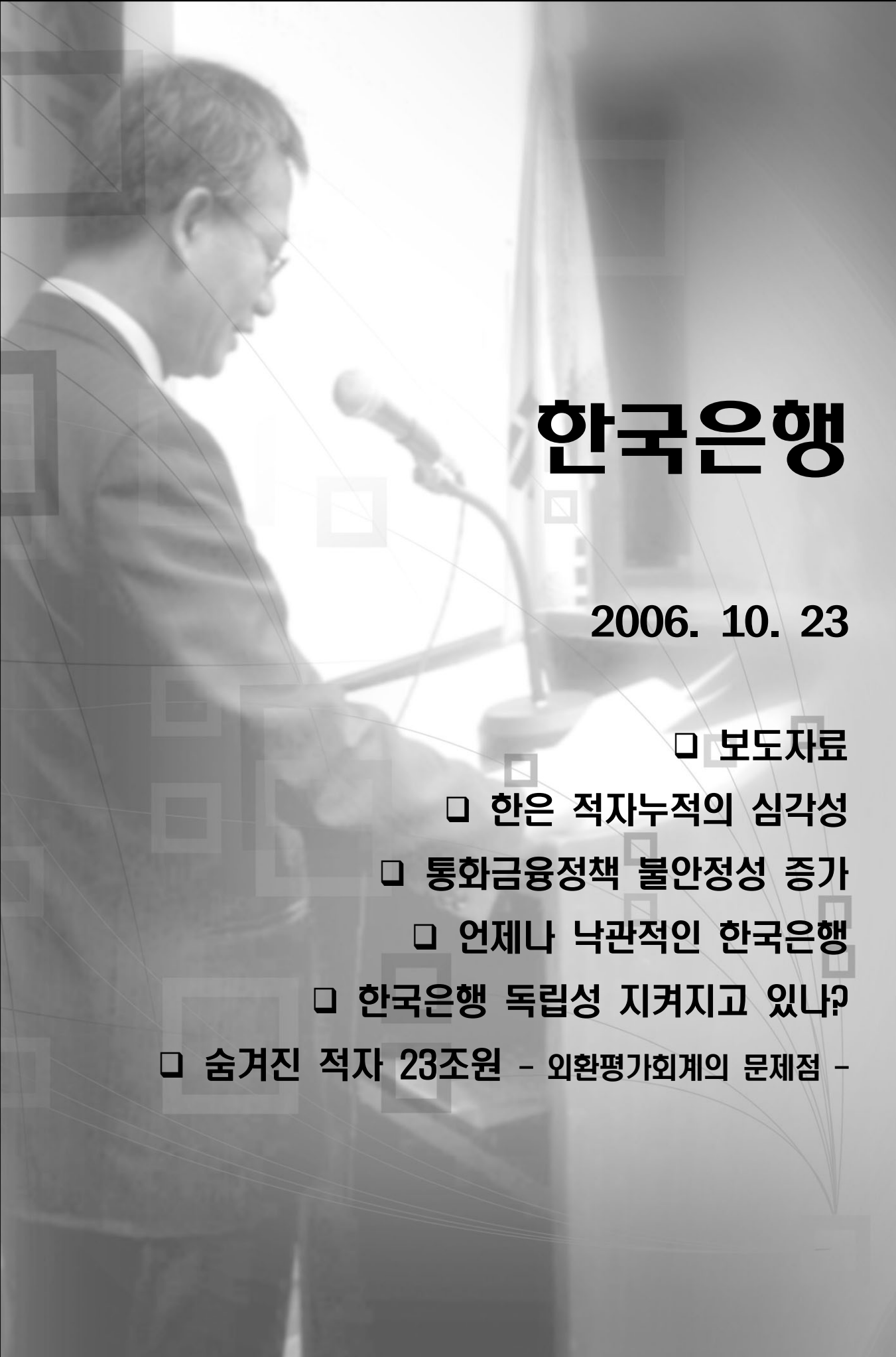
자료: 의원실 자체 검색, 2006.10.16

□ 질의사항

1. 여러 통계자료가 각 기관에서 중복되어 공표되고, 서로 비슷한 통계도 많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할 일은 바로 각 기관의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각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통계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2. 금년 7월에 국회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국가통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이 2006년~2008년에 세워져 있고, 금년에 40개 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합 DB로 구축하겠다는 설명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3. e-나라지표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통계청장은 아십니까?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2006년 9월 1일 시작하여 약 한달반가량) 하루에 사이트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4. 제가 e-나라지표 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통계를 검색해 보았는데, KOSIS나 STAT-KOREA 에 비해서 그래프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어 많은 통계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각종 포탈사이트에서 ‘통계’를 검색했을 때 e-나라지표 사이트가 상위 100개 사이트 안에 rank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통계를 검색하고 싶

어하는 국민들에게 e-나라지표 사이트를 알리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통계청 내부에서만 이용하실 겁니까?

5. 지금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 통계바다(STAT-KOREA) e-나라지표, 등에는 서로 중복되는 통계가 이름만 바뀌어서 수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도 다 제각각입니다. 통계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통계청에서 신뢰성 없는 통계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 공표 전에 각 부처간 간행물, DB, 홈페이지 간의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통계 이용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2006. 10. 23

- 보도자료
- 한은 적자누적의 심각성
- 통화금융정책 불안정성 증가
- 언제나 낙관적인 한국은행
- 한국은행 독립성 지켜지고 있나?
- 숨겨진 적자 23조원 - 외환평가회계의 문제점 -



보도자료

2006. 9. 17

환율방어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은행 - 2006년 상반기에만 1조4,139억원 적자 기록 -

당초 연간 적자규모 1조8,180억원 예상(2006년도 예산서) 크게 빗나가
사상 최대 적자 신기록 갱신 유력, 올 한해 적자 규모 3조원에 육박 예상
내년부터는 매년 한국은행에 국민혈세 투입해야 할 위기에 봉착
국가신인도 타격,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 한국은행 2006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27,979	예금이자	11,002
예치금이자	5,849	통화안정증권이자	32,583
어음대출이자	1,067	RP매각증권이자	4,038
수입잡이자	2,477	지급잡이자	2,634
유가증권매매익	1,650	유가증권매매손	1,159
기타	739	화폐제조비	397
		기타	2,087
		당기순이익	-14,139
합 계	39,761	합 계	39,761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은 무려 1조4,13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 적자규모 급증에 사상최대 적자 신기록 갱신 유력

이는 당초 한국은행 예산서상 올해 한 해 동안의 예상 적자 규모인 1조8,180억원의 77.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이 추세대로 갈 경우 한국은행은 올 한 해에만 약 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에 1,502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2005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은 3년 연속 적자에 작년 이어 사상 최대 적자 기록 등 불명예스런 기록을 연거푸 갱신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2~2004년 과도한 환율방어의 후유증

이와 같이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과 이자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흑자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과도한 환율방어 전략을 펴왔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해 온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 ⇒ **첨부자료 4 참조**

(참고 : 최근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문제와 국회 재경위의 감사청구 논란도 이 시기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의 후유증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예산서에 나타난 2006년의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7%(9,044억원) 늘어난 총 7조484억원으로서 한국은행의 2006년도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규모 11조8,229억원의 60%에 해당한다. ⇒ **첨부자료 3 참조**

연초 예산편성시 적자규모 대폭 축소표시, 고의인가 실수인가?

한편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연초에 예산편성시 적자규모를 과도하게 작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5년에도 연초 예산서상에는 5,697억원의 적자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무려 1조3천억원이나 적자 규모를 잘못 예측했던 것이다. 2006년의 경우도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연간 약 3조원 가까운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 역시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보다 약 1조2천억원이나 큰 규모의 적자인 것이다.

※ 한국은행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예산대비 결산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예 산	결 산	비 율	연간예산	상반기결산	비 율
수 익	84,171	74,876	89.0%	100,024	39,761	39.8%
비 용	89,868	93,652	104.2%	118,204	53,900	45.6%
당기순이익	-5,697	-18,776	329.6%	-18,180	-14,139	77.8%

자료 : 한국은행, 2005년도 결산서 및 2006년도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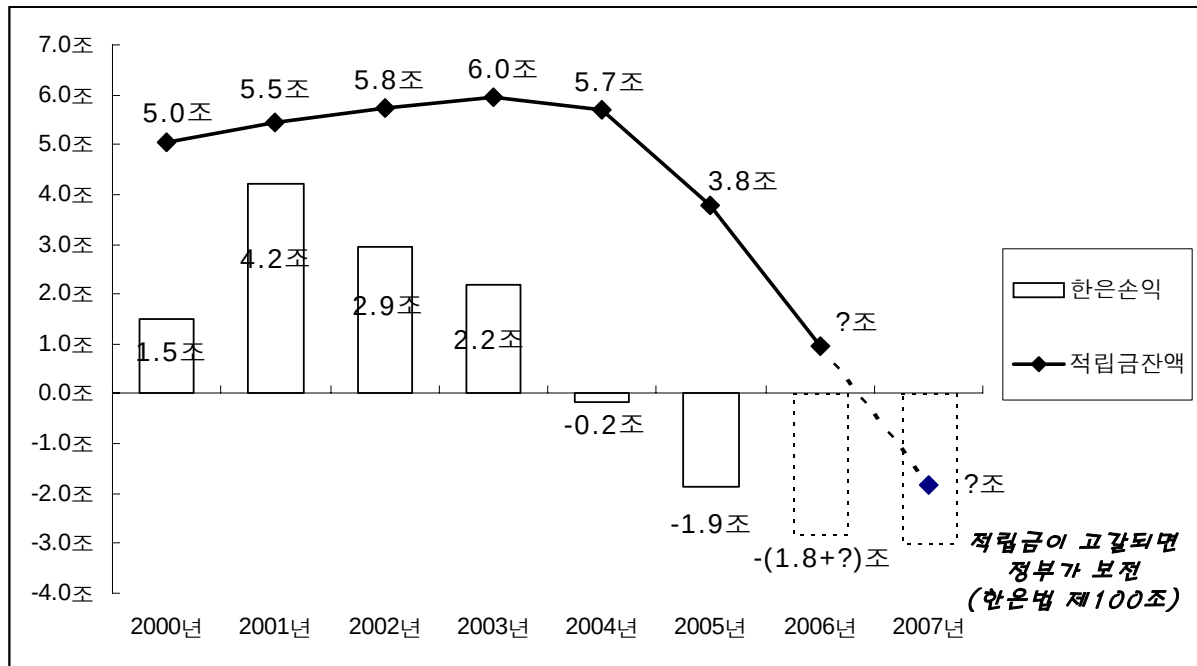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환율과 국내외 금리에 대한 전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 이라고 밝히고, “물론 미래의 환율이나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면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마저도 지키지 않는 듯 하다” 고 꼬집었다.

2007년부터는 매년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 위해 국민혈세 투입해야

한국은행 적자 문제는 국민세금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행법 제 100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손실을 미리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혈세를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2005년말 현재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합하여 3조7,748억 원 남아 있다. 2006년도에 한국은행이 3조원 가량의 적자가 나면 올해 말 한은의 적립금은 불과 7~8천억원만 남게 된다. 2007년도 한국은행 적자가 7~8천억원보다 크게 되면 2007년말에는 적립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차액만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은이 극적으로 흑자 전환하지 않는 한(실제로 이것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년부터는 매년 적자 규모의 100%를 국민혈세로 채워 넣어 연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첨부자료 1 및 아래 그림 참조**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 적자가 누적되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태에까지 다다르면 국가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도 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려 해도 적자가 급증하니 부담이 되고, 통안증권 발행에 제약을 받으니 물가관리도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또 정부로부터 국민세금을 타와 써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한국은행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은 적자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점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지만, 당장 물가 관리에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한은은 평시에 법정적립금 이외에 가능한 한 많은 적립금을 쌓도록 한은법을 고치겠다지만, 이것도 흑자가 날 경우에만 그럴법한 대책이지 이미 사후약방문이다.

윤 의원은 “외평기금의 누적적자와 한국은행의 적자만성화, 이 모두 경제원리를 무시한 데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가야만 할 거대한 짐들”이라고 설명한다. 카드사태의 후유증에서 미처 벗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 경제는 또다시 무모한 외환정책의 후유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보도자료

2006. 10. 22

통화안정증권, 빨간 불 켜졌다!

- 1991년 이래 발행잔액 10.7배 증가, 이자지급액만 60.6조원 -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본원통화 증가규모(28.9조원)의 2.1배에 달해 통화량 흡수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이자 때문에 오히려 통화량 늘려 이자 60.6조원 풀리자, 다시 통안증권 발행해서 31.7조원 걷어들인 셈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1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15년 8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이자로 지출한 금액만 무려 6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8월 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162.6조원의 37.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자가 이자를 낚는 악순환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지만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이 오히려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규모는 1990년말 현재 15.2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8월말 현재 무려 10.7배가 늘어나 162.6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만 해도 무려 총 60.6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중 본원통화가 13.8조원에서 42.7조원으로 약 28.9조원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2.1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은 이 기간동안 최소한 31.7조원(60.6조원-28.9조원) 어치의 통화안정증권을 다시 발행해서 통안증권

이자로 인해 늘어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해왔다는 얘기다.

※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잔액/이자지급액 추이

단위 : 십억원, 배

구 분	본원통화 기말잔액 (A)	통안증권 기말잔액 (B)	비 중 (B/A)	본원통화 증 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1990	13,811.2	15,240.5	1.1	-	n.a
1991	16,321.7	13,496.5	0.8	2,510.5	1,677.5
1992	18,107.3	20,264.1	1.1	1,785.6	1,879.3
1993	23,079.8	24,201.8	1.0	4,972.5	2,399.2
1994	25,204.1	25,340.3	1.0	2,124.3	2,420.5
1995	29,305.4	25,824.9	0.9	4,101.3	2,521.9
1996	25,722.4	25,030.0	1.0	-3,583.0	2,854.6
1997	22,519.3	23,470.9	1.0	-3,203.1	2,725.4
1998	20,703.0	45,673.3	2.2	-1,816.3	4,841.2
1999	28,486.7	51,489.2	1.8	7,783.7	3,799.2
2000	28,238.1	66,377.7	2.4	-248.6	4,665.7
2001	32,826.8	79,121.3	2.4	4,588.7	4,873.0
2002	37,987.4	84,277.9	2.2	5,160.6	4,801.8
2003	40,749.0	105,496.7	2.6	2,761.6	4,963.1
2004	38,791.8	142,773.0	3.7	-1,957.2	5,584.4
2005	43,249.0	155,235.0	3.6	4,457.2	6,144.0
2006.8월 말	42,727.4	162,638.7	3.8	-521.6	4,416.0
합 계				28,916.2	60,566.8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의 주범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에 1,502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2005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6년도에도 한은은 예산서상 1조8,18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조4,1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의 예산서에 나타난 2006년의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7%(9,044억원) 늘어난 총7조484억원으로서 한국은행의 2006년도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규모 11조8,229억원의 59.6%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6년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총비용 규모 5조3,900억원 중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60.5%인 3조2,583억원을 차

지하였다.

통안증권 부담은 통화금융정책의 불안정성을 초래

윤건영 의원은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너무 커지면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펴는데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통안증권 이자지급으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됨은 물론이고 통안증권 발행 확대에 의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의원에 의하면 통화금융정책의 불안정성은 통화안정증권 잔액과 본원통화 잔액의 비율을 보면 쉽게 나타난다(위 표의 B/A 항목). 실제로 1997년까지 이 비율은 약 1.0배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 비율은 1.8~2.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06.8월말 현재 약 3.8배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의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규모 급증과 이자지급액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누적적자 심화로 인해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윤건영 의원은 “통화안정증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며, “여태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문제가 더욱 커지도록 내버려둔 것은 한국은행이 너무 현실에만 안주해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도자료

2006. 10. 22

환율하락으로 2년 동안 외환보유고 40.3조원 증발

외환보유고 원화가치 2004년 24.1조원, 2005년 16.2조원 각각 하락
같은 기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49.2%나 되는 큰 규모
한국은행, 제때 처리하지 않고 숨어있는 손실 23.1조원 (2006.상반기말)

☞ 외환보유고의 2004년과 2005년 평가손익

단위 : 억달러, 억원

연 도	외환보유고 (달러기준)	평 가 손 익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분 ¹⁾	외평기금 ²⁾	외환보유고 計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272,414	59.5%
합 계	-	-311,730	-91,113	-402,843	819,469	49.2%

(주)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2006.10.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무려 40.3조원 하락하였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절반에 육박(49.2%)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 환율상승으로 외환보유고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연말 환율 상승에 힘입어 7.3조원의 가치상승이 있었음.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천억원을 넘어선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 합계해보면 총 외환보유고 가치는 41.4조원 하락하였음

외평기금은 이미 손실처리 완료, 한국은행은 손실에 반영 안 해

외환보유고는 관리주체에 따라 둘로 나뉜다. 우선 최근 17.8조원의 누적손실과 불법·편법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으로 감사원 감사 직전까지 갔던 외국환평형기금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가 별도로 있다.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외환보유고는 2,103억9천만달러인데, 이 중 462억8천만달러가 외평기금의 몫이고 나머지 1,641억1천만달러가 한국은행의 몫이다.

그러면 40.3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 가치하락은 어디로 간 것인가? 외국환평형기금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잘 알려져 있는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17.8조원 안에 외환보유고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사정이 좀 다르다. 한국은행은 자체 내부회계규정에 따라 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계정(외환평가조정금)에 쌓아두었다. 나중에 환율이 상승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정산하기 위함이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특이한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주고 이익이 나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즉, 환율 변동에 따라 몇 조원 단위로 정부 예산이 휘둘리게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 숨어있는 손실 23.1조원

단순히 생각해서 환율이 100원 하락하게 되면 한은 몫 외환보유고 1,641억달러의 가치는 무려 16.4조원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특별한 회계규정 덕분에 이러한 가치변동분을 손실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의 이익 또는 손실은 최대로 잡아봐야 연간 몇 조원 단위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손실처리하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에 쌓아둔 누계 금액은 2005년말 현재 18.3조원, 그리고 2006년 상반기말 기준으로는 무려 23.1조원에 달한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화안정증권 급증으로 인한 한국은행 적자문제, 외평기금 적자문제,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모두 수출지상주의에 목맨 재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와 한국은행의 막연한 외환보유고 쌓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

※ 한국은행의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¹⁾	평가손익	기업회계상 순이익
2000	14,834	138,568	83,977	98,811
2001	43,143	127,617	-10,951	32,192
2002	29,368	58,707	-68,910	-39,542
2003	21,750	128,275	69,568	91,318
2004	-1,502	-46,730	-175,005	-176,507
2005	-18,776	-183,455	-136,725	-155,501
2006상반기	-14,139	-230,624	-47,169	-61,308

(주) 1. 외환평가조정금 대변계정은 +로, 차변계정은 -로 표시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윤건영의원실 계산

외환보유고,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윤건영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은행이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외환보유고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2006. 10. 22

한국은행마저도 낙하산, 독립성 훼손

**2006.4.6일 청와대 인사수석 발언은 부적절한 인사개입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 한은 독립성 지킬 수 있나
낙관적 경제전망, 코드 맞추기식 통화정책 등 독립성 훼손 우려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한은 독립성을 지켜나갈 의지 보여줘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2006.10.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6일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정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은 부적절한 인사개입이자 한국은행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 이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4월 6일 한국은행은 은행연합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심훈 현 금통위원과 학자출신 후보 1명을 청와대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심훈 금통위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 반면, 대한상의 회장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려하였다.

당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학자 출신보다는 정부와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가이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실제로 참여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박봉흠 위원이 추천되어 금통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에 반발하여 한국은행 노조는 이 문제로 4월 11일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개입” 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분명히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이 임명거절을 한 자체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이 나서서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은 부적절한 인사개입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 때 부동산 정책 지원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적이 있다. 또한 8월 17일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꿨을 때에도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 때는 불과 3일 만에 60쪽 분량의 허술한 보고서를 내면서 부동산정책을 미화하고 나선 적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과연 한국은행이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윤건영 의원은 “일국의 중앙은행 금통위원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참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고,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행 사전에는 독립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된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한국은행은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적자누적의 심각성

□ 한국은행 적자 현황 및 심각성

핵심 : 통제 불가능한 해외 요인으로 인해 한은 손익이 조 단위로 휘둘림

⇒ 정부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 확대, 한은의 독립적인 정책기능 위축

○ 2006년 상반기 한은 손익 및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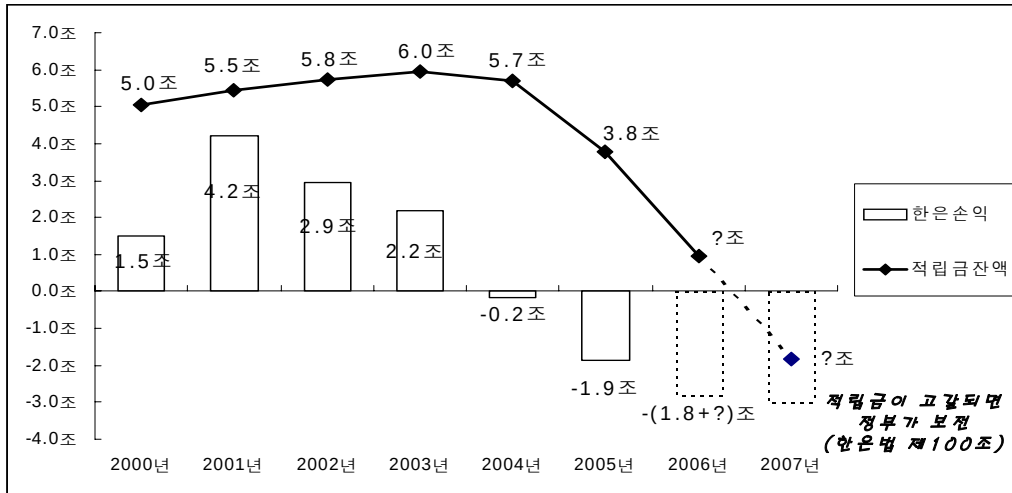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27,979	예금이자	11,002
예치금이자	5,849	통화안정증권이자	32,583
어음대출이자	1,067	RP매각증권이자	4,038
수입잡이자	2,477	지급잡이자	2,634
유가증권매매익	1,650	유가증권매매손	1,159
기타	739	화폐제조비	397
		기타	2,087
		당기순이익	-14,139
합 계	39,761	합 계	39,761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2006년 상반기만 1.4조원 손실 발생
 - 당초 한국은행 예산서상 2006년 연간 예상 적자 규모인 1조8,180억원의 77.8%에 달함
 - 2006년 연간 적자규모는 약 2.5~3조원 사이로 예상됨
 - ※ 한국은행은 2006년 연간 적자규모를 약 2~2.5조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음
 - 3년 연속 적자, 작년 사상최대적자 기록을 1년 만에 경신 등 예상
- 2006년 상반기말 적립금 잔액 2조3,609억원에 불과
 - 연간 적자 2.5조원으로 가정하면 2006년말 적립금잔액은 1조2~3천억원 수준
 - 한국은행은 2007년도 적자규모를 1조2~3천억원으로 예상(경향신문, 2006.9.19), 이 경우 2007년말 전후하여 적립금이 고갈됨(첨부 1, 2, 3 참조)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 한국은행 대규모 적자의 원인 및 심각성

· 대규모 적자의 원인 : 과도한 환율방어의 후유증

- 2002~2004년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초과한 과도한 환율방어(첨부 4 참조)
-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안정증권 대규모 발행

※ 2003~2004년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음

단위 : 십억원, %

연 도	연말 통안증권 발행잔액	전년대비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전년대비	통안증권금리	
					2년물	1년물
2000	66,377.7	-	4,665.7	-	8.24%	7.81%
2001	79,121.3	19.2%	4,873	4.4%	5.74%	5.45%
2002	84,277.9	6.5%	4,801.8	-1.5%	5.72%	5.19%
2003	105,496.7	25.2%	4,963.1	3.4%	4.59%	4.42%
2004	142,773.0	35.3%	5,584.4	12.5%	4.09%	3.92%
2005	155,235.0	8.7%	6,144.0	10.0%	4.24%	3.97%
2006예산서 (상반기말)	165,140.0 (157,468.70)	6.4% (1.4%)	7,048.4 (3,258.3)	14.7% (-)	- (4.88%)	- (4.61%)

자료 : 한국은행

- 한은 적자누적의 심각성 : 통화금융정책의 위축 및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 중앙은행의 누적적자는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줌

- 한은법상 적립금 고갈시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야 함

※ 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

“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 통화금융정책 위축 우려 : 통안증권 발행, 금리인상 등 정책수단의 제약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 정부 예산 투입시 재정경제부의 입김 작용 가능

□ 한국은행의 적자해소 노력과 문제점

○ 한국은행이 밝힌 적자해소 방안과 그 한계

- 통안증권 발행 증가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대응방안

통안증권 발행 억제 방안	문제점 또는 한계
외평기금 역할 확대	- 손실발생 주체를 한국은행→외평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 -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견제와 조화를 이루는 외환정책이 바람직할 것임
국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의 국외부문 자체 흡수	- 해외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등 재정경제부 소관 정책에 해당 - 민간부문의 자율적 선택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
정부의 한은 차입 축소	- 정부의 경기부양용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은이 제어할 수 있는 변수인지 의문임
총액한도대출 축소	- 경제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한은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납부 최소화	- 순이익 발생시기에만 효과가 있는 정책임

○ 통화스왑 제도를 통한 통안증권 발행 억제

- 통화스왑 거래 규모
 -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실적 : 2005.5~2006.7월까지 112.8억 달러
 -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실적 : 2005.7~2006.7월까지 2.3억 달러

- 통화스왑 거래의 긍정적 효과 : 통안증권 발행규모 축소
 - ⇒ 채권시장에서 통안증권이 회사채를 구축하는 문제 완화
- 통화스왑이 한국은행 손익을 개선하지는 못함
 - 한은 손실의 가장 큰 구조는 ‘자산(외화)수익규모 < 부채(원화)비용규모’ 임
 - 통화스왑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달러를 제공하고 원화를 수령했다가, 만기시 외화 원리금을 받고 원화 원리금을 주는 것임
 - ⇒ 손익만 고려하면 ‘외환보유고(미국채)자산+통안증권부채’ 와 차이 없음
- 통화스왑의 단점 : 대차대조표에 자산·부채로 기재하지 않음에 따른 관리소홀 우려
 - 거래시점 회계처리 : (차변) 원화자산 증가 / (대변) 달러자산 감소
 - 기말시점 결산평가 : 없음(원가법 적용)
 - ⇒ 동일한 구조로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일으키는 주체가 대차대조표상에 기록되지 않음
 - ※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상 자산부문에는 T-Bond 등 유가증권액(외환보유고), 부채부문에는 통안증권 발행액이 명시됨

○ 한국은행의 누적손실에 대한 대응 미흡

- 한국은행 손익 예측 부정확
 - 한국은행 손익은 환율, 국제금리, 국내금리 등에 영향을 받음
 - 외환보유고의 급증과 통안증권 발행규모 급증으로 인해 한은 손익의 변동성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 특히 환율과 국제금리 요인은 한국은행이 제어하기 어려운 요인임

※ 한국은행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예산대비 결산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예 산	결 산	비 율	연간예산	상반기결산	비 율
수 익	84,171	74,876	89.0%	100,024	39,761	39.8%
비 용	89,868	93,652	104.2%	118,204	53,900	45.6%
당기순이익	-5,697	-18,776	329.6%	-18,180	-14,139	77.8%

자료 : 한국은행, 2005년도 결산서 및 2006년도 예산서

- 한국은행 손익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대처 미흡
 - 연초 예산서 작성시 환율이나 국내외 금리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음 (예:2006년 예산서 작성 기준환율 1천원대)
 - 환율, 금리변수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지만,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환율이나 기타 요인의 급변시에도 연초 계획한 예산서를 수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의 적자 완화를 위한 제안 (윤건영의원실)

- 제안내용 :
 - (1)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중 58.5조원을 국고채로 전환
 - 2003~2004년 2년간 통안증권 증가규모 58.5조원(전체 발행잔액의 37.1%)
 - 외평기금이 통안증권과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인수
 - (2) 한국은행이 외평기금에 지급하는 정기에치금리 인하
(현행 : 미 재무성 채권 2년, 5년 금리의 산술평균)
- 제안이유 :
 - 2003~2004년 당시 외환정책 실패의 근원적, 최종적 책임은 재경부에 있음
 - 통안증권 급증은 당시 외환정책 실패의 결과물로서, 물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함
 - ⇒ 통안증권 급증의 근본 원인제공자(재경부)가 결과에 대한 부담도 떠안음
- 기대효과 : 통안증권 이자부담 연간 약 2.5조원 절감(2006년 예산서 기준) 및 외평기금 예치자산 증가로 이자지급액 약 2조원 내외 증가 예상

□ 질 의 사 항

1. 한국은행의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제시한 적자해소 방안들은 모두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한국은행 적자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2.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결국 외환정책을 모두 재정경제부에게 맡기고 한국은행은 뒷짐을 지겠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한국은행의 비용 요인을 외평기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보다 “이미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중 일부를 자산과 함께 외평기금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외환정책에서 재정경제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도, 한은 적자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국은행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국제금리는 한국은행이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 변수들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과 2006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그 방향은 손실이 커지는 쪽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이 정부 예산의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산편성은 정부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은행의 통화금융정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예산 편성시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하도록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5. 한국은행의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환율과 국제금리의 전망이 당초 예측과 달라져서 소신 있는 정책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한 가지 환율과 금리예측만을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책, 즉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해놓고 대응하면 더 좋은 정책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은 총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통화금융정책 불안정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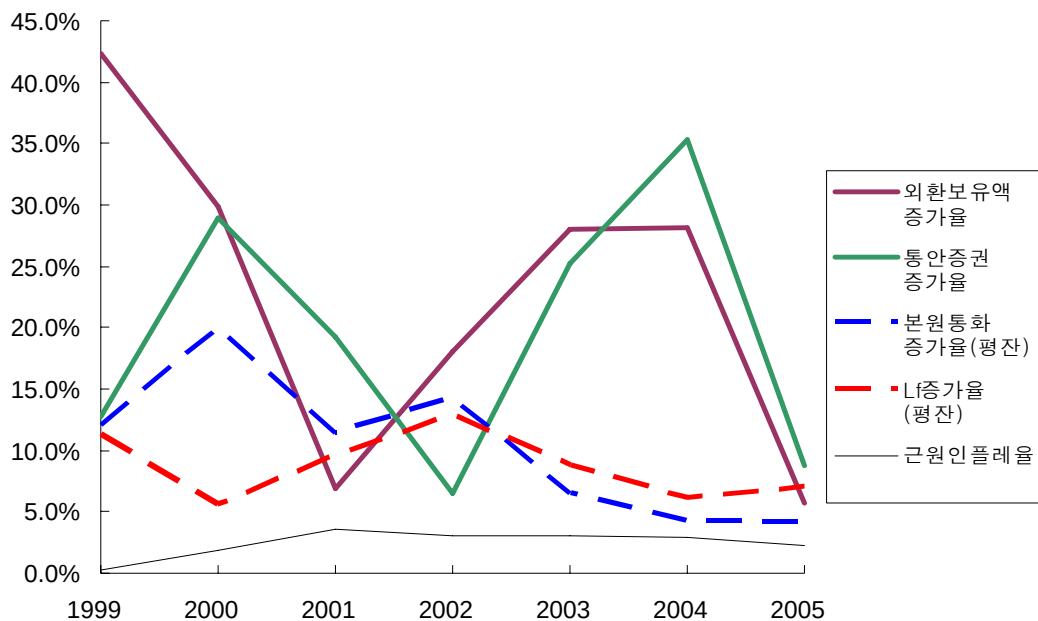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이 정책환경 변화의 전환점이었나?

- 외환보유액증가율, 통안증권잔액증가율, 통화량증가율, 물가상승률, 목표콜금리

단위 : %

연도	외환 보유액 (말잔)	통안증 권 잔액 (말잔)	화폐 발행액 (평잔)	본원 통화 (평잔)	M1 (평잔)	M2 (평잔)	Lf (평잔)	소비자 물가상 승률	근원인 플레이 션율	목표 콜금리
1999	42.3	12.7	5.9	12.1	29.6	13.5	11.3	0.8	0.3	4.75
2000	29.9	28.9	14.5	20.0	24.5	2.2	5.6	2.3	1.9	4.75→5.25
2001	6.9	19.2	10.1	11.5	18.0	6.9	9.6	4.1	3.6	5.25→4.00
2002	18.1	6.5	13.1	14.3	22.5	11.5	12.9	2.7	3.0	4.00→4.25
2003	28.0	25.2	4.2	6.5	6.9	7.9	8.8	3.6	3.1	4.25→3.75
2004	28.1	35.3	2.8	4.2	8.3	4.6	6.1	3.6	2.9	3.75→3.25
2005	5.7	8.7	4.4	4.1	8.5	6.9	7.0	2.7	2.3	3.25→3.75



- 2002년의 경우 외환보유액 대비 통안증권 잔액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 통화량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물가는 안정세를 보임
- 2004년의 경우 외환보유액 대비 통안증권 잔액의 증가율이 높았고 통화량 증가율도 낮은 상태를 유지, 물가도 안정세 유지
- 화폐발행액 및 본원통화 증가율이 2002년 이전과 2003년 이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통화금융정책의 불안정성 증가

- 본원통화에 비해 통안증권 발행규모가 2006.8월말 현재 3.8배에 달함
- 통안증권 발행 증가는 채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킴(특히 콜금리 정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

※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잔액/이자지급액 추이

단위 : 십억원, 배

구 분	본원통화 말 잔 (A)	통안증권 말 잔 (B)	비 중 (B/A)	본원통화 증 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1990	13,811.2	15,240.5	1.1	-	n.a
1991	16,321.7	13,496.5	0.8	2,510.5	1,677.5
1992	18,107.3	20,264.1	1.1	1,785.6	1,879.3
1993	23,079.8	24,201.8	1.0	4,972.5	2,399.2
1994	25,204.1	25,340.3	1.0	2,124.3	2,420.5
1995	29,305.4	25,824.9	0.9	4,101.3	2,521.9
1996	25,722.4	25,030.0	1.0	-3,583.0	2,854.6
1997	22,519.3	23,470.9	1.0	-3,203.1	2,725.4
1998	20,703.0	45,673.3	2.2	-1,816.3	4,841.2
1999	28,486.7	51,489.2	1.8	7,783.7	3,799.2
2000	28,238.1	66,377.7	2.4	-248.6	4,665.7
2001	32,826.8	79,121.3	2.4	4,588.7	4,873.0
2002	37,987.4	84,277.9	2.2	5,160.6	4,801.8
2003	40,749.0	105,496.7	2.6	2,761.6	4,963.1
2004	38,791.8	142,773.0	3.7	-1,957.2	5,584.4
2005	43,249.0	155,235.0	3.6	4,457.2	6,144.0
2006.8월말	42,727.4	162,638.7	3.8	-521.6	4,416.0
합 계				28,916.2	60,566.8

자료 : 한국은행

○ 10년 넘은 숙제

- 1996년 나오연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서 中
 “통화안정증권 발행 확대는 시장금리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아지도
 당행 발권력에 의해 지급됨에 따라 이자부담분만큼 본원통화가 자동적으로 늘
 어나는 요인으로 작용”
- 1997년 이상수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서 中
 “당행은 통화안정증권 확대발행에 따른 이와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해
 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은 가급적 해외부문 자체내에서 중화되도록 다각적
 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 질 의 사 항

1. 통화안정증권과 본원통화의 비율은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997년까지 이 비율은 약 1.0배 내외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비율은 약 1.8~2.4배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02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서 2006년 8월말 현재 이 비율은 무려 3.8배에 달합니다. 총재께서는 본원통화에 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2. 과거 1996년과 1997년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봤더니 한국은행은 이미 이 당시 통안증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003년부터 통화안정증권이 급증했는데도 한국은행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이 없었다는 데 대해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통안증권이 급증하던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었고,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 이후로만 봐도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8월말 현재 무려 60.6조원이나 됩니다. 이 기간 중 본원통화 증가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8.9조원에 그쳤습니다. 통화안정증권 이자가 이자를 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총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KDI와 비슷, 민간 연구기관보다 낙관적임

· 전년도말 발표한 각 기관별 2006년 국내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기관별 전망치			
	한국은행 (2005.12.6)	KDI (2005.12.16)	삼성경제연구소 (2005.12.8)	LG경제연구원 (2005.12.28)
GDP 성장률	5.0	5.0	4.8	4.7
민간소비	4.5	4.2	4.9	3.9
설비투자	5.4	6.9	6.5	6.3
건설투자	1.7	1.1	2.2	0.9
상품수출	10.8	13.2	9.2	11.5
상품수입	10.4	12.9	12.1	11.3

· 2006.7월 전후 발표한 각 기관별 2006년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기관별 전망치				
	한국은행 (2006.7.4)	KDI ¹⁾ (2006.7.15)		삼성경제연구소 (2006.9.13 ²⁾)	LG경제연구원 (2006.7.28)
		3/4	4/4		
GDP 성장률	4.4	4.8	4.1	4.1(4.0)	4.0
민간소비	4.2	4.5	4.0	3.7(4.0)	3.8
설비투자	5.9	10.1	6.2	6.4(6.1)	5.7
건설투자	1.6	1.0	1.3	-0.1(1.5)	0.9
상품수출	11.1	14.0	11.6	9.4(7.1)	11.0
상품수입	7.7	13.8	10.7	12.9(11.4)	14.0

주 : 1)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분기별로만 발표

2) 각 항목별 괄호 안은 2006.5.25일 전망치임

※ 최근 KDI 경제성장전망 발표 (10.17일) : 3분기 4.6%, 4분기 4.0%, 2007년 4.3%

○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경상수지 전망

- 한국은행은 2005.12.6일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 에서 올해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상품수지 +360억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 -200억달러)
- 2006.7.4일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에서 올해 경상수지를 40억달러 흑자로 예상치 수정
(상품수지 +280억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 -224억달러)
- 한국경제연구원, 2006.9.6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20억달러 흑자, 내년 경상수지 -22억달러로 적자 예상
- 삼성경제연구소, 2006.9.13일,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15억달러 흑자, 내년 경상수지 -45억달러로 적자 전환 예상
- KDI, 2006.10.17일,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27억달러 흑자, 내년 -14억달러 전망하여 적자 반전 예상

※ 월별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2005년	‘06.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상수지	165.6	-13.3	0.9	-7.8	-4.3	-16.1	13.6	9.4	-3.9	-5.1
▪상품수지	334.7	158.3	14.8	8.4	29.1	18.8	28.2	27.1	16.2	15.7
▪서비스수지	-130.9	-127.1	-16.4	-18.1	-15.4	-13.5	-13.5	-11.8	-17.4	-20.9
(여행수지)	(-96.5)	(-84.2)	(-12.2)	(-9.2)	(-8.2)	(-9.0)	(-8.9)	(-10.5)	(-12.4)	(-13.8)
▪소득수지	-13.2	-17.7	5.7	4.2	-14.7	-18.8	3.9	-1.6	0.4	3.1
▪경상이전수지	-25.0	-26.8	-3.1	-2.3	-3.2	-2.7	-4.9	-4.4	-3.1	-3.1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월별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각 월별 보도자료)

□ 2006.4.7일 (2월 실적 -7.8억불 발표) :

경상수지는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대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연간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듦 것으로 예상

□ 2006.5.11일 (3월 실적 -4.3억불 발표) :

경상수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되어 연간 흑자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듦 전망

□ 2006.6.8일 (4월 실적 -16.1억불 발표) :

한편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으나 5월 이후에는 흑자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다만 연간으로는 원유수입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

□ 2006.7.7일 (5월 실적 +13.6억불 발표) :

4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경상수지는 향후 소폭이지만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06.8.10일 (6월 실적 +9.4억불 발표) :

경상수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거의 균형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2006.9.7일 (7월 실적 -3.9억불 발표) :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도 확대되어 금년 연간으로 거의 균형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2006.10.12일 (8월 실적 -5.1억불 발표)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겠으나 최근 유가안정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금년 연간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무대응

- 한국은행은 2005년 9.4일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
 - 8.31 대책 발표 후 불과 3일 만인 9.2일에 총 60쪽 분량의 보고서 작성 완료, 9.4일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박 승 한은총재는 2005년 국정감사 중 “한국은행의 저력” 이라고 발언
 -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매우 수준 낮은 보고서임을 지적한 바 있음(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 시나리오 분석, 거래세를 논외로 하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기본적 요건 미비 등)
-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 없음 (8.31 대책 발표 때와 대조적)
 - 10.9일 북한 핵실험 이후 거시경제와 관련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가 없음
 - 한국은행의 ‘주간보도계획’에 의하면 10.30일까지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발표 계획 없음
 - 10.12일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는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매우 간단하게 언급함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의 감속 없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개선 미흡,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이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꾸준히 개선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활동도 파업, 집중호우 등 불규칙요인의 영향으로 월별로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견실한 신장세 유지
- 다만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도 잠재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 10.12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물금리 동결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태 총재가 기자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북한 핵실험의 영향에 대해 언급함

- 기자 : 북핵 사태가 터지자마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4%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 성장 전망을 수정할 것인가?

▶ 이성태 총재 : 내년 성장 전망을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단지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핵 문제를 미사일 발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과거 문제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갔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향의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긴장을 하고 관찰하는 단계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6.10.12 12:14)

□ 질 의 사 항

1.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전망과 경상수지 전망을 비슷한 시기에 분석한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행 전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KDI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난 8월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그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기초 분석자료에 바람직하지 않은 편향성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한은 총재께서는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분석에 낙관적 방향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불과 3일 만에 6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한국은행의 저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그러한 기민성과 저력을 진짜 보여줄 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10월 말까지도 별다른 보고서를 낼 계획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분석 보고서 하나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한은 총재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한국은행 독립성 지켜지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금통위원(박봉흠) 선임시 청와대 개입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뒀 금통위원 (김태동 위원의 후임) 선임 과정에서의 청와대 인사수석의 부당개입 논란 발생
 - 청와대는 2006.4.6일 한은 부총재와 심훈 금통위원을 내정하면서 대한상의 추천 학자출신 금통위원 후보만 반려
 -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학자 출신보다는 정부와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발언
 - 결국 대한상의는 참여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자 前 청와대 정책실장인 박봉흠씨를 추천함
 - 언론은 민간부문 추천 뒀에 대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인사개입이고 한은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
 - 한은 노조는 4.11일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 전달
 - * 추천제도의 사문화 내지 형해화, 한은법 위반 등 언급
 - 특히 청와대 인사수석이 언급한 ‘정부와 연결고리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은 재경부장관 추천과 금감위원장 추천 뒀의 금통위원으로도 충분함
- ※ 現 한은총재도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이지만 한은출신임을 감안, 야당은 문제 제기하지 않았음

○ 금통위원 구성

성 명	취임일	추천인	주요약력
이 성 태(62세)	2006.4.1	당연직(총재)	한은조사국장, 부총재, 금통위원
이 승 일(62세)	2006.4.7	당연직(부총재)	한은 부총재보,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
강 문 수(59세)	2004.4.21	재경부장관	KDI, 스탠퍼드 경제학과 객원교수, 캘리포니아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 덕 훈(58세)	2004.4.21	한은총재	KDI, 재무부장관자문관, 경제기획원장관자문관, 우리은행장
이 성 남(60세)	2004.4.21	금감위원장	시티은행, 금감원 부원장보, 국민은행 감사
심 훈(66세)	2006.4.8	은행연합회장	한은 감사, 부총재, 부산은행장
박 봉 흠(59세)	2006.4.25	대한상의 회장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親 정부, 親 재경부 인사가 다수 있음 (강문수, 이덕훈, 이성남, 박봉흠 위원)
- 한은 총재도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 (부산상고 2년 선배)

○ 콜금리 인상의 적정성

- 2006.6.8일 콜금리 0.25% 인상(4.00%→4.25%)
 - 6명의 금통위원 전원 찬성
 - 경기전망 : 금통위원 중 5명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1명 중립
 - 부동산시장 : 5명이 부동산 가격 불안 직접 언급
(나머지 1명은 자산시장 유동성 과잉 언급)
- 2006.8.10일 콜금리 0.25% 인상(4.25%→4.50%)
 - 콜금리 인상 주장 : 이성태 총재, 이승일 부총재, 이덕훈 위원, 심훈 위원
(한은출신 + 한은총재 추천 위원)
 - 콜금리 인상 반대 : 강문수 위원, 이성남 위원, 박봉흠 위원
(재경부, 금감원, 청와대 추천 위원)

※ 금통위원별 콜금리 인상에 관한 견해

- 2006년 8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콜금리 0.25% 인상 (이성태, 이덕훈, 이승일, 심훈)	콜금리 인상 반대 (강문수, 이성남, 박봉흠)
경기 종합 진단	- 실물경제지표의 완만한 상승세 유지 - 유가, 호우피해 등으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다소 높아졌으나 완만한 경기감속 후 재반등 전망	- 경기의 하방위험 증대 -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하더라도 단기적 효과 기대 어려움 - 지난 4차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 후 나타나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음 - 미국 주택경기 냉각,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소비와 투자추이	- 소비와 설비투자는 꾸준한 증가세 - 건설투자 부진은 하반기 토목건설 중심으로 회복 예상	- 소비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 재고증가세 확대
고용상황		- 서비스업과 건설산업 부진으로 고용사정 개선 지연
물가추이	- 중동정세 불안과 고유가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 - 그동안 물가안정에 기여한 수요위축 및 원화강세 지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가상승 및 호우피해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세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세 예상
금융시장	- 금융시장의 유동성 풍부 - 초과유동성 해소 필요성 있음	- 주가 변동성 확대 및 증시자금 유출 -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		- 부동산 가격 빠른 안정세
기 타		- 경제를 견인해온 IT업황 전망이 밝지 않음 -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사태진전이 중요한 변수임 - 노사갈등,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우려 - 각종 심리지표 하락

○ 물가목표 기준을 Core→CPI 로 변경

· 물가목표 기준 변경 내용

구 분	현행	한은 초안	재경부 1안	재경부 2안	최종 확정
대상지표	Core	CPI	Core	CPI	CPI
목표범위	2.5~3.5%	2.5±1.0%	2.5±0.5%	3.0±0.5%	3.0±0.5%
대상기간	3년	3년	2~3년	3년	3년

· 경과사항

- 2006.5.25일, 2007~2009년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금통위에 보고
- 2006.5.26일, 한은은 재경부에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통보 및 1차 협의
- 2006.6.8일, 재경부와 한은 2차 협의
- 2006.7.28일, 재경부의 최종 입장(1안, 2안) 한은에 통보
- 2006.8.17일, 금통위에서 2007~2009년 물가안정목표 최종 확정

· 문제점

-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꿀만한 특별한 장점이 없음
 - ※ 한은 설명 : 근원인플레이션의 현실반영 미흡, 국제기준으로서의 보편성 미흡(IMF가 CPI를 권고), 국민들의 물가수준 판단시 혼란 초래 가능성
 - ⇒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로 인한 물가변동시 과도하게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 발생
- 목표범위는 동일하나 대상지표를 Core에서 CPI로 변경
 - ⇒ 실질적인 목표 하향 조정 (Core가 보통 0.5% 정도 낮음)
 - ※ 부동산 정책 지원을 위해 편법으로 물가목표를 강화한 것이 아닌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비교 : 2004년 정기국회에서 이혜훈, 김종률 의원, 2005년 정기국회에서 신국환, 박영선 의원이 목표대상 지표를 CPI 등 국민체감지표로 바꿀 것을 주장

□ 질 의 사 항

1. 올해 4월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정 당시 청와대에서 대한상의 회장 추천 후보자에 대해 한 번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대한상의는 참여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내신 분으로 재추천하여 금통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은 총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한국은행법 제13조 제3항에는 분명히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청와대가 최초 추천인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006년 4월 6일, 당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학자 출신보다는 정부와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후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관료를 지내신 분, 그것도 청와대 출신이 금통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는 이러한 청와대 인사수석의 언행이 한국은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2006년 3월까지의 정부와의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한 금통위원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4. 한은 총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청와대에 항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5. 실제로 한국은행 노조는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까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서한 내용 중 한 대목을 인용해보겠습니다. “한은법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5개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통화신용정책이 국민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사과정에서 재경부 등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선임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천기관의 추천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추천기관도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재는 한은 노조의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6.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어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제침체를 외면하고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7. 최근 8월 17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명목적인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현재와 같이 2.5%~3.5%를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물가목표 수준도 지금보다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어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인상의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8. 작년 8.31 부동산 대책 때는 불과 3일 만에 60쪽 분량의 허술한 보고서를 내면서 부동산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북한 핵실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중앙은행 금통위원은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참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그저 낙관론만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 콜금리 인상이든 물가목표기준 변경이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외부에서 모두 코드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은 총재께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적자 23조원 - 외환평가회계의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보유고 2년간 평가손실 40.3조원 발생

- 외환보유고의 2004년과 2005년 평가손익

단위 : 억달러, 억원

연 도	외환보유고 (달러기준)	평 가 손 익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분 ¹⁾	외평기금 ²⁾	외환보유고 합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272,414	59.5%
합 계	-	-311,730	-91,113	-402,843	819,469	49.2%

(주)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 2004년과 2005년, 2년간 외환보유고의 환율하락 평가손실 40.3조원
-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49.2% 수준

※ 환율상승으로 외환보유고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연말 환율 상승에 힘입어 7.3조원의 가치상승이 있었음.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천억원을 넘어선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 합계해보면 총 외환보유고 가치는 41.4조원 하락하였음

○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평가 회계처리 상이

- 외국환평형기금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당기손익 처리
- 2005년말 현재 462.8억달러 규모

- 한은보유 외환보유고 : 한국은행 회계기준에 의거
 - 외환평가조정금(자산부채계정)에 축적
 - 2005년말 현재 1,641.1억달러 규모

※ 한국은행의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¹⁾	평가손익	기업회계상 순이익
2000	14,834	138,568	83,977	98,811
2001	43,143	127,617	-10,951	32,192
2002	29,368	58,707	-68,910	-39,542
2003	21,750	128,275	69,568	91,318
2004	-1,502	-46,730	-175,005	-176,507
2005	-18,776	-183,455	-136,725	-155,501
2006상반기	-14,139	-230,624	-47,169	-61,308

(주) 1. 외환평가조정금 대변계정은 +로, 차변계정은 -로 표시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윤건영의원실 계산

□ 질 의 사 항

1.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적절한 외환보유고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지금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적정선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2.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외환보유고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한국은행 2006년 상반기 요약재무제표

작성 : 한국은행 (기획예산팀 회계반)기획국

- 2006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요약)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27,979	예금이자	11,002
예치금이자	5,849	통화안정증권이자	32,583
어음대출이자	1,067	RP매각증권이자	4,038
수입잡이자	2,477	지급잡이자	2,634
유가증권매매익	1,650	유가증권매매손	1,159
기타	739	화폐제조비	397
		기타	2,087
		당기순이익	-14,139
합 계	39,761	합 계	39,761

- 2006년 상반기말 대차대조표(요약)

(억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유가증권	2,077,677	화폐발행	259,815
예치금	298,718	통화안정증권발행	1,574,687
어음대출	98,191	정부예금	71,834
정부대출금	48,300	예금	690,997
고정자산	55,855	RP매각증권	208,173
기타	269,088	기타	18,714
		<부채 총계>	2,824,220
		법정적립금	21,941
		임의적립금	15,807
		당기순이익	-14,139
		<자본 총계>	23,609
자산 총계	2,847,829	부채와자본 총계	2,847,829

■ 첨부자료 2 : 한은 손익과 적립금 추이

작성 : 한국은행 (기획예산팀 회계반) 기획국

(억원)

구 분	순이익금	적립금 잔액 ¹⁾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합 계
1980년	5,017	745	7,537	8,282
1981년	1,753	921	8,928	9,849
1982년	-1,318	921	7,315	8,236
1983년	-1,088	921	5,872	6,793
1984년	-1,948	921	2,799	3,720
1985년	-1,306	921	974	1,895
1986년	-572	921	402	1,323
1987년	-870	453	-	453
1988년	484	501	436	937
1989년	2,948	796	2,443	3,239
1990년	6,543	1,451	8,332	9,783
1991년	5,637	2,014	11,406	13,420
1992년	624	2,077	9,967	12,044
1993년	-1,428	2,077	8,139	10,216
1994년	-733	2,077	6,970	9,047
1995년	3,494	2,426	9,732	12,158
1996년	3,190	2,745	9,732	12,477
1997년	18,252	4,570	15,430	20,000
1998년	16,619	7,951	32,049	40,000
1999년	31,803	11,131	35,009	46,140
2000년	14,834	12,615	37,735	50,350
2001년	42,143	16,829	37,735	54,564
2002년	29,368	19,766	37,735	57,501
2003년	21,750	21,941	37,735	59,676
2004년	-1,502	21,941	35,133	57,074
2005년 ²⁾	-18,776	21,941	15,807	37,748

주 : 1) 순이익금 처분 및 기금 출연 후 적립금 잔액

2) 임의적립금은 기금출연 예정금액 550억원 차감후 잔액

■ 첨부자료 3 : 한국은행의 2004~2006년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4년도	2005년도 (A)	2006 예산 (B)	전년대비 (C=B-A)	증감률 (C/A)
영업수익			7,933,701	7,424,511	9,998,415	2,573,904	34.7%
수입 이자 와 할인 료	수입 이자 와 할인 료	수입이자와 할인료 합계	6,799,440	6,637,982	9,763,159	3,125,177	47.1%
		유가증권이자	5,804,384	5,303,546	7,486,832	2,183,286	41.2%
		예치금이자	541,460	775,204	1,191,332	416,128	53.7%
		할인어음할인료	-	-	-	-	-
		어음대출이자	212,746	179,850	188,000	8,150	4.5%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30,588	28,834	68,401	39,567	137.2%
		정부대출금이자	74,408	128,511	166,000	37,489	29.2%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877	903	930	27	3.0%
		수입잡이자	134,977	221,134	661,664	440,530	199.2%
	수입수수료		40,992	54,526	53,740	-786	-1.4%
	유가증권매매익		1,055,244	719,135	181,516	-537,619	-74.8%
	통화안정증권상환익		-	-	-	-	-
외환매매익		37,840	12,868	-	-12,868	-100.0%	
지금은익		185	-	-	-	-	
영업비용			7,898,884	9,343,624	11,818,922	2,475,295	26.5%
지급 이자 와 할인 료	지급 이자 와 할인 료	지급이자와 할인료 합계	7,168,611	8,556,937	10,903,830	2,346,893	27.4%
		예금이자	989,643	1,566,429	2,214,717	648,288	41.4%
		통화안정계정이자	-	-	-	-	-
		통화안정증권이자	5,584,444	6,144,029	7,048,406	904,377	14.7%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282,271	590,688	939,775	349,087	59.1%
		차입금이자	-	-	-	-	-
		지급잡이자	312,253	255,791	700,932	445,141	174.0%
	지급수수료		37,508	138,733	59,113	-79,620	-57.4%
	유가증권매매손		282,402	204,366	133,832	-70,534	-34.5%
	통화안정증권상환손		-	-	-	-	-
	외환매매손		-	-	95,732	95,732	-
	지급은손		-	-	-	-	-
	화폐제조비		104,440	121,811	241,900	120,089	98.6%
	퇴직급여		19,581	19,800	24,214	4,414	22.3%
	감가상각비		20,184	19,802	22,713	2,911	14.7%
	무형자산상각비		2,939	3,667	4,593	926	25.3%
	일반관리비		263,219	278,508	323,296	44,785	16.1%
일반관리비에비비		-	-	9,699	9,699	-	
영업이익			34,817	-1,919,113	-1,820,507	98,609	-5.1%
영업외수익			9,893	63,149	3,989	-59,160	-93.7%
		자산처분익	1,367	56,431	858	-55,573	-98.5%
		잡익	8,526	6,718	3,131	-3,587	-53.4%
영업외비용			101,625	21,622	1,501	-20,121	-93.1%
		출연금	79,818	21,093	1,500	-19,593	-92.9%
		자산처분손	2,856	102	1	-101	-99.0%
		잡손	18,951	427	-	-427	-100.0%
경상이익			-56,917	-1,877,586	-1,818,020	59,570	-3.2%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56,917	-1,877,586	-1,818,020	59,570	-3.2%
법인세등			93,305	-	-	-	0.0%
당기순이익			-150,222	-1,877,586	-1,818,020	59,570	-3.2%

자료 : 한국은행, 『2005년도 결산서』, 『2006년도 예산서』

■ 첨부자료 4 :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4-1]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원, %

연 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분 (B)	B/A	연초v.s.연말 U\$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1998	371.7	316.3	85.1%	- 207.40	-6.9%
1999	265.6	220.1	82.9%	- 62.40	9.5%
2000	243.6	221.5	90.9%	114.30	8.5%
2001	46.4	66.2	142.7%	66.40	3.8%
2002	116.5	185.9	159.6%	- 125.70	7.0%
2003	258.6	339.4	131.2%	- 2.60	3.1%
2004	357.7	437.2	122.2%	- 154.00	4.7%
2005	170.5	113.2	66.4%	- 30.80	4.0%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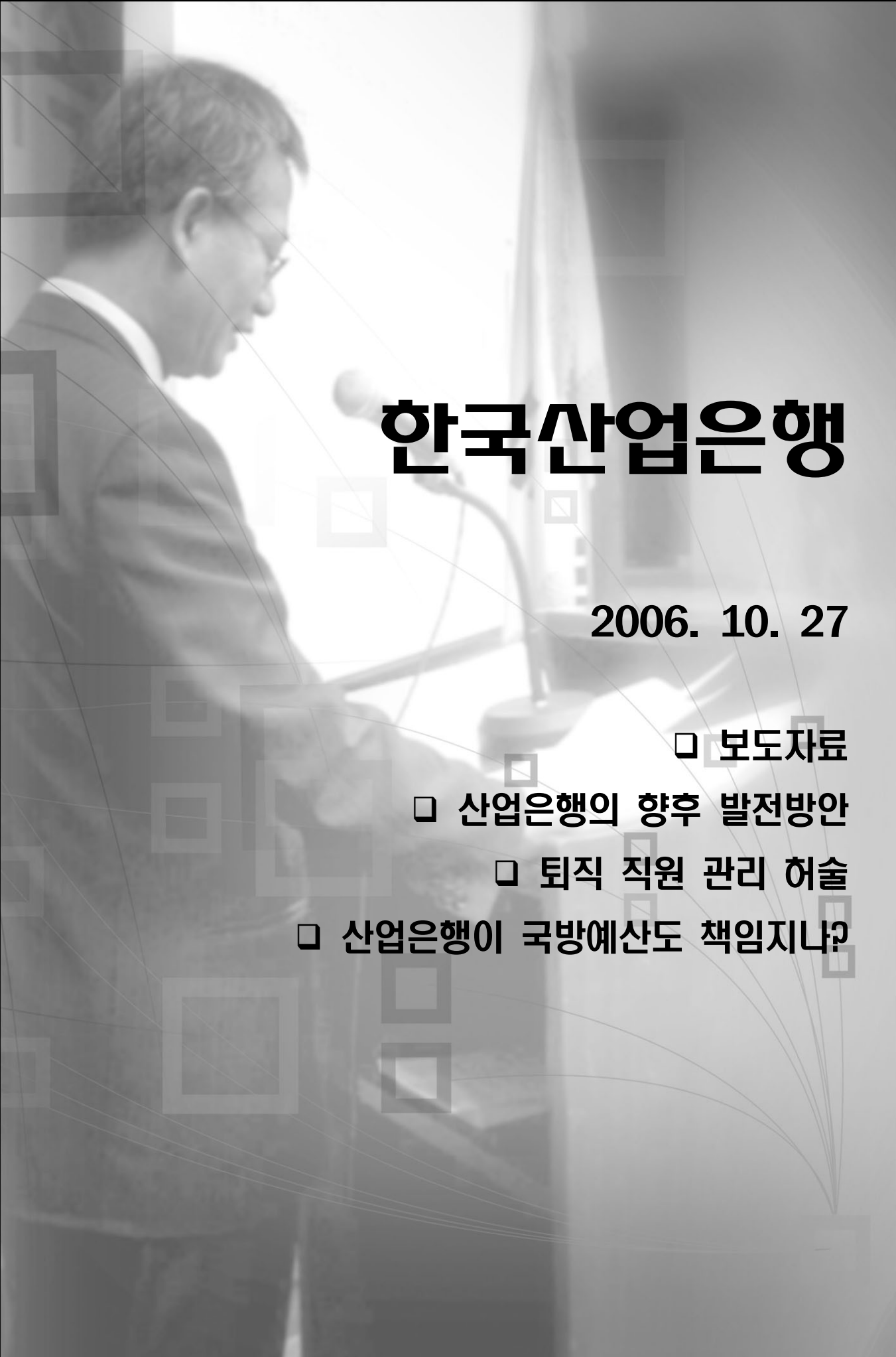
* 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4-2] 외환보유액 증가분 중 외평기금과 한은의 비중

단위 : 억달러, %

연 도	외환보유액 증가분 (A)	외평기금 증가분 (B)		한은보유외화자산 증가분 (C=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8	316.3	46.6	14.7%	269.7	85.3%
1999	220.1	14.7	6.7%	205.4	93.3%
2000	221.5	11.6	5.2%	209.9	94.8%
2001	66.2	- 11.4	-17.2%	77.6	117.2%
2002	185.9	41.0	22.1%	144.9	77.9%
2003	339.4	110.7	32.6%	228.7	67.4%
2004	437.2	103.7	23.7%	333.5	76.3%
2005	113.2	103.8	91.7%	9.4	8.3%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한국산업은행

2006. 10. 27

- 보도자료
- 산업은행의 향후 발전방안
- 퇴직 직원 관리 허술
- 산업은행이 국방예산도 책임지나?



보도자료

산업은행이 국방예산도 책임지나?

- 이상한 산업은행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주주 되기 -

국방부의 예산부담, KAI에 떠넘겼다가 결국 산은이 떠안아!
낙하산 인사 KAI 사장, 당장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27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KAI의 상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따졌다.

○ 산업은행이 왜 국방부가 져야할 책임을 떠맡나?

KAI는 1999년 당시 소위 ‘대기업 빅딜’의 결과로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000년 말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채무재조정을 한 이후 꾸준히 연 260억~518억 내외(매출의 4~5%)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회사 특성상 항공기 개발, 생산, 시험평가, 후속 군수지원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내 독점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다.

그런 KAI가 현재 재무구조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및 양산, 중등훈련기 KO-1 양산과 관련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KAI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구조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삼일회계법인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즉 정부의 대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KAI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1,1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이후 KAI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A)	8,311	9,517	8,001	6,537	6,771	7,328
영업이익(B)	443	518	387	260	554	312
(A/B, %)	(5.3)	(5.4)	(4.8)	(4.0)	(8.2)	(4.0)
매출채권	501	3,210	5,680	6,290	8,859	8,099
차입금	5,750	6,272	6,431	6,647	8,789	10,874
이자비용	540	507	416	376	437	599
당기순이익	(625)	165	104	70	11	(1,163)

* 자료: 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편집

* 2006년은 추정치(삼일회계법인 컨설팅 보고서)

KAI의 매출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군수 산업	T-50	2,586	4,112	5,469	7,042
	KO-1	-	-	379	1,288
	기타	356	1,406	302	259
	소계	2,942	5,518	6,150	8,589
민수사업		268	162	140	270
계		3,210	5,680	6,290	8,859

* 자료: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보고서

표에서 보듯 2005년말 현재 KAI의 매출채권 중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매출채권 8,850억원의 97%이다. 정부가 이 채권의 일부라도 해결해줄 경우 KAI의 부채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국방예산의 급증과 무절제한 재정팽창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는 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래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채무이행을 미루고 그 결과 KAI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와중에 산업은행이 구원투수인양 KAI의 인수자로 나타났다. 왜 산업은행이 정부 예산의 미

지금으로 인해 부실해진 회사까지 떠맡아야 하는가? 정부는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도양양한 멸절한 방위산업체인 KAI를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정부투자기관인 산업은행이 KAI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고 나타난 것인가? 정부는 의도적으로 KAI를 부실기업으로 둔갑시켜 국유화하려는 것인가?

○ 낙하산 사장의 임명, 산은이 바로 잡아야

KAI의 정해주 사장은 2004년 10월 취임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200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지 6개월만이다. 특허청장, 중소기업청장, 통상산업부장관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 CEO로 취임한 것은 KAI를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견인차로 이끌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사장이 한 일이라고는 국방부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KAI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참여자들의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모면해온 것이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소신과 경륜을 가진 CEO라면 과연 채무자로서의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순응했을까?

최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은 지난 2년간 KAI의 정상화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현 사장을 물러나도록 해야 하며, 소신과 책임성 있는 전문 경영인을 등용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의 향후 발전방안

□ '산업은행의 발전방향' 보고서 개요

(용역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용역기간: 2006. 4~9(6개월))

○ 연구용역 목적

- 금융환경 변화 및 국책은행 기능 관련 논란, 산은의 역할 및 발전방향 재정립
-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수립 지원
- 산은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주요 연구내용

- 산은의 향후 역할과 기능
- 산은의 장기 비전 및 단계별 발전전략 정립

○ 보고서의 문제점

- 산업은행의 역할을 거의 모든 금융 분야로 확장하라는 결론 도출
- 자회사 운영을 적극 권장, 타 국책은행과 업무 충돌 부분도 권장

→ 산은의 '바람' 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 정서와 맞지 않음

→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T/F」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2006. 9) 결과

○ 주요 내용

- 정부의 산은 역할재정립관련 결론나오기 전까지 수익성 위주 업무영역 확대보다 설립목적인 중요 산업자금 공급 업무에 치중할 것
- 자회사 매각할 것(경영정상화 자회사, 자산운용사, 모회사와 업무 중복된 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자회사 등)
- 조직, 인력, 예산 관리 부적정

→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 많아... 재경부 T/F의 결론에 주목할 필요

□ 용역보고서와 감사원 지적사항의 비교

업무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비고
설립업무 수행 부적정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인구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노인경제력 성장에 따른 실버산업 분야 등으로 PF 업무 확장 ② 신규 퇴직연금사업과 종합재산신탁사업 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③ M&A중개 및 금융주선 업무 는 상업부문에서 수행해야하나,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 수행하며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자문 등 여러 업무영역 개척할 필요 ④ 과생금융상품업무 는 상업적 업무로 구분될 수 있으나 발전속도가 빠르고 상품범위가 방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바람직 ⑤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상업기능을 수행할 자회사 조직을 확보, 상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	정부에서 산은의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전까지 수익성 위주의 업무영역 확대를 하지 말고 설립 목적인 중요 산업자금 공급업무 수행에 치중(통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상업부문의 업무를 확대·개척하여 수익성/경쟁력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업무 부적정	시장실패보정 및 미래경쟁력 확보 위해 BB등급이하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 장기채 관련업무, 채권시장에서 실질 시장조성업무, 해외채권 발행업무등에 주력하고, BB등급 이상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는 국내 시장상황 감안해 자율 조정해야 할 것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대상을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등급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제한하는 등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회사채 인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마련(통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일치함
자산 운용사 인수 및 인프라 자산운용 설립 부적정	① 2005년 현재 산은자산운용의 수탁고 3.8조 원으로 급속한 신장세, 아직 업계평균 못미침. 향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전략 필요 ② 투자은행 자회사, 자산운용 자회사 등을 육성 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수익원의 안정화·다원화를 실현	국책은행에서 진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산은자산운용(주)와 산은과 업무가 중첩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지분매각 방안 마련(권고)	전반적으로 반대의견
산은캐피탈(주) 관리 부적정	① 벤처캐피탈 업무에서 산은캐피탈과 업무연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중복에 대한 조정이 필요 ② 향후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성숙되면 산은캐피탈과 업무의 통합 또는 재조정이 바람직함	경영부실로 모회사에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중복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산은캐피탈(주)을 매각하거나 모회사와 합병하는 방안 마련(권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일치함

□ 용역보고서 중 타 국책은행과 업무 중복을 오히려 ‘주문’ 하는 부분

○ 수출입은행

- 중장기적으로 산은은 국내 기업구조조정시장 및 PEF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과 함께 해외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시장 진출, 해외투자 PEF 설립 및 해외에서의 Fund Raising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필요
- 향후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과 관련, 타 국책은행과 공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투자은행들과 경쟁해야 할 것
- 국내 개발금융의 노하우를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향후 남북경협 및 북한개발 금융 지원사업에서 적극적 역할 필요

○ 중소기업은행

- 향후 여신업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므로 전문성 강화하고 중소기업금융의 취약성 보완하는 방안 강구할 것

□ 질의사항

- 현재 재정경제부는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하여 연구하고 있음.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재정경제부의 대책 수립에 근간이 될 금융연구원의 「산업은행의 발전방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재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난 9월 감사원이 [금융 공기업 감사]를 통해 산은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목할 점은 감사원 처분요구서와 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상치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보고서는 상업부문의 업무를 확대하여 수익성,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재는 의견이 무엇입니까?
 - 보고서는 투자은행 자회사, 자산운용 자회사 등을 육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있는 자산운용사를 매각하라고 합니다. 의견은 무엇입니까?
- 또 보고서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과의 업무 경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해외 금융시장 진출, 투자 및 자원 개발, 북한 관련 금융 등 수출입은행과 경쟁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 금융 분야를 강화하라는 권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원칙(산업은행의 권고?)에 맞춰서 쓰여진 느낌이 듭니다. 하나는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 확대, 또 하나는 민간·국책은행과의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재정부 T/F의 결론에 따르시리라 보지만, 산은 총재는 산업은행이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 직원 관리 허술

□ 산업은행 퇴직한 직원에 대한 관리

○ 2000~2006 9. 현재 자본시장실, 트레이딩센터, 자금거래실의 퇴직자 현황

퇴직 당시부서	직급	담당업무
자본시장실	5급	채권인수, 운용
트레이딩센터	4급	금융공학
트레이딩센터	4급	스왑
트레이딩센터	5급	금융공학
트레이딩센터	5급	스왑
트레이딩센터	5급	ABS영업
트레이딩센터	5급	Middle Office
트레이딩센터	5급	옵션
트레이딩센터	5급	신금융상품 개발
자금거래실	3급	대고객거래
자금거래실	3급	Middle Office
자금거래실	4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4급	금융공학
자금거래실	4급	채권인수, 운용
자금거래실	4급	Middle Office
자금거래실	5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5급	외환매매
자금거래실	5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5급	금융공학
자금거래실	5급	외환매매
총 인원	20명	

○ 2006. 4. 26. 산업은행 업무보고 중 퇴직자 관리 관련 질의(별첨 속기록 참고)

- 당시 퇴직자 18명: 6개월간 2명 더 퇴직
- 재취업 현황에 대한 산은의 답변: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퇴직직원의 취업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질의사항

- 트레이딩센터, 자금거래실 등의 업무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희소합니다. 이 부서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타 기업으로 이직하면 산업은행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산업은행을 상대하는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러한 핵심 업무부서에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재취업 현황에 대하여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에는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퇴직 직원의 취업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4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필요성은 인정하셨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된 듯 합니다. 소관 부서에 지시는 하셨습니까?
- 최근 소위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관련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여, 당해 부처와 기업을 연결하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된 적 있습니다.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그것도 자금운용과 상품개발 쪽 업무에 있었던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현황에 대해 최소 첫번째 직장만이라도 파악을 하여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은행 기관장, 감사의 재경부 낙하산 인사 관련

1997년 이후

산은, 수은, 기은 3개 국책은행의 기관장 9 명 중 8명,

감사 9명 중 8명이 재정경제부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임명

산업은행이 국방예산도 책임지나?

□ 한국우주항공(주)(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관련

1999. 04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총리주재), 범 정부차원 지원 의결
 - 대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적 참여 보장, 군용기 사업물량 창출 지원
1999. 10 KAI 설립(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3사 통합)
2000. 12 금융기관 차입금 출자전환 728억원(산은 250억원), 채무재조정 3,527억원
 (5년 거치 4년 상환 기준)
2001. 02 KT-1 인도네시아 수출계약 체결(국내 최초 항공기 수출)
2001. 10 T-50 시제 1호기 Roll-out
2003. 12 T-50, KO-1 양산계약 체결
2005. 12 T-50 양산 초도기 납품
2006. 6. 23 산업자원부 주관 KAI 이사회 의사결정 재구조개선에 대한 이사회 결의 지원
 - 주주사 CFO 등 대상으로 정부정책 설명
2006. 6. 26 KAI 이사회 결의(감자 2,547억원, 증자 900억원: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3사 각 300억원씩)
2006. 8. 2 재경부 앞 초과출자 예외승인 요청
2006. 8. 7 산은의 KAI 앞 15% 초과출자 승인
2006. 8. 14 감자등기 완료
2006. 8. 21 산은 KAI의 채권 1200억원 출자전환 승인
2006. 8. 24~29증자대금 납입 및 등기 완료

□ 산업은행이 왜 국방부가 져야 할 책임을 떠맡나?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현황

- 1999년 대기업 빅딜의 결과로 설립(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 항공기 개발, 생산, 시험평가, 후속 군수지원 능력 보유: 사실상의 ‘독점 기업’

○ 왜 위기인가?

- 국방부(방위사업청)에서 KAI에 발주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및 양산, 중등훈련기 KO-1 양산과 관련한 대금지급을 계속 미룸
-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이자부담 등으로 재무구조에 심각한 위협

2001년 이후 KAI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A)	8,311	9,517	8,001	6,537	6,771	7,328
영업이익(B)	443	518	387	260	554	312
(A/B, %)	(5.3)	(5.4)	(4.8)	(4.0)	(8.2)	(4.0)
매출채권	501	3,210	5,680	6,290	8,859	8,099
차입금	5,750	6,272	6,431	6,647	8,789	10,874
이자비용	540	507	416	376	437	599
당기순이익	(625)	165	104	70	11	(1,163)

* 자료: 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 편집

* 2006년은 추정치(삼일회계법인 컨설팅 보고서)

KAI의 매출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군수산업	T-50	2,586	4,112	5,469	7,042
	KO-1	-	-	379	1,288
	기타	356	1,406	302	259
	소계	2,942	5,518	6,150	8,589
민수사업		268	162	140	270
계		3,210	5,680	6,290	8,859

* 자료: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보고서

→ 2006. 2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보고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즉 정부의 대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KAI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1,1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KAI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매출채권 회수지연, 특히 97%에 이르는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것이라는데 동의하는가?

☞ 정부가 이 채권의 일부라도 해결할 경우 KAI가 굳이 감자 및 추가출자, 출자 전환과 같은 조치를 필요로 했다고 보는가?

☞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KAI와 같이 정부가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겨 지원하게 된 경우가 있는가?

☞ 결국 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 기업을 부실업체로 만들고, 산업은행이 이를 떠맡은 것 아닌가?

☞ KAI를 국유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나?

☞ 이러한 결정이 국방예산의 급증, 정부의 무절제한 재정팽창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낙하산 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정해주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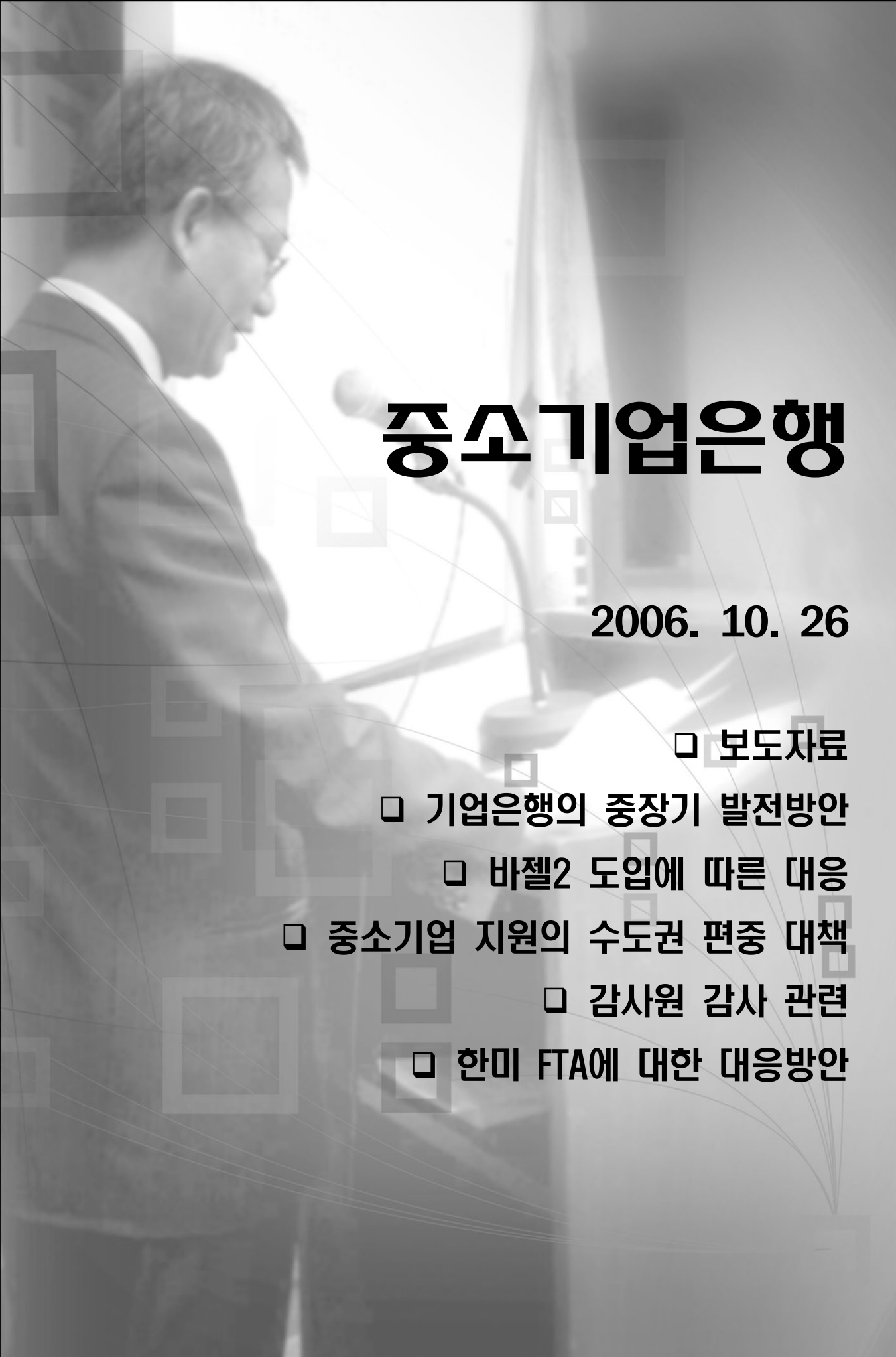
- 1943년생, 통영고, 서울대
- 특허청장, 중소기업청장, 통상산업부 장관 역임
- 2004년 4.13 총선 열린당 후보로 총선 출마, 낙선
→ 6개월 후인 2004년 10월 취임

☞ 산업은행은 현 정해주 사장의 지난 2년간 경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출신상 정부에 순응하는 낙하산 사장이기에 이러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전문 경영인이 사장이더라도 매출채권이 쌓여 회사가 금융위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은행

2006. 10. 26

- 보도자료
- 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 바젤2 도입에 따른 대응
-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 대책
 - 감사원 감사 관련
-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보도자료

기은, 지방경제 살리겠다더니 비 수도권 영업점 비율, 중소기업 대출비율 모두 하락세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경제선진화 어려워,
지방 지점의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6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 행장에게 비 수도권 중소기업에의 대출에 앞장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지방 기업들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2.3%에서 2006년 상반기 68.0%로 5.2%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1.3%가 줄었으며, 늘어난 27개의 기업은행 점포 수 중 지방 영업점 수는 고작 4개에 그쳤다.” 며 “중소기업은행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것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2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혀 시정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며 “지역의 경제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액의 68%나 기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 의원은 “아무리 유능한 지점장을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여도, 영업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이 기업은행을 찾기 힘들것” 이라며, “비 수도권 지점의 기업금융기능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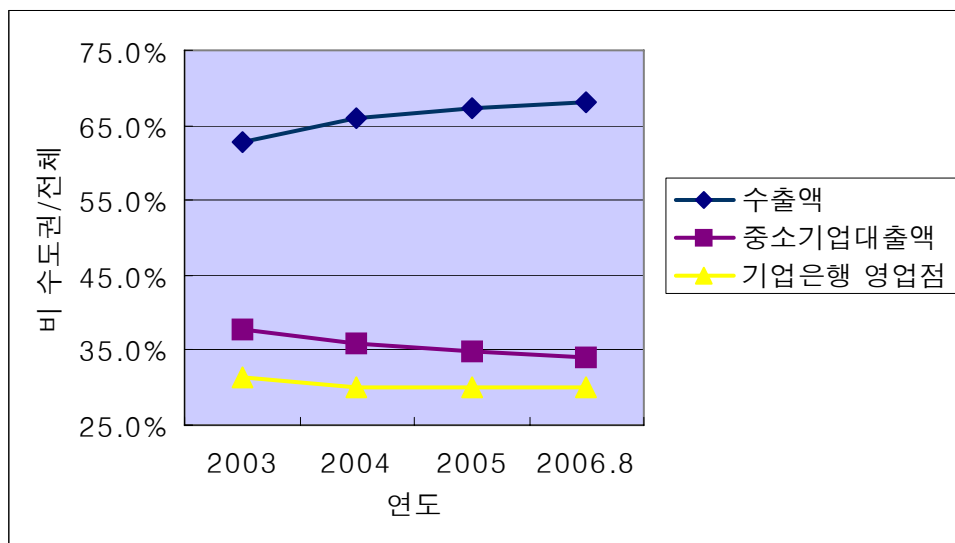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개,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액 ¹⁾	수도권	수출액	72,219	86,332	93,189	49,857
		비율	37.3%	34.0%	32.8%	32.0%
	비수도권	수출액	121,598	167,513	191,230	105,720
		비율	62.7%	66.0%	67.2%	68.0%
	계		193,817	253,845	284,419	155,577
기업은행의 지역별 영업점 수 ²⁾	수도권	점포수	268	274	291	308
		비율	68.70%	69%	70%	70%
	비수도권	점포수	122	121	126	135
		비율	31.30%	30.10%	30%	30%
	계		390	395	417	443
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액 ³⁾	수도권	잔액	241,436	272,063	320,820	377,545
		비율	62.16%	64.14%	65.13%	65.98%
	비수도권	잔액	146,987	152,106	171,790	194,663
		비율	37.84%	35.86%	34.87%	34.02%
	계		388,423	424,169	492,610	572,208

주1) 한국은행, 2006년은 1~6월

2) 기업은행, 2006년은 9월 현재

3) 기업은행, 2006년은 1~8월, 대출금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 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2005.10)

○ 주요 내용

- 기업은행의 진로에 주는 시사점
- IMF 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국내 은행산업은 4개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4개 중형은행(기업, 외환, 한국시티, SC제일), 3개 소형은행(대구, 부산, 전북)의 3그룹으로 나누어짐
- 기업은행은 중형은행그룹에 속하며 여타 은행에 비해 기업금융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업무의 다양성이 떨어져 미래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
- 국책은행으로서 업무에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는 기업은행은 향후 성장성/수익성 제고할 마땅한 수단이 없으므로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위치 선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한정된 업무범위의 제약조건(국책은행으로서 가지는 제약조건 포함)을 해소하면서 대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등 중형은행으로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 재설정 필요
- 중소기업금융과 기업은행
- 전적으로 상업금융기관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 및 중소기업의 양극화, 신용경색, 버블 등 시장실패문제 발생
- 정부나 공적기관이 중소기업금융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
- 상업성 측면에서 차입기업 모니터링 강화, 금융기관의 담보·보증요구 요건 강화, 담보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활성화, 새로운 네트워크금융 모색
- 정책금융 측면에서 관련부처간 협조체계 재구축, 지원기준을 다양화·자율화 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

- 중소기업금융시장을 계층화, 세분화하여 금융기관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할 수 있도록 유도
- 향후 기업은행이 중소기업금융의 선도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취할 필요
- 1단계(2005~2006) :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자체적 노력을 경주
- 2단계(2007~2008) : 규제완화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칭)를 규제완화의 대체 또는 보완기구로서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시장친화적 운영 및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조화를 도모
- 3단계(2009년 이후) : 대형화·겸업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선도은행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민영화 등을 통한 상업금융 확대

(첨부1 : 기업은행의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참조)

(첨부2 : 기업은행의 민영화의 방향, 민영화의 방안과 과제)

□ 질의사항

1. 기업은행의 민영화 논의 나온지 한참 되었음. 물론 재경부 T/F 팀의 결론이 나와 하나 어느 방식으로, 언제쯤 정부지분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2. 업무현황을 보면 매년 1%씩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을 높여서 25% 정도(2006.9월 현재 19.4%)까지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추진계획이 있음. 또한 2006년 8월 30일 발표한 기은 경제연구소의 「한·미 FTA가 當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금융에서 확실한 1위(시장점유율 25% 이상) 구축 후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음. 그렇다면, 앞으로 5~6년 후가 민영화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생각하고 있는 민영화의 시기가 있는가?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민영화라는 것은 정부지분이 몇 %이하인 것을 말하는가?

바젤2 도입에 따른 대응

□ 바젤2(신 BIS) 협약의 내용

1. 신 BIS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은행의 도입 시기 및 단계

□ 신BIS협약 이란?

- BIS비율 산출시 은행경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장규율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7월 발표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제도임
- BIS비율 산출시 현행 신용·시장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추가 산출
- 리스크측정방법은 표준방법 또는 내부방법 중 선택 적용

* 표준방법 : 외부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0~150%)

* 기본내부등급법 : 은행 자체적으로 부도확률(PD)만 추정, 기타 리스크 측정요소 는 감독 기관의 지침 사용

□ 신BIS협약의 도입시기 및 도입단계

- 2008년 1월 1일부터 개별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표준방법, 내부등급법 중 선택하여 적용(금융감독원 2004.12)
- 당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
 - 신용리스크 : 기본내부등급법(FIRB)
 - 운영리스크 : 고급측정법(AMA)

2. 구 BIS 기준과 신 BIS 기준을 사용할 때의 BIS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운영리스크 등의 변화 비교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BIS비율 변화 비교

- 표준방법과 기본내부등급법은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미사용액의 일정비율과 운영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으로 추가 인식함으로써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았을텐데, 소폭 하락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가?

☞ 현 BIS 비율은 몇 %이고, 두 방법 사용시 산출되는 BIS 비율은 얼마인가?

- 고급내부등급법은 선진신용평가모형 도입 및 담보인정 범위 확대로 현행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다소 상승이라는 것은 얼마를 뜻하는지?

☞ 그런데, 고급내부등급법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나?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위험가중자산(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 변화 비교

- 표준방법과 기본내부등급법은 현행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운영리스크 변화 비교

- 운영리스크는 신BIS협약 도입으로 위험가중자산에 새롭게 추가

바젤2 협약에 대한 예상 및 대응방안

- 바젤2 시행이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 소매금융 비중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의 상대적 위축가능성, 미사용 한도 관리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조 :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을 소매exposure*로 간주해 75%의 고

정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10억원 이하의 소매금융으로 빠르게 재편 될 수 있음.

*소매exposure : 10억이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방법에서는 75% 고정위험가중치를 적용(10억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0%~150%의 차등적인 위험 가중치 적용)

☞ 오히려 영세한 다수의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 행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바젤2 시행에 따른 기업은행의 대처방안
 -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상업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성장하여 왔음
 - 따라서, 바젤2 협약 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여신지원과 동시에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임
 - 먼저, 중소기업의 신용도와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신용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함으로써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 성장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 바젤2 협약의 내용과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동 내용을 거래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교육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동 제도시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 더불어 감독당국, 타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바젤2 협약 시행이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
 - 또한, BIS비율 하락에 대비하여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장기적인 자기자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바젤2 협약 시행을 대비한 조직체계 및 추진현황

- 설치 일시 : 2004년 7월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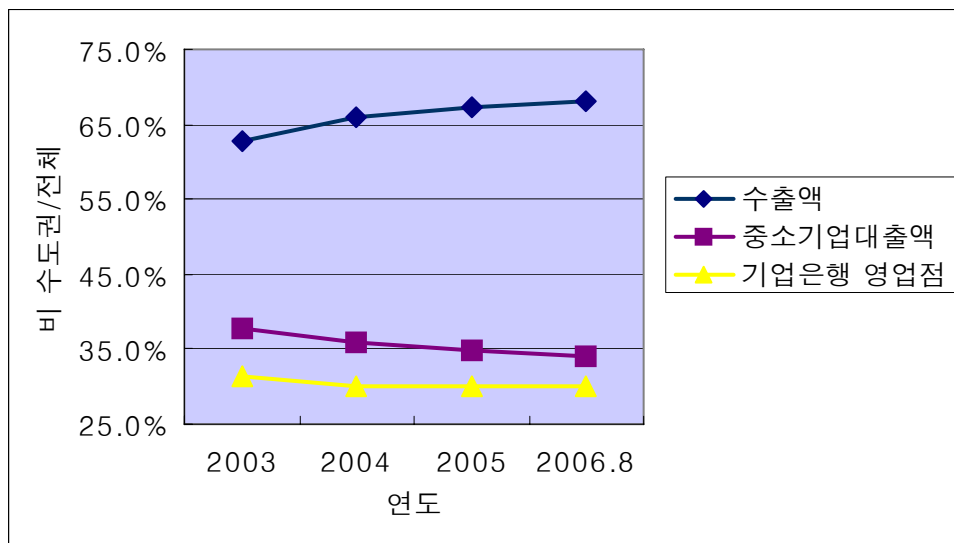
- 조직 및 인원 : 리스크관리본부 내 임시조직
 - 부장 1명, 팀장 2명, 팀원 19명(신용리스크 13명, 운영리스크 6명)

- 담당 업무
 - 바젤II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 바젤II 신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및 내부등급법 승인 준비
 - 바젤II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및 고급측정법 승인 준비

- 주요 업무 추진 현황
 - 바젤II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04.10.29
 - 바젤II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시행 : 2005.12.29
 - 바젤II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시행 : 2006.04.30
 - 관련 여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 계속 진행중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 대책

□ 비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비율, 기업은행 영업점 비율 모두 하락세, 지방 경제는?



(단위: 백만달러, 개,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액 ¹⁾	수도권	수출액	72,219	86,332	93,189	49,857
		비율	37.3%	34.0%	32.8%	32.0%
	비수도권	수출액	121,598	167,513	191,230	105,720
		비율	62.7%	66.0%	67.2%	68.0%
	계		193,817	253,845	284,419	155,577
기업은행의 지역별 영업점 수 ²⁾	수도권	점포수	268	274	291	308
		비율	68.70%	69%	70%	70%
	비수도권	점포수	122	121	126	135
		비율	31.30%	30.10%	30%	30%
	계		390	395	417	443
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액 ³⁾	수도권	잔액	241,436	272,063	320,820	377,545
		비율	62.16%	64.14%	65.13%	65.98%
	비수도권	잔액	146,987	152,106	171,790	194,663
		비율	37.84%	35.86%	34.87%	34.02%
	계		388,423	424,169	492,610	572,208

주1) 한국은행, 2006년은 1~6월

2) 기업은행, 2006년은 9월 현재

3) 기업은행, 2006년은 1~8월, 대출금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질의사항

1.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 업무현황을 보니까 지난 국정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방의 경제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수출액의 68%나 되는 금액이 비 수도권, 즉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68%를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정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도권 중소기업 편중대출에 대해 말로만 시정·처리하시는 겁니까?
2. 지역별 중소기업의 대출현황을 보니까 비수도권, 즉 지방의 중소기업대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기업은행의 점포 수도 전체의 30%에서 4년째 정체상태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기업금융지점장을 배치시킨다고 하여도, 고객이 찾아갈 은행 점포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3. 말로만 지방경제의 활성화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경제에 돈이 돌아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관련

□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2005년 10.10~12.9 실시) 처분요구서 요약

○ 2002년 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 현황

- 2002년 : 문책 2, 주의 1, 통보 4 합계 7
- 2003년 : 주의 6, 현지주의 1, 시정 1, 통보 4, 합계 12
- 2004년 : 문책 4, 주의 1, 통보 4, 합계 9
- 2005년 : 주의 5, 통보 3, 시정 2, 합계 10

○ 세부 분야별 지적사항

- **주기능·주업무 분야** :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여신보다는 가계대출 등 일반여신의 비중을 계속 늘림. 중소기업에 대출시에도 예금 수취해 부담 줌

중소기업은행의 자금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중소기업자금 대출	계 획	140,200	140,800	148,500	152,300
	실 적	133,790	126,447	123,156	88,328
	달성률	95.4	89.8	82.9	58.0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	계 획	18,000	18,000	18,000	20,000
	실 적	43,843	28,739	34,253	33,500
	달성률	243.6	159.7	190.3	167.5

자료 : 중소기업은행, 감사원 처분요구서

- 중소기업은행의 총여신 중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1999년 말 93.0%에서 2005년 8월 말 현재 83.2%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7.0%에서 16.7%로 계속 증가(통보 조치)

고객별 여신공급(잔액기준) 변동명세

(단위 : 억 원, %)

구분	1999년 말		2005년 8월 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여신	215,768	100.0	552,162	100
중소기업여신	200,645	93.0	459,676	83.2
가계여신 등	15,123	7.0	92,486	16.7

자료 : 중소기업은행, 감사원 처분요구서

-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취급한 여신 가운데 여신취급 후 10일 이내에 예금을 수취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등 256개 지점에서 631개 업체에 대하여 4,680억 원의 여신을 취급한 후 2,890억 원(61.8%)을 정기에 금으로 수취하였고, 이 중 180개 업체의 정기에금 563억 원은 담보로 취득하여 여신업체에 부담을 주었음(주의 조치)
- 지배구조 분야 : 경영 평가시 내부평가만 실시(비전문적, 주관적임), 기관장과 「경영계약」 체결 없음(경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

금융공기업 이사회 구성 (2005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총이사수(A)	10	12	7	6	7	9
사외이사수(B)	2	4	0	0	0	3
비율(B/A)	20%	33%	0	0	0	33%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사원 처분요구서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정관」에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 3. 3.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38조를 개정하여 상임이사를 당해 은행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은행 정관 中

제 38조 [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는 당은행의 직원중에서,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 는 중소기업 등

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각 은행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 또한, 타기업에로의 출자, 인사규정등의 중요개정 시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이사회 규정 제6조 제2항, 경영협의회 규정)
(이사회가 중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통보 조치**)

- 임직원 임면 절차 관련, 1997년 8월 정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관장 및 감사로 재정경제부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주로 임명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움

※ 1997년 이후 위 산은, 수은, 기은 3개 국책은행의 기관장 9 명 중 8명, 감사 9 명 중 8명이 재정경제부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임명

공기업 임원 임면절차 비교

임 원	정부투자기관	국책은행
기 관 장	사장 추천위원회 추천 →주무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면	재정경제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상임이사	사장 제청 → 주무부장관 임면	기관장 추천 →재정경제부장관 임면
감 사	운영위원회 의결→기획예산처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재정경제부장관 임면

- 1997. 8. 28. 정투법 및 2003. 12. 31. 정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아
-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2004년 경영평가 시 평가기준은 2004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과급 지급률은 2005년 새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계 1억 3,300만 원 더 지급하는 등 경영평가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주의 조치**)
- 시설경비 및 운전인력을 자체 운영중이고, 일부만 위탁함(**통보 조치**)

외부위탁 가능인력 및 1인당 평균임금 현황(2004년)

(단위 : 백 만원, 명)

구분		직접 수행			용역업체 위탁			차이 (C-F)	외부위탁시 연간비용감축 $B \times (C-F)$
		총액 (A)	인원 (B)	1인평균 (C)	총액 (D)	인원 (E)	1인평균 (F)		
청원경 찰	한국은행	8,483	122	69	4,253	137	31	38	4,636
	한국산업은행	814	15	54	1,608	86	18	36	540
	중소기업은행	4,860	74	65	6,548	414	15	50	3,700
	한국수출입은행	460	7	65	166	7	23	42	294
	소계	14,617	218	63	12,575	644	21	41	9,170
운전기 사	한국은행	1,717	24	71	940	38	24	47	1,128
	한국산업은행	763	13	58	236	12	21	37	481
	중소기업은행	3,071	42	73	566	30	18	55	2,310
	한국수출입은행	617	9	68	17	1	17	51	459
	소계	6,168	88	67	1,759	81	20	47	4,378
계		20,785	306	65	14,334	725	23	44	13,548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사원 처분요구서

- 2003. 2. 28. 「직무성과급규정」을 제정하여 해마다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직원의 경영노력과 관계없는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처분손익 등까지 포함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
- 2003년도의 경우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2,240억 원으로 재정경제부 승인 목표액 3,000억 원에 미달하였고 정부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포스코 주식 208만 주를 2,878억 원에 매각하여 얻은 처분익 1,802억 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438억 원에 불과한데도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249억 원을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
- 또한, 2004년도에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케이티앤지 주식 1,000만 주를 3,190억 원에 매각하여 얻은 처분익 953억 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2,751억 원으로 목표액 3,500억 원에 미달하는데도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을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주의 조치)

※ 참고 : 2005년도분 성과급 230% 지급

중소기업은행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 원, %)

연도	목표 당기순이익	결 산			성과급 (지급률)
		당기순이익 (A)	정부출자 주식 처분이익(B)	A-B	
계	6,500	5,944	2,755	3,189	620
2003	3,000	2,240	1,802	438	249(150)
2004	3,500	3,704	953	2,751	371(200)

자료 : 중소기업은행, 감사원 처분요구서

-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임차사택 부당 수혜 받은 관련자 2명(시정 조치)
-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를 폐지 및 이를 반영한 임금협상 할 것이며, 노동조합 전 입자 수를 정부기준에 맞게 축소하는 한편,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비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주의 조치)
- 행우회 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여 고가로 계약하는 등 특혜를 제공(주의 조치)
- 「BPR시스템 구축계약」 제15조의 약정에 따라 전산용역업체 (주)○○○로부터 기술 자 등급 차이에 따라 과다 지급한 용역비 376,502,880원을 회수(시정 조치)

☞ 감사원의 감사요구사항 시정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 달라.

☞ 앞으로는 엄중히 주의하여 지적사항 개선하고,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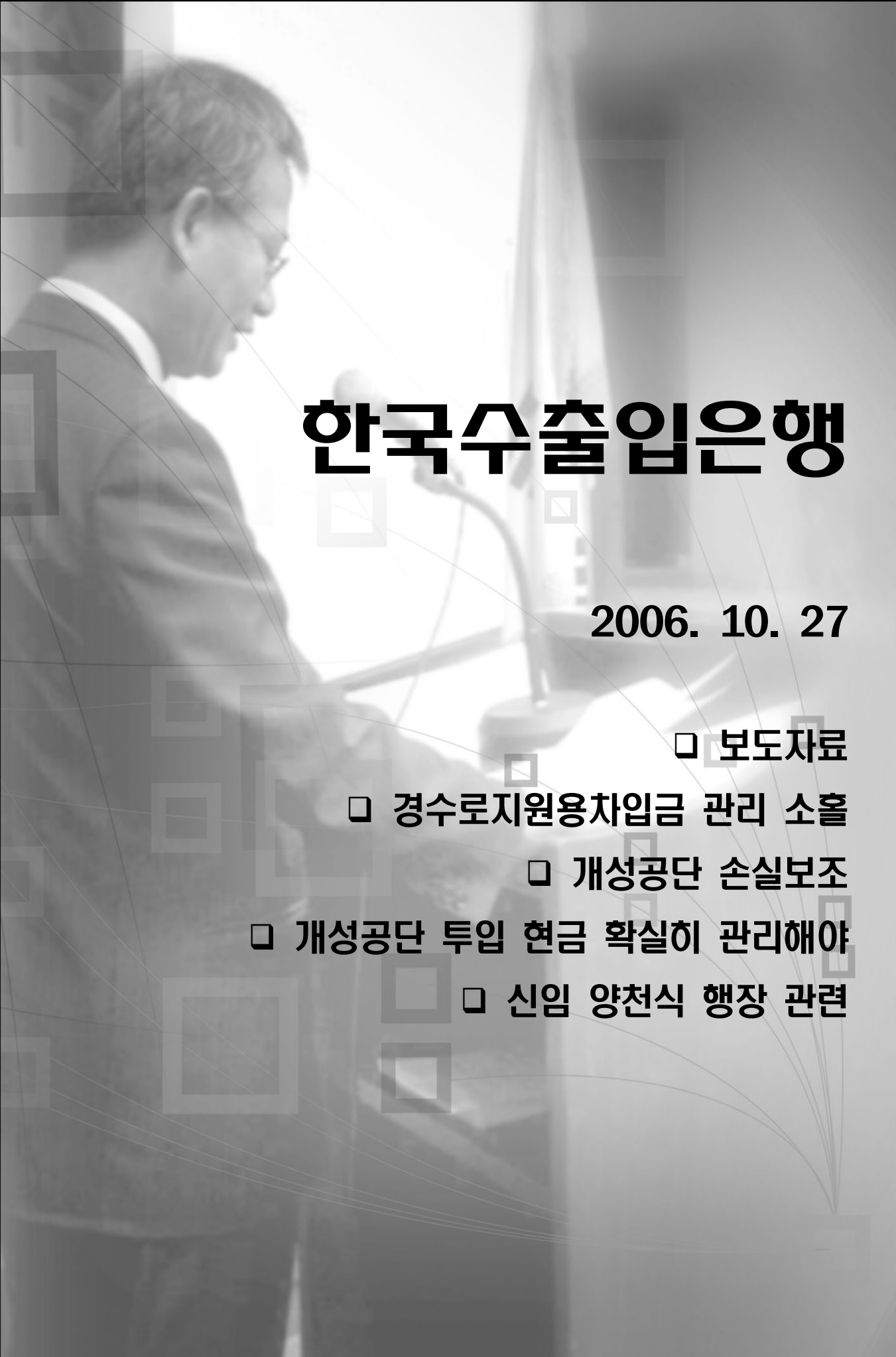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

- 현재 한미 FTA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고, 진행중인 사안으로 은행경영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한미 FTA는 분야별 협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 동일 산업내에서 기술력 수준 어떤 지에 따라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
-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對美수출 중소기업의 80%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자의 77%가 관세철폐를 통한 미국시장 수출 증가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 다만, 한미 FTA로 인하여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내수 중소기업에게는 일부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당행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최소화 되도록 FTA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부품소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은행의 관련 조직체계 및 해당부서

- 현재 당행은 한미FTA관련 조직체계 및 해당부서 없으나 2006년 3월부터 은행연합회차원에서 FTA 시행의 영향을 분석하고 은행권 공동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협상의 진행경과와 은행연합회의 최종 결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한국수출입은행

2006. 10. 27

- 보도자료
- 경수로지원용차입금 관리 소홀
- 개성공단 손실보조
- 개성공단 투입 현금 확실히 관리해야
- 신임 양천식 행장 관련



보도자료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차입금 만기 7년 연장

손실 처리해야 할 경수로 차입금, 만기 2013년으로 늘려 잡아
북한 미사일 발사 직전 4,030억원 차입, 80일간 별 목적 없이 보관
차입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차입해야 하는 상황 지속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수로사업 공식종료 선언 직후인 지난 6월 13일 남북협력기금은 손실처리가 확실해진 경수로 사업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만기를 무려 7년이나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지난 1994년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차관 형태로 지원하여 북한 신포지역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6년 6월 1일 최종적으로 공식 중단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제공한 차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으로서 2006년 9월 30일 현재 1조9,330억원의 차입금 잔액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만 해도 9월말 현재 4,258억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 12월 최초 차입할 당시에는 공자기금으로부터 3년 만기로 돈을 빌려왔다. 그 결과 2002년말부터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만기를 연장해오고 있다. 즉,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 공자기금으로부터 새로운 차입을 일으키고 이 돈으로 만기도래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04년까지는 만기도래분에 대해 3년만 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지난 2005년부터는 5년 후 상환으로 연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6년 6월 13일부터는 무려 7년 후인 2013년에 상환하도록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더욱이 9월 1일 만기도래분 4,030억원의 상환시점을 한참 앞둔 지난 6월 13일 이미 공자기금으로부터 이 자금을 차입해왔다. 무려 80일간이나 별 목적 없이 일찍 돈을 빌려

남북협력기금이 보관해온 것이다. 마침 이 시기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과 비교해볼 때 묘한 여운을 남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는 경수로 목적이 아닌 일반남북협력사업 명목으로 4,157억원의 공자기금 차입금 한도를 이미 승인받아놓은 상태이다.

※ 사학법 파동으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2006년도 예산안 통과됨

수출입은행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8월에 차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월별 균등발행을 위한 국채발행 물량 조정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차입시기를 6월로 조정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장기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자기금의 국채발행 기간을 가능한 한 7년이나 10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고채만 해도 연간 62조5천억원(2005년 기준)이나 발행하는 상황에서 손실처리를 눈앞에 둔 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굳이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 80일이나 일찍 조달하게 만들고 만기를 무려 7년이나 뒤로 잡게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8월 23일에도 차입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1,170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빌려왔다. 이렇듯 차입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자초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경수로 사업 종료 이후 정부가 손실처리에 대해 준비하기는커녕 남북협력기금이 공자기금 차입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경수로 손실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공자기금 차입금의 건별 차입조건(경수로)

(백만원, %)

차입연월	차입금액	만기연월	금 리	비 고
'99. 12.	149,831	'02. 12.	8.66	만기상환
'00. 4.	109,852	'03. 4.	8.84	"
'00. 7.	45,100	'03. 5.	8.04	"
'00. 11.	50,000	'03. 11.	7.00	"
'00. 12.	49,900	'03. 11.	6.82	"
'01. 2.	82,500	'04. 1.	5.40	"
'01. 5.	90,000	'04. 4.	6.53	"
'01. 8.	90,000	'04. 7.	5.41	"
'01. 11.	47,500	'04. 10.	4.94	"
'02. 1.	113,000	'07. 1.	6.90	
'02. 4.	110,000	'07. 4.	7.17	
'02. 7.	100,000	'05. 7.	5.62	만기상환
'02. 12.	182,000	'05. 10.	5.44	"
'03. 1.	40,000	'06. 1.	5.10	"
'03. 3.	40,000	'06. 3.	4.63	"
'03. 4.	150,000	'06. 3.	4.54	"
'03. 4.	50,000	'08. 3.	4.80	
'03. 5.	60,000	'06. 3.	4.40	만기상환
'03. 7.	80,000	'06. 3.	4.17	"
'03. 9.	80,000	'06. 9.	4.40	만기상환 (2006.9.1일)
'03. 11.	180,000	'06. 9.	4.54	
'03. 12.	143,000	'06. 9.	5.08	
'04. 3.	100,000	'07. 3.	4.77	
'04. 6.	110,000	'07. 3.	4.22	
'04. 9.	100,000	'07. 9.	3.68	
'05. 2.	10,000	'09. 12.	3.74	
'05. 5.	117,000	'10. 3.	4.07	
'05. 8.	233,000	'10. 6.	4.14	
'05. 12.	50,000	'10. 9.	4.61	
'06. 2.	370,000	'10. 12.	5.24	
'06. 6. 13.	403,000	'13. 3.	5.20	9.1일 상환용
'06. 8. 23.	117,000	'13. 6.	5.16	
합 계	3,652,683			

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제출자료

경수로지원용 차입금 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경수로 사업 주요 일지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94.10.21)
1995. 3. 9	KEDO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뉴욕)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8.11. 9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1999. 8.12	국회,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비준
2000. 4.21	사용 후 연료봉 봉인작업완료
2002.10.16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시인
2002.11.14	KEDO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공급 중단 및 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
2003.11. 6	북한, 부지현장 장비반출금지 발표
2003.11.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1년간 중단(suspension) 발표
2003.12.17	건설현장 우즈베크 인력 철수
2004. 2.29	건설현장 북한 인력 철수
2004. 3.10~12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향산)
2004.11.26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1년 연장 합의 발표
2005. 7.12	한국,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200만kW 대북 직접송전 발표
2005. 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5.11.21~22	KEDO 집행이사회(뉴욕)
2005.11.30	일시 중단(2차 suspension) 기간 만료
2006. 1. 8	금호 경수로부지 잔류인원 57명 전원 철수
2006.5.31~6.1	KEDO 집행이사국 실무회의, 집행이사회, 일반이사회(뉴욕) “경수로 사업 공식종료 결정”

※ KEDO 집행이사회 결의문 요지 (2006. 6.1)

-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
- 한전이 경수로 부지 외 소재 KEDO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 처리
 - 집행이사국들은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해 수출허가 등 협조
- 사업 관련 재정적 손실에 대한 KEDO의 대북 청구권 보유 확인
 - KEDO의 부지내 자산 소유권 재확인, 북한에 자산 반출 요구
- KEDO는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해체, 종료 결정 후 사무국 축소

○ 경수로 사업 지원 내역

-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차관 형태로 제공(총 11억3,702만불)
-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 연도별 지원 금액

단위 : 억달러,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달러기준	2.9	2.3	2.4	2.8	0.8	0.2	-	11.4
원화기준	3,259	3,003	3,009	3,287	870	227	-	13,655

※ 달러금액은 발생당시 환율 기준임

○ 경수로 손실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 2005년말 결산 결과 1조3,655억원(외환 평가 후)의 KEDO 앞 차관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대손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은 상태
- KEDO 앞 차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1조7,660억원-이자 포함)으로 집행
- 통일부도 KEDO 앞 차관은 회수불가능함을 실질적으로 인정함

⇒ 따라서 원금만 1조3,655억원인 경수로 손실은 남북협력기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로 귀착됨

※ 2006.9.30일까지 공자기금 예수금의 총 이자지급액은 4,258억원임

- 통일부는 손실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통일부 답변**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경수로 차입금 관리 소홀

- 차입금 만기도래시 7년 만기 채권으로 대체
- 2006.9.1일 상환 4,030억원에 대해 80일 일찍(6.13일) 차입
- 차입이자 상환을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상황 지속
(최근 2006.8.23일 1,170억원 차입의 경우 원금상환용이 아닌 이자지급용임)

□ 질 의 사 항

1. 2006년 6월 13일 경수로계정 공자기금 차입금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올해 6월 13일과 8월 23일 경수로 계정 공자기금 차입건에 대해서 7년 만기로 차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일부의 뜻입니까? 아니면 재정부의 뜻입니까?
3. 경수로계정의 차입금에 대해 손실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정부나 통일부와 회의나 기타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4. 경수로계정 공자기금 차입금은 이자지급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다시 차입을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재정부나 통일부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해 재정부와 통일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들었습니까?

※ 공자기금 차입금의 건별 차입조건(경수로)

(단위 : 백만원, %)

차입연월	차입금액	만기연월	금리	비고
‘99. 12.	149,831	‘02. 12.	8.66	만기상환
‘00. 4.	109,852	‘03. 4.	8.84	“
‘00. 7.	45,100	‘03. 5.	8.04	“
‘00. 11.	50,000	‘03. 11.	7.00	“
‘00. 12.	49,900	‘03. 11.	6.82	“
‘01. 2.	82,500	‘04. 1.	5.40	“
‘01. 5.	90,000	‘04. 4.	6.53	“
‘01. 8.	90,000	‘04. 7.	5.41	“
‘01. 11.	47,500	‘04. 10.	4.94	“
‘02. 1.	113,000	‘07. 1.	6.90	
‘02. 4.	110,000	‘07. 4.	7.17	
‘02. 7.	100,000	‘05. 7.	5.62	만기상환
‘02. 12.	182,000	‘05. 10.	5.44	“
‘03. 1.	40,000	‘06. 1.	5.10	“
‘03. 3.	40,000	‘06. 3.	4.63	“
‘03. 4.	150,000	‘06. 3.	4.54	“
‘03. 4.	50,000	‘08. 3.	4.80	
‘03. 5.	60,000	‘06. 3.	4.40	만기상환
‘03. 7.	80,000	‘06. 3.	4.17	“
‘03. 9.	80,000	‘06. 9.	4.40	만기상환 (2006.9.1일)
‘03. 11.	180,000	‘06. 9.	4.54	
‘03. 12.	143,000	‘06. 9.	5.08	
‘04. 3.	100,000	‘07. 3.	4.77	
‘04. 6.	110,000	‘07. 3.	4.22	
‘04. 9.	100,000	‘07. 9.	3.68	
‘05. 2.	10,000	‘09. 12.	3.74	
‘05. 5.	117,000	‘10. 3.	4.07	
‘05. 8.	233,000	‘10. 6.	4.14	
‘05. 12.	50,000	‘10. 9.	4.61	
‘06. 2.	370,000	‘10. 12.	5.24	
‘06. 6. 13.	403,000	‘13. 3.	5.20	9.1일 상환용
‘06. 8. 23.	117,000	‘13. 6.	5.16	
합계	3,652,683			

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제출자료

개성공단 손실보조

□ 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액 손실보조제도

○ 손실보조제도 개요

- 손실보조제도 : 기업이 북한과 교역·경협사업을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의한 북한의 비상 위험, 예를 들면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송금제한, 북한 내 정변발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정책보험임
- 교역손실보조 : '04. 5. 14 시행
 - 손실보조비율 : 50%
 - 약정 한도 : 기업당 10억원
 - 약정기간 : 반출일~결제기일(선적후 반출), 약정체결일~반출기일(선적전 반출), 대금지급일~반입기일(반입)
 - 손실보조 수수료율 : 약정기간 및 조건에 따라 연 0.4%~0.8%
- 경제협력 손실보조 : '04. 9. 24 시행
 - 손실보조비율 : 70% (단, 개성공업지구는 90%)
 - 약정한도 : 기업당 50억원
 - 약정기간 : 10년 이내
 - 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70%(중소기업 : 0.525%)

○ 2004년 5월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 취급현황

- 2004년 본격 시행 이후 2006년 9월말까지 약정실적은 교역손실보조 4건, 경험손실보조 12건에 약정누계액은 169억원임.
- 이중 교역손실보조 3건, 경험손실보조 1건은 손실보조금 지급 없이 정상 종결되었고, 현재 약정잔액은 교역손실보조 1건, 경험손실보조 11건에 156억원임.

‘06. 9월말 현재 손실보조 약정 실적

(백만원)

종목	피약정자	약정금액	약정체결일	약정기한	수수료율	약정비율
교역	㈜○○○○○	69	’04.09.09	’04.12.28	0.525%	50%
	○○○○○	66	’05.01.20	’05.03.31	0.525%	“
	○○○○○	17	’06.01.10	’06.02.22	0.525%	“
	㈜○○○○○	48	’06.08.14	’06.10.09	0.525%	“
	합계	200				
경험	㈜○○○○○	1,143	’05.04.01	’05.12.31	0.525%	90%
	○○○○○	524	’05.07.25	’06.12.31	0.525%	“
	○○○○○	445	’05.07.25	’06.12.31	0.525%	“
	㈜○○○○○	284	’05.07.25	’06.12.31	0.525%	“
	○○○○○	592	’05.07.25	’06.12.31	0.525%	“
	○○○○○(주)	1,022	’05.07.25	’06.12.31	0.525%	“
	○○○○○(주)	282	’05.07.25	’06.12.31	0.525%	“
	㈜○○○○○	432	’05.07.25	’06.12.31	0.525%	“
	○○○○○	379	’05.07.25	’06.12.31	0.525%	“
	○○○○○(주)	2,000	’05.10.04	’06.12.31	0.525%	“
	㈜○○○○○	4,626	’06.09.29	’13.02.28	0.700%	“
	㈜○○○○○	5,000	’06.09.29	’13.08.31	0.525%	“
	합계	16,729				

자료: 수출입은행

주) 개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조건 등 대출심사 현황은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조 발생시 북측에 구상 경로·방법 및 근거가 되는 합의문 등 자료 일체

- 북측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손실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6조),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대북청구권을 양도받아 당국간 협의 창구를 통해 북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임.

※ 간접 구상 : 손실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해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하고 매 6월 단위로 채권행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그 대금은 즉시 기금 앞으로 반납토록 하고 있음.

- 구상 근거가 되는 합의문
- 현재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손실보조 관련 대위권을 인정받고 있음.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6조(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 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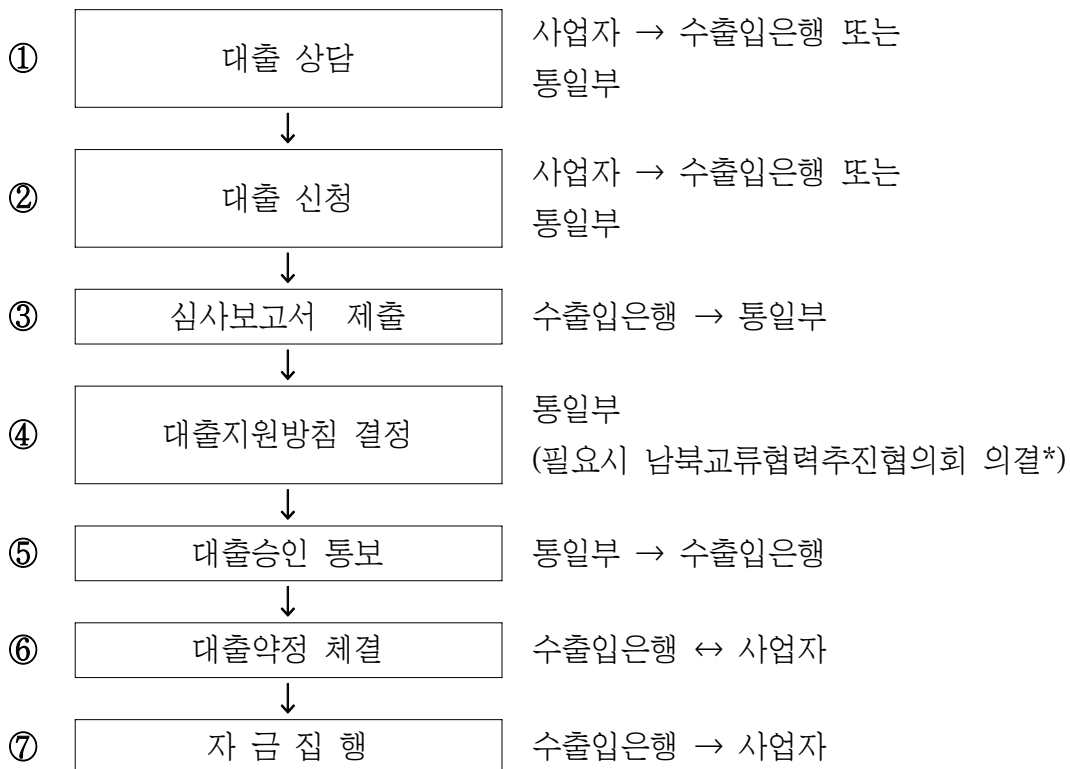
□ 질 의 사 항

1.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손실보조 제도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어느 지역에 진출한 몇 개 업체에, 약정액은 얼마입니까?
(개성공단, 12개, 156억원)
2.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손실보조를 실제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손실보조를 해야 할 시점에는 북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조란 북한의 비상 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비상위험시에는 북한에 방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손실의 실제 정도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손실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3. 결국에는 피 약정자, 즉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 오는 서류에 근거해서 보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해서 손실보조 한다면 아마도 모든 기업이 어떻게든 최대한 손실보전을 많이 받으려고 서류를 꾸밀 것입니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 정확한 손실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투입 현금 확실히 관리해야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개성공단 투자기업 지원현황

○ 지원시스템의 주요 체계와 현황



* 아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방침 결정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건당 50억원 이상
- 반출·반입 자금 대출 : 건당 30억원 이상
- 일반대출조건 예외 취급시

• 사업별 지원규모와 특이점

(억원)

업 종	업체수	승인액	집행액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냉난방설비 포함)	6	180.5	133.7
의류 및 침구류	6	191.3	110.0
자동차 부품	2	80.0	69.5
신 발	1	49.5	49.5
기타 (플라스틱 및 주방용품)	2	75.0	75.0
합 계	17	576.3	437.7

• 기업별 지원 규모와 특이점

(억원)

구분	기업명	승인일	업 종	승인액	집행액
시범 단지	○○○○	‘04.9.24	전기공급장치	30	30
		‘06.6.16		15	0
	○○○○	‘04.9.24	신 발	39	39
		‘05.12.23		10.5	10.5
	○○○○	‘04.9.24	자동차부품	40	40
	○○○○	‘04.9.24	전자부품	27	16.6
	○○○○	‘04.9.24	전자부품	29	11.9
	○○○○	‘04.9.24	플라스틱	30	30
		‘05.12.27		15	15
	○○○○	‘04.9.24	의 류	30	30
		‘05.12.2		13.3	12.5
	○○○○	‘04.9.24	의 류	30	30
		‘06.4.25		14	10
	○○○○	‘04.9.24	반도체금형	30	30
	○○○○	‘04.9.24	냉난방설비	24.5	24.5
	○○○○	‘04.9.24	주방용품	30	30
본 단지	○○○○	‘04.11.4	반도체금융	25	20.7
	○○○○	‘05.5.11	자동차부품	40	29.5
	○○○○	‘06.4. 7	침구류	30	17
	○○○○	‘06.5.16	내의류	20	10.5
	○○○○	‘06.5.16	내의류	30	0
	○○○○	‘06.6.30	내의류	24	0
합 계		17개 기업		576.3	437.7

□ 질 의 사 항

1.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금까지 대출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17개 기업, 승인액 576.3억원(집행액 437.7억원))

2. 수출입은행은 사업자에게 자금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자에게 수표를 발행하거나 통장에 입금시켜 주니까?

3. 사업자에게 대출만 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눈으로 기업이 대출받은 돈을 실제 개성공단에 투입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대출 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금 지원 후 증빙서류와 함께 기금사용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금이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 결정은 통일부소관이나, 통일부장관이 수출입은행에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

- 수출입은행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금을 사용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월 말일까지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동 규정 제61조)

4.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돈이 어떻게 개성까지 흘러 들어가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히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구좌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 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세부내역(일자, 금액, 송금이유나 명목 등)을 보고해 주십시오.

5. 만약 이 경로를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면 수출입은행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전임행장께 리빙아트의 대출심사 부실문제와 대출금 관리 부실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전임행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리빙아트건은 검찰의 수사중인데, 대출금 30억을 리빙아트가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6. 북한에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돈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를 수출입은행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통해 들어간 돈은 사실상 대북지원 전체 금액에서 따지면 소소하지만, 북한의 현금유입통로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양천식 행장 관련

□ 양천식 행장 프로필

○ 양천식 행장 약력

▲1950년생 ▲전북 전주 ▲경기고 ▲서울대 ▲재무부 외환국 ▲재경부 국제금융
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위 상임위원
▲금감위 부위원장 ▲수출입은행 행장

○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직접 관련

-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론스타의 외
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적격성 판정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짐

- 현재 검찰 고발 상태

※ 2003년 7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외 1명 참석)

론스타가 요청한 대주주 자격요건 구두확약 요청에 따라 비공식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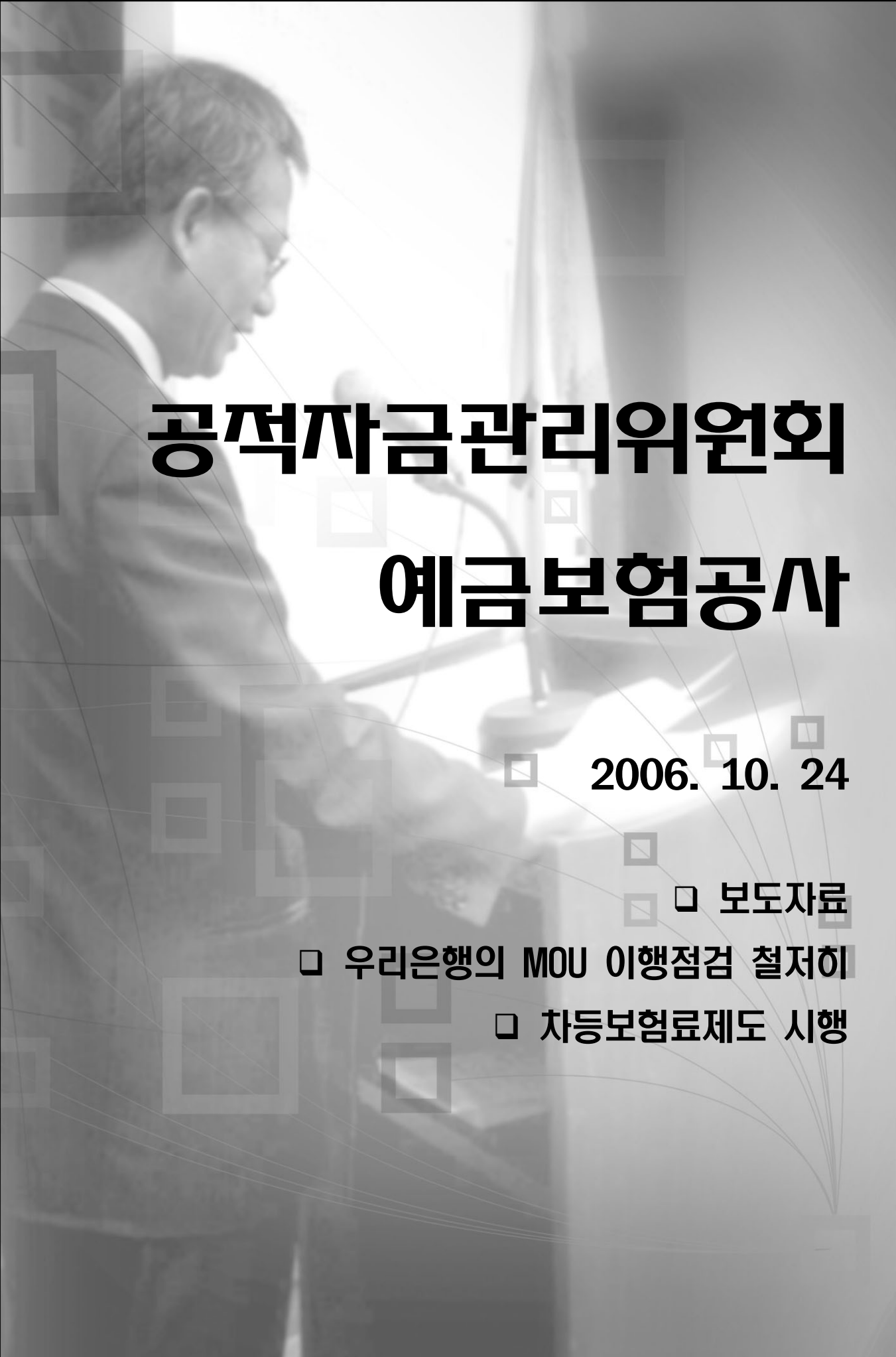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그 논의 결과를 외
환은행측에 구두로 전달

※ 2003년 9월 26일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참석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최종 승인한 회의에 참석하여 찬성의견

□ 질 의 사 항

1. 국책은행의 기관장 및 감사 중 대다수가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입니다. 특히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과, 기관장의 경영활동을 성실히 감시해야 할 감사가 똑같이 재정경제부 출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장께서도 재정경제부 출신이신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또한 행장은 과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고, 매각 찬성의견을 냈었던 당사자입니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행장의 내정 소식을 듣고 “투기자본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5인방 중 핵심인사인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이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 내정된 것은 론스타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행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임한지 약 한달이 넘었는데,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3. 지금 행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지금 출국금지 상태이거나 과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던 적이 있다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수출입은행장은 특히 해외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수사를 받는 것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4. 또한 행장이 포함된 금감위원들의 결정으로 론스타에게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한 셈이 되므로, 행장은 사실상 수출입은행에 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그러고도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2006. 10. 24

- 보도자료
- 우리은행의 MOU 이행점검 철저히
- 차등보험료제도 시행



보도자료

예보의 한화컨소시엄 중재신청, 면피를 위한 혈세낭비?

- 문제점 1.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 결정하고 동일한 법인과 계약, 중재에 대한 긍정적 의견 받아내
- 문제점 2. 공자위 서면 보고 본문에는 중재 필요성, 별첨에는 부정적 검토의견... 국회·언론 의식해 중재절차 밟는다는 것 드러내
- 문제점 3. 왜 태평양은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외국 법인은 시간당 Fee ?
- 문제점 4. 수십억이 소요되는 중재 절차, 공자위는 No Comment!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따졌다.

<국제중재 사건 개요>

2002. 12. 12 예금보험공사,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컨소시엄에 51% 매각
2005. 7. 1 예금보험공사,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 법원 1심 판결 결과 한화그룹이 맥쿼리사와 이면계약(별첨 1)을 맺고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한 것 최초 인지
2005. 11. 18 2심 역시 입찰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
2006. 5. 31 예보,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 방침 서면보고
2006. 6. 16 3심 대법원 역시 입찰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
(한화그룹 부회장은 뇌물공여 유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2006. 6. 19 한화, 예보에 ‘옵션 행사 통지문’ 발송(옵션 내용 별첨 2)
2006. 7. 4 예보, 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 발송
2006. 7. 31 예보, 한화 각각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문제점 1.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중재 결정하고 그 법인과 계약, 중재에 대한 긍정적 의견 받아냄

- 예금보험공사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 요청, 부정적 의견
 - 2006. 1. 27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의견
 - : 민법 103조, 104조, 110조 등에 따른 계약 무효 모두 곤란(별첨 3)
- 이에 예보는 타 법무법인(서정)에 법률자문 요청, 긍정의견 받아냄
 - 2006. 3. 24 법무법인 서정의 검토 의견
 - : 민법 109조, 110조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 방법 검토 가능
 - : 한화컨소시엄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 있으나 그 예상이익 크지 않아(별첨 4)
- 부정적 의견을 낸 태평양과 2006. 6. 29 법률자문계약(국제중재 참여 계약) 맺음
 -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최대 20억(중재 결과에 따라 상이)
- 계약 직후 태평양, 이번에는 긍정적 의견 예보에 제출
 - 2006. 7. 3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의견
 - : 민법 109조, 110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주장 가능(별첨 5)

☞ 최초 법무법인 태평양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계속한 이유는?

☞ 부정적 의견 낸 태평양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국제중재 참여 계약을 맺은 이유는?

☞ 태평양이 계약 나흘만에 원 의견을 뒤집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는?

○ 문제점 2. 공자위 서면 보고 본문에는 중재 필요성, 별첨에는 부정적 검토의견... 국회 언론 의식해 중재절차 밟는다는 것 드러내

- 예보는 2006. 5. 31. 중재절차 밟을 것임을 공자위에 서면 보고
 - 이면계약 문제 현황, 중재절차 필요성 등 보고
 - 중재 관련 비용, 중재 가액, 중재 전망 등의 사항은 보고하지 않음
- 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위 태평양의 1월 27일 검토의견을 보고서에 별첨으로 첨부
 - 긍정적인 서정의 검토 의견 등은 첨부하지 않음

- 보고서에 한화가 Call Option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사가 수용하면 국회·언론으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함
 - 중재신청의 주요한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비판’임을 스스로 드러냄

☞ 공자위에 중재 비용, 가액, 전망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나치게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본문에는 중재절차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더니, 별첨에 부정적인 의견만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중재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 국회·언론으로부터의 비판을 의식해 콜옵션 행사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중재신청 자체도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닌가?

○ 문제점 3. 왜 태평양은 시간당 Fee + 성공보수, 외국 법인은 시간당 Fee ?

- 예보는 6. 29 태평양과, 7. 19 ‘Freshfield’(英)과 법률자문(중재 신청 대행) 계약
 - 태평양과는 시간당 Fee와 성공보수 base로 계약한 반면, Freshfield와는 시간당 Fee로만 계약

☞ 태평양과 성공보수를 넣어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재신청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닌가?

☞ 양쪽과 각각 상이한 계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왜 뉴욕에서 진행되는 중재신청에 영국계 회사와 일을 하는가?

○ 문제점 4. 수십억이 소요되는 중재 절차, 공자위는 No Comment

- 예보는 5. 31 공자위 서면보고 직후 6. 1 보도자료 내어 국제중재신청 방침 밝혀
 - 공자위는 이와 관련, 아무런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음(공자위 관계자 구두 확인)
 - 법적으로도 예보에는 보고의 의무만 있을 뿐, 공자위의 권리나 의무 없어
- 그러나 예보의 예측으로도 30~50억이 드는 소송(한화는 100억 예상-구두 확인)
 - 공자위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 의무는 방기한 셈
 - 특히 보고서가 중재 비용이나 규모 등은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본문에는 중재의 필요성을, 별첨에는 중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 지적했어야

- ☞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서면보고 자료를 언제 보았으며, 이 사실은 언제 알았나?
- ☞ 서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은 갖지 않았나?
- ☞ 중재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공자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나?
- ☞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과연 도덕적인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 결론

- 예금보험공사의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중재신청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예보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실책에 대한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것
- 중재를 통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는다는 목적보다는 국회·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임이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수십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 큼
-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자위에 대한 부실한 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뒤집히는 법률 검토의견은 예보의 무리한 중재절차 진행을 드러내는 것
-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뒤늦은 중재에 힘을 쏟기보다 철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계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별첨 1>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한 이면계약 내용

- ☐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기로 약정

*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 한화그룹은 동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

- 맥쿼리사는 동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2003.12.16)

<별첨 2> 한화가 예보에 행사 요청한 call option 내용

: 예보가 가진 대한생명 지분 중 16%를 주당 2,275원에 한화가 살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10월 28일까지 행사할 수 있음. 모두 행사하면 총 2584억원

<별첨 3>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6. 1. 27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과 이면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 곤란

*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예보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가, 주식매매계약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 곤란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한화컨소시움이 예보에 이면약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2심 판결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는 곤란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별첨 4> 법무법인 서정이 2006. 3. 24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매매계약의 효력관련 의견

- 본건 컨소시엄을 통하여 유력한 외국금융회사가 대한생명 인수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입찰절차상 매각주간사 또는 매도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점은 본건 컨소시엄을 본건 매매계약상 최종매수인으로 선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매도인에게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 역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귀 공사로서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근거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일응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본건 주식매매계약 취소의 소 제기시 한화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귀사가 본건 컨소시엄에 대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건 컨소시엄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본건 컨소시엄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귀 공사의 소제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귀 공사의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남소가 아닌 이상, 본건 컨소시엄이 손해배상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예상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내법원에서 소제기 가능 여부

- 다만 아래에서 상설하는 바와 같이 본건 주식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일체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매매계약 제9조 이하에서 구속력있고 최종적인(미합중국 뉴욕에서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9조에 의하여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4>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6. 7. 3 예보에 제출한 검토의견

□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관계의 인정 여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지만, 귀 공사로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있어서의 진실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로 법원은 형사판결문을 통하여 다소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귀 공사는 전략적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보험사 참여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 한화그룹의 입찰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한화그룹 측에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한화그룹은 1999년의 입찰에 이미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계약들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응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평가된다는 것이 본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

우리은행의 MOU 이행점검 철저히

□ 우리은행 성과급 선지급 관련

○ 우리은행과의 성과급 관련 마찰

- 예보와 우리은행 간의 MOU 지표 항목 中 성과급 지급 관련
 - 경제적 부가가치(EVA) 초과 달성분의 20% 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
 - ※ 경제적부가가치 : 회사가 창출한 영업이익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을 뺀 값
- 우리은행 측 입장
 - 우리은행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 직원보다 대우가 매우 열악하므로, 성과급을 선지급 하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겠다는 각서 받고 130%(전 직원 395억원)을 지급
->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음
- 예보 측 입장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우 성과급은 MOU의 비재무적 항목에서 경제적부가가치(EVA) 초과 달성분의 20%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MOU 위반임.
 -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란 결산 후 성과에 따라 추가로 주는 급여. 우리은행은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을 지급한 셈

○ 예보의 사후조치

- 우리은행의 성과급 선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행장에 대한 사후조치
 - 2004년 성과급 지급 당시에는 MOU에서 임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판매관리비용이 영업이익의 4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MOU 항목을 근거로 “주의” 조치를 받음. (2004년 성과급 지급 당시 행장은 이덕훈 이었음)
 - 2006년 4월 3일 성과급 선지급과 관련하여, 10월 18일에는 “경고(엄중주

의)” 처분을 받고 성과급의 15%(7000만원 가량) 삭감됨.

※ 경고 = 엄중주의(원래는 “엄중주의” 였으나 “주의” 조치와 혼돈의 우려가 있어 “경고” 로 명칭을 바꿈)

- 동일 사항으로 1인이 “경고” 2차례 이상이면 향후 3년간 예보와 MOU를 맺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1차례 경고 시에는 성과급의 15%반납임

○ 예보의 사후조치에 대한 문제점

- 황영기 행장은 지난 2004년에도 이덕훈 전 행장시의 대규모 초과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주의” 조치를 받은 적 있음. 이 당시 예보는 “전 행장 때 일이라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MOU 달성에 힘쓰고 제도개선을 중시하라는 ‘미래지향적’ 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 이라 밝혔음
- 2005년 재경위 예보 국정감사 시에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정감사장에 출석, 직원 복리후생 과다지원 및 성과급 과다지급으로 질의받고, MOU 약정을 지키겠다고 답변함.

※ 2005년 재경위 공자위/예보 국정감사 회의록 中

○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왜 노조 말썽을 하십니까? 은행장으로서 앞으로 MOU 약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 증인 황영기

예, 지키겠습니다.

○ 이상민 위원

엄중하게 지켜주십시오.

○ 증인 황영기

예, 알겠습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우리은행의 성과급 지급 관련 문제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보의 조치는 ‘경고’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음. 2004년 성과급 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을 또다시 같은 건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증거임
- 사전협의 당시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대주주로서 만류를 제대로 못한 것

은 잘못된 것

※ 감사원, 금융공기업감사처분요구서 中 2006.9

우리은행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 한편, 지난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영기 행장(개성공단 외화송금의 불법성과 관련)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음. 이유는 내년 6월 모스크바 현지법인 설립관련 러시아의 연방은행 총재 면담임. 실제로는, 작년 예금보험공사 국감때 MOU를 지키지 않아 시정요구등을 받은 것에 대한 질의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전혀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듯 함

□ 질의사항

1. 지금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국책은행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 지분율 상 사실상의 국책은행 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약 78%임) 지금 재경위 피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6.7%) 기업은행보다 무려 11%나 정부지분율이 높은 우리은행이 국회의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기 행장이 국정감사의 당연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시다. 황 행장은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agency problem 이라고 생각함)
 2. 예금보험공사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극대화하여 회수하는 것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얼마나 됩니까?(약 12조원)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모아 만든 공적자금으로 되살린 우리은행의 행장이 다른 국책은행장 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직원 성과급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가 MOU 이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십니까?
 3. 특히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은 2004년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조치를 받았고, 작년에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보와의 MOU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는 황 행장의 MOU 약정이 예보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 재경위와의 약속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성과급 지급으로 MOU를 어겨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보의 징계조치가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는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리은행장에게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절대적 대주주 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은행장 해임 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
- ※ 우리카드 사장(舊 평화은행장)의 경우 예보에서 2001년 3/4분기 엄중주의(경고), 2001년 4/4분기 엄중주의(경고) 조치에 이어 2003년 2/4분기에는 해임요구를 하였음

차등보험료제도 시행

□ 차등보험료 제도의 연구 현황

○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 추진의 한 부분으로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예정

- 현재까지 주요 추진경과
 - 1999. 4월 「차등보험료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 2000. 11월 외부 연구용역 실시 및 은행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방안 마련
 - 2005. 4월 FDIC 관련 전문가 자문
 - 2006년 5월 9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하기로 결정
- 이 외, 2002년 이후 은행권에 대해 정기 시뮬레이션 실시 中
 - 2006년 8월 비은행권(저축은행, 보험, 증권 등)의 차등보험료제도 도입방안 검토

□ 차등보험료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가 도입을 미루고 있음

- 사실상 은행권으로의 도입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음
-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은행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지 3년이 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일정안

- 2006년 6월~ 7월 : 기존 연구결과 정리 및 향후 연구방향 · 범위 설정
- 2006년 8월 ~ 2007년 3월 : 해외 사례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 수행(한국 금융학회)

- 2007년 4월 ~ 2007년 6월 : 민관합동 T/F 구성 · 논의
- 2007년 7월 이후 : 법령 개정작업 추진

○ 향후 일정안과 관련,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관련 현황(예보 제출자료)

1. 목 적

-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차등보험료제도와 목표기금제 도입방안 및 보험료율 체계 개편방안 마련

* 규제개혁 장관회의(' 06.5.9)에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 기본일정을 제시

- 위험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금융회사의 고위험 선호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기금적립의 목표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금융권역별 보험료율의 적정성 제고

2. 용역수행기관 선정

- 2006.8.18 제안서·입찰서 접수(2개 업체)를 마감한 후, 가격·기술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2006.9월 한국금융학회와 최종 계약 (260백만원)

□ 질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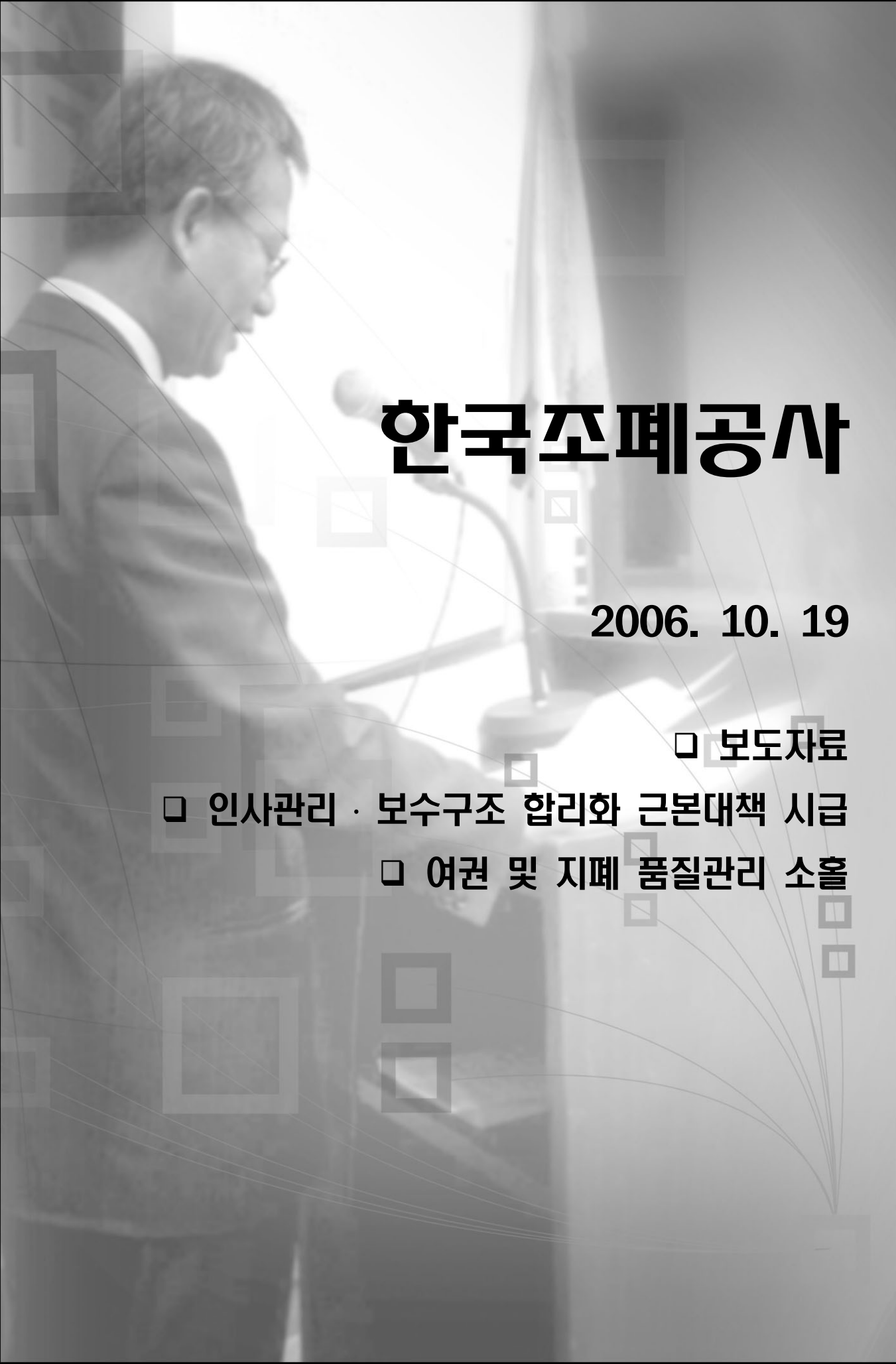
1. 차등보험료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 데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서
는 이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1999년)
2. 이미 2002년 3월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은행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
을 하고 있다고, 예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온지 4년 6
개월이 지났고,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도 4년동안이나 했는데, 은행권에 차등보험료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를 이렇게 늦게 도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3. 정부는 2006년 5월 9일이 되어서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예금보험제도의 선진
화에 대해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8월에 예보는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
받고, 9월에 한국금융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연구용역 수행 후 민관 합동
T/F 운영 후 내년 7월이 되어서야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슨 법
령을 개정할 생각입니까? 이미 지난 3월 24일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금자를 보호하는 차등보험료제 시행에 무슨 법령을 더 개정해야 합니까?

※ 예금자보호법 中

제30조(보험료의 납부등)

- ①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
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
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
다.<개정 1998.9.16, 2003.5.29, 2006.3.24>

4. 예보 사장은 하루 빨리 차등보험료제도를 실시하여, 건실한 은행이 부실한 은행의 몫
까지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

2006. 10. 19

- 보도자료
- 인사관리 · 보수구조 합리화 근본대책 시급
- 여권 및 지폐 품질관리 소홀



보도자료

조폐공사 1인당 인건비 1년 새 20%나 올라

조폐공사 2005년의 1인당 인건비 65백만원, 전년대비 11백만원(20.0%) 올라
 매출액 14%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64%나 줄어
 전체 임직원 중 4급 직원 비중이 71.0%, 3급 이상도 급증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본적인 인력·보수 구조조정 있어야

※ 한국조폐공사의 1인당 인건비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인당 인건비	49,455	46,497	50,213	54,822	54,421	65,331
전년대비	-	-6.0%	8.0%	9.2%	-0.7%	20.0%

자료 :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인건비가 불과 1년 만에 20%나 급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2005년 1인당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무려 20% 증가하는 등 비용 급증으로 인해 매출액이 14%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건비의 급증으로 인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5.0%에서 2005년은 88.6%로 3.6%p 증가했다. 또한 관리비용까지 감안한 영업이익률은 2005년 1.6%에 불과했는데, 이는 2004년 5.0%과 비교하여 3.4%p 하락한 것으로서 조폐공사의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원가비율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매출액(A)	235,455	230,906	194,597	194,659	221,872	14.0%
매출원가(B)	191,670	182,400	165,406	165,450	196,650	18.9%
매출원가비율(B/A)	81.4%	79.0%	85.0%	85.0%	88.6%	(+3.6%p)
영업이익(C)	27,530	31,484	10,192	9,765	3,515	-64.0%
영업이익률(C/A)	11.7%	13.6%	5.2%	5.0%	1.6%	(-3.4%p)

자료 :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년도

※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도별 직급별 비중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31
3급이상	6.5%	5.7%	5.7%	5.7%	5.7%	5.6%	7.4%
4급	52.3%	56.3%	58.8%	62.6%	67.2%	69.7%	71.0%
5급이하	28.2%	25.8%	22.7%	18.7%	13.8%	11.1%	6.8%
기능/별정	12.9%	12.2%	12.8%	13.0%	13.3%	13.6%	14.8%

자료 :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폐공사는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2004년 222%에서 2005년 382%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 급증한 것이 인건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고 이를 제외한 인건비 상승률은 5.1%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14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2004년 6위에서 2005년 5위로 불과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어차피 직원이 퇴직할 때 받아가는 것이므로 실제 임직원 연봉이 20% 오른 것과 다름 아니다.

윤건영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국민 삶이 고달픈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조폐공사의 1인당 인건비가 한 해에 20%나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특히 “조폐공사 전체 임직원 중 4급직원의 비중이 71%에 달하고 3급 이상 직원의 비율도 최근 5.6%에서 7.4%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조폐공사는 별반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임금피크제 도입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력구조와 보수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 · 보수구조 합리화 근본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조폐공사의 연도별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매 출 액	235,455	230,906	194,597	194,659	221,872	14.0%
매 출 원 가	191,670	182,400	165,406	165,450	196,650	18.9%
매출총이익	43,785	48,506	29,191	29,209	25,222	-13.6%
판매비와 관리비	16,255	17,022	18,999	19,444	21,707	11.6%
영 업 이 익	27,530	31,484	10,192	9,765	3,515	-64.0%
영업외수익	3,188	9,250	5,876	4,556	3,143	-31.0%
영업외비용	2,643	3,066	2,573	2,227	2,800	25.7%
경 상 이 익	28,075	37,668	13,495	12,094	3,858	-68.1%
당기순이익(세후)	18,338	28,031	9,493	11,331	11,525	1.7%

자료 : 조폐공사 감사보고서 각 년도

- 2004년 대비 2005년 매출액은 14.0% 증가했으나 매출원가가 18.9% 증가하여, 매출총이익은 13.6% 감소함
- 그 밖에 2005년은 전년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1.6%, 영업외비용이 25.7% 증가하여 경상이익은 무려 68.1% 감소한 3,858억원 기록
- 그러나 2005년은 負의 법인세비용 76.7억원(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후 당기순이익은 115억2천5백만원을 기록함

※ 이연법인세 회계 : 손익에 대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회계이익)과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세이익) 사이의 차이를 조정해주기 위한 법인세 기간배분 과정

○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 2005년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총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5위(2004년 6위) 기록
 - 개별 경영지표별로는 노동생산성, 화폐류 인쇄사업, 주화 제조사업 부문이 최상 점수인 A⁺를 기록
 - 반면 영업비용관리, 보수구조 합리화 부문에서는 조폐공사가 받은 최하 점수인 C⁰를 기록
- 4급 직원의 비중이 매년 급증 : 인력구조 합리화 노력 시급

※ 조폐공사 임직원 연도별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임 원	5	5	5	5	5	5	5
1 급	9	9	11	13	12	11	17
2 급	27	22	19	19	22	22	30
3 급	58	51	52	51	50	49	66
4 급	793	856	899	969	1,046	1,083	1,132
5 급	422	389	346	274	196	162	103
6 급	5	3	1	15	18	10	5
기능직	127	108	107	106	106	105	104
별정직	69	77	89	96	101	106	132
계	1,515	1,520	1,529	1,548	1,556	1,553	1,594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도별 직급별 비중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31
3급이상	6.5%	5.7%	5.7%	5.7%	5.7%	5.6%	7.4%
4급	52.3%	56.3%	58.8%	62.6%	67.2%	69.7%	71.0%
5급이하	28.2%	25.8%	22.7%	18.7%	13.8%	11.1%	6.8%
기능/별정	12.9%	12.2%	12.8%	13.0%	13.3%	13.6%	14.8%

자료 : 한국조폐공사

- 4급 직원 비중이 매년 급증(2006.7월 현재 전 임직원의 71.0%)
- 3급 이상 직원의 비중도 2005년 5.6% 대비 2006년 7.4%로 급증
⇒ 전체적으로 고급 직원의 비중이 급증세에 있음

· 1인당 인건비의 급증

- 2005년의 경우 1인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으나, 1인당 인건비는 전년대비 무려 20.0% 증가하였음
- 특히 2005년의 경상이익은 38억5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8.1% 급감

※ 조폐공사의 연도별 1인당 매출액, 1인당 인건비, 경상이익 추이

단위: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인당 매출액	142.3	157.1	154.2	126.7	124.9	142.8
전년대비	-	10.3%	-1.8%	-17.9%	-1.4%	14.3%
1인당 인건비	49.5	46.5	50.2	54.8	54.4	65.3
전년대비	-	-6.0%	8.0%	9.2%	-0.7%	20.0%
※ 경상이익	35,414	28,075	37,668	13,495	12,094	3,858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의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 부족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노력 부족
 - 조폐공사는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경영실적 부진 및 노무관리 합리화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음(2005년은 국정감사 없었음)
 - 조폐공사는 노조전임자 감축 등 일부 시정조치를 하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점인 인건비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함

· 2005.1.1일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보수구조 합리화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관련규정	일 자	주요 내용
인사관리 합리화	사규 및 하위규정	2005.9.27	- 신규채용 연령제한 폐지 -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조정 - 비위행위자 문책 강화 및 구체화
		2005.11.9	- 종합근무평정 실효성 제고 - 여비규정 개정
		2005.12.30	- 명인·명장·명수 제도 신설 (보수규정에 의거 업무수당 지급) - 관련규정 정비
		2006.3.22	- 채용관련 규정 정비
		2006.6.1	- 종합근무평정 규정 정비
보수구조 합리화	임원보수규정	2005.2.22	-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법 합리화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2005.11.25	- 2005년 임금은 전년대비 2% 인상 (노사합의사항 반영)
	취업규칙 및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2005.12.20	- 보수지급 관련 규정 일원화 - 성과급 차등지급 폭 축소 (타 투자기관수준)

자료 : 한국조폐공사, 윤건영 의원실 정리

- 일상적인 정비 수준의 조치는 수시로 있었음
- 반면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조치는 없었음

□ 질의사항

1. 조폐공사의 2005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경상이익은 3,858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무려 8,236억원, 68.1%나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익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2005년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매출원가는 18.9%, 판매비와 관리비가 11.6%, 영업외비용이 25.7% 각각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그 증가폭이 매우 컸습니다. 조폐공사가 비용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 조폐공사는 특히 임직원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급 직원의 경우 매년 급격히 그 비중이 증가해서 최근에는 전체 임직원의 71.0% 수준에 달합니다. 이처럼 매우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1인당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1% 급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노무관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개선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하나로서 인력관리와 보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6. 2004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인 2005년1월부터 지금까지 조폐공사의 인사관리 합리화, 보수구조 합리화와 관련된 내부 보고문건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상 업무 수준의 정비 정도에 불과한 조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폐공사가 큰 틀에서 인사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조폐공사의 경우 특히 4급 직원의 비중이 71%에 달하고 있고, 3급 이상의 고급 인력 비중이 2005년 5.6%에서 2006년 현재 7.4%로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지금 상태라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폐공사는 본 위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해서 인사관리와 보수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검토하여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권 및 지폐 품질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여권 품질관리 소홀

- 공백여권 품질불량으로 인해 외교통상부에 배상한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발생건수	보전금액	배상금액	비 고
1999~2000	1,748	5	24	
2001	2,461	7		
2002	7,219	22	36	
2003	20,184	61		
2004	39,473	118		
2005	-	-		미청구
2006. 01 ~ 06월				미청구
합 계	71,085	273		

자료 : 한국조폐공사

- 보전금액 지급사유 및 근거
 - 2003.12.30일 체결 약정에 따라 품질불량 여권에 대해 외교부에 발급비용 손실보전
 - 2003.12.30일 이후 각 연도별 불량 발생 건수 대하여 건별 @3,000원 지급
 - 발생건수의 공백여권은 무상으로 대체 공급

- 배상금액 지급사유 및 근거
 - 외교통상부에 발생건수에 해당하는 공백여권 대금 배상
 - 2003.12.30일 손해배상금 관련 약정 체결 전에 외교부 요청에 따라 품질 미흡 여권에 대하여 공급 대금에서 감액 처리
- 품질 미흡 사유 : 신원정보란 이탈 및 재봉선 부위 인표지 터짐

※ 여권 품질불량으로 개별 민원인 손해배상 지급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민원관련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민원건수	배상금액	비 고
2003	2	1.5	신원정보지 이탈 1건 (0.3) 형광잉크 불량 1건 (1.2)
2004	4	3.2	신원정보지 이탈
2005	5	3.9	신원정보지 이탈
2006. 01 ~ 08월	5	4.9	신원정보지 이탈
합 계	16	13.5	

(주) 진정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순수손실액을 진정인의 계좌에 입금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품질관리 소홀

- 은행권 손지발생량 및 손율 추이

단위 : 천장, %

연도	은행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0	289,000	9,119	3.15	77,000	2,266	2.94	497,000	9,096	1.83
2001	409,000	9,417	2.30	60,000	1,723	2.87	417,890	7,205	1.72
2002	670,000	12,728	1.90	100,000	2,865	2.87	471,890	8,196	1.74
2003	835,000	13,439	1.61	71,000	2,058	2.90	314,000	5,432	1.73
2004	640,000	9,270	1.45	70,000	1,964	2.81	271,700	4,547	1.67
2005	349,800	4,944	1.41	45,000	1,265	2.81	662,600	12,285	1.85
2006.6	-	-	-	225,000	18,023	8.01	445,000	23,541	5.29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용지 수율 실적

단위 : Kg

연도	은행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투 입	생 산	수 율 (%)	투 입	생 산	수 율 (%)	투 입	생 산	수 율 (%)
2000	595,745	489,542	82.2	113,929	98,639	86.6	610,910	520,484	85.2
2001	994,836	840,818	84.5	-	-	-	448,111	386,147	86.2
2002	1,186,861	999,115	84.2	231,119	196,050	84.8	584,951	509,902	87.2
2003	1,247,140	1,053,930	84.5	94,949	78,388	82.6	535,268	465,961	87.1
2004	849,932	720,177	84.7	91,617	75,763	82.7	511,407	442,980	86.6
2005	169,716	141,186	83.2	303,134	252,279	83.3	395,211	332,602	84.2
2006.6	597,360	463,373	77.6	134,600	111,949	83.2	685,115	561,252	81.9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주화 손품발생량 및 손율 추이

단위 : 천장, %

연도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0	128,000	100	0.08	423,000	320	0.08	86,000	59	0.07
2001	113,000	77	0.07	470,000	310	0.07	102,000	68	0.07
2002	110,000	68	0.06	490,000	294	0.06	100,000	61	0.06
2003	122,000	70	0.06	415,000	232	0.06	169,000	97	0.06
2004	45,000	25	0.06	250,000	126	0.05	100,000	52	0.05
2005	105,000	53	0.05	205,000	103	0.05	90,000	45	0.05
2006.6	125,860	63	0.0497	163,220	82	0.0502	41,390	21	0.0506

연도	10원화			5원화			1원화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0	335,000	230	0.07	30	2.7	8.96	30	3	8.96
2001	345,000	220	0.06	130	11	8.53	130	14	10.83
2002	100,000	61	0.06	122	10	8.53	122	10	8.18
2003	128,000	73	0.06	20	1	5.96	20	2	10.96
2004	135,000	66	0.05	13	1	8.42	13	1	8.42
2005	250,000	126	0.05	-	-	-	-	-	-
2006.6	36,000	18	0.0505	-	-	-	-	-	-

자료 : 한국조폐공사

□ 질의사항

1. 조폐공사의 품질관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의 경우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건수가 2002년 7,219건에서 2003년 20,184건, 2004년은 30,473건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 규모도 2005년도에 1억1천8백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여권 불량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2005년 불량 발생건수는 집계가 되었습니까?
2. 특히 여권의 경우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입국거부를 당해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전달되는 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3. 2006년 상반기에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5천원권과 1천원권의 손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5천원권은 손율이 올해 상반기 8.01%로서 전년도 2.81%에 비해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 불량 5천원권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바 있는데, 새 5천원권 발행 이후 품질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쯤이면 새 5천원권의 품질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나가고 계십니까?
4. 1천원권의 경우 손율이 전년도 1.85%에서 올해 상반기 5.29%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새 1천원권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손율 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은행권 용지 수율의 경우는 오히려 5천원권의 경우 올해에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1만원권의 경우 전년도 83.2%에서 올해 상반기 77.6%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천원권도 전년도 84.2%에서 올해 상반기 81.9%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2006. 10. 26

- 보도자료
- 2006년 상반기 대규모 적자의 원인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방식 개선



보도자료

상반기 181억원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정책 때문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금융시장 출혈경쟁 촉발
 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 밀려 판매 급감에 적자까지 이어져
 8.31 대책 → 2005.11월 주택담보대출 지원 → 3.30 DTI 규제 등 엇박자 속출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공기업 경영마저 흔들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2006년 상반기 181억원 적자의 주범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국은행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2005.10.11일과 12.8일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씩 인상했고 시중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1.2조원 증액함과 동시에 대출금리를 5.2%에서 최저 4.7%(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낮추었다.

생애최초대출은 초저금리에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등에 업고 시장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였고, 신청자 폭주에 따른 기금고갈로 인해 판매 35일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쟁과 같은 출혈경쟁 상태로 돌입했고 그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 참고 : 2005.11월 이후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대출의 공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5.11	12월	'06.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보금자리론(A)	1,418	1,432	672	1,020	1,014	869	732	855	1,278	9,290
생애최초(B)	3,003	7,221	7,105	7,220	3,558	1,683	854	632	682	31,958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즉,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상승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를 2005.9.21일부터 6.5%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2005.12.28일에 가서야 6.8%로 0.3%만큼 인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론의 판매는 급감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05년 10~12월에 걸친 출혈 판매분을 2006년 1분기에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는 한 편으론 LTV 규제와 DTI 규제 같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고 비판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상반기 181억원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을 뒤흔든 대표적 사례로서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LTV :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 DTI :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2006년 상반기 대규모 적자의 원인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상반기 181억원 적자현황

- 2006년 상반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6월말	2006년 6월말	증 감
영업수익(A)	677.8	508.5	△169.3
영업비용(B)	649.2	692.0	+42.8
영업외 수익(C)	0.2	0.3	+0.1
영업외 비용(D)	0.9	-	△0.9
법인세(E)	7.1	△1.9	+9.0
당기순이익(A-B+C-D-E)	20.7	△181.2	△201.9

- 발생원인별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6월말	2006년 6월말	증 감
이 자 손 익	109	96	△13
수 수 료 손 익	86	170	+84
대출채권 처분 손익	△156	△56	+100
파 생 상 품 손 익	89	△146	△235
대 손 총 당 손 익	△5	5	+10
판 매 관 리 손 익	△94	△149	△55
지급보증총당 손익	0	△103	△103
영 업 이 익 합	29	△183	△212

· 2006년 상반기 영업이익 세부 내역

단위 : 억원

계정과목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증 감
영 업 수 익	678	509	△169
이자수익	153	116	△37
기금관리수익	0	115	+115
수수료수익	97	175	+78
대출채권처분이익	54	92	+38
파생상품거래(평가)이익	374	6	△368
대손충당금환입액	0	5	+5
영 업 비 용	649	692	+43
이자비용	44	20	△24
수수료비용	11	5	△6
대출채권처분손실	210	148	△62
파생상품거래(평가)손실	285	152	△133
대손상각비	5	0	△5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0	103	+103
판매비와 관리비	94	264	+170
영 업 이 익	29	△183	+212

○ 2006년 상반기 적자의 원인 설명이 부서마다 제각각

☞ 헷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와 대출채권처분이 모두 손실 발생한 데 주목해야 함

- 파생상품손실과 대출채권처분 모두 손실발생한 사유(재무관리부 A팀 유선설명)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의 등장 등으로 금리 인상기에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의 요인이 발생
 - 기본적으로 손실 발생한 상태에서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
 - 최초 판매시점에 비해 유동화 시점에 금리 하락하여 대출채권처분 손실은 처음보다 축소, 헷지거래는 손실 발생
- 이한구 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제83번 (재무관리부 B팀 작성)

“모기지론 판매시점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동화부문 손실 발생”

- 이계안 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제4번 (재무관리부 B팀 작성)
 - “MBS 발행당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148억원의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 발생”
 - “적자의 주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무리한 경쟁 때문은 아님”
 - “상반기 적자발생과 6월초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안하조치와는 관계가 없음”
- 서병수 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제33번 (유동화관리부 작성)
 - “8.31대책, 3.30대책 등에 따른 주택매매부진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액 감소”
 -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의 금리경쟁력 약화, 은행권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의 금리갭이 2005년 중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5월 중 1.39%까지 기록”
 - “2005.11월 재개된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대출(2005.11.7~2006.2.22일 대출금리 4.7~5.2%)이 저금리 및 완화된 대출조건 등으로 대상고객층이 유사한 보금자리론 시장 잠식”
- 각 답변을 종합한 결론
 - 재무관리부 A팀의 유선설명과 유동화관리부의 국감자료, 재무관리부 B팀의 국감자료 모두 기본적으로는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임
 - 단, 재무관리부 B팀이 이계안 위원에 대한 답변시 “시중은행과의 무리한 경쟁 때문은 아님” 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음
 - 가장 큰 요인은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대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금융공사는 설명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배제하고 있음

○ 2005년 11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관련

-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 한국은행 2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
 - 2005.10.11일과 12.8일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씩 인상 ⇒ 시중금리 상승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재개

-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1.2조원 증액
- 대출금리를 5.2%, 최저 4.7%(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액 1억원 이하)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
- ※ 신청자 폭주에 따른 기금고갈로 인해 판매 35일만에 중단

· 주택금융공사의 경영 악화

- 조달 금리는 상승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림
- 2005.9.21일부터 6.5% 적용 중인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의 현상유지 (출혈판매)
- 2005.12.28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6.8%로 0.3%만큼 인상 (판매실적 급감)
- 2005년 10~12월에 걸친 출혈 판매분을 2006년 1분기에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이 발생 예상

※ 참고 : 2006년 중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공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보금자리론 공급액	668	1,022 (53.0%)	1,017 (△0.5%)	869 (△14.6%)	731 (△15.9%)	855 (17.0%)	1,278 (49.5%)	6,440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¹⁾	2,907	6,084 (109.3%)	11,887 (95.4%)	31,716 (166.8%)	30,728 (△3.1%)	21,656 (△29.5%)	22,603 (4.4%)	127,653

1) 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2) ()안은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갭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보금자리론 (A)	6.70	6.70	6.45	5.95	5.95	6.25	6.50	6.80	6.80	6.50
은행권 평균 ¹⁾ (B)	5.98	5.99	5.63	5.41	5.48	5.13	5.36	5.60	5.46	5.48
금리 갭 (A-B)	0.72	0.71	0.82	0.54	0.47	1.12	1.14	1.20	1.34	1.02

주) 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참고 : 2005.11월 이후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대출의 공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5.11	12월	'06.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보금자리론(A)	1,418	1,432	672	1,020	1,014	869	732	855	1,278	9,290
생애최초(B)	3,003	7,221	7,105	7,220	3,558	1,683	854	632	682	31,958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참고 :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조정 내역

단위: %

구 분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금리조정 일자
		10년	15년	20년	30년	
2004년	3월	6.70			-	3.25일 보금자리론 출시
	8월	6.45			-	8.17일
	10월	6.20			-	10.14일
	11월	5.95			-	11.19일
2005년	4월	6.25			-	4.6일
	9월	6.50			-	9.21일
	12월	6.80			-	12.28일
2006년	2월	6.80			6.85	2.1일 30년 만기 상품 출시
	4월	6.60	6.70	6.80	6.85	4.21일
	6월	6.30	6.40	6.50	6.55	6.12일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질 의 사 항

1. 2006년 상반기 주택금융공사가 1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혹시 헷지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가 있었습니까?
3. 헷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만 있었다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유동화시점의 대출채권처분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보증자리론 판매시점과 유동화 시점 사이의 금리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헷지를 했기 때문에 손실은 보완이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시점과 유동화시점 사이에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손실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보증자리론의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수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5. 동의하신다면 무슨 이유로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까?
6. 생애최초대출의 대규모 판매가 어느 정도 규모로 주택금융공사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상반기 손실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8. 정부 정책의 변화방향이 주택금융공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2006년 상반기의 적자를 분석해본 결과 정부 정책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도와 조달금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 실패가 주택금융공사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정부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손실뿐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개황

- 2005.7.18, 기존의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제도 도입
-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기금의 사무위탁 관리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금운영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2인(연세대 흥복기 교수, 경남정보대 조길복 교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기금 건전성 유지에 취약함
 - 학자금 대출의 신용보증 이외에 이차보전과 무상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차보전과 무상지원은 기금운용배수(법상 20배 한도) 산정에서 제외함
(학술진흥 및 학자금신보법 제42조 제1항)

-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과 유·무상지원 사업이 혼용되어 있음
 - 각 사업 목적별 출연금은 따로 받지만 이에 대한 회계계정은 일괄관리
 - 지원사업 업무는 계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 관리하고 있음
(학신보 담당자는 교육부로부터 출연금수령 → 은행에 지급하는 단순업무이고 학자금신보의 채권, 채무, 손익과도 무관하므로 계정분리 실익 없다는 의견)
- 향후 3~5년 후 주택금융공사 업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2006년 1~9월 이미 51만4,666건(1조4,630억원 규모) 취급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보증은 전체의 53.4% 차지(2006.9월말 현재)
 - 3년 후 170만건, 10년후 520만건 이상의 과중한 대출 관리 부담 예상됨
※ 주택신용보증기금 2006.1~9월 15만 세대에 3조원 보증공급과 비교해볼 때 건수는 3.4배 많고 금액은 48.7%에 불과함
 - 현행 공사 정원 382명, 현원 374명, 이 중 주신보 213명, 학신보 34명임
⇒ 3년 후 학신보 인원이 200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학신보 실무자 전화면담에 의한 비공식적인 추산)
 - 2006년 수탁수수료로 연간 6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수령
(34명 인건비의 절반 미만 수준임)

○ 학자금 대출, 연체 및 구상권 현황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공급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5년 실 적	2006년		
		계 획	1~9월 실적	달성률(%)
건 수	181,983	500,000	514,666	102.9%
금 액	4,701	15,000	14,630	97.5%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체현황

- 2006. 7월말 현재 연체율은 2005.12월말 대비 0.1%p 감소한 2%임

단위 : 억원, %, 건

구 분	'05.12월말	'06.6월말	'06.7월말
보증잔액(A)	4,606	11,780	11,751
연체잔액(B)	95	299	235
연체율(B/A)	2.1%	2.5%	2.0%
연체건수	3,780건	11,191건	9,067건

※ 연체액은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1개월이상 연체'를 대상으로 산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구상권 현황

- 2006.7월말 현재 구상권 잔액은 3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06.5월말	'06.6월말	'06.7월말
구상권 누적 발생액(A)	31.0	256.3	340.0
누적 회수액(B)	0.3	5.6	14.0
구상권 잔액(A-B)	30.7	250.7	326.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자금대출 조건

· 요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증대상자로 추천받은 대학(원)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금의 신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장애우 및 신입생 등은 제외)
- 연제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청 당시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

- 금리 : 고정금리 (국채5년물 금리 기준)
 - 2006년도 1학기 대출금리 연 7.05%
 - 2006년도 2학기 대출금리 연 6.84%
- 우대사항
 - 가산점 운영 : 세자녀 이상 가정, 50인미만 중소기업체 근무자 및 자녀
 - 저소득층 무이자(이공계) · 저리(비이공계, 연 2%) 대출

□ 질 의 사 항

1. 학자금 신용보증 사업이 9월말 현재 이미 연간계획의 100%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학기별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간 사업이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내년도 이후 학자금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업무 이외에도 학비의 무상지원,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또 법률에 이러한 유무상 지원들은 보증 운용배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업무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계정을 분리하지는 않고, 실무 차원에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업무가 복잡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보증업무와 지원업무에 대해 각각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 학자금 신용보증 공급 실적이 9월말 현재 51만5천건, 1.5조원에 달합니다. 주신보는 올해 9월말까지 약 15만 세대에 3조원을 보증했습니다. 학신보는 주신보에 비해 건수는 3.4배가 많지만 금액은 48.7%에 불과합니다. 반면 주신보의 인원은 213명이고 학신보 인원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사장께서는 3년 후에 학자금 신용보증 업무의 보증 건수는 몇 건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며, 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또 공사가 감당할 범위 내에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

2006. 10. 25

- 보도자료
- KIC 존재이유 재검토



보도자료

KIC, 존재이유 없다!

국내외 경제환경 진단 착오, KIC 설립의 당위성 없어
 위탁자산 재위탁으로 수수료 이중 지급, 태생적인 비효율 구조
 국제적 자산운용사로부터 노하우 전수도 구호에 그쳐
 외환은행 매각 논란 당사자 사장선임, 과도한 임대료 등 초반부터 뼈거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C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인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지난 2004년 9월 16일 국회에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출하였고, 국회 재경위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05년 2월 25일 표결로써(10:7) 통과시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4년 11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KIC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전제로 (1) 아시아 4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는 국제적 거래패턴이 상당기간 계속 된다는 전망 유지 (2) 외국 투자성향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 필요 외환보유고가 1,500억불 정도라는 판단의 유효성 유지, (3) 남북관계 등의 불안정으로 외환보유고를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 유지 등 3가지를 설명한 바 있다(제250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KIC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이미 효력 상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KIC 성공에 대한 세 가지 전제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서 그동안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즉 KDI를 비롯하여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경상수지를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 다다익선 식의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인해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와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부총리의 전제는 잘못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

재위탁으로 인한 수수료 이중 부담, 태생적 한계

또한 KIC는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위탁자인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필연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이중으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외부자산운용사들이 이런 구조를 양해해서 수수료를 깎아줄 리 만무하고, KIC 또한 수수료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 이중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의 비용으로 귀착된다.

국제적 자산운용사들의 노하우 전수?

KIC의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해외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여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20일 KIC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외부자산운용사 심사조건 중 마지막 부분에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넣어놓았을 뿐이다.

실제 KIC가 윤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최근 10월 16일 2곳의 외부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사항에 노하우 전수나 국내진출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은 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도 하였다.

전임 사장에 1년간 3억5천만원 지급, 1인당 14.1명 사무실

이 밖에도 KIC 초대 사장은 외환은행의 톤스타 매각 문제의 핵심인물로서 검찰수사와 국회 출석 등에 시달리다 지난 7월 14일 사임했다. 전임 사장에 지급된 급여는 1년 14일 근무에 퇴직금 포함 3억5천2백만원(급여 3억2천5백만원, 퇴직금 2천7백만원)에 이른

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가장 비싼 빌딩에 자리잡은 전용면적 604.66평에 달하는 사무실은 1인당 14.1평에 해당(임직원 43명)하며, 지난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5일까지 임대료만 총 1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9단”

주식속담에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9단”이라는 말이 있다. 윤건영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또한 이미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발생할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IC가 과연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그 비용과 효율을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C 존재이유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KIC법 관련 경과사항

- 2004.9.16, 정부가 한국투자공사법안 국회 제출
 - 제안이유 :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활용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 2005.2.25, 재경위 투표로 수정안 통과 (찬성 10, 반대 7)

○ KIC의 문제점 1 : 성공의 전제조건 효력 상실

- 이헌재 당시 부총리 국회발언 中 (2004.11.17일 재경위 회의록)

“몇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국제거래의 구조적 특성상 아시아 3국을 포함해서, 더 넓게는 대만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4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미국이나 이쪽이 무역적자가 나는 국제적인 거래의 패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것은 국제적인 어떤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전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소위 우리가 외환을 단기적으로 방어한다는 목적만을 위해서 필요한 외환이라면 한 1500억 불 안팎 정도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는 부분은 기간이나 이런 면에서 좀 여유 있게 운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예비적 동기로 외환보유고를 좀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외환 수준을 넘는 외화는 우리가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KIC를 준비했을 때 전제가 되는 정책 상황입니다.”

- KIC 성공전제에 대한 문제점
 - 대미 무역흑자 지속 여부
 - ⇒ KDI를 비롯하여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경상수지를 적자로 예상
 - 적정 외환보유고와 추가 외환보유의 필요성
 - ⇒ 비과학적인 다다익선(多多益善) 식 외환보유고 쌓기 정책은 외평기금과 한국은행 누적적자, 과도한 국가채무의 급증 등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KIC의 문제점 2 : 구조적 문제점은 도외시, 장밋빛 전망만 존재

- 수수료 이중 부담의 문제
 - 한국은행이나 재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는 구조
 - 외부자산운용사가 위탁수수료를 할인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음
 - KIC도 위탁수수료가 주 수입원임
 - ⇒ 따라서 수수료 이중 부담은 한국은행과 재경부(외평기금)의 부담으로 귀착
- 국제적 자산운용사들의 노하우 전수와 국내유치 문제
 - KIEP 보고서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KIC의 역할로서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전문인력 양성,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 3가지를 제안
 - 특히 외국계 자산운용사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시
 - ⇒ 국제적 자산운용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국내유치를 해야 함
 - ※ “금융허브 기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5.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마련 (2006.7.20, KIC 운영위원회)
 - KIC 투자팀이 제안요청서를 외부자산운용사에게 송부할 때 심사조건 중 하나로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라는 항목이 있음
 - 표현의 모호성과 측정불가능성으로 인해 실효성 의문시됨
 - 특히 실제 KIC가 최근 선정한 2곳의 외부자산운용사와의 계약사항에도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 KIC 답변 : “운용계약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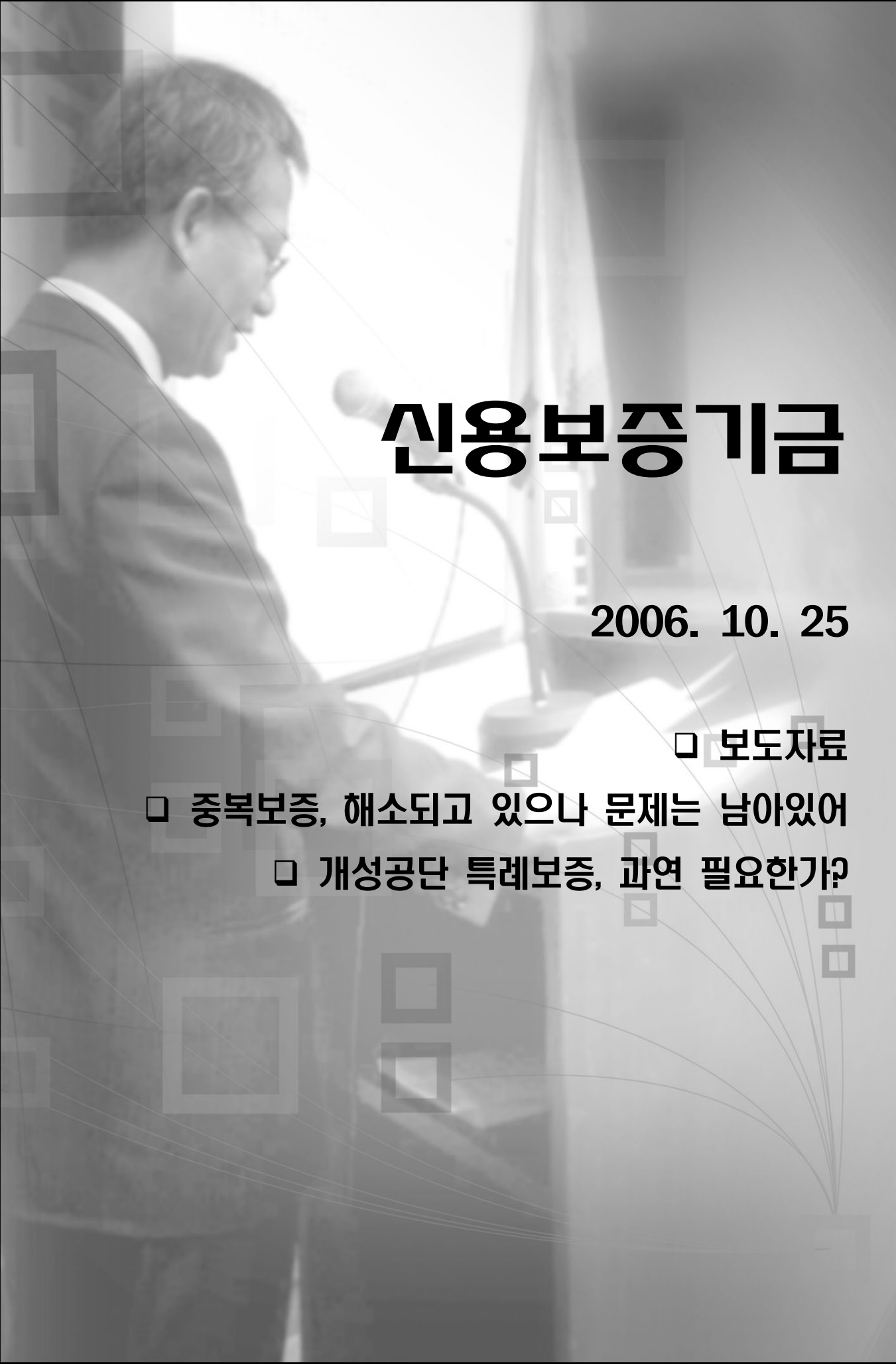
(첨부자료)

○ KIC의 문제점 3 : 벌써부터 방만한 경영, 무책임 경영

- 사장 선임의 부적절함
 - 이강원 전임 사장은 1년14일 재직, 퇴직급여 포함 총 352백만원 지급
(월 급여 25백만원 × 13개월 + 퇴직급여 27백만원)
 - 전임 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 67백만원
- 불필요하게 크고 비싼 사무실
 -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15, 16층에 위치
 - 임대차기간 5년 (3년 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조건)
 - 월 임대료 1억1,652만원 (단, 매년 7월 임대료 면제)
⇒ 2006.10.25일 현재 총 16억3천만원 지급
(15개월 동안 14회 지급, 1회 면제)
 - 전용면적 총 604.66평 (15층 73.67평, 16층 530.99평)
⇒ 1인당 14.1평에 해당(총 임직원 43명)

□ 질의사항

1. 신임 사장님께서서는 한국투자공사가 국가 경제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기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기본적으로 KIC는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탁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실 계획입니까?
3. 해외 선진 금융기법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우리가 터득하고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KIC 설립의 매우 중요한 명분인데, 이러한 점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4. 실제로 10월 16일 바클레이즈와 SSgA 양사와 위탁업무에 대해 계약한 내용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즉, 명분은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지만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외부자산운용사 선정하는데 KIC 설립 명분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도 불필요하게 크고 비쌉니다.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관련한 중심인물이 사장에 선임되는 바람에 1년 동안이나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KIC는 출발할 때부터 방만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KIC가 출범하여 비록 1년여 간 업무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비효율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KIC 존재가치에 대한 비용과 효율을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

2006. 10. 25

- 보도자료
- 중복보증, 해소되고 있으나 문제는 남아있어
 - 개성공단 특례보증, 과연 필요한가?



보도자료

개성공단 특례보증, 핵실험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미뤄야

북핵 리스크 보증 반영 불가, 구상권 행사도 어려워
지나친 특례보증, 국내 기업 역차별과 과잉투자 유발
특례보증 실시하더라도 별도 계리, 별도 재원으로 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보증은 미사일 발사, 북한 핵실험,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핵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미뤄야 하며, 지나친 특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남북관계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투자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특례보증을 실시하더라도 신보의 다른 보증사업과는 별도 계리, 별도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투자 사업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미 기존에 투자한 업체들조차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핵사태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북한 핵실험은 개성공단의 사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 기업 및 자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재경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보증지침을 내놓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북한 핵실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특례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특례보증지침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증한도는 100억으로 일반기업의 한도인 30억원보다 훨씬 크다. 또한 보증기간도 국내기업은 1년인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5~7년이다. 이는 북핵 리스크가 있음을 감안하면 입주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북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경부는 6. 30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초 신용보증기금이 제안했던 일반보증과 별도 계리, 별도 자원 마련의 원칙을 뒤집고 일반 보증과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재원으로 시행하며, 별도 자원 마련 계획도 세우지 않을 뜻을 비쳤다. 일반 보증 재원에서 특례보증이 나가게 되면 북한 리스크를 감안한 별도 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며, 국내 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돌아가게 되어 일반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구상권 행사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게 되므로 구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생산 기능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신보는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 현 시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검토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며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북핵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의제는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 금융기관이 나서서 개성공단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을하기를 기대한다.

중복보증, 해소되고 있으나 문제는 남아있어

□ 신보-기보의 중복보증은 꾸준히 감소

○ 2005.12.28 신기보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복해소 및 특화방안 주요내용

(1원칙) 벤처기업·Inno-Biz 기업은 기보가 전담, 기보의 일반보증은 전액 신보로 이전,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 우선 적용

(2원칙) 주거래 보증기관제도 도입

■ 한쪽 기관의 보증 금액이 80% 이상인 경우 많은 기관으로 최초 기한도래시 일괄 이전)

(3원칙) 이수관 방법, 대상보증 관리 및 정산방법

* 사고발생기업은 이·수관 제외 / 대위변제는 이관기관 80%, 수관기관 20% 부담 / 정산 기간은 2년간, 매년말 일괄 정산

이수관 현황

(단위: 개, 억원)

이관(신보→기보)		수관(기보→신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51	8,027	4,739	6,184

* 재보증 제외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총보증	89,167	165,225	100,371	167,461	80,687	135,084	67,642	115,013	58,594	113,341
중복 보증	30,680	76,029	31,560	76,332	28,047	72,042	24,357	60,398	18,730	45,253
(구성비)	(34.4)	(46.0)	(31.4)	(45.6)	(34.8)	(53.3)	(36.0)	(52.5)	(32.0)	(39.9)

- 중복보증 현황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당초 기대만큼 빠르지는 못함

☞ 중복보증의 개선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언제쯤 중복보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가?

□ 문제점

○ 중복보증은 개선되겠지만, 보증경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벤처, 이노비즈기업은 기보로 이관한다고 했으나, 유사한 기술 기업들에 대해 계속 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
- 신보는 전략적 지원분야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선정, 2010년까지 총 보증공급액의 55% 수준으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1. 기술진보기업: 조특법 시행령 상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
2. 혁신제품 생산기업: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IT, BT, NT, CT, ET, ST 등) 및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이동통신, 바이오 신약, 차세대 전지 등)
3.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유망서비스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 결국, 벤처인증 등이 있는 기술기업은 기보만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 관련한 기업은 신보, 기보 모두 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 중복보증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소되겠지만, 동일한 기업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바뀌지 못함.

- ☞ 중복보증은 앞으로 더 이상 생기지 않겠기에 차츰 개선되겠지만, 보증 대상의 중복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차세대 성장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기업 등은 결국 기술 중심의 기업인데, 신보도 지원하고, 기보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결국 이 분야를 놓고 기보와 경쟁하겠다는 논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성공단 특례보증, 과연 필요한가?

□ 개성공단 특례보증 배경과 현황

○ 금년 하반기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본격화, 300여개 기업 입주 전망

-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은 총 1조2천억원 내외 전망(북 핵실험 발생 이전 예측)
-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직접 대출 및 산은, 기은에서 제한적으로 대출해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구 분	업체수	지원(약정)금액
남북협력기금 대출	16	537억원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1	20억원
産銀·企銀 대출	3	166억원
합 계	18	723억원

- * 사업 확대로 남북협력기금 대출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금융지원이 없는 상황
→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요청하게 됨

○ 6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최고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
- 보증방식에 대해서
 - 신용보증기금: 별도출연 및 별도계리방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기획예산처가 반대 입장 표명,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가, 6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1~2년간 기존 일반보증과 통합 계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별도 예산에 대한 검토 없었음

○ 세부 운용방안(미정, 재경부 특례지침 안나옴)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母기업
- 보증비율 : 부분보증(시설자금 90%, 운전자금 신용등급 따라 차등비율 적용)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한도)
- 보증료 :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年 0.5 ~ 3% 수준
- 보증기간 :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 특례보증 지원절차 >



□ 문제점

☞ 민간 금융지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굳이 이러한 사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보증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 보증한도 100억원은 국내 일반기업 30억원 한도(일반보증)보다 큼
- 보증기간의 경우도 국내기업은 1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5년~7년

☞ 특례보증은 주로 재해와 관련한 보증이 많았고, 이 외에 지방이전, 수출 기업 등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하는 경우 실시하였음. 개성공단이 과연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 특례보증의 근거규정

- 신용보증규정 제91조(특례조치) 재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거나 긴급한 정부시책의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신보의 퍼주기식 특례 보증 때문에 사업성, 기술력이 낮은 기업까지 입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

☞ 당초 신보는 별도 계리로 특례 보증을 운영하고,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 계리로 운영하고, 일반보증과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통합 계리로 일반보증과 함께 운영할 경우,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운용배수를 운영해야 하는데, 복핵 등 Risk를 반영해 가면서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 일반 보증에서 이러한 보증이 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닌지?

☞ 보증사고 발생시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보증사고 발생시 구상권 회수의 어려움

: 국내 모(母)기업에 대한 보증이지만 사실상의 생산 기능은 개성공단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보증사고 발생시 실질적 구상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음

일반보증 및 개성공단 특례보증 비교

구분	일반보증	개성공단 특례보증(안)
보증대상	· 국내기업의 국내활동 (통상 CCC등급 이상)	· 국내 모기업(B등급 이상)의 개성 공단 사업
보증비율	· (시설자금) 90%, · (운전자금)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비율(50~90%)	· 좌동
보증한도	· 투자자금 이내 - (시설자금) 100억원 - (운전자금) 30억원	· 투자자금의 70% 이내 - (시설자금) 100억원 - (운전자금) 70억원 * 국내모기업 보증금 포함 한도
보증료	· 연 0.5~3% 수준	· 좌동
보증기간	· 대부분 단기(1년)로 운용하나, 만기 연장가능(평균 4.1년)	· 시설 7년, 운전 5년 이내 (거치후 분할상환)
담보후취	· 금융기관이 공장·설비 등을 후취 담보로 취득 ·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의 60~70% 해지	· 금융기관이 개성현지자산을 후취 담보로 취득 ·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의 20~40% 만 해지
대출금리	· 연 6~8% 수준	· 좌동
기타	-	· 손실보조 가입기업 우선지원 (0.3%p까지 보증료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2006. 10. 25

□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생존이 목적인가?



보도자료

기술보증기금 독자생존, 필요한가?

거래기업수 감소, 신규보증 비율 감소

총보증 유지 위해 신규보증업체 발굴운동까지 벌여

신규업체 보증승인을 급증: 지난해 비해 무려 10% 상승

보증규모 확대보다는 적정 보증규모 유지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5일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보의 보증 현황을 분석, 총보증 규모 유지를 위한 무리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굳이 독자생존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이사장에 따져 물었다.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거래기업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생존의 근거라 할 신규보증업체의 수는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신규보증업체가 1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은 기보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누적 거래기업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
기업수	60,211	58,313	58,389	54,691	49,927	41,429

주) P-CBO 보증 및 재보증 제외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평균 거래기업 및 신규보증업체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신규업체 지원현황				기금 총계	
	업체수	비중	공급금액	비중	업체수	공급금액
2001년	12,344	29.9	22,569	16.7	41,229	134,771
2002년	10,164	25.6	16,669	12.8	39,708	130,033
2003년	11,739	28.8	19,125	14.7	40,711	129,814
2004년	7,493	19.7	12,338	10.6	38,101	116,289
2005년	4,981	11.4	8,638	8.4	43,789	102,941

주)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에 있을 기금준치평가에서 다시 통합 권고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연초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신규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신규업체 발굴 운동

- 실시일: 2006. 7. 3 ~ 9. 29
- 1,518개 업체 신규 발굴(3개월간 2006년 상반기 2,319개의 66.6% 수준 달성)

○ 그 결과로 총 보증공급 대비 신규업체 공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규업체공급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05년	4,981 (11.4%)	8,638 (16.7%)	43,789	102,941	49,927	113,041
2006년 3월	934 (9.8%)	2,242 (13.1%)	9,491	17,075	47,498	111,553
2006년 6월	2,319 (11.2%)	6,252 (11.1%)	20,698	56,575	43,241	111,761
2006년 9월	3,797 (14.0%)	8,836 (11.7%)	27,102	75,261	40,860	108,817

주) 재보증 및 P-CBO등 보증제외

한편 신청기업들의 보증승인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신규보증 승인률이 매우 높아졌다. 신규보증 대상 기업 발굴운동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 무조건 보증 승인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보증승인률 꾸준히 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75.6	65.4	77.7	70.8	83.4	80.2	84.4	82.2	<u>88.3</u>	<u>86.0</u>

○ 특히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승인률은 2006년 들어 급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66.3	57.7	72.0	65.4	75.6	73.6	73.8	73.1	<u>84.5</u>	<u>83.1</u>

○ 기보는 노골적으로 올해 보증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 2006. 7 기술보증기금 경영혁신토론회 자료 중:

“보증수요 충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계획 11조 5천억원 수준의 보증 잔액을 유지할 필요”

기술보증기금은 이렇게 총 보증규모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인위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와 계속 불거졌던 신보, 기보의 유동성 위기의 원인은 P-CBO 제도의 무리한 운용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 기관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에 있음을 기보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술보증기금, 생존이 목적인가?

□ 보증기업 수의 감소

○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업체 수 자체가 계속 감소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누적 거래기업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
기업수	60,211	58,313	58,389	54,691	49,927	41,429

주) P-CBO 보증 및 재보증 제외

☞ 전반적인 기보의 거래기업수의 감소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 특히 신규보증업체 급감

○ 2001년 이후 신규보증업체 숫적으로 급감, 비중도 점점 축소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평균 거래기업 및 신규보증업체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신규업체 지원현황				기금 총계	
	업체수	비중	공급금액	비중	업체수	공급금액
2001년	12,344	29.9	22,569	16.7	41,229	134,771
2002년	10,164	25.6	16,669	12.8	39,708	130,033
2003년	11,739	28.8	19,125	14.7	40,711	129,814
2004년	7,493	19.7	12,338	10.6	38,101	116,289
2005년	4,981	11.4	8,638	8.4	43,789	102,941
2006. 6월	2,319	11.2	6,252	11.1	20,698	56,575

주)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 신규보증 축소와 원인
 - 총보증 규모의 축소(2003년 16.7조 → 2005년 11.5조)
 -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리스크 피하고 안전한 업체에 재보증
 - 중복보증 논란으로 인해 일반 중소기업 보증 회피
 - 기술보증 대상기업 발굴 한계
- 기보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신규보증 발굴에 힘을 쏟음
 - 전략영업부 신설, RM지점장제도 도입
 - 경영실적 평가에 신규공급 배점 높임

☞ 한 해에 이루어지는 보증의 90% 정도는 기존 업체들에 대한 보증 연장, 증액 등이며 단지 10% 정도만 신규업체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 최근 몇 년간 신규보증의 꾸준한 축소는 기본적으로 보증 대상 기업군 자체가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 거래기업 감소, 신규보증 급감에도 불구하고, 총 보증규모 유지를 위해 노력

※ 총 보증규모가 계속 줄어들 경우, 기관의 존폐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신규업체 발굴 증강운동

- 실시일: 2006. 7. 3 ~ 9. 29
- 1,518개 업체 신규 발굴(3개월간 2006년 상반기 2,319개의 66.6% 수준 달성)

☞ 신규업체를 발굴하는 실적에 얽매어 무리한 보증발급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 보증승인률 급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75.6	65.4	77.7	70.8	83.4	80.2	84.4	82.2	<u>88.3</u>	<u>86.0</u>

○ 특히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승인률은 2006년 들어 급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66.3	57.7	72.0	65.4	75.6	73.6	73.8	73.1	<u>84.5</u>	<u>83.1</u>

- 신규 보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으로 인해 승인률이 낮은 것이 당연하나, 기보의 경우 70%에 머물던 승인률이 2006년 들어 80%대로 급상승함

☞ 신규 보증 승인률이 이렇듯 크게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지? 보증총량 관리 및 신규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가 아닌지?

○ 보증이 용이한 시설자금의 비중 증가

기술보증기금 자금용도별 현황

(단위: 원,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 타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2년	14,463	10.6	121,068	89.0	443	0.3	135,974	100.0
2003년	13,291	9.6	124,453	90.2	198	0.1	137,942	100.0
2004년	11,509	8.8	118,899	91.1	141	0.1	130,549	100.0
2005년	9,658	8.5	103,253	91.3	130	0.1	113,041	100.0
2006.6월	<u>11,163</u>	<u>10.0</u>	100,500	89.9	98	0.1	111,761	100.0

- 용도가 분명하여 대출이 용이하고 보증규모가 큰 시설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

→ 쉬운 대출, 대출규모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증거

☞ 시설자금의 구성비가 2006년 들어 큰 폭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용이한 대출이며, 규모가 크다는 점이 이유인가?

○ 비혁신 기업 보증 공급 확대

· 2006. 7 경영혁신토론회 자료 중:

-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비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비혁신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로 잠재적인 혁신보증 수요 창출
 - * 비혁신기업 보증잔액(억원): (05년말) 46,443 (06년말) 33,652

☞ 비혁신기업 보증잔액이 줄고 있는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큰 방향에 있어 당연한 결과 아닌가?

☞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혁신 기업을 찾아 보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

☞ 과연 비혁신 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잠재적 혁신보증 수요가 있겠는가?

○ 기보증 업체 신규 누적보증확대

· 기보증업체 신규지원비율

2005년 6월: 45.3% → 2006년 6월 55.0% (9.7% 증가)

→ 역시 보증규모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됨

☞ 기존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 총 보증규모 유지, 꼭 필요한가?

○ 보증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이유

- 계속 불거졌던 신·기보 통합 논란, 그리고 2007년 통합 문제 재검토 결정 의식
- 보증규모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통폐합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을 의식한 행보
- ※ 2007년 초 있을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서 좋은 결과 나와야 할 필요

참고: 신·기보 통합 관련 주요 결정사항

○ 2005. 5. 20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 신보와 기술신보,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2007년까지 추진
- 이후 혁신성과 미흡하면 두 기금의 통합 추진기로 함

○ 2005. 6. 23.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발표

- 신·기보 역할 특화 및 연계 강화를 과제로 내세움
-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을 특화하며 일반기업 보증은 축소하고
- 신보는 일반혁신, 수출·영세소기업 지원 특화 및 창업기업·시설자금 중점
- 신보 보증 규모 연도별로 1조씩 축소, 2010년 25조

- 2006. 7 기술보증기금 경영혁신토론회 자료 중:
“보증수요 충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계획 11조 5천억원 수준의 보증 잔액을 유지할 필요”

○ 무리한 보증규모 유지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 가져올 수 있어

- 2000년대 들어와 계속 불거졌던 신보, 기보의 유동성 위기는 P-CBO와 같은 제도의 무리한 도입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 기관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에 있음: 보증규모 확대 및 유지 위한 인위적 정책 곤란

기보 연도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1998~2006)

(단위: 억원, 배)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월
보증잔액 (A)	113,402	113,055	124,977	161,605	165,225	<u>167,461</u>	135,084	115,013	113,341
기본재산 (B)	11,895	12,427	14,257	13,933	15,819	10,619	<u>7,773</u>	7,981	12,525
운용배수 (A/B)	9.5	9.1	8.8	11.6	10.4	15.8	<u>17.4</u>	14.4	9.1

* 총보증 기준(재보증 및 P-CBO등보증 포함)

· 시장상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보증규모가 줄어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정부는 매년 신보의 보증규모 1조씩 감축 노력: IMF 권고에 못미쳐

IMF 연례협의단의 2004년 한국경제 보고서(2005. 2)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요약)

- 탄력적인 환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의 수립·이행
- 개인 파산제도의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
- 공적 신용보증의 점진적 축소와 함께 민간 금융재원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
-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 노동자의 경직된 직업보장의 완화 및 노동시장 현대화를 통한 투자 촉진
- 신용보증관련 구체적인 Action Plan
 - 부분보증비율 85%에서 국제적 수준인 50%까지 줄일 것
 - 추후 5년간 매년 GDP 대비 약 1% 정도씩 단계적으로 줄일 것
 - 벤처투자 법적규제 완화, 자산유동화에 있어 자산 범위 확대
 -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규모 축소 등

- ☞ 시장 상황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총보증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총보증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보와 신보의 통폐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가?
- ☞ 총보증규모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경우, 자칫 부실보증 등으로 이어져 유동성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입장은?
- ☞ 총보증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봐서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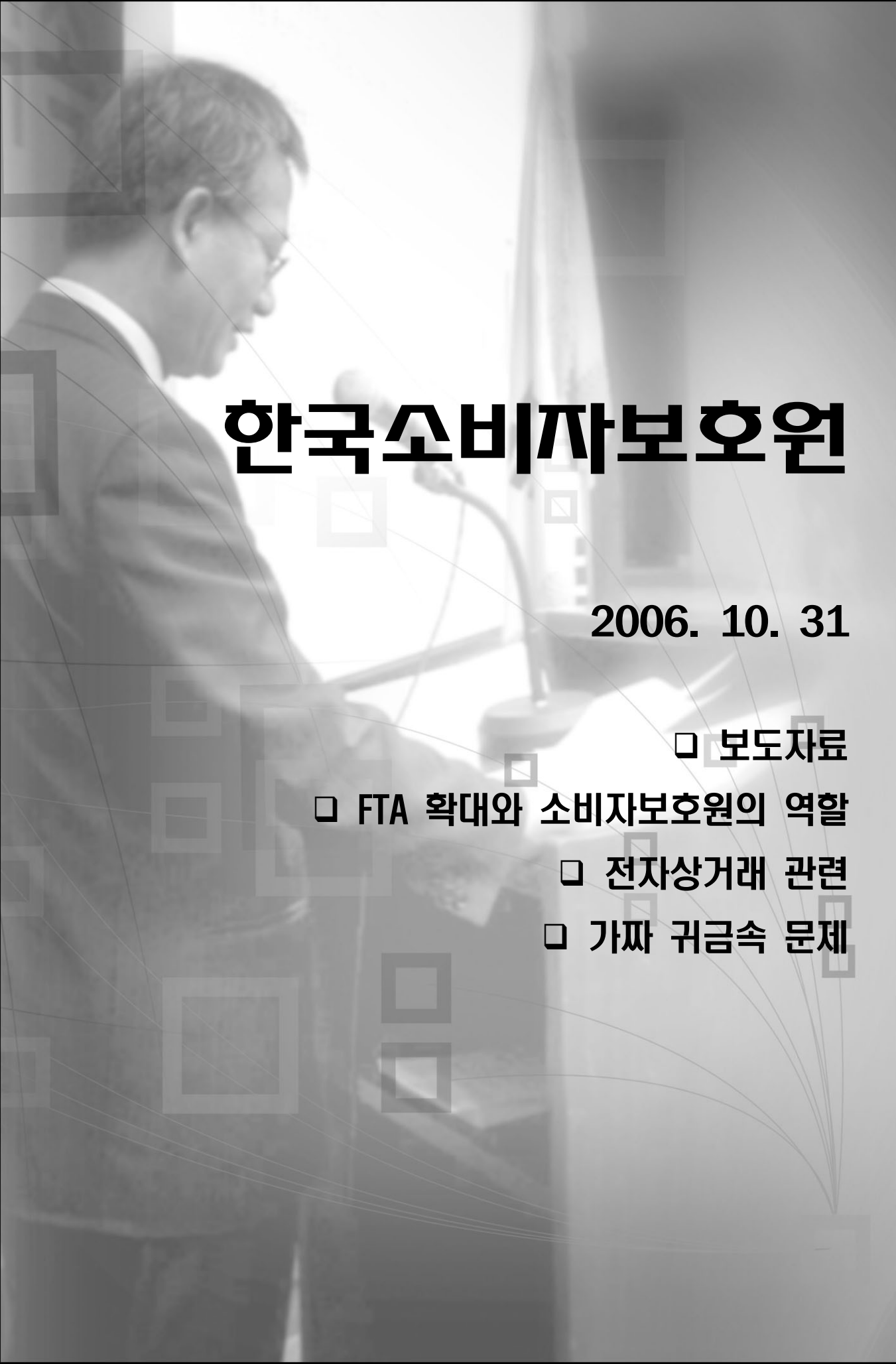
○ 보증졸업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음

- 현재 기보의 입장, 그리고 정책은 매우 소극적
- * ‘보증졸업제 도입 여부 및 시행현황’에 대한 기보의 답변:
 “전면적 보증졸업제를 도입하여 일정시점부터 일시에 보증지원을 중단할 경우 보증기업의 자금난 가중으로 도산유발 가능성이 높아 보증졸업제는 탄력적으로 운용 필요”
- 장기간 보증이용기업에 대해 단계적인 Penalty 적용, 점진적 보증감축 추진중

-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를 연차적으로 확대(06.1월 시행)
 - 이용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최대 0.6%p까지 가산(2011년)
 - 06년부터는 신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초과시 매년 0.1%p 가산보증료 부과(0.6%p까지)
 - 보증금액 3억원이상 기업만 적용, 시설자금 제외
- 10년 초과 이용기업은 부분보증비율 인하(06.1월 시행)
 - 기보증기업은 보증기한 도래시 부분보증비율 5%p 인하
 - 기업이 해당 부분보증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0.2%p의 가산보증료 부과

-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보증졸업제 도입 어려우며, 앞에서 보았듯 한 해에 이루어지는 보증의 90% 정도가 기존 업체보증 연장, 증액이며 단지 10% 정도만 신규업체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기간 보증기업에 대한 점진적 보증감축이 어느 정도 장기 보증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데이터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0. 31

- 보도자료
- FTA 확대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 전자상거래 관련
- 가짜 귀금속 문제



보도자료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증가추세
FTA가 확대될수록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속히 국제거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고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거래에서 우리 소비자를 보호 할 방안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에만 무려 74건을 기록, 전년도 연간 상담건수 87건에 근접하였다.

연도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상반기
건수	90	107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 상담자를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59.8%(52건)로 가장 많았고,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거래 29.9%(26건), 기타 통신수단(전화/팩스/이메일 등) 이용이 10.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 유형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구입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는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4.5%(30건), 물품 및 서비스 품질의 불량이나 결함 관련 불만이 17.2%(15건)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6년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 유형도 배송 관련 불만이 44.6%(33건), 품질 관련 불만이 16.2%(12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주문한 물품의 미배송	49	28	21
당초 주문 물품과 다른 물품 배송	3	2	6
배송비 관련 분쟁			6
결제대금 과다 청구	3	2	3
착오 및 조작 미숙에 의한 결제	11	2	1
계약 취소 및 환불 불가	20	12	5
물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또는 결함	10	15	12
수리 및 품질보증 미이행	3	3	1
사업자 연락불가	2	16	5
계약조건 미이행	5		
기타	7	7	14
합계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처럼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외국의 리콜 상황을 국내에 전달하고, ‘ecomsumer.gov(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수집·공유 사이트)’에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불만 접수를 도와주는데 한정되어 있어 국제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FTA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유무역 확대와 국제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해 다른 나라 관계기관의 실질적 협조를 얻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확대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 현황 및 문제점

○ FTA의 확대에 따른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FTA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5년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
 -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이미 74건이 접수

연도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상반기
건수	90	107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피해 거래 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59.8%(52건),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거래 29.9%(26건), 기타 통신수단(전화/팩스/이메일 등) 이용이 10.3%(9건)
-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구입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는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4.5%(30건)로 최다
- 최근에는 ‘물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또는 결함’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
: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하자와 연관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큼

유형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주문한 물품의 미배송	49	28	21
당초 주문 물품과 다른 물품 배송	3	2	6
배송비 관련 분쟁			6
결제대금 과다 청구	3	2	3
착오 및 조작 미숙에 의한 결제	11	2	1
계약 취소 및 환불 불가	20	12	5
물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또는 결함	10	15	12
수리 및 품질보증 미이행	3	3	1
사업자 연락불가	2	16	5
계약조건 미이행	5		
기타	7	7	14
합계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 미흡

-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국제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분쟁 해결은 해당국가에서 해주어야 하는 사항
-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외국에서의 리콜사항을 국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과 econsumer.gov(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수집·공유 사이트, 19개국의 소비자보호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 프로젝트)에 국제소비자 피해에 대해 불만 접수를 도와주는 역할에 한정

※ econsumer.gov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다발적 사기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 국제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분쟁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 국제소비자 거래 피해 분쟁 해결을 위한 대비 필요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국제소비자 거래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06 ICPEN 제주회의 등에서 국제소비자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

※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의 약자. 한국이 ICPEN 의장국

- 하지만, 국제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비는 미비
 - 참가국들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국가 (스위스, 뉴질랜드)들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문제 있음

□ 질의사항

- 앞으로 타국과의 FTA가 확대될수록 국제소비자 거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국제회의를 통해서 국제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소비자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 국제소비자 거래에 대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다른 나라와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각국의 소비자보호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국제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

-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고 각종 쇼핑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증가
- 특히 의류·신변제품과 문화용품, 정보통신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

품목별/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의류·신변제품	121	460	1,625	3,312	4,300	8,344	5,735
문화용품	183	501	1,047	2,677	2,088	2,562	1,873
정보통신기기	378	1,017	1,505	3,366	2,151	2,517	1,921
정보통신서비스	308	952	2,050	3,008	2,745	2,500	2,592
가사용품	66	226	478	786	724	1,544	787
보건·위생용품	60	311	602	1,073	1,170	1,235	758
스포츠용품	46	181	435	971	724	862	551
식생활·주방용품	79	180	343	1,042	468	831	504
도서·음반	148	389	554	689	619	649	266
문화오락서비스	72	244	472	512	431	479	31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42	827	1,559	2,729	2,253	3,618	2,384
합 계	1,803	5,288	10,670	20,165	17,673	25,141	17,687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도 증가

- 의류 및 신변제품의 경우 최근에 급증하는 모습

품목별/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의류 및 신변제품	9	26	106	218	430	923	525
가사용품	8	18	32	87	63	710	54
정보통신서비스	42	189	358	283	293	337	348
정보통신기기	40	97	141	399	219	291	193
문화용품	13	46	60	361	176	262	167
보건·위생용품	5	31	44	83	106	115	50
스포츠용품	6	21	48	88	65	98	49
문화오락서비스	11	25	29	60	37	78	43
도서·음반	12	66	49	107	57	73	14
금융·보험	5	7	32	60	33	49	12
기타	22	102	138	335	187	312	253
합 계	173	628	1,037	2,081	1,666	3,248	1,708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자상거래가 확대에 따른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피해 상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사기·기만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속보, 소비자경보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후적 조치에 불과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분쟁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운송 기일 및 반품에 대한 표준 약관 필요
 -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 필요

cf) 에스크로 제도 :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

도. 2005년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의해 도입
(2006년 4월 1일 시행)

※ 2006년 9월 7일 현재 에스프로(결제대금예치)제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을 도입한 업체는 총 24,973개소로 파악. 2005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된 통신판매업체 수는 106,000개소로 파악(에스프로 제도 도입률
23.6%로 추정)

에스프로 제도 도입 현황(2006. 9. 7 현재)

(단위 : 업체수)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합계
15,624	9,349	24,973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질의 사항

- IT 발달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계속될 것임. 관련 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 특히 의류나 신변제품들을 인터넷을 통한 구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도 증가하고 있음. 사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분쟁도 줄일 수 있도록 운송 및 반품 등에 대한 표준 약관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프로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금전적 사기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귀금속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유리반지 하나에 53만원?

- 백화점 및 귀금속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유색보석 및 진주의 상당수가 가짜. 값싼 인조석(Artificial Stones)이나 모조석(Imitations)이 값비싼 천연석(Natural Stones)으로 둔갑하여 팔림

※ MBC PD 수첩(2006. 10. 24 방송분)

- 백화점 매장 A에서 ‘천연 황수정(Citrine)’ 이라고 하여 90만 원(할인가:63만 원)에 구입한 물건은 감정결과 컬러 큐빅(Cubic Zirconia)이었으며, 백화점 매장 B에서 ‘합성 사파이어(Synthetic Sapphire)’ 라고 하여 53만원(할인가:45만원)에 구입한 물건은 인조유리
- 백화점 매장 C에서 ‘천연물질의 가루를 섞어 에메랄드를 본떠 만들었다’ 며 71만 원(할인가:58만원)에 판매한 ‘합성 헬렌스톤’. 그러나 실제 ‘헬렌스톤’이라는 보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조석(Artificial Stones) 야그(YAG)로 판명
- 품질과 색상이 뛰어나 자수정(Amethyst)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자수정. 백화점 매장 D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매장에서 ‘한국산’ 이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팔리고 있는 자수정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보석 전문가들은 한국산 자수정이 거의 산출이 안 되고 있음. 한국산 자수정은 과거에 연양에서 활발히 생산이 되었지만 지금은 폐광되어 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울진에서도 자체 매장 5곳에만 한정하여 유통 중
- 귀금속 매장 E에서 42만원에 구입한 진주 반지의 경우, 구입 당시 업체의 주인은 ‘진짜 진주’ 인 것을 강조했지만 불과 세 달 후에 진주는 껍질이 모두 벗겨짐. 이에 대해 주인은 ‘핵진주’ 라서 그렇다며 관리소홀을 이유로 소비자 쪽으로 모든 책임을 돌림. 이 매장에서 판매한 핵진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진주(Imitation Pearl)’ 였음

- 현재 귀금속의 가장 큰 판매 대상은 신혼부부 예물. 결혼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귀금속이, 믿을 수 있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귀금속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

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
계약해제·해지	247	326	425	411	403	545	333
품질	237	274	312	358	299	281	129
부당행위	53	102	81	93	78	92	93
계량	11	5	5	2	1	1	1
계약이행	49	58	53	70	33	21	33
가격·요금	49	71	89	45	50	47	23
A/S	29	63	55	66	63	44	56
안전관련	1	1	1	1		3	2
광고	2	2	4	2	1	3	
거래관행	21	27	26	22	18	14	14
표시	3	1	2	2		2	1
기타	101	155	198	245	153	52	26
합계	803	1,085	1,251	1,317	1,099	1,105	711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 ※ 계약해제(소급효과 있음) :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계약해지(소급효과 없음) : 해지시점 이후로만 계약이 소멸

귀금속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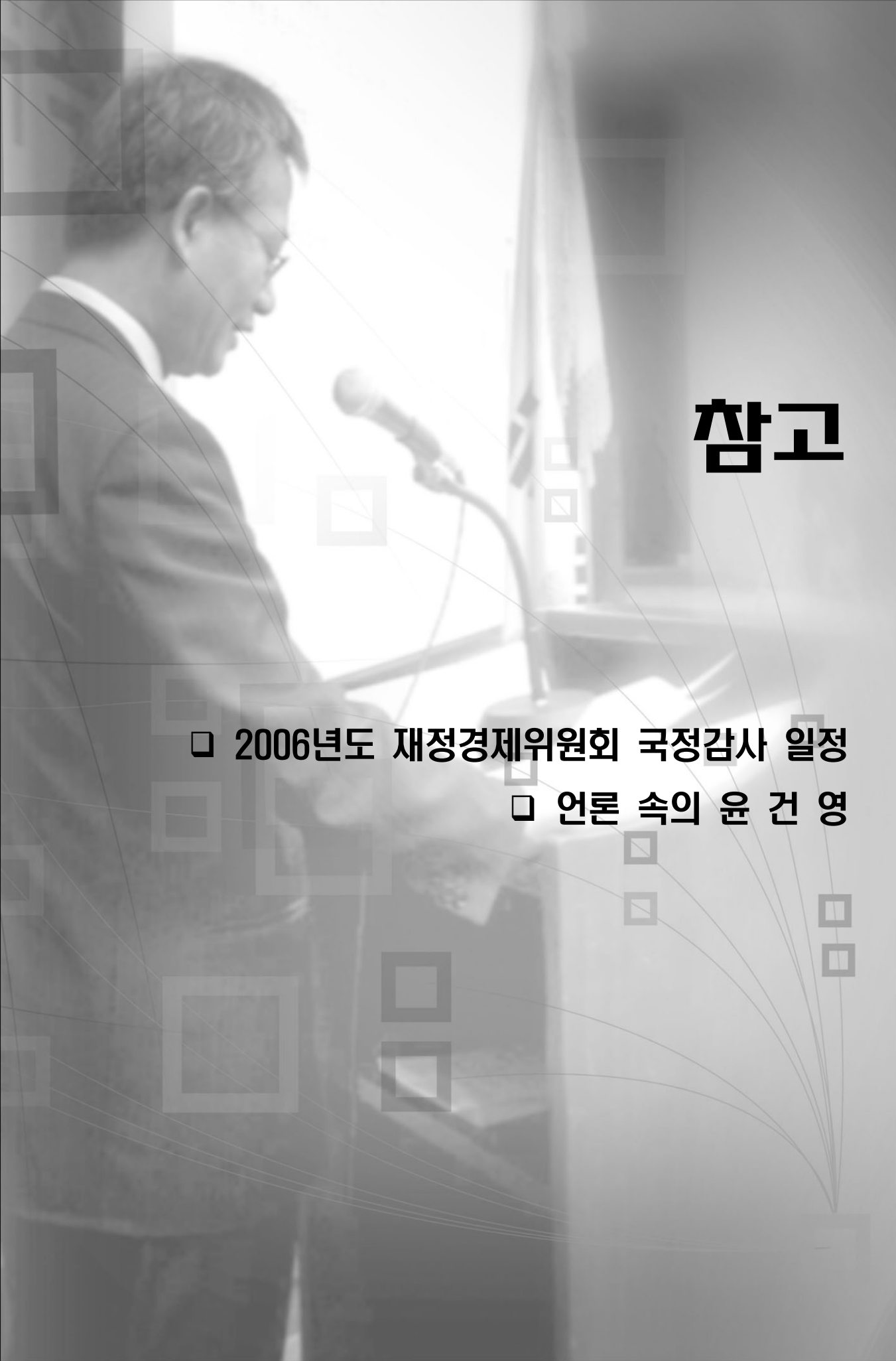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
합계	39	23	34	40	29	33	34

○ 귀금속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없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금까지 귀금속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사한 적 없음
 - 피해의 접수추이 및 청구이유,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조사 사업 과제로서 타당성 여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 질의 사항

- 시중에서 가짜 귀금속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짜 귀금속의 유통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귀금속의 가장 큰 소비집단이 신혼부부이고,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다니지 않는 관계로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큼. 앞으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된 가짜 귀금속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참고

□ 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언론 속의 윤건영



〈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날 짜	대 상 기 관	장 소
10.13(금) 10:00	재정경제부	국 회
10.16(월) 10:00	국세청, 지방국세청(2)	국세청
10.17(화) 10:00	재정경제부	국 회
10.18(수) 10:00 14:00	통계청 관세청, 지방세관(6)	관세청
10.19(목) 10:00 14:00	한국조폐공사 조달청, 지방청(4)	조달청
10.20(금) 10:00 11:00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현황 보고) 지방국세청(4)	광주지방국세청
10.23(월) 1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10.24(화) 10:00	예금보험공사 (공자위 포함)	국 회
10.25(수) 10:00 14:00 16:00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국 회
10.26(목) 10:00 14:00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27(금) 10:00 14:00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 회
10.30(월) 10:00 14:00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경제부	국 회
10.31(화) 10:00 14:00	한국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국 회
11.1(수) 10:00	재정경제부	국 회

〈언론 속의 윤 건 영〉

세계일보 [2006-09-11]

남북협력기금 집행 통일부 내키는대로?

지난 16년간 4조1200억 내역 들여다보니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 동안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4조 1253억원 중 94.2%인 3조8845억원이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10일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의 94.2%인 3조8845억원이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조항 중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기타' 조항(법 8조5항)에 근거해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올 6월까지 통일부가 이 조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기금액은 전체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46.6%인 1조 9237억원에 달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기타 조항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규정돼 남북주민 왕래 지원(8조1항),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8조2항), 교역경제협력사업 대출(8조3항), 교역경제협손실 보조(8조4항) 등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비해 범위가 포괄적 이어서 기금이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타 조항에 따른 사업 지원 여부는 '남북한 당국 간 합의 또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기타 조항에 따른 사업은 인도적 지원(1조602억원), 민족공동체 회복 대출(7933억원), 교류협력기반 조성(5656억원), 이산가족교류 지원(324억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다. 이 중 무상지원

은 1조6582억원, 유상지원은 2조 2264억원이었다. 현 정부의 무상 지원 규모는 9249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5209억원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났다.

이에 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도에 의한

남북협력기금법
8조 기타조항=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
동체 회복에 이바지하
는 사업의 지원

자의적 판단... 94% '기타조항'으로 지출
참여정부 들어서만 46% 1조9200억 달해
통일부 "모두 교류협력위 의결 거쳤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현황

기간: 1991~2006.6 (단위: 억원)

구분	1991~1997	1998~2002	2003~2006.6	누계(%)
남북주민 왕래 지원	0	243	110	353(0.85%)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10	7	155	172(0.42%)
교역경제협력사업대출	0	828	1,043	1,871(4.5%)
교역경제협손실 보조	12	0	0	12(0.03%)
인도적 지원	2,070	3,717	4,815	10,602(25.7%)
민족공동체 회복 대출	0	2,330	5,604	7,933(19.3%)
교류협력기반 조성	49	1,427	4,180	5,656(13.7%)
이산가족 교류 지원	5	65	254	324(0.8%)
경수로사업 대출	0	9,946	4,384	14,330(34.7%)
합계	2,124	17,485	19,237	38,845(94.2%)
총 계	2,146	18,563	20,545	41,253

(자료 =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실)

지원은 남북주민왕래 지원 353억원(0.85%),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172억원(0.42%), 교역경제협력사업 대출 1871억원(4.5%), 교역경제협손실 보조 12억원(0.03%) 등으로 미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항에 포함된 사업 지원의 경우 1억원 미만은 통일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1억원 이상의 사업만 교류협력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기타' 조항의 사업 지원은 모두 교류협력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2003년부터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어 다른 조항에 비해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기타 조항은 해석 여하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정부적인 사업은 선정되고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업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며 "관련 규정을 세분화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지난해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협력기금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이 기금의 자산 2조7070억원 가운데 자본은 8688억원, 부채는 1조8382억원으로 이에 따른 부채 비율은 211.6%였다.

오승재 기자
seungjaeo@segye.com

남북협력기금 부채비율 211%

대북 쌀·철도차관 등 8300억원은 회수 불투명
사용용도 '기타'가 94%... 자의적운용 논란도

■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이 재정운용 상태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금의 부채비율 증가와 대북 대출금 회수 불확실성, 기금집행의 엄격성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정부예산이란 점에서 시선이 따갑다.

◆기금 부채비율, 200% 넘어=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금 자산 2조7070억원 중 자본은 8688억원, 부채는 1조838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1.6%였다. 2004회계연도에는 부채비율이 193.5%였다. 18.1% 포인트가 상승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에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가 누적된 까닭이다. 공자금은 국채발행으로 조성되며, 상환되어야 한다. 국민 부담이 커질 공산이

적잖다. 통일부는 "관계부처가 대책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대북 쌀차관 등 회수 불확실"=삼일회계법인은 10일 공개된 2005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KEDO 대출금은 관련 차주(借主)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쌀 차관 집행액은 7223억원이다.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계약 조건은 연리 1%에 10년거치 20년 상환으로 2010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감사보고서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와 장비 차관 1072억여원도 비슷하게 진단했다. 통일부는 "식량 차관 상환은 북한이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경수로 사업추진을 위한 KEDO 대출금(차관계약)은 2003년 목표시한까지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경수로 비용

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기금의 자의적 운용?=1991~2006년동안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4조1253억원 중 94.2%인 3조8845억원이 기금용도 조항중 '기타' 항목에 의거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협력기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아당은 "기타 조항은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통일부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정부 들어 올 6월까지 기타조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액은 협력기금 지원액의 46.6%인 1조9237억원이다. 기타 조항에 따른 사업은 인도적 지원, 민족공동체 회복 대출, 교류협력기반 조성, 이산가족 교류 지원등의 명목 등이다.

통일부는 "기타조항 사업은 국회 보고후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자의적이란 말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태기자 strato1@

외평기금 손실 눈덩이 ‘뜨거운 감자’

작년말 누적적자 18조...환율방어 비싼 대가

정부 소극적 대처에 野선 “감사 하라”

외화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누적적자액이 지난해말 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실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평기금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외환당국자가 무리한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까지 손을 대 2조원가량 손실을 입는 등 한 해에만 10조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외평기금의 누적적자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년 만에 첫 국회 보고=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외평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비공개 보고와 질의가 이뤄졌다.

외평기금의 구체적인 운용실태가 국회에 보고된 것은 1967년 외평기금이 만들어진 뒤 4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각 나라의 정부는 외평기금을 어떤 상품에 얼마나 넣어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대외비로 한다. 외평기금의 운용실태가 공개되면 환투기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비공개에다 제한된 수준이긴 하지만 외평기금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국회에 보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외평기금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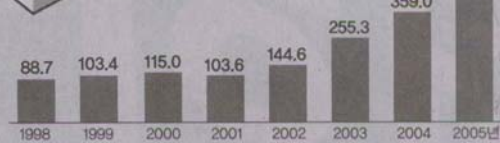
◇문제는 뭘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만 해도 2천5백48억원에 불과하던 외평기금 누적적자액은 지난해말 17조8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외평기금 누적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은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 환투기세력과 전쟁을 치르며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역외선물환 또는 차액결제선물환으로 불리는 NDF를 통해 달러를 매입하는 등 환율방어에 나섰다. NDF는 싱가포르 홍콩에 형성된 시장이란 의미에서 역외시장이며, 만기 시점에 계약한 환율과 실제 환율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써



외국환평형기금 규모 추이

(자료:기획예산처 '기금결산보고서')
(기금규모:억달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NDF 시장에 뛰어들어 파생상품까지 거래하며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04년 환투기 세력의 반격을 받으면서 환율이 폭락, 그 해 10조원의 외평기금 손실을 초래하는 등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정부는 그 뒤 NDF거래를 중단하긴 했지만 기존의 거래가 청산되지 않고 만기연장이 되면서 외평기금 손실액이 지난 한해 동안만 4조6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외평기금 손실,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나=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재경위에 청구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왜 그렇게 무리한 외환거래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외평기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외평기금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진규기자 kangjk@kyunghyang.com



외국환평형기금

달러 공급과잉으로 외환수급에 불안이 생길 때 정부가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마련한 기금. 외평기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면 환율하락(원화강세)을 막아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평기금은 국제(외평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세계일보 [2006-09-18 08:36]

韓銀 을 적자 3조 달할 듯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1조41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올 상반기 적자는 1조4139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올해 전체 적자 규모 1조8180억원의 7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2004년 1502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8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

은 추세라면 한은은 올해 3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한은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과 이자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2005년 말 현재 3조7748억원에 불과해 올해 한국은행이 3조원가량의 적자를 낼 경우 올해 말 한은의 적립금은 불과 7000억~8000억원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은행 적자가 7000억~8000억원보다 많을 경우 2007년 말에는 적립금이 고갈돼 부족한 차액만큼 국민이 낸 혈세로 메워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6-09-17 14:06]

“한은 올해 적자 3조원 육박할 듯”
3년연속 적자..내년 내부적립금 고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올해 한국은행이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재경위 소속 윤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 상반기 1조4천13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3년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초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대거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반기 한은의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3조2천583억원으로, 전체 비용 5조3천900억원의 60%에 달했다.

한은의 같은 기간 적자액은 연초 예상한 올해 전체 적자규모인 1조8천180억원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실제 올해 적자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1980년대에는 6년에 걸쳐 적자를 낸 적도 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93년과 9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냈으며, 특히 97년 이후 2003년까지는 매년 조단위의 순익을 올린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천502억원, 지난해 1조8천77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은 내부적립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한은은 이익이 나면 당기순익의 10%를 적립해 적자에 대비하는데, 최근 적자누적으로 내부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3조7천748억원만 남아 있어 올해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내년중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한은 내부적립금이 고갈되면 이후부터는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한은 독립성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한은이 수년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당국의 무모한 외환정책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2006-09-18]



연합인포맥스 [2006-09-18 11:36]

한은, 올 적자 1조8천180억원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중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수지적자를 연초 예상했던 1조8천180억원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은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윤건영교수의 국감자료를 인용, 올해 3조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연간 적자규모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는 상반기 중 적자규모가 1조4천139억원인데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현재 수지구조상 외화유가증권 이자수입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크게 늘어나도록 돼 있고 최근 환율과 국내외금리가 상반기보다 상당히 안정되는 추세에 있어 적자규모는 하반기 들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현재의 환율 및 국내외 금리 추세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올 연간 적자규모는 애초 예상한 1조8천180억원에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은의 법정 및 임의적립금 누적액은 3조7천748억원으로 올해 예상했던 정도의 적자가 날 경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나 애초 전망보다 적자규모가 늘어나거나 내년에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에서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6-09-18]

N&I 브리핑

韓銀 올해 적자 3조 육박 예상



경북출신인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올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은은 올 상반기 1조4천13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이로써 2004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올초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 화를 대거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윤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 이들에 한번 언론중재 신청

참여정부 들어 최근까지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는 무려 589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평균 14건, 이들에 한 번꼴로 DJ정부 동안의 월평균 2건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수성갑)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3년 반 동안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중재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산업자원부로 총 52건, 청와대는 총 49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내용 중에서 대통령이 신청한 것이 17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홍보 관련 부서인원과 예산을 증가시켜 언론과의 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집권 3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세계평균성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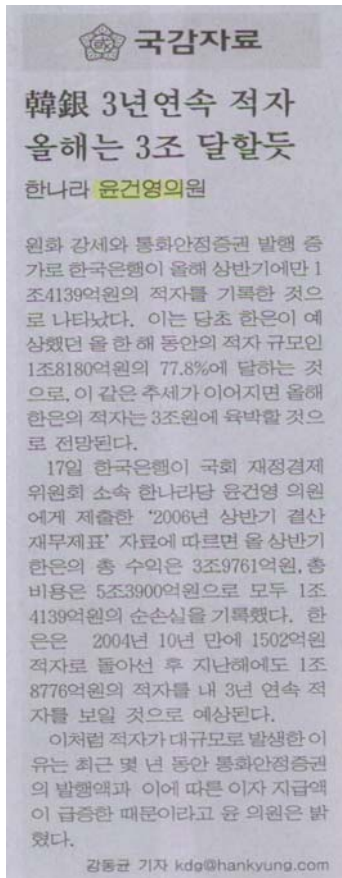
휴대폰 복제 상반기 2475대 적발

올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휴대폰 불법 복제 적발 건수가 총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구·경북의 휴대폰 불법 복제 적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구미을)이 17일 분석한 ‘복제휴대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불법 휴대폰 복제 적발건수는 58건에 총 2천475대였다. 휴대폰 복제 적발건수는 2004년 43건, 858대에서 2005년 81건, 6천574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까지 지역별 불법복제 휴대폰 적발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가 25건, 1천535대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은 5건, 18대로 적발건수가 비교적 적었다.

한국경제 [2006-09-18]



edaily [2006-10-12 15:04]

(국감)석유비축 지속 확대 방침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비상시 석유수급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지난 6월 현재 석유류 비축량은 약 1억5000만배럴, 일일 순수입량 기준 11일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권고 수준인 90일 이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0억배럴 이상의 해외 대형광구 개발, 유전개발 펀드 도입 등 해외자원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구조 전환 노력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차량운행 제한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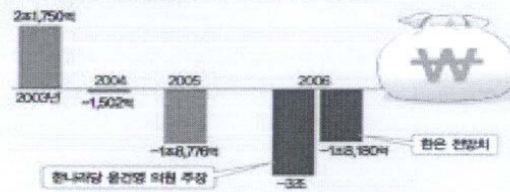
한은 사상최대 적자 '경고음'

한국은행이 2004년부터 겹쳐
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
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야 하는 상황에 별 가능성도 제
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올해 한은의 적
자가 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18일 반박자료
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은의 결 산반기
적자가 1조4천1백99억원에 이
르렀으며, 어같은 추세라면 올
해 적자는 약 3조원에 이를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은은 "3조원은 상반기 중 적자
규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연간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액
(1조8천1백99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고 반박했다. 대규모 적자가 불
가능한 상황이지만 적자규모
는 3조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천억원, 원화)



상반기 1조4천억... 올 "2조~3조"전망
2008년에 적립금 바닥 혈세로 메울판

라는 게 한은에 실명이다.

◇총안공급 이자 상반기 3조
3천억원= 한은이 막대한 적자
를 내는 이유는 원금급을 막
기 위해 달러화를 대거 매입하
고, 이 과정에서 물려나간 불확
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
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이자비
율이 크게 높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7월말 현재 1백
61조원에 달하는 불확증권 불확
을 떠안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3

조3천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여기에 한은이 보유한 2백60조
원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세계적
인 저금리로 저조한 상황이다.

◇적립금 고갈? = 그동안 한
은은 순이익의 10%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켜 왔
다. 또 적자가 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적립금이 고갈되면 한
은법에 따라 정부가 대위주도보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한은 적립금은

3조7천7백억원으로 겹쳐 한은
예산대로 2조원 한위의 적자를
낸다고 하면 적립금은 1조7천억
원으로 감소한다.

윤 의원은 "무모한 외환정책
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이 수년내 흑자로 돌아
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
다. 그는 "국민원세(공부 보조)
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걸림물
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1조2천~1
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금리차가 한은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다 고령에 도달한 외환채권
만기구조가 평균 3년여가 때문
에 당분간 외환자산의 이자수입
이 증가노릇을 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적립금 고갈
시키는 2008년 이후로 예상되
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경필기자 sk02@vungnyong.com

(국감)월 1천만원 넘는 이자·배당 소득자만 7천여명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1억2000만원을 넘어 매달 1000만원 이상씩 버는 부자들이 7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급 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4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자산가가 2만3184명이었다.

특히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7125명으로 지난 2003년의 4328명에 비해 64.6%, 2797명이나 늘어났다.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산가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지난 2002년 2조5153억원에서 2004년 3조8839억원으로 2년새 무려 1조3000억원(54.4%) 증가했다.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의 수도 2002년 1만5286명, 2003년 1만9357명, 2004년 2만3184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들 자산가들이 한 해 벌어들인 총 금융소득은 2002년 3조2715억원, 2003년 3조9346억원, 2004년 4조94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도 1597명이나 됐다. 이들은 총 2조640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헤럴드경제 [2006-10-12]

정부 3년간 환율개입 22兆 날렸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경제인구 1인당 95만원부담… 일부 기업에만 혜택”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노무현 정부 3년간 외환시장 개입 손실액이 22조4000억원에 달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95만원의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의 혜택도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수출업체 상위 50개사 등 일부 업체에만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외국환평형기금 관련 손실 15조3000억원, 한국은행 통안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차 손실 5조3000억원, 한국은행의 외환 개입에 따른 추정 외환평가손 1조8000억원 등 외환시장 개입 손실이 모두 22조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환시장 개입 방법 측면에서도 재경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자금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원/달러 역외선물환(NDF) 거래, 원/달러 스와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행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법률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약 2조6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환율 개입에 의한 효과 역시 수출 상위 소수기업에 집중됐다고 추정했다. 즉 지난 3년간 전체 수출업체 수의 0.1%에 불과한 상위 50대 업체의 수출 점유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1% 수준인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개입의 혜택 역시 환위험

이 집중된 중소기업보다 소수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문제점을 규명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편법을 동원한 2003~2004년 환율 방어는 과거 카드사태와 닮은꼴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외환정책은 참여정부가 부인해온 인위적 경기부양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수곤·양춘병 기자/leesk@

조선세일보 [2006-10-12 15:33]

‘이자·배당’만으로 월 1천만원 버는 사람 7천명

신고 금융소득액만 3조8000억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억2000만원을 넘는(월 1000만원) 금융부자들의 수가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융소득의 규모만 해도 무려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급별 신고현황(2004년 귀속분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연 4000만원 이상)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산가들의 수는 2만31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7125명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4328명) 64.6%(2797명)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산가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지난 2002년 2조5153억원에서 2004년 3조8839억원으로 2년새 무려 1조3000억원 이상(54.4%)이 증가했다.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의 수도 2002년 1만5286명, 2003년 1만9357명, 2004년 2만3184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들 자산가들이 한 해 벌어들인 총 금융소득은 2002년 3조2715억원, 2003년 3조9346억원, 2004년 4조94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도 1597명이나 됐다. 이들은 총 2조 640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1인당 평균 16억5360만원)국세청에 신고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002년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과세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과세기준금액 인하에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재경부는 “현 시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의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2006-10-13 09:45]

(국감)재경위, 론스타·외평기금 등 ‘집중 추궁’

-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외평기금 부실 등 집중제기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문제도 거론될 듯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외국환평형기금 부실화 문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전망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전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지만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대두된 만큼 조사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오규 부총리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정책수석 재임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강원 당시 행장은 청와대에 보고 후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회장을 만났다”면서 “권 부총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도 재경부가 론스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론스타의 심판 청구 결정이 법정시한의 3배가 넘는 270일이 넘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경부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자를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임명, 면죄부를 주어 론스타를 감싸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외평기금의 부실문제를 지적하고 “외평기금의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이라면서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정부가 거둬들인 외화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재의 외평기금 운용에 있어 일방향 환율방어는 국가채무가 급증시키게 된다”고 밝히고 ▲외평기금 운용시 양방향 개입 ▲적정 외환보유고 모색을 통한 환부담 축소 ▲외환·통화관리의 한국은행으로의 책임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후분양제,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의 조치가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전 국민 65%가 주택·토지 투기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투기지역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시켜놓고 해당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06-10-13 10:56]

<재경위, 외평기금 손실 외환정책 질타>
“한은에 외환관리 전권부여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는데 쓰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부실운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경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이라며 “재경부는 정책실패와 불법·월권행위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는데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 시장이 일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 외환시장 안정화정책(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2001~2004년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초과하는 외화를 거둬들였고 특히 2003~2004년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NDF 거래와 스왑(Swap) 거래를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시점에서 재매입(rollover) 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를 매입, 지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환거래법에는 외평기금으로 NDF나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국회의 동의나 승인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조6천억원에 이르는 NDF 손실은 투기세력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에게 국민세금을 현찰로 송금해준 꼴”이라며 “편협하고 실효성 없는 외환정책이 국가채무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며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환율방어용 국채가 급증하고 이에따른 이자부담, 환차손, 이차손 등이 크게 늘어 2005년 외평기금 누적손실이 17조8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외평기금 손실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5년 6조5천억원에 이어 2006년 14조9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환율유지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수출기업에 특혜를 줘 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반면 수입물가는 높게 만들어 내수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득이 상실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환율방어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를 매입하는 일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적정환율 수준을 정한 뒤 단기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양방향으로 개입하는 환율방어가 필요하다”면서 “외환-통화 관리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외환관리 전권을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6-10-13 16:40]

“노무현 정권의 '위'선+'독'선 = 국민 '위독’”

윤건영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댄 반기업·반시장 정서 버려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감자료를 통해 ▲ 노 대통령의 ‘인위

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말장난, 거짓말에 불과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등을 ‘노 정권의 위선’ 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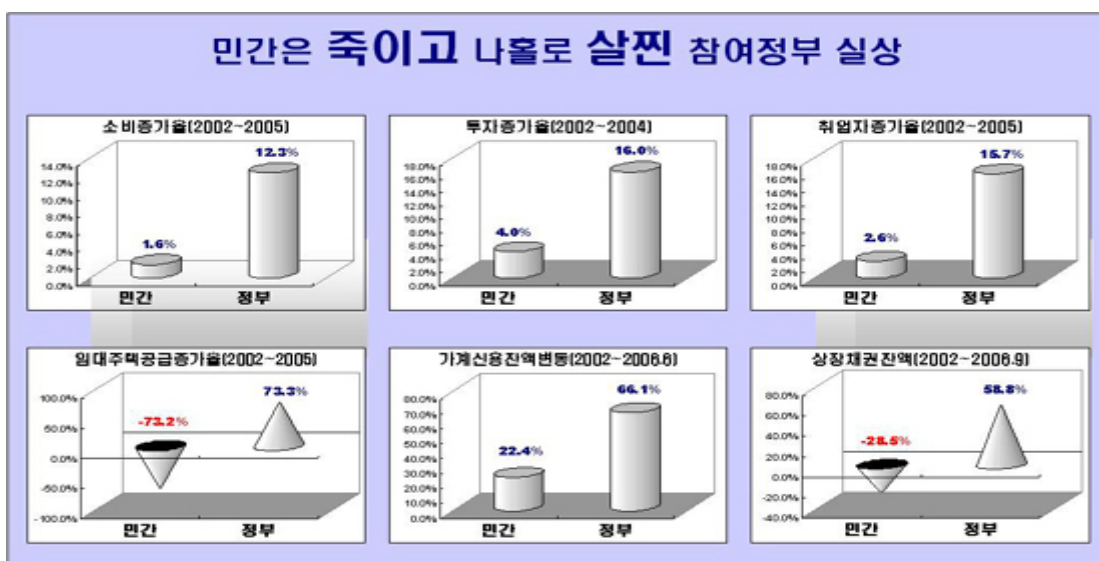
윤 의원은 “모든 경기 부양은 인위적인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을 일으킨다” 면서 “노 정권은 ‘부절절한 경기부양’ 을 ‘인위적 경기부양’ 이라는 용어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또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는 ▲ 2005년 7월 15일, 땅 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 왜곡 ▲ 2006년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20대 80 발언 ▲ 2006년 8월 24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등을 들었다.

이어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년~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르다” 면서 “비전 2030 발표 당시 복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도 반영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핀 정부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부 ▲ 퍼주기식 대북 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등을 ‘정권의 독선’ 으로 꼽았다.

또 ▲ 작년 3년 대비 자살 56.7%(특히, 노인 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 2002년 말 대비 국가채무 85.1% 급증(연체 채권 37.2% 증가) ▲ 2002년 말 대비 구직 단념자 80.9%,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0.7% 증가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국민 위독’ 의 실증으로 적시했다.



윤 의원은 “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는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민복을 희망한다면 위선적인 말장난이나 뜬 구름잡는 비전 같은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귀를 크게 하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반부자·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는 접근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분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반부자·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는 접근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분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6-10-13]

<재경위, 외평기금 손실 외환정책 질타>(종합)

“NDF 거래는 명백한 불법..책임자 추궁해야“

재경부 “당시 외환시장 개입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박대한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을 통한 손실발생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감사청구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어진 국감에서 재경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외평기금의 부실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외환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는데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 시장이 일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 외환시장 안정화정책(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2001~2004년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초과하는 외화를 거둬들였고 특히 2003~2004년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NDF 거래와 스왑(Swap) 거래를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시점에서 재매입(rollover) 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를 매입, 지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환거래법에는 외평기금으로 NDF나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국회의 동의나 승인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환율방어용 국채가 급증하고 이에따른 이자부담, 환차손, 이차손 등이 크게 늘어 2005년 외평기금 누적손실이 17조8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외평기금 손실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5년 6조5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4조9천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환율유지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수출기업에 특혜를 줘 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반면 수입물가는 높게 만들어 내수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득이 상실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국민에게 안긴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담당공무원들을 사후처리했다고 하는데 지난 2003년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해 22조원의 손실을 낸 담당자 중 한명은 IBRD(세계은행) 이사로 갔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승진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당시 외환시장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당시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은 동아시아 국가에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로 인해 중국도 30조원 이상, 일본도 100조원 이상의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은 환율방어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또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후처리 문제가 전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환거래법에도 NDF 거래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서 “재경부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고발 등 사법조치를 재경위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재경부 국감**

오늘(13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복핵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올 재경부 국감은 초반부터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확대, 감세,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여야간, 당정간 치열한 공방도 점쳐진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문제를 비롯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인선 잡음,

국책은행 구조개편방향 등 논쟁거리도 적 않다.
이달말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재경부 국감의 방향을 가능하게 될 의원 요구자료를 정리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로 내년 세수 8500억 늘어나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내년 세수증대 효과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제도 가운데 25개를 축소, 폐지해 42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또 일몰이 없는 제도 가운데 7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4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은 세수 중립적으로 짜여졌다"며 "세수 효과는 933억원으로 총 국세 예산액 135조 3000억원 대비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실태파악 뒤 신중 검토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실태 파악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우체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종교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대가 지급구조도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실태 파악과 함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에서는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이나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해외투자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 추진

정부가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국적의 기업이나 펀드가 국내에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현재 이들 국가들은 국내가 아닌 현지(거주지)에서 각각의 과세권을 갖고 있다.

재경부는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올 1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스위스, 5월 아일랜드, 6월 벨기에와 각각 이미 체결한 조세조약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이달 초 네덜란드, 이달 말 아일랜드와 개정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해외펀드 등이 국내에 투자한 지분을 팔았을 때 우리 조세당국이 과세하는 원천지(소득발생지) 과세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주요 개정협상 내용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외비인 만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투자 금융 7월말까지 2억달러 육박

한국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액은 올해 7월말까지 2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액의 20배가 넘는다.

재경부가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526건, 금액은 1억9343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29건)의 18.1배, 전체 금액(932만달러)의 20.8배 증가한 것. 올해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 519건, 1억9029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토지는 7건, 314만달러로 나타나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36만8000달러, 건물은 36만7000달러, 토지는 4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개인들의 해외 토지 투자는 올 5월22일부터 허용됐다. 해외부동산 취득대상 국가별 건수와 금액은 미국이 202건 8632만달러로 가장 많고 캐나다 136건 5414만달러, 중국 74건 1563만달러, 기타 114건 3734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금융소득 연 1억2000만원 이상자 7천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1억2000만원을 넘어 매달 1000만원 이상 버는 부자들이 7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급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400만원 이상 벌어들인 자산가가 3184명이었다.

특히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다고 보고한 자산가는 7125명으로 지난해 2003년 4328명에 비해 64.6%, 2797명이나 늘어났다.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인 자산가들(신고한 금융소득은 지난해 2002년 2조5153억원에서 2004년 3조8839억원으로 2년새 무려 1조3000억원(54.4%) 증가했다.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의 수도 2002년 1만5286명, 2003년 1만9357명, 2004년 2만3184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

매일경제 [2006-10-14 09:38]

“정책실패로 외평기금 적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부실운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이라며 “재경부는 정책 실패와 불법·월권행위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역외선물환(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 시점에서 재매입(rollover)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를 매입해 지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환거래법에는 외평기금으로 NDF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데 국회 동의나 승인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17조8000억원에 달했던 외평기금 누적손실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5년 6조5000억원에 이어 2006년 14조9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와 같은 일방향 환율방어가 아닌 적정 환율수준을 정한 뒤 단기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양방향으로 개입하는 환율방어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에 외환관리 전권을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평기금 손실과 관련해 “환율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면서 “불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과거에도 NDF 거래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옵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과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NDF 거래 등을 통한 손실 발생의 실태 배경과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2006-10-15 16:28]

대북지원 물자분배 감시 구멍…국내 단체 상주 감시원 한 곳도 없어

[쿠기 정치] 대북지원 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 상주요원을 둔 국내 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모니터 요원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7개 단체 31명,국제 비정부기구(NGO) 5개 단체 30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한국인은 없다.

국제기구 가운데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각 10명의 상주인원을 두고 있고,세계보건기구(WHO),국제적십자연맹(IFRC),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각 4명과 3명,2명을 파견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각각 1명의 상주인원을 두고 있다.

NGO 중에서는 독일 구호단체 저먼 아그로 액션(GAA)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프랑스와 아일랜드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과 컨선이 각각 7명,스웨덴 구호단체 PMU와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의 상주인원을 파견했다.

윤 의원은 “북한내 분배감시 활동 인원이 12개 단체 61명에 불과하고 이중 국내 인력은 아예 없다는 것은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지적했다. 통 일부는 “물자지원을 할 때 우리측 인원이 방북해 분배를 감시하고 있고,북측으로부터도 최종적인 분배 결과를 문건으로 통보받고 있다” 고 밝혔다.

조세일보 [2006-10-16 12:33]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하반기에 '벼락치기?'(종합)

윤건영 의원, “하반기 정기세무조사 집중 납득못해“

임태희 의원, “징수실적 보완용으로 하반기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정부의 세금 징수실적이 상반기에 저조한 기미를 보이면 이를 보완키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 몇 년간의 반기별 정기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정기 세무조사가 각 연도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와 부과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기세무조사는 특별 조사와는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2만625건의 정기세무조사 중 절반이 넘는 1만1542건이 하반기에 시행됐으며 2004년에도 2만6526건의 정기세무조사 중 1만3903건이 하반기에 시행됐다. 지난해에도 2만 5894건의 세무조사 중 1만5334건이 하반기에 집중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도 2003년 하반기 2조735억원(전체 부과액 3조2407억원), 2004년 하반기 2조5962억원(전체 부과액 4조7158억원), 2005년 하반기 2조5621억원(전체 부과액 4조3169억원) 등으로 하반기에 집중 추징이 이뤄졌다.

한편 2006년 상반기 현재 총 1만2351건의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됐으며 1조712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윤 의원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라며 “한 가지

는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부족, 또 한가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조사대상별, 종류별 집중기간 배정을 통해 조사인력과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이 같은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가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연간 징수실적의 보완용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3년 하반기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상반기 대비 건수로는 56%, 금액으로는 92%증가했다”며 “2005년에도 건수와 금액이 각각 31%와 62%증가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으로 건수는 30%, 금액은 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조사, 법인세 조사 등의 기초분석자료가 되는 신고내역 등이 상반기에 취합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반기에 정기세무조사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6-10-16 11:36]

(국감)“세금 안건히면 연말 몰아치기 세무조사“

임태희 의원 “상반기 징수 부진하면 하반기에 팔건어“

- 윤건영 의원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뒤늦은 시도“ 비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세금 징수실적이 상반기에 저조하면 이를 보완키 위해 국세청이 하반기에 세금건기와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상반기 징수 실적이 예산대비 저조하면 하반기 징수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2년에는 예산대비 상반기 징수실적이 49.7%로 50%에 미치지 못하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101%로 늘어났다. 상반기 실적이 모두 50%에 미치지 못한 지난 2003년과 2004년 하반기 실적은 각각 107.3%와 110.1%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도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고 있어 이는 연간 징수실적의 보완용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도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하반기에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상반기 대비 건수로는 56%, 금액으로는 92% 증가했다. 2005년에도 건수와 금액이 각각 31%와 62%증가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으로 건수는 30%, 금액은 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도 부과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부족이거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뒤늦은 시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2006-10-16]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책’ 참여정부 ‘시장’은 없다



국정감사 이슈

한나라 윤건영의원 지적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시장은 없다.’ 참여정부가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 결과 소비와 투자, 취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은 극도로 위축되고 정부만 살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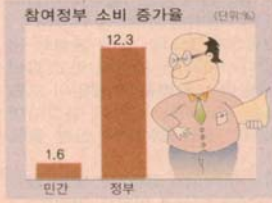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고 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정부 만능주의) 덩벼든 결과 소비와 투자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가 민간을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로 본 비만형 정부=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간 소비는 2005년 말 기준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정부소비는 12.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민간 부문에서 2.6% 늘어났지만 정부는 무려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거와 관련되는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민간은 -73.2%로 뒷걸음질

참여정부 소비 증가율 (단위%)

부문	증가율 (%)
민간	1.6
정부	12.3



정부위원회는 지난해 381개(행정 부문 42개, 자문 부문 339개)로 집계돼 2004년에 비해 23개나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58만8270명으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총업원 수 25만4493명의 배가 넘는다는.

복합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검토에서도 정부와 시장은 엇갈린 해답을 내놓고 있다.

소비·투자등 경제전반서 민간부문 소외... ‘나홀로 비만’ 심각

친 데 비해 정부만 73.3% 증가했다. 부자(2004년 말 기준) 역시 민간 부문이 4.0%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4배인 16.0%가 늘었다.

이 밖에 가계신용잔액(6월 말 기준)은 민간이 22.4% 증가한 데 비해 정부는 66.1% 늘었다. 기업자금 조달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상장채권잔액(9월 말 기준)도 정부는 58.8%가 늘었지만 민간은 오히려 -28.5%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통계수치는 정부주도형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 문제는 정부 만능주의 정책이 횡행하면서 나타났기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라며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85.1%나 급증했고, 연체채권도 37.2%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시장과 따로 노는 정부=정부주도형 정책이라도 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은 민간이 요구하는 내용과 따로 놓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시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실현해줄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부정책의 결과물은 모두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02년 말 7723건이던 것이 9월 말 기준 8084건으로 361건, 4.7%가 증가했다.

또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참여정부의 수용률은 일부 수용을 포함해 36.2%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시절 6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정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해마다 시행해온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세는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도 정부는 민간 부문을 사실상 소외시켜왔다”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초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병 기자/ang@heraldm.com

파이낸셜 뉴스 [2006-10-16 13:00]

“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세수가 부족했던 2004년과 2005년 특히 두드러졌다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하면 2004년과 2005년에 무려 6조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뺑뚱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10·29 대책이 발표된 2003년 하반기와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하반기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패턴은 투입인원, 피조사자 및 위반자, 추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상반기 투입인원 대비 추정세액은 967만원에 그치는 반면 지난해 하반기의 3억4925만원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된 것과 관련,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도, 부과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집중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10-16 14:35]

“참여정부서 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세수가 부족했던 2004년과 2005년에 두드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2004년과 2005년에 6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29 대책이 나온 2003년 하반기와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하반기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패턴은 투입인원과 추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2006-10-16 15:21]

국세청, “게임아이템 거래 세무조사 임박”

국세청장, 전자상거래...조사대상자 가리는 작업 중

최근 '리니지'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 각종 게임아이템이 고가로 거래되는 것과 관련 국세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자를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게임아이템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현상을 인지하는지, 또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과세정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리니지와 관련한 게임아이템은 갑옷이나 무기는 1~2만원, 귀걸이 등은 32~50만원, 반지는 수백만원, 어떤 것은 1000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게임아이템거래와 관련한 현상을)인지한다. 게임아이템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2006-10-17]

“DJ정부이후 北에 3조5000억 지원”

DJ정부 이래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달러 기준)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총 488만t에 달하는 한편 한국의 지원 비중이 현 정부 들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방만한 대북 퍼주기 정책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은 한 명숙 총리가 11일 본회의 긴급 질문에서 '북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98년 이후 >개성공단사업권으로 5억

이 밖에 선박의 북한 항구 입항에 따른 비용 49억5000만원, 북한 방문객의 지출액(1인당 100달러) 1704억원 등도 계산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특히 총 30억달러에 달하는 이 같은 금액은 북한이 연간 총 수출액이 58억20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한나라 최경환·윤건영의원 지적…개성공단 사업권 등 '방만한 퍼주기'

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재경위 소속)과 윤건영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각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먼저 DJ정부 이래 북한으로 유입된 금액을 개성공단사업권, 금강산관광에 필요한 건물 매입, 통일축전 행사비 등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총 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

달러, 토지사용료 1200만달러를 포함한 노동자 임금 및 세금·통신료 5억2089만달러 >금강산관광 대가 4억5152만달러를 포함한 관광(개성·평양·아리랑축전 관람료) 대가 4억5622만달러 >금강산관광에 필요한 건물 매입(운정각·문화회관·온천장)으로 1297억원 >통일축전·민족화해국민회의 등 행사비 236억원 등을 북한에 지급했다.

규모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11년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총 488만t으로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 431만2000t의 1.13배에 달한다며 특히 한국·미국 지원 비중은 DJ정부 시절 4대6에서 현 정부 들어 9대1로 역전됐다고 방만한 대북 퍼주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은정 기자/thankyou@heraldm.com

파이낸셜 뉴스 [2006-10-17 10:39]

“한·미, 11년간 북에 식량 488만t 지원”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488만t)는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2004년 431만2000t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비중이 김대중 정부때까지 4 대 6을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8.9 대 1.1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부양할 책임을 진 북한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북한이 지난 99년 실질성장을 6.2%의 극적인 반전을 거둔 것도 대북 식량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10-17 12:49]

권부총리 “대북 UN결의안 적용범위 조율 필요”
북 지원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 울 기자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물자는 9~30번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상당 부분이 재수출돼 군비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북지원 물자가 100% 주민들에게 지원됐는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있지만, 국제기구가 물자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만약 해당 물자를 전량 재수출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몰라도 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1조8천억원은 쌀과 비료와 같은 물자였고, 경수로 지원도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만 들어갔다“면서 “일반교역까지 대북지원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에 18년 동안 58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통일 이후 지원금액도 컸는데, 이같은 지원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전체 금액을 합치더라도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 “국제연합(UN)의 대북결의안 적용범위와 국제간의 협력 범위에 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심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은 없다“며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3차 핵실험이 계속돼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되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 조율과 국내적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每日新聞 [2006-10-17]



부산일보 [2006-10-17 12:51]

[국정감사 현장] 재경위 “경협 손실보상 어떻게”
국방위 “한미공동 핵 대비책은“

17일 재정경제위와 국방위 등에서는 북 핵실험에 따른 남북경협사업과 우리 군의 준비태세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모두 12건 15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역손실보조’, ‘경협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모두 16건 169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경협사업의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 야기로 경협사업 참가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인데 정부는 대책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확인된 것만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대가성 뒤통을 포함하면 대북 현금 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송금 내역과 어떤 루트를 통해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가 북한에 지급된 모래대금이 북한군부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모래난을 이유로 수입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북한군비 증강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무역협회의 ‘북한모래 반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부 관련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에도 보고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북한 모래 반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488만t)는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2004년 431만2천t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작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며 “핵 준비태세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승은기자

연합뉴스 [2006-10-17 16:30]

<초점> ‘北지원 핵개발 전용’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의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과 식량이 북한 핵개발의 ‘뒤통’으로 쓰였다고 추궁의 날을 세웠고, 이에 재경부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수준”이라며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景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8년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원된 현금이 3조5천억원, 미화로는 3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상식적으로 북한이 달러가 없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북한과의 거래에서 들어간 뒷돈까지 감안한다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9월 발간된 무역협회의 ‘북한 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북한 군부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이면서 명목상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며 이른바 ‘창구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북한 모래 반입확대 방침을 세우는 등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본인이 추정하는 바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넘어간 현금이 7조원에서 9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핵실험을 9차례에서 12차례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소규모 핵폭탄의 경우 30차례 이상의 실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대북 ‘퍼붓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며 “이런 식량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남북경협사업이 북핵 사태로 중단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중 약 5천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대북 지원은 단순한 퍼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몇조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조8천억원 정도로 쌀과 비료 등의 물자가 거의 전부라며 “군비로도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나 산업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북한에 지원된 물자가 100% 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십자사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물자배정에 관여하고 있어 일정부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는 전체 금액을 합쳐도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 이전에 서독이 18년 동안 동독에 지원한 규모가 총 58조원, 연도 별로는 3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 권 부총리는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 현금지원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2006-10-17 17:14]

한나라, “정부 대북지원 핵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 높다”

[쿠키 정치] 정부 대북 지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재경위=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확인된 것만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 권과 토지사용료 5억2000만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5600만달러, 남북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남북간 교역적자액 1조3000억원, 금강산 건물매입비용 1297억원 등을 주요 북한 유입 현금 항목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현금 지원규모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북한 총 수출액 58억2000만달러의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으로 유입된 30억달러를 전액 핵 개발에 전용할 경우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비용”이라며 “이 자금중 상당액이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통일부 자료를 인용,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한국과 미국이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비중이 김대중 정부 때까지 4대6을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한 이후 8.9대 1.1로 역전됐다”며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유엔 제재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금액금액 중 약 5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

을 촉구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미국 전자기파 위협 분석위원회 자료를 인용, “북한이 소형 핵무기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미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 등=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이 완공되는 2012년 북한 노동자 인건비로 매월 994만달러가 송금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30%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9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중인 8911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평균 66.3달러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완료시점인 2007년에는 북측에 매월 464만 달러(7만명 고용 기준), 완공시점인 2012년에는 994만 달러(15만명)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大田日報 [2006-10-17 23:33]

“南, 北에 현금 3조5000억 지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2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5600만 달러 ▲남북간 교역적자액 1조3000억원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는 4억5000만 달러등이다.

또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 비용 1297억원 ▲통일축전과 민족화해 국민회의 행사비 331억원 ▲경의선 개발 등에 쓰인 북한 노동자와 자재구입 비용 625억원 등도 포함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금지원 규모(미국 달러 환산시 약 30억 달러)는 1998년~2005년 북한 총수출액 58억2000만 달러의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국무회의 보고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 간 대북 지원액은 모두 2조3003억원이며, 이 중에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한국과 미국이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통일부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1

년간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규모(488만t)는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2004년 431만2천t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서울신문 [2006-10-18 08:48]

[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북핵 개발자금’ 논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뒷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을 압박했다.

최경환 의원은 “DJ정부 출범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에 지원된 현금은 확인된 것만 3조 5000억원으로, 플루토늄 핵폭탄을 최소 4~10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대가성 뒷돈까지 포함하면 현금 지원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 2000만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 5600만달러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 비용 1297억원 ▲통일축전과 민족화해국민회의 행사비 331억원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이 돈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총수출액 58억 2000만달러의 52%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조 8000억원 정도로 쌀과 비료 등의 물자가 거의 전부”라고 답한 뒤 독일 통일을 거론하며 “통일 이전에 서독은 18년 동안 동독에 58조원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동독 주민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개성공단 사업에 2368억원, 금강산 관광사업에 2768억원을 우리 기업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뒤 “유엔제재위원회가 남북경협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 돈 5136억원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윤건영 의원은 “제 추정으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넘어간 현금이 7조~9조원으로 이 돈으로 핵실험을 9~12차례까지, 소규모 핵폭탄은 30차례 이상 실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 지원은 단순한 퍼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을 갖는다.”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몇조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군사적

으로 전용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北지원 현금 9억弗 정도” 해명

한편 통일부는 “1998년 이후 민간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9억 5000만달러 정도”라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06-10-18 09:06]

“남북경협 당분간 계속” 권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은 국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계속해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남북경협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결심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은 없다”면서 “다만 중단 이후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권부총리는 또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물자는 9~30번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상당 부분이 재수출돼 군비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달하는 규모”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2006-10-18 10:50]

<국감현장> 재경위, “북한통계 전담인력 전무“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통계청 내에 북한관련 통계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18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는 각종 북한관련 통계 자료가 제때 갱신되지도 않고 일부 자료는 수치조차 잘못 기재돼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는 매월 ‘남북교류 협력동향’을 발간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반면 통계청의 경우 각종 수치가 지난해 10월분까지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의 경우 2005년 수치가 2004년으로 기재돼 있는 등 자료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유 통계청장은 “남북관계 관련 통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담당직원이 2명 배정돼 있으나 그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돼 있어 사실상 북한관련 통계 전담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남북관계 현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면서도 “하지만 남북관계 통계는 대부분 비공개자료라서 근본적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시의성에 맞게 각종 데이터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06-10-18 11:16]

<국감>북한통계 외면하는 통계청

【대전=뉴스시스】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와 정부 승인 통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경제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통계청에서 북한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통계자료 조차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통계청이 북한관련 통계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때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673종에 달하는 정부 승인통계 중에도 북한과 관련된 통계조차 전무(全無)한 실정”이라며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통계자료조차 제시간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통계청은 지난 1995년 이후 통일부, 국정원 등 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자를 넘겨받아 매년 한 차례씩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자료에는 총 21개부문 76종의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이 중 통계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통계는 통일부와 KOTRA, 한국은행 등이 생산한 24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최근 대북 교역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직접 북한관련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통계청이 기본적인

자료수집마저도 게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의원은 또 최근 대북지원 규모 논란 등과 관련해 “통계청이 앞장서 대북지원 관련 통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교역·지원대금, 국내·국제지원, 현물·현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 [2006-10-18]

北관련 통계 부실한 이유 있었네

한나라 윤건영 의원 “전담인력 단 2명” 지적

‘북한 통계 왜 부실한가 했더니... 통계 전담인력 단 2명.’

18일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통계청에서 북한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남북 교역 추이 등의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데 반해 통계청이 관리하는 KOSIS의 자료는 1년여 동안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다.

더군다나 북한 통계 전담인력

이 통계청 통계정보국의 행정정보과 내 4급 1명, 7급 1명 등 단 2명뿐이고, 관련 예산도 1년에 한번 책자 발간비용으로 500여만원만 계획돼 있다.

윤 의원은 “올 10월 현재 통계법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이 작성 승인한 673종의 정부 승인 통계 중 북한과 관련돼 승인된 통계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 북한 관련 자료의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은커녕 정부 공표 통계조차 제대로 수합,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청 본연 업무의 태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국민일보 [2006-10-18]

국감종합

“대북사업 중단땀 5136억 회수 불가”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재경위=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확인된 것만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2000만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5600만달러, 남북정상 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남북간 교역적자액 1조3000억원, 금강산 건물매입비용1297억원 등을 주요 북한 유입 현금 항목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현금 지원규모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북한 총 수출액 58억2000만달러의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으로 유입된 30억달러를 전액 핵 개발에 전용할 경우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자금 중 상당액이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DJ정부이후 현금 30억달러 北유입 핵개발 전용땀 4~10개 핵폭탄 제조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통일부 자료를 인용,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한국과 미국이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비중이 김대중 정부 때까지 4대 6을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8.9대 1.1로 역전됐다”며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유엔 제재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금액 중 약 51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미국 전자기파 위협 분석위원회 자료를 인용, “북한이 소형 핵무기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미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통외통위 등=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이 완공되는 2012년 북한 노동자 인건비로 매월 994만달러가 송금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30%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9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중인 8911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평균 66.3달러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완료 시점인 2007년에는 북측에 매월 464만달러(7만명 고용 기준), 완공시점인 2012년에는 994만달러(15만명)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에서 “북한은 최고 5000t의 화학무기와 생화학무기 관련시설 40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김도훈 기자 yskim@kmib.co.kr

세계일보 [2006-10-18]

“對北지원, 핵개발 뒷돈 대준 꼴”

재경부 국감... 한나라 의원 주장

“DJ정부 출범후 현금만 3조5000억 유입”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를 놓고 한나라당과 통일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 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현금 및 식량이 핵개발의 ‘뒷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북쪽으로 지원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핵개발에 전용됐다’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지

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재경부는 기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송금 방식은 물론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 한 해 곡물 생산량을 넘는다고”며 “이런 식량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 규모가 사중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1998

년 이후 민간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9억5000만달러 정도”라고 해명했다. 여기에는 우리 측 무역업체가 남북교역 과정에서 물품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빠져 있다.

통일부는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협사업”이라며 “이에 따른 대가 지불은 정상적 상거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남 교역 흑자(1998년 이후 12억여달러)를 현금 유입액에 넣지 않은 데 대해 “교역은 상호 재화를 매매, 교환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제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교역에서의 현금 지급도 정상적 상거래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대북 현금유입 규모에 넣지 않은 것은 통일부의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또 “8년간 대북지원액 8조원”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 지원액은 모두 2조3003억원이며, 이 중에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8조원은 대북 지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상적 상거래와 경수로분담금, 개성공단·금강산사업 투자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에럴드경제 **생생뉴스** [2006-10-18 11:56]

개성공단 전력지원 사업 국감 도마에 올라

18일 나흘째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정부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지속 방침에 대한 비판론이 잇따랐다. 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개성공단 전력지원 논란이, 재경부 국감에서는 관세청과 통계청의 대북 관련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지난 2003년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인용,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가 연평균 193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에 대해 정부(통일부)가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 같은 손실분은 국민부담 증가로 올 수밖에 없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2005년 말 한전 개성지사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한전의 대북 전력지원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대북송전 매출액은 59만2165달러에 불과한 반면 매출원가는 145만7852달러에 달해 총 86만5688달러의 매출적자를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203만5222달러와 기타비용을 더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무려 290만3513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총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로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수준은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 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손실이 ‘0’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수준보다 72.1% 인상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적자 지속에 따라 한전은 통일부에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보전해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날 한전의 실폐경수로 잔류자산인 각종 중장비가 북한 핵실험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8일 북한이 인력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자산 반출을 금지해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경수로 건설 중장비 283종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재경위의 통계청, 관세청 국감에서도 북핵 파문은 핵심 쟁점이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가 전무하고, 업데이트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전략물자수출신고 대비 검사 건수가 거의 0%에 불과하다”며 “방사성동위원소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북한이 핵우려국 지정에서 빠진 까닭은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멀티미디어 민영 뉴스 통신사

[2006-10-18 16:01]

<국감>관세청 압류 일부 '짜통' 유통 가능성(?) 있다

[대전=뉴스시스]

관세청이 압류, 직접 소각해야 할 일명 '짜통'이 위탁업체로 넘어가 폐기처분과정에서 일부 짜통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재정경제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윤 의원은 “관세청이 압류한 물품을 위탁, 판매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짜통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지난 2월17일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한 79건이 소각돼었는데, 28점의 폐기 사유에 '유사품(일명 짜통)'으로 기록돼 있다”며 “폐기과정에서 세관직원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확인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유사품 또는 '상품도용상품'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소각하므로 위탁판매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문건은 관세청의 압류물품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간 짜통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폐기목록 서류에 유사품이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진품과 케이스상이’, 또는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의 폐기 사유가 함께 적혀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짝퉁이 유통되려다 폐기 처분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의원은 “관세청이 업무착오나 단순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세관직원이 폐기확인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청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압류물품 환가처분(세관장이 압수 또는 몰수 등으로 국고귀속된 압류물품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유통사업단으로 위탁, 판매,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는 것)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됐는지 등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엄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2006-10-18 16:29]

<국감현장> 재경위, 북한선박 검문강화 주문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최근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북한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경협을 목적으로 북한 나진과 부산을 주 1회 운행하는 ‘추심호’라는 배가 이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짜담배와 마약류를 밀수하다 적발됐다”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 강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핵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이 크다”며 밀수 근절이라는 세관의 목적상 제주해협과 대한해협 등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조치방안이) 정부에서 조율되고 결정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뿐,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대한민국의 수문장인 관세청의 조치가 애매하다. 남북해운합의서를 빌미로 북한 선박 검문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추궁하자 성 청장은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항구에 접안한 배만 검색할 뿐 현재로서는 단순 영해통과 선박을 모두 검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한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북한 등 외국 선박을 정선, 나포,

수색하는 주무기관은 관세청이 아니라 해경“이라며 “관세청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관세청장을 거들기도 했다.

내일신문 [2006-10-19 18:09]

정부-한나라 꺼지지 않는 대북지원금 공방

통일부 2조3천억, 한나라 8조4천억원' ... 해석에 따라 6조원 차이
한나라, 국제사회가 94년 지원 결정한 경수로분담금까지 포함시켜

대북지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포용정책 폐기의 근거로 '대북지원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식의 의혹을 계속 던지고 있고, 통일부는 한나라당의 논리방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수치를 들이대며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도 한나라당 내에서 여전하다. 18일 김형오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동안 우리가 갖다 준 돈이 한나라당의 예측으로 하면 10조원 가까이 된다"며 마치 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갖다 바쳤다는 투의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한나라 의원들 아직도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 한나라당의 '대북지원금 부풀리기' 논란(내일신문 10월 13일자 3면)이 보도된 후 통일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2조3000억원 상당의 현물뿐 현금지원은 한 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북지원 규모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금액은 8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계산과 비교해 6조1000억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이런 차이는 대북지원에 대한 성격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부 항목들을 지원으로 보느냐,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북한에 돈을 00조 갖다 줬다'는 식 정치공세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 대북 포용정책 폐기 주장의 근거를 억지로 만들기 위한 '헛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특회계로 농가에 지원된 돈 포함해야 하나 = 우선 국민의 정부이후 정부·민간의 현물지원금 규모 논란. 통일부는 2조3000억원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4조6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조3000억원의 차이는 북한에 지원된 쌀을 국제시세로 계산하느냐, 국내가격으로 계산하느냐

나에서 발생한다.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북한에 쌀을 지원할 때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에 따라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제공하게 돼 있고, 국제시세와 국내가격의 쌀 가격 차이는 양곡특별회계에 따라 국내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이후 양곡회계로 지원된 돈 2조3000억원은 북한에 지원한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윤 의원은 “쌀 한 가마 지원효과를 표현할 경우, 정부 주장대로라면 한 가마에 12만원 정도 되는 쌀을 ‘북한에 2만7000억원어치(국제시세 기준) 지원’ 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에게 대북지원의 정확한 크기를 전달하지 못한다” 고 설명했다.

두번째 경수로분담금 2조2000억원. 통일부는 “경수로분담금은 94년 10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제네바 합의 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그 때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만일 경수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그만큼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북한의 투자부담을 덜어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경수로분담금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전력생산을 약속하고, 한국정부에 경수로 건설에 드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근거로 ‘경수로 지원’ 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셋째 금강산 관광대가 5000억원과 2000년 현대의 대북송금액 5000억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상거래행위에 따른 돈이라고 해도 북한경제의 폐쇄성에 비추어볼 때 대북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액 6000억원. 정부는 각종 기반시설과 건물건축 등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건물 등의 소유권은 국내업체에 있지만 매각이나 처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북한지원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확한 근거 갖고 말하자” = ‘지원’ 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북지원금 공방은 해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들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확하지 않는 근거로 대북지원 금액을 부풀리는 것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민간부문 지원금을 정부지원으로 말하거나 자료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 역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6-10-19 20:15]

〈국감현장〉 재경위, 한미FTA 집중질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19일 국회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인 한미 FTA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1996년 한국과 미국 간 정부조달협정 체결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미 조달시장 진출이 미미하고 진출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미국 진출확대를 위해 현지 입찰정보의 제공과 전문가·민간업체의 연결주선 노력은 물론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에 대비하고 국내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주무기관이 돼야 할 조달청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FTA 관련 조달분야 용역이 11월에야 나오게 돼 있고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업의견 수렴도 공문 한 장에 그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앞둔 시점인데도 가장 기초적인 정보수집에서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최근에는 원자재 비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주재하던 미국 구매관실을 폐지하고 중국에 설치했다”며 한미 FTA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hosun.com [2006-10-20 03:03]

[뉴스 블로그] 자기 목소리 없는 권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남북경협에 대해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수장(首長)답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 부총리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사태와 관련, “남북경협 중 금강산 관광이 문제가 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정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하라, 마라 하기 어렵다. (금강산 관광)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금강산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금강산 관광비용이 북한의 핵무기에 투입되든 말든 막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금강산 사업은 민간회사(현대아산)가 사업주체이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현 정부의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고, 거액의 정부 보조금 덕분에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북한 권력층에 수천억원의 현금 줄 역할을 해 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권 부총리가 금강산 관광은 정부와 무관한 사업이고 정부가 개입해선 안될 민간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는 또 지난 17일 국감에선 “북한에 제공한 물자가 북한의 군비 증강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질문(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 18년 동안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규모가 총 58조원, 연도별로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동독과 북한은 다른 것 아니냐. 독일이 핵실험을 했느냐”고 하자, 권 부총리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유 의원이 “그런 것도 부총리가 모르냐”고 다그치자, 그 제서야 “핵개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열린 재경위에서 “남북경협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통일부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고, 이어 유승민 의원이 “(부총리는) 통일부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고 묻자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회에서 ‘로봇’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나왔습니다.

 [2006-10-22 11:44]

(국감)“통안증권 빨간 불 켜졌다“-윤건영의원

- 91년이후 발행잔액 10.7배 증가..이자만 60.6조원
- 통안채 이자가 본원통화 증가의 2.1배 달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급증하면서 91년 이후 이자만 60조에 달해 한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늘어난 이자 때문에 다시 통안증권 발행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15년 8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이자로 지출한 금액만 무려 60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 162조6000억원의 37.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윤 의원은 “이 기간 중 본원통화는 약 29조원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2.1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며 “통화량 흡수를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이자 때문에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났으며, 이자로 인해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한 통안증권이 91년 이후 최소한 31조7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통안증권 이자는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의 주범”이라며 “올해 한은 예산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는 7조484억원으로 연간 총비용의 59.6%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너무 커지면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안증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사항인데, 여태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문제가 더욱 커지도록 내버려둔 것은 너무 현실에만 안주해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6-10-23 06:12]

[한은 국감] KIC, 170억달러 순차적 위탁

(서울=연합뉴스) 이성규 기자=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KIC)가 구체적인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맞춰 외화자산을 순차적으로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한은은 국정감사 전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은과 KIC는 지난 6월 170억달러의 외화자산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을 이미 완료했다”며 “따라서 동 계약에 근거하고, KIC의 자산운용 계획이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외화자산을 위탁할 것”이라며 위탁 계획 중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 12일 재정경제부는 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에서 “KIC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200억 달러 자산 전액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밝힌 KIC 투자 운용 계획대로라면 재경부는 30억달러, 한은은 내년 중 170억달러의 외화자산을 KIC에 전액 위탁해야 한다

edaily [2006-10-23 09:25]

(국감)“韓銀, 낙하산 인사로 독립성 훼손“-윤건영의원

- 청와대 인사수석 지난 4월 부적절한 인사개입 발언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청와대의 부적절한 인사개입 발언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 선정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은 인사개입이자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위네 따르면 지난 4월 6일 한국은행은 은행연합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을 받아 심

훈 현 금통위원과 학자출신 후보 1명을 청와대에 추천했었지만, 대통령은 심훈 금통위원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한상의 회장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려했다.

당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학자 출신보다는 정부와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가이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윤의원의 주장이다.

그후 참여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박봉흠 위원이 추천돼 금통위원으로 임명됐고, 이에 반발해 한국은행 노조는 4월 11일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었다.

윤의원은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참여정부 관료출신 인사가 중앙은행 금통위원으로 임명되고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사전에는 독립성이라는 단어자체가 실종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6-10-23]

韓銀 국감 2제

“통안증권 이자가 적자 주범”

올 7조원 예상… 총비용의 60% 차지

3년6개월간 19조9000억

■ 외환시장 개입 등의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이자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갑)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한은 적자구조 고착화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며 근본

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해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발행액이 73조2000억원으로 김대중정부 5년간 60조8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에따른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도 노무현정부 3년6개월동안 19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2002년 이후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환율방어에 적극 개입

해 과도하게 달러를 매집한 뒤 물가안정을 이유로 과도한 시중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량의 통안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7조원에 달하는 통안증권 잔액은 사실상 ‘은폐된 국가부채’”라고 지적하면서 “한은 자체적인 통안증권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통안증권을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의 원도 “올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통안증권 이자는 한은 연간 총비용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한은 적자의 주범”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병직기자

 연합뉴스 [2006-10-23 09:27]

“환율하락으로 외환보유액 40조 증발“<윤건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환율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가치가 40조3천억원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81조9천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가치가 하락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를 매년 당기손실로 처리하지만 한국은행은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계정에 쌓아둔다”면서 “이는 환율 변동에 따라 몇조원 단위로 정부예산이 휘둘리게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다다익선’의 단순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안정증권 급증으로 인한 한국은행 적자, 외평기금 적자,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모두 수출지상주의에 목맨 재정경제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와 한은의 막연한 외환보유액 쌓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4월6일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정 당시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과 관련, “부적절한 인사개입이자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 금통위원을 임명하면서 은행연합회장 추천 몫으로 심훈 전 부산은행장 1명만 내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몫인 나머지 1명은 내정을 유보했었다.

김완기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에 대해 “대한상의회가 추천한 학자출신보다 정부와 연결고리 및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을 좀 더 찾아 보임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일보 [2006-10-23]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 눈덩이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환율정책 후유증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인 정증권(통안증권) 이자 지급액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안증권 이자 지급을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통화금융정책의 실효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한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1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60조6000억원으로, 8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 잔액(162조6000억원)의 37.2%에 달한다고 밝혔다. 1991년 말 1조6700억원이었던 연간 이자 지급액은 지난해에는 6조1400억원으로 3.7배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이자 지급액은 이 기간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본원통화 증가액의 2.1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며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이자 지급으로 인해 늘어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최소한 31조7000억원어치의 통안증권을 다시 발행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이 급증한 최대 원인은 외환 위기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도한 완화 질상 방지 정책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눈덩이 적자와 함께 통안증권의 발행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윤 의원은 “통안증권 이자 지급으로 통화 발행 증가 압력이 더욱 커졌을 뿐 아니라 통안증권 발행 확대에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통안증권 이자가 이자를 낳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한은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병우 기자

edaily [2006-10-23 10:59]

(국감)“2년간 외환보유고 손실 40.3조”-윤건영의원

韓銀 숨은 손실 23.1조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최근 2년간 환율하락으로 증발한 외환보유고가 40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은행의 숨어있는 손실이 23조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동안 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무려 40조 3000억원가량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GDP증가분 81조 9000억원의 절반(49.2%)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외환보유고 손실을 ‘자산·부채’ 계정(외환평가 조정금)에 쌓아두는 특이한 자체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규정으로 인해 숨은 외환보유고 손실액이 올 상반기기준으로 2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 왔으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통화안정증권 급증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적자문제, 외평기금 적자문제,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모두 수출지상주의에 목맨 재경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와 한국은행의 막연한 외환보유고 쌓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의원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한국은행이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외환보유고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10-23]

韓銀 통안증권액 15년간 10.7배 증가

◇...지난 15년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무려 10.7배나 증가했고, 이로 인한 이자지급액이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23일 한국은행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규모는 1990년말 현재 15조2천억원 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무려 10.7배가 늘어난 162조6천억원이었고, 통안증권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60조6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본원통화가 13조8천억원에서 42조7천억원으로 약 28조9천억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2.1배나 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통안증권 발행규모 급증과 이자지급액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누적적자 심화로 인해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경기자 kek@yeongnam.com

☎ 每日新聞 [2006-10-23]



23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한구(오른쪽 두 번째부터), 윤건영, 유승민 의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韓銀 지역차별 철회하라

대구·경북 중기 대출 제자리·규모 큰 포항본부 폐지

국감 초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지역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 축소와 구미지점 폐쇄 방침에 대해 강하게 따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점폐쇄로 총액한도대출 지원의 축소, 지역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지역금융·실물경제 동향 파악 애로 등이 우려된다."며 "지역에선 한은의 조직 정비안에 대해 지역차별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말부터 4년간 지역별 총액한도 대출 증가율이 광주·전남(52.6%), 전북(39.1%), 대전·충남(53.8%) 등은 평균 50.1%로 급증한 반면 부산(10.7%), 대구·경북(10.7%) 등 평균 10.7%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한국은행도 영남지역을 차별하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포항본부의 관할지역 인구는 90여만 명으로 목포본부보다 20여만 명이 많고, 여·수신 규모도 포항이 목포보다 각각 1조, 3조 원이나 많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어떤 이유로 포항본부만 폐지하고 목포본부는 확대개편하려

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생산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폐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비교·검토해 현재 한국은행이 마련한 중장기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구미지점의 근무 인력은 도합 103명으로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순천지점의 92명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구조 조정은 영남권에 치중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 서울경제 [2006-10-23 18:27]

[국감 초점] 한국은행

적정 외환보유고등 '송곳 추궁'

"환율하락으로 지난 2년간 40兆 손실"

적자·방만한 경영 문제등도 도마위에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한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 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무려 40조3,000억원 가량 하락했다” 며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81조9,000억원의 절반(49.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외환보유고 손실을 ‘자산·부채’ 계정(외환평가조정금)에 쌓아두는 특이한 자체 회계제도를 채택하면서 숨은 외환보유고 손실액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간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2조5,644억원의 매매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를 매입하는 일방향 환율 방어만 채택하는 바람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한은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162조6,000억원으로 증가, 본원통화 잔액 40조3,000억원을 4배나 초과했다” 고 지적했다.

한은의 적자 문제 및 방만한 경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은 김영삼 정부 때는 2조2,775억원 흑자, 김대중 정부 때 15조1,9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누계 적자액은 1조2,667억원에 달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은 직원의 1인당 영업이익은 2000년 대비 2005년에 17억4,000만원(184%)이나 급감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같은 기간 2,705만원(57.75%)이 늘었다” 며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됨에도 임직원들이 ‘돈잔치’에 여념이 없었던 것 아니냐” 고 질책했다.

최경환 의원도 “한은이 ■■상위직급 정원 과다 증원 ■■편법적 임금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운영 등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방만 경영을 지적받고도 방치하고 있다” 며 “한은이 개별법을 적용받아 정책과 예산에서 견제기능이 약화된 데 따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제안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은의 현재 적자가 자산운용의 손실이 아니라 환율변동 및 외생적 요인에 따른 평가손이라 해도 중앙은행이 3년째 계속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hankook1.com [2006-10-23 19:42]

을 통안증권 이자만 7조 “통화량 흡수아닌 증가 기여“

통화안정증권이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나 관련 이자지급액만 7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량 흡수를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이자지급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991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15년 8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이자로 지출한 금액만 무려 60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 162조6,000억원의 37.2%에 달하는 규모다.

윤 의원은 “이 기간 중 화폐발행총액과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을 합한 본원통화 증가규모가 약 2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2.1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며 “이자로 인해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한 통안증권 규모가 91년 이후 최소한 31조7,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올해 한은 예산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는 7조484억원으로 연간 총비용의 59.6%에 해당하는 규모로 통안증권 이자가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의 주범”이라며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너무 커지면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每日新聞 [2006-10-24]

‘독불장군’ 韓銀

지역반발 불구 포항·구미 구조조정 강행

한국은행이 포항본부와 구미지점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조조정안을 강행 추진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본부·지점 구조조정은)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하겠다.”며 “경제논리란 한국은행의 경제논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행의 지방조직 문제는 나

름대로 속고하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 문제는)한국은행이 주어진 일을 잘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본부·지점 축소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 총재는 “광역시가 아닌 시·군·구에 있는 3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연말까지 확정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구에 있는 지역본부는 포항, 강릉,

목포 등으로 목표본부가 앞으로 이전되는 전남도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총재의 발언은 구미와 강릉본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윤건영 의원은 24일 “한국은행은 지점폐쇄 문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지방경제를 악화시키려 한다.”고 이 총재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전기자 mikypark@msnet.co.kr

 연합인포맥스 [2006-10-24 07:36]

[한은의 2005년 외화자산운용, 큰 손실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지난 23일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대회의실에 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외환보유액 운용 손실에 대 한 질타와 대책, 수익률 공개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공언에도 최근 한 은의 외환 운용 수익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은의 외환운용 손실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한은이 외화자산 운용 손실을 막으려면 선진국 주식, 석유, 부동산, 금 비중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위험 감소와 투자수익 증대가 필요하다”며 미 국채 투자 중심의 외화자산 운용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감사원의 산정결과를 토대로 “외환매매에 손실은 평 가손이 아닌 거래 손실로만 지난해 상반기 중 1조6천593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기 도 했다.

송 의원은 “매매손실과 별개로 한은이 보유한 외환의 평가손은 2004년 17조5천 억원, 2005년도 13조6천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다다익선'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고 지적한 뒤 “한은은 외환 보유액의 적정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은은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한은의 외환자산 운용과 관련해 통안증권 발행 이자를 차감한 이후의 자산 운용 순수익은 큰 평가손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은 전체 외환보유액 중 30% 이상을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의 금리가 오르면 보유한 미 채권이 평가손은 불가피하게 된다. 미국은 2004년 6 월 이후 17차례에 걸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고, 올해 8월에 들어서야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한은이 지난 2002년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1천억달러가 조금 넘었을때 8조원 정 도의 운용수익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005년 한해 동안에는 최악의 '운용 수익 률'과 평가손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은 총재는 이날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는 4조원, 올해에는 4조7천억원이 예상 된다고 각각 밝히면서 이는 환율과 금리 변동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서 총재는 하지만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감안된 구체적인 외화자산의 '운용수익률'이나 '평가손'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은행이 외화보유액 운용수익률을 공개하게 되면 국제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은 대차대조표만을 재구성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추정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 했다.

문화일보 [2006-10-24]

대한생명 매각놓고 한화컨소시엄과 국제중재 “예보, 무리한 중재 강행 세금 수십억 낭비할 듯”

국감 재경위서 지적

■ 대한생명 매각을 놓고 한화컨소시엄과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리하게 중재를 강행,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재 신청을 결정하고, 법률 자문을 맡은 외국 법무법인과는 성공보수 계약을 맺지 않는 등 무

리하게 중재를 추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중재신청 이전인 지난 1월27일 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해 “계약 무효가 곤란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예보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다시 의뢰했고, “한화의 이면계약은 매각 주간에 대한 기망행위로 매매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예보는 6월 당초 부정적

의견을 냈던 법무법인과 국제중재 참여 계약을 맺었고, 해당 법무법인은 재검토를 통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당초 의견을 뒤집었다.

윤 의원은 “예보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에 낸 국제중재 신청 서면보고에서 “한화의 콜옵션을 예보가 수용할 경우,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미뤄 예보는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중재를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예보가 법률 자문을 맡은 외국 법무법인(영국 프레시필드)과 계약을 맺으면서 시간당 보수만을 지불하기로 한 것 또한, 국제 중재 결과에 확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보는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국제 중재보다 철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계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

한국경제 [2006-10-24]

韓銀 국감서 경기부양 논쟁

의원들 “침체 우려 ... 금리정책 기조 바꿔야”

李총재 “4% 성장이면 금리인하 필요없어”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제 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재경위 의원들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8월 한은의 풀금리 인상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팽배난을 가하기도 했다.

◆금리정책 놓고 공방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의원들의 거센 금리 인하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지속되더라도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풀금리 목표치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서 “올해 하반기가 경기순환상 어려운 시기이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5%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더라도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 등의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시장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거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정책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한은이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하반기 경기하강 이외에도 북핵 사태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이후 유가가 예상보다 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작년 10월 이후 다섯 차례나 풀금리를 인상했던 정책기조는 이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인위적 개입’ 비판

이 총재는 “과거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원화의 강세 일변도는 한계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원화 강세가 많이 진행됐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서도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 3~4년 동안 일방적인 원화 강세가 앞으로는

속도가 많이 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단순논리로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환율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가치가 40조3000억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은의 외환개입 정책이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안정증권의 급증으로 인한 한국은행 적자, 외평기금 적자,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모두 수출지상주의에 목멘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와 한은의 막연한 외환보유액 쌓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들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와 관련, “서비스적자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분이 이전수지 등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통계상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승훈 기자 hyunsu@hankyung.com

세계일보 [2006-10-24 10:18]

[이코노 브리핑]외환보유액 가치 하락 외

지난 2년간 환율하락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가치가 40조3000억원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81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 1년4개월 만인 다음달 첫 해외투자에 나선다. KIC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 10억달러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60억 달러, 2008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채권 70%와 주식 30% 비율로 운용하고, 2008년부터는 직접 운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2011년 IAIS 연차총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IAIS는 보험감독기관 간 상호협력과 표준보험감독기준 제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설립됐으며 세계 3대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SK텔레콤은 국내 처음으로 중국 내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와 한글 문자메시지(SMS) 수·발신이 가능한 ‘한중 한글 SM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요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한글 SMS를 보낼 경우 건당 100원(부가세 제외)이 부과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경우 건당 60원이 부과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종로학원 관계사인 (주)종로학평과 자사 TV포털 ‘하나TV(hanatv.co.kr)’의 수능 동영상 강의 수급계약을 체결해 TV 수능과 논술 교육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11월 대입 수험생들이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TV를 통해 종로학원의 온라인 입시 사이트 ‘종로 e-class(jongro.co.kr)’ 논술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東亞日報 [2006-10-24]

40조원 증발

2년새 환율하락 영향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달러당 원화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외환보유액 가치가 40조3000억 원가량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하락으로 외환보유액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2004년에는 24조1000억 원, 지난해에는 16조2000억 원 각각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81조9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윤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한은이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논리로 접근한 결과”라며 “적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진흙 기자 jinhup@donga.com

연합뉴스 [2006-10-24 17:17]

〈초점〉 재경위, 우리금융 민영화 추궁
예보.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모럴해저드’ 논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2005년 3월로 잡혀있던 매각시한이 초과된 상황임에도 대주주인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예보는 당초 기한내 매각작업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08년 3월로 매각시한을 연장해놓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는 커녕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한 소수지분을 빨리 매각하고 국민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매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예보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정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혀 진척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민영화 시한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보와 한화그룹간의 대한생명 매각계약 무효논란도 불거졌다.

문석호 의원은 “예보와 한화그룹간의 대생 매각계약은 한화그룹의 기만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무효화되거나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예보가 국내 소송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지난 7월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은 대생 매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예보가 중재신청을 낸 것은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는다는 목적보다는 국회.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면피성으로 보이며 수십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예보는 법무법인의 부정적 의견을 무릅쓰고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무리한 중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예보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 논란이 됐다.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예보가 경영이행약정(MOU)을 체결한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 총 임직원 제재조치건의 72%가 집행내용 없이 주의에만 그치고 있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관련 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보 퇴직 임직원의 44%가 자회사, 지분 소유회사,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이직하고 있다. 예보가 99.2%의 지분을 소유한 서울보증보험 역시 퇴직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나 지분 소유회사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예보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으로 특수활동비 예산 23억원을 편성해 사용했는데 명목은 특수활동비이지만 실제론 밥값”이라며 “예보 임원의 급여가 5년간 2배 증가하고 일반직 평균급여가 5년간 64.9% 증가하는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6-10-25 09:10]

(국감이슈)첫 투자 앞둔 KIC, 벌써 ‘존폐 논란’

- 이한구 “한은에 운용 일임하는 게 더 효율적“
- 윤건영 “수수료 이중지급…선진노하우 전수도 구호뿐“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의 일환으로 야심하게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정감사에서부터 존폐 논란이 휩싸였다.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자산을 재위탁해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선진 노하우 전수도 구호에 그치고 있어 한국은행에 외환보유고 운용을 일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재경위가 실시한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IC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KIC는 전체 직원 51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료로 매달 1억592만 원을 쓰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12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비용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인 구안 응씨를 CIO로 영입하면서 사택 임차료로 3억7800만 원을 선지급했고 올해 51명 임직원에게 대한 인건비 예산만도 58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KIC가 출범 1년 4개월동안 실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올 4분기에도 고작 10억달러만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나마 직접투자도 아닌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하는 간접 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85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은에 외환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한다면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도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스럽다”며 “KIC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KIC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태어난 기관으로, 설립의 당위성이 없고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

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다익선 식의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외평기금과 한은 적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등 KIC 설립의 전제조건들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해 운용하기 때문에 위탁자인 한은과 재경부는 필연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이중으로 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KIC가 최근 2곳의 외부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사항에 노하우 전수나 국내 진출 조항 등의 내용을 넣지 못했다“며 “선진 노하우 전수라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6-10-25 10:36]

한국투자공사 1인당 사무실, 정부청사 3배

한국투자공사의 1인당 사무실 사용면적이 14.1평으로 정부중앙청사보다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임대료만 지난해 8월부터 1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설립된지 15개월이 넘도록 단 한건의 투자도 진행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호화 업무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투자공사가 25일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윤건영, 이해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임직원 43명(계약직 8명 제외)이 임대료가 높기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604.66평(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중앙청사의 사무실 1인당 사용면적은 2~5평 정도다.

고액 연봉도 지적받았다.

한국투자공사 일반직 부장의 연봉은 최고 1억3296만원에 달하며 사원도 최고 4125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단 한건의 투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올초 차장 1명에게 610만원, 과장 2인에게 7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16.88%에서 올 상반기 24.95%로 높아졌다.

헤럴드경제 [2006-10-25 14:41]

“KIC 실적全無불구 성과급 돈잔치“

국감“평균연봉 1억2천만원 등 지출 세계 최고“비판

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투자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또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해 운용하는 태생적 한계는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실적 없이 적자만 냈는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KIC도 신이 내린 직장대열에 합류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KIC는 올 1월 15명의 임직원에 대해 직위별 차등만 둔 채 2005년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재경부 출신 감사는 혼자 6863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며 “투자실적은 0원이고 지난해 19억6500만원의 손실을 본 KIC는 어떤 성과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했느냐”고 지적했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51명 직원의 일인당 인건비가 1억2591만원에 달하고 일인당 임차료와 건물관리비, 전기료 등이 각각 2719만원과 1110만원에 이르는 등 지출은 벌써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목표 수익에 외평채 및 통안채 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43개가 KIC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을 경우 한국 진출이나 영업 확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국감 답변자료에 대해 “설문방법이 e-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의견인지 분명치 않고, 한국 진출·확장이 확실하다고 응답한 21개사 중 14곳은 이미 국내 진출 업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KIC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민간 운영위원들에게 시간당 100만원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한 민간 위원의 경우 회의 때마다 항공료와 숙박료까지 부담해 6회 참석하는 동안 4521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KIC는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해 운용하며 수수료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태어난 기관으로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연합뉴스 [2006-10-25 21:10]

<초점> ‘개성공단 보증’ 부실화 논란(종합)

재경위, 한국투자공사 ‘폐지론’ 대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5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문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북핵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현지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 것.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체 투자자금이 1조2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신보와 기보로 하여금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특례보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평균 사고율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부실금액이 1천53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신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보증한 비율이 85%에 달하는데다 통상 1년인 보증기간을 8년까지 늘려주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신보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규복(金圭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한이헌(韓利憲) 기술신보 이사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우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보증지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투자공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KIC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인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가세했다.

같은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9월 현재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1인당 1억2천591만원, 임차료가 2천718만원, 차량 유지비가 1억4천429만원에 달하고 회의 한번에 참석하는데 2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된다”며 “빛내서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를 운영한다면서 벌써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설립후 1년4개월이 경과하도록 자금운용실적이 전무하고 전문인력과 준비부족으로 부실한 운영이 우려된다”며 “KIC의 존폐여부 및 적정 외환보유와 외화자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KIC 폐지의 이유로 ▲내부규정 미비 등 준비부족 ▲해외투자 경험과 능력의 부족 ▲심각한 도덕적 해이 ▲푸르덴셜과의 자산운용위탁 불법계약 의혹 ▲외부 견제장치 부재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특히 KIC의 CIO(최고투자담당자)인 구안 웅 이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1998~2006년 푸르덴셜에서의 자산운용 경력이 전부인데, 그나마 국제투자 사업부문의 경력은 한달 밖에 안된다”며 “그럼에도 사장 연봉의 3~4배인 160만 달러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석주(洪錫柱) KIC 사장은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하는 간접투자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운용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며 “구안 웅 이사의 경우 싱가포르 등지에서 6년 이상 글로벌 투자를 한 경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2006-10-25]

대구·경북 8명 등 58명 국감 우수의원 선정		
NGO모니터단 중간평가	간평가를 발표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4일 270여개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2006 국감 중	이날 발표된 중간평가에서는 여·야에서 58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대구·경북권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 윤건영(비례대표)·최경환 의원(경산	-청도), 국방위 송영선 의원(비례대표), 교육위 이주호 의원(비례대표), 농림해양수산위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 산업자원위 김성조 의원(구미갑), 건설교통위 김석준(달서병)·정희수 의원(영천) 등 8명이 포함됐다. 이영란기자

 毒日新聞 [2006-10-25]

시민단체가 뽑은 국감 우수의원

지역의원 7명 선정

지역출신 국회의원 7명이 국정감사 우수의원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4일 국정감사 중간평가결과 우수의원 58명을 선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지역출신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성조(구미갑) 의원을 비롯,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경산·청도)·윤건영(비례대표) ▷건설교통위

원회 정희수(영천)·김석준(대구 달서병) ▷교육위원회 이주호(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송영선(비례대표) 의원 등이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선정된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소신껏 점검·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북핵위기 불안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했다."며 "이들 때문에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모니터단은 다음 달 중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정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파이낸셜 뉴스 [2006-10-26 12:27]

중소기업 외면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설립목적에 역행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질타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대출금리 책정이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타당한지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대기업, 가계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대기업 6.24%, 가계 5.92%인 반면 중소기업은 6.61% 수준이다. 지난 2001년 대기업 9.43%, 가계 7.64%, 중소기업 7.01%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은행에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국내 전체수출 중 지방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62.3%에서 올해 상반기 68.0%로 5.2%나 늘었지만 중소기업의 지방기업 대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 1.3%나 줄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이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힘쓰는다고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每日新聞 [2006-10-26 14:15]

윤건영 의원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편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수도권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윤건영(비례대표) 의원이 26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기악화 속에서도 지방기업들의 올해 수출액은 지난 2003년 대비 전국 수출액의 62.3%에서 68.0%로 늘어났으나 중소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1.3%가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행은 총 27개의 지점을 늘리면서 지방에는 고작 4개 영업점만 배정해 수도권 기업에 거래를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2006-10-26 17:21]

“기업은행, 中企대출금리 대기업·가계대출보다 높다”

재경위, 기업은행 역차별 집중 추궁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지난해부터 대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에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가계대출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6.61%로 대기업 6.24%, 가계 5.92%보다 높았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91%로 대기업 5.69%, 가계 5.49%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그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대기업이나 가계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의 우제창 의원은 기업은행이 개인고객 확보를 위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기업대출 관련 예대마진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1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4년간 가계대출은 부동산 대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한 차례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은 ▲2002년 2.59% ▲2003년 2.32% ▲2004년 2.64% ▲2005년 2.25% ▲2006년 8월 1.91%였으며, 시중은행은 ▲2002년 1.77% ▲2003년 2.02% ▲2004년 2.17% ▲2005년 2.03% ▲2006년 8월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기업은행이 이익내기에 몰입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개인고객 위주로 여신정책을 운용하는 사이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은 뒷전에 방치돼 있다”며 “최소한 예대마진을 시중은행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 차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기업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62.3%에서 올해 상반기 68.0%로 5.3%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수출액의 68%를 기여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경제 선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다기 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06-10-30]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시장실패 아닌 정부실패”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

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양쪽 모두 시장원리를 무시한 탓에 총체적이고 필연적인 실패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재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정부 부동산정책의 5가지 문제점'이란 자료에서 "수요관리정책은 위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조세와 규제 강화 탓에 뜻하지 않은 공급 위축을 가져와 서민부담을 가중시켰고, 뒤늦게 신도시개발 등 총량달성식 공급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는 주

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 정부는 투기억제라는 아주 소극적인 목표에 매몰돼 부자 때리기, 강남 때리기, 수도권 때리기라는 무리수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주택건설 실적이나 매매·전세가 격 추이, 미분양 주택 추이 등 어느

도로 무관심한 정부 태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지난해 8·31대책이 나왔을 때 주택공급 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점,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임대시장이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증가

윤건영의원 국감서 조세·규제강화 등 5가지 문제점 신랄 비판

택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발상,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세 도입 이후)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의 되풀이, 무리한 조세정책을 통해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점, 세대별 합산과 매매금지, 양도세 중과 등에서 나타난 위험적 요소, 정부 주도의 획일적 공급정책 등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5대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목표와 수단을 혼돈한 정책의 합리성 결여가 구조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며 "부동산정책이란 주택

하나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를 반영해주는 지표가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건설 주택 수는 지난 2002년 37만6248가구에서 지난해 19만7901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 가격 상승의 1차 원인이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 수는 2만4923가구에서 5만7215가구로 오히려 배 이상 늘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또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 9월까지 20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 비판과 쓴소리에 지나칠 정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당시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이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세금중과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공급확대정책에 전념해야 한다"며 "공급확대시에도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보듯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몇 퍼센트 이상 식의 경직적인 통제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민간 부문이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급의 애로를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

조세일보 [2006-10-31 09:21]

연봉 2400 이하 무주택근로자 소득공제 확대추진

윤건영 의원,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서민들만 고통”

근로자 등 '무주택자 소득공제' 입법안 제출방침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31일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격히 올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갔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7만 세대 중 무주택세대는 전체의 45.4%인 806만 세대(2005년 8월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자 503만명(2004년 기준)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300만명이 무주택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세규모는 2400억원이며 1인당 연간 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 소득공제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해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림드경제  [2006-10-31 11:23]

무주택자 소득공제 도입 추진

무주택자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발의를 거쳐 11월 1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병합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

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와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 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자가 총 503만명(2004 소득분 기준)이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을 무주택자로 추정하고 이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세 규모를 2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무주택자 1인당 연간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 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자료(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77만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5.4%인 806만가구에 달한다.

파이낸셜 뉴스 [2006-10-31 14:36]

무주택자 소득공제 추진...윤건영 의원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전국 1777만 세대 중 45.5%인 806만 세대가 무주택 세대인 만큼 이번 ‘무주택자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연소득 이하인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작게 부과함으로써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2006-10-31 18:51]

“간이과세제 탈세 블랙홀...부총리 정말 모릅니까?”

권부총리, “간이과세제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

“폐지보다는 거래 투명성↑, 비노출 과표 찾아야“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40%육박)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네. 국세청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 신고를 토대로 나온 숫자입니다“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놓고 나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문답이다.

권 부총리는 이 의원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다. 연매출 4800만원, 월 매출 200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403만4000명 사업자 중 156만8000명(38.9%, 2005년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현실과악'인 셈.

그러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과 학계에서는 연매출 4800만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자신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개인사업자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한 지 오래전 일.

다만 정부만 현 실태를 모르고(?) 있는 셈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월 매출 200만원이면 비용을 최소한(50%)으로 잡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은 100만원이고 실재는 더 낮다”라며 “일시적 경기침체 등 여파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일반과세를 적용 받아야 할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 고의적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간의 분석이다. 즉 '탈세'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이과세제를 통해서 상당수의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본다”며 “영세자영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탈세유발 블랙홀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세자영자 보호를 위한 다른 대책을 만들고 이 것은(간이과세제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권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좀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본다”며 “다만 제도는 유지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숨겨진)과표를 찾아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매출 4800만원 중 30%를 소득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14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버는 사업자가 40%가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대규모 탈세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의 현실과약은 확고했다. 권 부총리는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라며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비율도 줄었지만 (과표)노출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고 납세협력비용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사업자(일반+간이) 중 간이과세자 비율은 지난 2001년 49%에서 2002년 46.5%, 2003년 44%, 2004년 41% 등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403만4000명 사업자 중 156만8000명(38.9%)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뉴스 [2006-11-1 12:54]

“참여정부 5년 성장률 4.2%에 그칠 것” 윤건영 의원

참여정부의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참고로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를 기록했으며, KDI의 전망대로 올해 5.0%, 내년엔 4.3%를 기록할 경우 5년간 평균치가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5년간 연평균 성장률 4.2%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간 7% 성장과 비교해 볼 때 2.8%포인트나 낮은 수치” 라면서 “노 대통령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명목 성장률조차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연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

질 성장률 7%라는 대선공약은 허황된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목 성장률이 2003년 5.9%, 2004년 7.5%, 2005년 3.5%, 2006년 5.3%, 2007년 6.7%로 연평균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04과 2005년에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다”면서 “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 외적 요인들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3년 반 만에 남은 것이라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연체채권 뿐” 이라면서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은 늘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채권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의 연체가 늘어서 발생한 현상” 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기조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2006-11-1]

“성장도 분배도 두토끼 다 놓쳤다”

재경위 국감 경제정책 성토

“시장을 외면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3년반 동안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만들어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외환, 기업규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개발정책 지적과 함께 경제수장으로 정책조율을 해야 할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역할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동반 성장론으로 동반 몰락만 초래” 맹공 “외환시장 개입 3년간 국고22조 날려” 질타

▶정부 정책을 못 밟았다-이회규의 원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크게 “3대 물자정책”과 “3대 불신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3년간 최소 22조원의 손실이 났으며, 국내총생산(GDP) 창출효과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가 170조원에 달하고, 8조원 이상 투입된 햇볕정책의 결과는 해위험”이라며 “결국 효과와 손실규모를 따지지 않는 불지마정책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에 관한 정책은 수도권, 부자지주와 기업규제, 수도권 균형 초래 등 일리가 맞지 않는 정책

실행으로 시장침탈만 조장했다”며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 정부와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는 이른바 ‘불신의 법칙’을 낳기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반성장론이 동반몰락 초래했다-윤건영 의원(원나라당)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동반성장론’의 실상을 조목조목 따졌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대선공약인 7%에 한참 못 미치는 4.2% 수준에 그친 전방위이다. 기대했던 복지 부문에서도 빈곤층만 25만가구 60만명이 늘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참여정부가 경제발전과 복지의 동반성장이란 국정기조와는 반대로 동반몰락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권오규(자유선진) 부총리 겸 재정위 장관이 재정부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동술 기자/dyang@heraldm.com

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밝혀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정책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 감정을 앞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반시장·반기업·반부자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친기업·다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기조로 전환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는 감안이 유익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은 말의 성찬-“비전 2030 등 참여정부의 복지국가 밑그림에 대해서도 자원조달 방안이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경환 의원(원나라당)은 “정부가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2조1000원의 재원이 들어갈 저층민 고령화 대

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자원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결혼 기피 및 양육에 대한 대책 같은 구체적인 고안에 접하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동술 기자/dyang@heraldm.com

盧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5년간 성적표...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미쳐

윤건영 의원 분석... 대선공약 '7%'의 60% 불과

■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연평균 7%성장)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며, 재정경제부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4%대 후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성적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2006~2007 경제전망을 기초로 노무현정부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평균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KDI전망대로 5.0%, 4.3%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전제로 삼은 2007년 경제성장률(4.6%)을 토대로 추계를 해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그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와 내년이 각각 4.1%, 3.8%씩 늘어났다고 볼때 5년간 연평균 1.9%증가하는데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도 7.6%, 7.0%씩 증가할 경우 연

노무현 정부 5년간 거시경제 성적표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평균
GDP성장률(실질)	3.1	4.7	4.0	5.0(5.0)	4.3(4.6)	4.2(4.3)
민간소비	-1.2	-0.3	3.2	4.1(4.4)	3.8(4.2)	1.9(2.1)
설비투자	-1.2	3.8	5.1	7.6	7.0	4.5
건설투자	7.9	1.1	0.4	-0.8	2.3	2.2

· 2006~2007년은 KDI 전망 ()은 재정경제부 전망
· 5년 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출평균

자료: 윤건영의원실·한국은행·KDI·재경부

평균 4.5%, 건설투자는 -0.8%, 2.3% 성장한다고 볼때 연평균 2.2%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적표는 노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연평균 7.0%성장이라는 공약이 공수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우리경제의 기본체력인 잠재성장률(통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4%대 후반(재경부 추산)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능력만큼도 제대로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30년만의 호황이라는 세계경제의 흐름에도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경제정보제공업체인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3~2006년 아시아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0%, 신흥 경제강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연평균 10.2%, 8.0%의 고성장세를 이뤄냈다는 점을 볼때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윤의원은 "국보법·사학법·수도이전 등 소모적 논쟁으로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우선순위에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라며 "경기침체의 원인은 결국 우리 내부, 특히 경제의 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

2006 국정감사 자료집

**힘찬 경제,
밝은 사회,
강한 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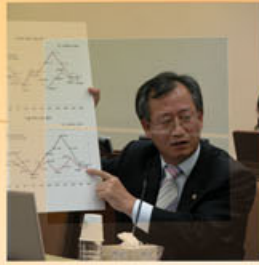
국회 윤건영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784-1528, 02-788-2031 Fax. 02-788-3331

홈페이지 : www.yun.or.kr

이 메 일 : yun@assembly.go.kr



힘찬 경제, 밝은 사회, 강한 나라



국회의원

윤건영

재정경제위원회

2006 국정감사 자료집

국회 윤건영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 1528, 02 788 2031 Fax 02 788 3331

홈페이지 : www.yun.or.kr

이 메 일 : yun@assembly.go.kr